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6호 2022. 6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한국과 중국의 문화충돌 원인 분석
-문화제국주의에서 문화민족주의까지-

- 박영환 | 한중 문화충돌 서막, 단오 논쟁의 교류사적 의미 7
- 윤성우 |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47
- 김인희 | 중국의 '문화 담론'과 한중의 문화충돌
-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87

논문

- 김성환 |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115
- 이춘호 | 모용선비(慕容鮮卑)의 계성(薊城)시대와 하북(河北)지역 159
- 이정일 |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대일 육상 전력 강화
- 1596년 강화협상 결렬 전후를 중심으로 211
- 이경분 | 포로를 향한 음악
-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기 라디오 방송음악과 프로파간다 255
- 안광호 | 중국사 연구에서 문화적 접경 연구의 필요성
- 중국의 '성씨공정(姓氏工程)'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중심으로 295
- 문상명 |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331

자료소개

김택민 | 『당물총론』·『당물각론』 373

서평

- 전명혁 |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사건 판례를 통해 본 사상통제의 역사
-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 역사공간 397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21



Contents

Special Issue **A Study on the Causes of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From Cultural Imperialism to Cultural Nationalism**

- Park Younghwan ▮ The Prelude to the Cultural Clash between Korea and China,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Dano Festival Debate 7
- Yun Gyongwoo ▮ Acceptance and Resistance of the Korean Wave in China 47
- Kim Inhee ▮ China's Cultural Discourse and Korea-China Cultural Clash 87

Articles

- Kim Sunghwan ▮ Tangun, from Mythology to History 113
- Lee Chunho ▮ The Ji City Era of Murong Xianbei and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159
- Lee Jeongil ▮ Strengthening the Anti-Japanese Combat Power of Ground Force during the Imjin War (1592-1598) 211
- Lee Kyungboon ▮ Radio Broadcasting Music for POW's: A Study on Music Propaganda of Early Radio Broadcasting at Koje POW Camp 255
- An Gwangho ▮ The Necessity of Cultural Contact Zone Approach in Chinese History Studies 295
- Moon Sangmyeoung ▮ China's Baekdusan Strategy and Our Countermeasure 331

Introduction to Documents

- Kim Taikmin ▮ The T'ang Code – Study on General Principles
The T'ang Code – Study on Specific Articles I·II – 373

Book Review

- Jun Myunghyuk ▮ The History of Thought Control through the Precedent of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Case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Occupation Period 397



특집

한국과 중국의 문화충돌 원인 분석
- 문화제국주의에서 문화민족주의까지 -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중 문화충돌 서막, 단오 논쟁의 교류사적 의미

박영환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중국 문화부 차관, 단오절 논쟁에 불 붙이다
- III. 중국인들 단오(골원)문화 강탈로 오해하다
- IV.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와 중국인의 자각
- V. 새로운 문화쟁탈 논쟁으로 확대되다
- VI. 단오절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
- VII. 맺음말



개혁개방 20년 이후, 특히 1990년대 후반 전후로 중국 사회도 급변하였다. 기존 마르크스,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론 및 마오쩌둥의 홍색 사상을 뛰어넘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도이념과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였다. 청나라 말기 과거제를 폐지한 1905년 이후, 약 100년 만에 중국은 다시 친유가의 흐름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을 전후하여 중국 대륙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유교복고라는 열풍 속에서 한중단오 논쟁이 촉발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중 간 단오절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 문화쟁탈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중국 내부의 결속강화, 서구적인 가치관의 배척, 중국 전통문화 부흥을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양 자유주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중국 전통문화로 무장하고자 하는 열풍이 1990년대 후반부터 유교부흥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인 중국 청소년층을 향한 서구화를 차단하고, 중국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단오논쟁을 이어간 것이다. 문화대혁명 전후 ‘혁명화된 춘절’을 위해 전통명절을 폐지할 때, 또한 그것을 재복원할 때와 같이 단오절 논쟁도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앞장서고 다른 언론들이 따라간 방식이었다. 결국 이 논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자국 전통명절문화보호시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 동력이 되었고, 중국 내 중화중심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한중 간 새로운 문화쟁탈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한중 간의 갈등도 격화되었다. 반드시 문화근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즉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문화인식도 한중 간의 갈등에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결국 단오논쟁은 대내적으로 자국 전통명절문화보호시책을 강화하면서 중국사회 유교열풍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투고: 2022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10일, 재심사 완료: 2022년 5월 22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25일

I. 머리말

중국 역사를 보면, 한국 역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친유교와 반유교 흐름이 교차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 때 “백가 사상을 폐하고, 오직 유학을 존숭한다(罷黜百家獨尊儒術)”는 국시 아래, 유학은 중국 대륙 및 동아시아에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약 400년 후, 한나라 말기부터 도교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빈번하게 왕조가 교체되었던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반유정서의 확대와 현학과 불교가 흥성한다. 융합과 다민족 국가 당나라에 와서는 불교, 도교의 발전과 더불어 유교, 이슬람교, 경교(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병진하였다. 북송대에 이르러 신유학인 이학의 성립을 거쳐 남송 말 주희에 이르러 성리학(주자학)이 집대성되며 주변 동아시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상업을 중시하던 원나라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과거제가 존재했지만, 유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¹ 한족 정권인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면서 주자학은 관방 학문으로 공인되며, 다시 독존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흐름은 청대까지 이어지며 명청시대 약 540년간 주희의 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아편전쟁 등 서양 열강의 침입 아래 청나라는 힘없이 무너지고, 그 후과를 짊어진 유학은 다시 비판의 심판대에 올랐다. 1911년 신해혁명, 1914~1915년 신문화운동, 1919년 5.4운동 흐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분모는 반전통, 반예교, 반유교 흐름이었다. 중화민국을 거쳐 중국 대륙에는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다. 무산계급의 혁명에 따라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유교 정명론에 근거한 계급이 사

1 정사초(鄭思肖)의 『대의략서(大義略敍)』에 보면, ‘구유십개(九儒十丐)’라는 기록이 있다. “관리, 아전, 승려, 도사, 의사, 기술자(공), 목공, 기녀(서민), 유생, 거지”라며 유생의 지위가 거지 바로 앞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한족인 정사초가 반몽감정을 아주 강하게 가졌던 인물이기에 실질적으로 ‘구유십개’의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원나라에서의 유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참고할 수 있다.

라진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신중국’ 혹은 ‘해방후’라 칭한다. 이 시기에 반유교, 반공자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1967~1977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러 반유열풍은 완전히 정점을 찍는다. 단순한 반전통이 아니었다. 마오쩌둥은 우리에게 익숙한 ‘비림비공(批林批孔)’과 ‘조반유리(造反有理)’를 구호로 삼아 모든 전통과 과거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으로써 권력의 동력을 유지하였다. 오천년의 중국전통문화들은 혁명화된 인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전통명절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건국 직후, 1949년 12월 명절 휴일 규정을 공포할 때만 해도 신년(元旦), 춘절, 노동절, 국경일을 휴일로 지정하였고, 그중에서 춘절은 3일 동안 공휴일로 지정하였다.² 하지만 1967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설날(춘절) 휴일은 ‘혁명화된 춘절’로 바뀌며 1월 1일부터 철근하였다. 중국인의 설날 구두선인 ‘공시파차이(恭喜發財)’라는 인사말도 사라졌다. 대신 ‘올해는 마오 주석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³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가장 중요한 ‘춘절’조차도 사라졌기에 추석, 단오절을 공휴일로 한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었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에도 춘절 휴가 제도는 실행되지 않았다. 회복의 징조는 개혁개방이 막 시작된 이후인 1979년 춘절 즈음 중국 제1신문인 『런민르바오』를 통해서이다. “왜 춘절에 쉬지 못하는가?” “농민들로 하여금 안정된 설을 지내게 하자!”⁴는 한 농민이 보내온 편지가 1월17일자에 보도된 이후, 1980년부터 중국 정부는 춘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한다.⁵ 1999년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국가법정휴일의 연장 요청 건의」를 제출했으며, 2000년에 국무원에서 5.1 노동절, 10월 1일 국경일,

2 關崑, 2021.2.13, 「春秋筆：國共兩黨“封殺”春節往事」, 『西網新聞』.

3 卜榮華, 2018.2.15, 「祝您今年見到毛主席!」, “五十年前革命化春節：過年唱語錄歌”, 『每日頭條』(<https://kknews.cc/history/km38pbr.html>).

4 王宗仁, 「1967-1革春節的命」, 『民間歷史』, 香港中文大學中國研究服務中心主辦(<http://mjsh.usc.cuhk.edu.hk/Book.aspx?cid=4&tid=1579>).

5 王宗仁, 위의 글.

춘절에 7일 휴가를 결정하였다.⁶ 그리고 2004년 5월 6일, 한중 간 단오절 논쟁의 시발점이 되는 저우허핑(周和平) 문화부 부부장의 주장을 『런민르바오』에서 처음 보도한다.⁷ 이후 온 중국 대륙이 들썩이며 한국이 단오절을 침탈하는 문화 침략자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하게 성토했다. 뜨거운 비난의 물결이 대륙을 휩쓸고 지난 뒤, 2006년 5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전통명절에 관한 보호법안을 만들게 된다.⁸ 그리고 초유의 인터넷 투표라는 방식을 거쳐 2008년부터 춘절 이외에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등 전통명절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2009년 9월 30일, 중국 단오절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정식 등재된다. 한국이 중국 단오절을 침탈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 글에서는 2004~2005년 중국에서 한중 단오절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특히 중국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 한중 간의 문화교류에서 단오절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화교류사적 측면에서도 사고해본다. 사실 오늘날 한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한복 논쟁, 김치 논쟁 등도 대부분도 단오절 논쟁의 여진으로 봐도 무방하다.

II. 중국 문화부 차관, 단오절 논쟁에 불 붙이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중국 베이징 영빈관에서 역사적인 수교를 수립하였다.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은 약 10여 년 동안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

6 索研, 2000.6.23, 「關於進一步發展假日旅游的若干意見」, 『光明日報』(<https://www.gmw.cn/>).

7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할 것.

8 2006년 5월 20일, 청명절, 단오절, 칠석절, 중추절, 중앙절 등을 국무원에서 처음으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편입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원소절은 2008년 6월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편입하였다.

를 유지하였다. 수교 이후 양국은 전면적인 경제교류, 문화교류, 교육교류를 추진하면서 양국의 우의를 점진적으로 심화시켰다. 게다가 1997년 <사랑이 뭐길래>⁹ 등 한국 한류 드라마와 음악은 중국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그 결과 1999년 11월 19일 「북경청년보」에 처음 한류라는 용어가 나타났고, 2000년 2월 베이징 ‘공린(工人)체육관’에서 열린 H.O.T의 공연은 중국에서의 아이돌문화, 팬문화를 만들어내면서 하한주(哈韓族)라는 신조어도 유행시켰다. 2002년 <가을동화>는 중국의 21개 방송국에서 동시에 방송했으며, 2003년 <보고 또 보고>, <목욕탕집 남자들>도 큰 환영을 받았다. 2002년 중국에서는 무려 316차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였다.¹⁰ 이처럼 2000년도 초반까지 한국과 중국은 유사 이래 최고의 밀월관계와 교류를 이어갔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단군 이래 최고의 대우를 받는 시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통해 자국이 실전한 유교중심의 중국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한류열풍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한국을 서방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활용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 대자연 섭리이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집체적으로 처음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한류가 대륙에서 뜨겁게 요동치던 2004년 봄이다. 2004년 3월 양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이후, 2004년 5월 6일, 중국 문화부 부부장(文化部副部長, 차관급)인 저우허핑(周和平)의 글이 공산당기관지이자 중국 제1신문으로 공인되는 『런민르바오』에 보도되면서부터이다. 리우위친(劉玉琴) 기자가 쓴 「스스로의 전통명절을 냉대하지 말자」라는 제목 아래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9 중국 중앙방송국(CCTV)8에서 방영한 <愛情是什麼>는 중국 관중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오면서 시청률은 무려 4.2%에 이르렀다. 金健人 主編, 2008, 『韓流 沖擊波現象考察與文化研究』,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0 金健人 主編, 2008, 위의 책.

근일 동북의 한 대학 교수가 문화부 부부장인 저우허핑에게 하나의 급한 문건을 보내왔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단오절을 본국의 문화유산으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그것을 국가유산 명단에 편입시켰으며, 곧바로 유엔에 ‘인류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작’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¹¹

이렇게 동북의 한 대학 교수가 편지를 보내왔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다음 단락에서 저우허핑 부부장의 감정적인 언사를 소개하며, 이웃 국가(한국)가 장차 중국 단오절 문화를 강탈해갈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며칠 전에 열린 “중국민족 민속문화 보호공정 시범작업에 대한 교류회의”에서 저우허핑(Zhou Heping)은 조급하게 말하길: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오절은 중국의 전통명절이다. 만약 외국의 유네스코 무형문화 신청이 성공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우리는 무슨 안목으로 조상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우허핑은 매체를 향해 현재 중국이 모든 전통명절을 묶어서 집체적으로 유네스코에 ‘인류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작’으로 서둘러서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 전통명절은 다채롭고, 문화 내면도 풍부하며, 인류의 독특한 문화 기억을 남기고 있다. 조상들이 창조한 역사 문화유산에 대해 반드시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민족 민간문화에 대한 보호를 최고로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민중이 특히 젊은 층이 중국 스스로 전통명절을 냉대하지 말 것을 희망하였다.¹²

11 劉玉琴, 2004.5.6, 「近日東北一位大學教授給文化部副部長周和平發來一份急件, 說據可靠消息: 亞洲某國準備向聯合國教科文組織申報‘端午節’為本國的文化遺產, 目前已將其列入國家遺產名錄, 很快將向聯合國申報人類口頭遺產和非物質遺產代表作」, 『人民日報』, 第四版.

12 劉玉琴, 2004.5.6, 위의 글.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것은 2004년 한국이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당연히 이 보도는 중국 내에서 지대한 관심과 반향을 불러왔다. 중국 각지의 모든 언론매체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런민리바오』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전후매락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일반 국민들도 “우리는 무슨 안목으로 조상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사를 보고 카다란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기사를 접한 전국 곳곳에서 우리 중화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며 서로 앞다투어 강릉단오제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고, 수많은 네티즌과 독자들은 중국 단오절 문화를 끝까지 수호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III. 중국인들 단오(굴원)문화 강탈로 오해하다

20세기 중엽, 중국 저명한 고전문학자인 베이징대 교수 여우귀언(游國恩)은 「위대한 시인 굴원 및 그의 문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절이라 칭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날은 우리 조국의 위대한 애국시인 굴원의 기일이다. 인민들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이날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각종 의식을 거행하며 그에 대한 애도와 숭경(崇敬)의 의미를 나타낸다. 수많은 기념 의식 중에서 쫓즈를 먹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다음으로 남방 각지에서 ‘경도(競渡)’라 칭하는 용선경기가 있다.¹³

중국 단오절의 기원에는 여러 학설이 있다. 전국시대 굴원¹⁴ 이전에 이미 단

13 游國恩, 1957, 『楚辭論文集』,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273쪽.

14 굴원은 중국 전국 후기 초(楚)나라 사람이다. 이름은 평(平)이며, 중국 전국시대 후

오절이 존재했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중국 일반 민중들은 단오절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굴원에 관한 고사를 떠올린다. 앞에 언급한 여우귀언 교수의 기록도 바로 그런 면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중국 학계와 민간에서는 단오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굴원과 연계한 명절로 인식한다. 굴원으로 인하여 쫄쫄리를 먹고, 굴원 때문에 용선경기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한마디로 굴원과 단오절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국을 비롯한 타이완,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5월 6일자 『런민르바오』 보도 이후, 중국의 각종 언론 매체가 앞다투어 이 기사를 연이어 인용 보도하였다. 특히 저우허핑의 ‘무슨 안목으로 조상을 대할 것인가?’라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구절을 대부분 언론들이 빠짐없이 인용하였다. 보도를 접한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굴원이었다. 중국 최초의 애국시인이자, 중국 문화 근원 초사체 창시자, 민족영웅 굴원을 빼앗아가서 유네스코에 한국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오해했던 것이다. 거센 반발이 이어진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굴원의 생평과 관계된 지역에서는 더욱 반발이 거셌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치엔룽왕(千龍網)』의 5월 7일자 보도를 보자.

단오절이 만약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이며 치욕이다. ... 웨양시의 인민들은 단오절에 대해 매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반드시 잘 보호해야 한다. 웨양시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것이며, 끝까지 우리 것에 속하는 단오절을 수호할 것이다.¹⁵

이 보도는 굴원이 유배 갔던 후난성 웨양시 지역민들의 울분을 반영하고 있다. 동일한 5월 7일 남방 대도시 광저우에 있는 『양청완바오(羊城晚報)』의 보

기의 정치가이자 문학가로 중국 최초의 애국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초사체(楚辭體) 시를 처음으로 창작하였다. 생졸연대는 불분명하나 약 기원전 340~기원전 278년경으로 전하고 있다.

15 「端午節被列入別國遺產, 岳陽要用行動捍衛端午節」, 『千龍網』, 2004.5.7.

도를 보자. “우리나라 단오절이 다른 나라 문화유산?(我國端午佳節, 他國文化遺產?)”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이) 강탈하여 등재한다는 소식이 국민들의 감정적인 언사를 촉발시켰고, 웨양과 미뤄 지역은 끝까지 수호할 것을 맹세하였다(搶報消息引發國人感言, 岳陽汨羅誓言捍衛)”¹⁶는 소제목 아래, 저우허핑의 한국 찬탈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교류회의에 참가한) 대표¹⁷들은 현재 젊은 층이 서양(외국)의 명절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밸런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문화 내면을 갖춘 우리 중국 전통명절은 냉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 전통 명절뿐만 아니라, 중국 민족과 민간문화 전체의 생존환경은 현재 경제 세계화와 현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¹⁸

서구 명절을 배격하고 소외받고 있는 우리 전통명절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방 도시 랴오닝(遼寧)에 본부를 둔, 『스파이상바오(時代商報)』의 5월 8일자 ‘신량왕’에 게재된 보도내용을 보자.

미뤄시(汨羅市)의 부서기 휘동화(霍東華)는 단오절이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놀랐다. 단오절은 중국의 전통명절이며, 이것은 중화민족의 정수이다. 반드시 빼앗길 수 없다. 미뤄시의 전통문화는 대부분 미뤄장(汨羅江) 굴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단오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⁹

16 『金羊网-羊城晚報』, 2004.5.7(<http://www.sina.com.cn>).

17 “중국 민족 민속 문화 보호공정 시범작업에 대한 교류회의”에 참가한 대표

18 『金羊网-羊城晚報』, 2004.5.7(<http://www.sina.com.cn>).

19 『時代商報』, 2004.5.8(<http://www.sina.com.cn>).

미뤄장은 굴원이 투신자살한 곳으로 굴원을 추앙하는 마음이 특별한 지역이다. 이 외에 중국 중부지방인 후난성 창차에 기반을 둔 『동광신보(東方新報)』 5월 8일자 보도를 보자.

단오절은 중화민족의 것이다. 어제 후난성 ‘신바오新報’의 “후난성은 단오절을 수호한다”는 문장은 강렬한 반향을 불러왔고, 독자들은 단오절이 서양(외국)의 명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력히 표명했다(讀者強烈表示不讓端午節成“洋”節). 이 소식은 곧바로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시민이 우리 민족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어떻게 하면 단오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신문의 핫라인 0731-2204000으로 전화하는 것을 환영한다.²⁰

눈여겨볼 점은 첫째, 아직 유네스코에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중국의 모든 언론 보도는 외국(한국)에서 중국의 단오절을 강탈해가는 것으로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²¹ 이러한 자극적인 언론보도는 당연히 혐한정서를 자극하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둘째, 일반적으로 ‘양절(洋節)’은 서양 명절 혹은 외국 명절을 가리킨다. 단오절이 한국의 문화유산 목록에 편입되어 등록된다면, ‘양절’로 편입된다는 표현이 매우 특이하다. 핫라인을 통해서 단오절 수호 의견을 듣는다는 방식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굴원이 유배당한 이후 ... 지금까지 2,000여 년이 되었다. 단오절이 다른 나라의 국가문화유산명단에 편입되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모든 이들, 특히 단오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 단오절을

20 『東方新報』, 2004.5.8(<http://www.sina.com.cn>).

21 보도에 의하면,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2004년 10월 완성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송부하였다. 이후 유네스코의 보완자료 요청에 따라 2005년 3월에 보완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2005년 11월 25일 등재를 확정지었다.

서양(외국)의 명절로 만들 수 없다(不能讓端午節成“洋”節). 단오절은 우리의 전통축제이다. 이것은 후난성 인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민족전통을 끝까지 수호해야 한다.²²

내면이 다른 한국 강릉단오제를 중국의 단오절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굴원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 언론의 시각이자 중국인의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의 단오절이 한국에 빼앗겨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바로 “서양(외국)의 명절(洋節)”로 변모한다는 시각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중국 제1의 상업도시 상하이에 기반을 둔 『신원완바오(新聞晚報)』 5월 9일자에 게재된 “각계 반응”이라는 기사 부분에서 상하이교통대학 한 교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단오절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아시아 국가(한국)가 성공적으로 등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인류의 구전유산과 무형유산 대표작은 독창성, 완성성 및 진실성의 세 가지 특징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특정 국가의 단오절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2,000여 년 전, 굴원은 웨양지역의 미뤄장에서 순교하였다. 웨양 사람들은 단오절에 대한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웨양시는 장차 신속하게 행동해서 우리의 단오절을 단호하게 방어해야 한다.²³

위의 보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중국 언론들은 폐쇄적인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기인한 것이면 모두 중국 것이며, 따라서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절대 등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둘째,

22 『東方新報』, 2004.5.8(<http://www.sina.com.cn>).

23 梁宏峰, 2004.5.9, 「韓國準備申報端午節爲文化遺產 我正加緊考慮對策」, 『新聞晚報』.

대부분 중국 언론과 중국인들은 단오절과 굴원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는 것을 2,000년 전 중국의 굴원 문화를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강릉단오제 내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다원성과 변이성, 그리고 문화의 교류, 융합, 변용이라는 문화 유동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관된 문제로 한국이 중국 단오절을 실제로 강탈해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지가 없다. 당연히 한국 강릉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의 차이에 대해 심층 분석 보도하려는 시도가 매우 부족하였다. 오히려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준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 민중들에게 단오문화를 수호해야 한다며, 단오를 서양(외국)의 명절로 편입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만 반복 강조하고 있다.²⁴ 넷째, 중국 젊은이들이 풍부한 내면을 가진 중국 전통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서양(외국)의 명절을 중시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언론매체들은 저우허핑의 “특히 젊은 층들이 중국 스스로의 전통명절을 냉대하지 말 것을 희망하였다”는 구절을 이구동성으로 보도하며, 하루빨리 중국 젊은 층이 중국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실 필자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으로 판단된다.²⁵ 크리스마스와 밸런타인데이 등 서구적인 가치관의 유입으로 기독교의

24 샤샤오리도 이러한 언론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인터넷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매체들이 중국 민중의 험한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면,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에 대해 매체들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보도할 때 단오 두 글자만 집중해서 보도하고, ‘단오’ 두 글자 뒤의 (한중의 차이인) (단오)‘제’와 (단오)‘절’의 차이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 단지 표면적인 문자상의 유사함만 보고 문화의 내면의 차이를 탐구하지 않았다.” 夏曉莉, 2014, 「從文化之爭探討中國民間“嫌韓”情緒的解決之道」, 『經濟研究導刊』第23期, 295쪽.

25 최근 중국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서양의 명절을 배척하는 보도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내몽골 투취안현(突泉縣)의 선전부가 제공한 「나는 중국인이다. 서양명절 지내는 것을 거절하는 창의서(我是中國人, 拒絕過“洋節”倡議書)」를 작성하여 『평파이신원(澎湃新聞)』(2019.12.23)에서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BBC NEWS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등한 가치관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기 때문이다.²⁶

종합해보면, 한국에 의한 단오절과 굴원문화 강탈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한국과 한류에 우호적 정서를 가졌던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해 질시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대장금> 열풍이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구던 2005년 11월, 결국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했던 중국인들은 이 사건을 중화민족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준 것으로만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민족 영웅 굴원과 관련된 단오문화를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해 단오절을 빼앗아간 한국에 갇아주자”(주간 『21세기경제』 보도)²⁷는 기사 제목에서도 중국 언론의 한국에 대한 “문화강탈” 인식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중문, 2018년12월25일자에서 安徽성 泗縣의 官方報道를 인용하여, 안휘성 스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서양의 명절을 배척하는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자(抵制洋節, 從我做起)”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성탄절은 중국인의 치욕이다(聖誕節是中國人的恥辱)”라고 말하며, 서양의 명절은 중국에 큰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6679194>).

26 2017년 1월 26일, 중공중앙판공청(사무실)과 국무원판공청(사무실)에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계승발전 공정의 실시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關於實施中華優秀傳統文化傳承發展工程的意見)」를 발표하였고, 또한 통지문을 보내며 춘절, 중추절, 단오절, 칠석 등의 중국 전통명절에 대한 중시와 시행을 요구했다는 뉴스를 『澎湃新聞』(2019.12.25)에 보도하고 있다. 이 뉴스의 제목은 “서양의 명절을 지내지 않는 것, 당원과 간부들로부터 시작하자(不過洋節, 從黨員干部開始!)”이다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335905).

27 박영환, 2008, 『문화한류로 본 중국과 일본』, 동국대학교출판사, 182쪽 재인용.

IV.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와 중국인의 자각

여론에 편승하여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비난하는 일부 중국 학자들도 있었지만, 학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민속학회 비서장인 베이징대 교수 가오빙중(高丙中)은 2004년 5월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각도에서 보면, 비록 단오절 발원지가 중국이라 할지라도 강릉단오제 문화는 한국문화관념이 들어간 것이므로 합리성이 있으며 반드시 존중할 가치가 있다. 동시에 한국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문화약탈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반대한다.’²⁸ 이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2005년 11월,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이후 가오빙중 교수는 여전히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였다. 『난방두스바오(南方都市報)』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강릉단오제와 중국 단오절은 분명히 내면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성공은 오히려 중국에 긍정적인 일깨움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한국은 전통문화활동에 현대적 요소를 주입하고, 현대적 변형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기에 중국문화유산보호와 중국 단오절의 유네스코 등재에 좋은 거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⁹

하지만 이미 중국 언론의 전방위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네티즌들과 국민들은 한국이 중국 굴원문화를 강탈해서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성적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5년 12월 『베이징칭니엔바오(北京青年報)』에서는 “한국의 단오제 등재 성공을 어떻게 대해

28 董曉賓, 2004.5.17, 「對話中國民俗協會秘書長:韓國人有他們的合理性」, 『國際先驅導報』(<http://www.sina.com.cn>).

29 「聯合國“非物質遺產”端午申遺之爭韓國勝出中國專家稱韓國端午申遺并非坏事」, 『南方都市』, 2005.11.26.

야 하는가, 전문가와 네티즌의 의견은 완전히 다르다”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어떠한 학자들은 중한 양국의 단오절(혹은 단오제)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르다면 왜 똑같이 모두 ‘단오’라고 칭하겠는가? 이러한 논점은 오히려 중국 단오절의 주변국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폄하하는 것이다. 사실 문화유산의 본토화 현상은 대단히 보편적이다. 설사 우리나라라고 할지라도 각 지역에도 존재하는 것이다.³⁰

전형적인 중화중심주의적인 사고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에서 기원하였다면 그 문화는 영원히 중국 소유라는 문화패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³¹ 2004년 이후 중국 단오절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2009년, 중국 언론들은 강릉단오제가 중국 단오(구월)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웃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은 인색하였다. 중국 경제주간지 『21세기 경제 보도』에서 “한국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비록 중국 단오절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³²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5년 11월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중국학계의 시각은 복잡다단했다. 위에서 언급한 가오빙중 교수처럼 학자적인 양심에 따른 객관적인 견해를 나타낸 소수의 학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30 顏菁, 2005, 『北青網·北京青年報』, 來源: YNET.com.

31 중국인들이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 기원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음수사원(飲水思源) 문화인식에 대해서는 Ⅷ장에서 다루고 있다.

32 鄭寅淑·張麗萍, 2009, 「論互聯網中中韓兩國端午文化遺產爭論的認識差異及其作用」, 『當代韓國』秋季號, 60~61쪽 재인용.

것보다는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 내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2009년 “단오절 등재로부터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유실과 보호를 말한다”라는 문장에서 자국 문화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등재는 중국전통문화보호에 대한 성찰을 가져와 중국 사회 각계에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였다. 당연히 ‘중국 전통명절보호’라는 인식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도 폭넓게 공감을 얻게 되었고, 이들에게 전통문화보호라는 성찰을 남겨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등재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각성하기 시작하였고, 놀라움과 피로움을 느꼈으며, 비로소 ‘단오를 보위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더욱 많은 민중은 ‘단오절은 중화민족의 전통명절이며, 모든 중국 인민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끝까지 우리 민족 전통에 속하는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소리 높여 외쳤다.³³

한국 강릉단오제 등재 성공은 중국 사회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자국문화에 대한 중시와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통명절을 보호하는 것은 중화민족 스스로의 문화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문화자각의 표현이다.”³⁴ 따라서 중국인들이 전통명절에 대한 인식이 소홀하게 된 원인과 이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유실을 방지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굴원의 고향인 후베이성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삼협문화연구』에 실린 문장도 흐름을 같이한다. 한국 강릉단오제의 문화적 형태와 중국 역사 문화와의

33 宋洋·郭德剛, 2009, 「由“端午節申遺”談我國傳統文化的流失與保護」, 『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188쪽.

34 宋洋·郭德剛, 2009, 위의 글, 188쪽.

연원 관계를 살펴보고, 중국 입장에서 한국 ‘강릉단오제’보다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뒤쳐진 원인을 반성한다. 중국 사회는 모든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와 자각에 대한 길이 아직 요원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³⁵ 이 외에도 중국 문화유산 보호에서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국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세 측면에서 건의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와 중국 국민들의 사상도덕건설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화유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문화유산의 보호와 중국의 현대화 건설을 상호 적응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³⁶ 이 외에 리우진과 두윈시엔은 중국 사회가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질타하며 중국인들의 이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³⁷ 이처럼 한국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는 중국인들이 자국 전통문화의 소중함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면서 자국 전통문화 보호라는 인식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 학자들은 중국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시와 보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베이징대 천리엔산 교수가 2011년에 발표한 논문 「단오절 논쟁으로 본 중한 양국의 문화충돌」³⁸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한중 간의 단오절 논쟁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그는 한중 단오절 논쟁의 출발점이 『런민르바오』에 실린 저우허핑 부부장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중 양국 단오절 차이에 대해 고증하면서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유득공의 『경도잡기』,

35 王作棟, 2010, 「韓國端午節及其它」, 『三峽文化研究』, 25쪽.

36 李博, 2014, 「中韓文化遺產之爭對我國文化遺傳保護的啓示」, 『吉林省教育學院學報』 9期(第30卷), 147~148쪽.

37 “세계화 충격 아래, 우리나라 전통문화, 전통명절은 냉대받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전통문화 유실을 막기 위해 우리들은 반드시 전통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중국)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시와 보호가 부족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엄중한 형세는 우리들이 필요한 대책을 취해 보호와 전승해야 함을 요구한다.” 劉金·杜文軒, 2010, 「中韓申遺之爭對無形文化遺傳保護的啓示-以端午節和江陵祭為例」, 『科教導刊』, 218쪽.

38 陳連山, 2011, 「從端午節爭端看中韓兩國的文化沖」, 『民間文化論壇』 3期, 12~18쪽.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등 다량의 한국 고문헌과 중국 문헌을 통해 한국 단오절의 특수성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유교계례식의 한국 강릉단오제를 중국의 단오절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중국 성황묘 숭배신앙과의 비교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³⁹ 이런 주장은 양국의 논쟁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응대하던 기존 학계의 주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이다. 또한 이 한중 간의 문화충돌은 중국인들의 한국 단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면서 양국 논쟁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심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한중 쌍방 모두가 단오절 문화는 자기 것이라 인식하는 ‘문화자아중심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⁴⁰ 천리엔산 교수는 중국인들은 ‘자아중심주의’에 빠져 있으며, 한국인들은 ‘문화자아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 논문은 고급의 단오문화에 대한 고증과 풍부한 사료의 운용,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될 만한 논문이다. 다만, 한국 학계 일부분의 주장을 확대하여 한국 학계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활용한 점은 아쉽다. 또한 그가 제기한 한국인의 ‘문화자아중심주의’라는 정의와 논거가 불명확하다. 아마도 한국인이 가지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비판으로 판단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면 더욱 좋았을 듯하다.

39 이전의 논문들은 대부분 논쟁의 핵심을 규명하기보다는 한국의 강릉단오제 등재 신청이 중국인들에게 주는 충격, 현재까지 중국이 전통문화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 게다가 차후에 중국 전통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천리엔산 교수는 중국 학자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논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판단된다. 陳連山, 2011, 「從端午節爭端看中韓兩國的文化沖」, 『民間文化論壇』3期, 14~15쪽.

40 陳連山, 2011, 위의 글, 17~18쪽.

V. 새로운 문화쟁탈 논쟁으로 확대되다

사실 한중 간의 단오절 논쟁의 심각성은 단오절 논쟁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오절 논쟁 자체만의 문제라면 중국도 자국의 단오절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해결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한중 간 단오절 논쟁이 중국의 오해로 빚어진 논쟁이었다고 사실적으로 보도해주는 중국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비록 간헐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양국 단오문화의 상이성을 강조했다지만, 2004년 5월 이후 대부분의 중국인과 네티즌의 정서는 이미 한국은 우리 것을 강탈해간 민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9월 말 중국의 단오절도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등재된다. 굴원문화 중심의 중국 단오절이 한국에 빼앗긴 것이 아니며, 강릉단오제의 내면이 중국 굴원 단오절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중국 학자, 언론계도 당연히 이를 인지했지만, 어느 누구도 한국을 오해했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거나 해명하는 보도나 설명이 없었다. 오히려 일반국민들은 중국 단오절이 등재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⁴¹ 심지어 “(2009년 중국의 단오절 등재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전통문화의 존엄을 지켜낸 것이다”⁴²라고 강변하는 학자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도 없고, 한국은 빼앗아 간 것도 없는데, 즉 중국 전통문화 존엄이 한국에 의해 훼손당한 적이 없는데, 존엄을 지켜냈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중국 단오절이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했음에도 강릉단오제 등재가 중국 사회

41 사실 2009년 9월30일 중국 단오절의 등재는 매우 큰 사건이었다.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등재 시점이 200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와 맞물린 점도 있지만, 중국 단오절을 한국에 강탈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기에 하루 아침에 다시 이를 뒤집어서 부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일반 국민들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년을 전후로 하여 비로소 단오절에 대해 한국을 오해했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였다.

42 劉金·杜文軒, 2010, 앞의 글, 217쪽.

에 준 충격은 중국 전통문화의 비애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만큼 단오절 논쟁은 중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천리엔산 교수의 주장을 보면, 중국인들의 분노 정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저우허핑 부부장의 말이) 하나의 돌이 되어 수많은 파도를 일으켰다. 많은 중국인들, 학자를 포함해서 정치가들은 모두 중국이 계승하고 있던 2,000여 년의 단오절이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더욱 욕설로 가득 찼고, 한국의 유네스코 신청은 중국 문화유산을 절취한 것이라 여겼다. ... 이런 주장에 대한 당시 중국민속학회 이사장인 리우쿠이리 선생의 비판과 민속학자 허자권 등이 한국 강릉단오제 현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강릉단오제와 중국 단오절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이후에도 결코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보아 이번 단오절 논쟁의 영향이 얼마나 심원한지 알 수 있다.⁴³

중국의 대표적인 민속학자들이 강릉 현지에서 직접 강릉단오제를 참관하고 돌아와서 중국의 단오절과 다르다는 설명에도 일반 중국인들의 오해는 불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학문적인 해석과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무런 실체가 없었던 한국 강릉단오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적대적인 감정은 이처럼 확고하게 굳어지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 간에는 또 다른 문화논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었다. 중국의 험한정서 확대에 대해 중앙민족대학 샤샤오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005년 한국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등재 성공 이후, 2008년 유엔보건기구에서 (한국) 한방 경혈을 표준으로 참고한다는 주장과, 한국 다수 민중들이 중의를 한의로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논쟁이 제2차 중한문화논쟁으로 형성되었다.⁴⁴

43 陳連山, 2011, 앞의 글, 13쪽.

중국 국민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굴원의 단오절을 빼앗겼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채 아물기도 전에 중의학을 또 한국에 빼앗기게 되었다는 보도는 중국인들을 또다시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2008년 유엔보건기구에서 한국 한방 경혈을 (국제)표준으로 한다는 국내언론 보도는 한국 한의학계의 과도한 홍보로 알려졌다. 한국 침구와 경혈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었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중국 중의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중의학계의 손을 들어주었다.⁴⁵ 필자가 보기에 2008년 3월, 한국 한의학계가 유네스코에 허준의 『동의보감』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의학서적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중국인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한의를 중의와 동일시한다. 중국인들의 관점에서는 ‘한의’라는 명칭도 인정하지 않지만, ‘한의’는 ‘중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 논쟁은 또다시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중국 문화를 약탈하는 민족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었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다른 문화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2007년 광저우(廣州)에서 발간되는 『신쾌이바오(新快報)』는 특집 기사를 통해 박정수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가 10여 년의 연구 결과 (한국어) 한자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사실 이 뉴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 뉴스였다.⁴⁶ 이 외에도 이런 유형의 가짜 뉴스가 중국에서 봇물을 이루었다. 공자, 월나라 미인 서시(西施), 명나라 시기 『본초강목(本草綱目)』 저자 이시진(李時珍), 신해혁명 주도자 쑨원, 심지어 마오쩌둥, 농구선수 야오밍까지 한국인의 후예라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되었다는 가짜

44 夏曉莉, 2014, 앞의 글, 294쪽.

45 정주호, 2008.7.3, 「침술은 우리 것 … 韓中, 침술 국제표준 논란(종합)」, 『연합뉴스』.

46 「한국의 漢字 세계유산 신청설에 中 네티즌 “발끈”」, 『노컷뉴스』, 2007.12.13 (<https://www.nocutnews.co.kr/news/387502>).

뉴스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⁴⁷ 한자, 중의, 혼천의 발명권도 한국에 있다고 한국인들이 주장한다는 뉴스도 판을 쳤다. 당연히 이러한 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인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이해 못할 문화침략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런 유형의 뉴스가 날조된 것이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인터넷에 난무하는 이런 가짜뉴스를 일부이지만 학자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4년, 한 대학교 학술지에 실린 한 사례를 소개한다.

2001년 한국은 긍정종묘제사의 예악을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신청하였다. 그것은 매우 짙은 중국의 제사 예의 색채를 띠고 있다. 2005년 한국의 강릉단오제 등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한 단오절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공자, 서시, 이시진 등 모두가 한국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중의(中醫), 침구(針灸), 한복(漢服), 심지어 한자도 모두 그들의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수법은 일반 대중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⁴⁸

강릉단오제 이외에도, 한국의 종묘제례악이 중국과 유사한데 한국이 유네스코에 이미 등재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외에 공자, 서시, 이시진 등이 한국인의 후예라고 한국인들이 주장한다는 유언비어를 사실로 판단하고 대학 학술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일이다. 대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계에서조차도 유언비어에 미혹되어 험한의 선봉에서 한국을 문화침략자라고 공격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

47 박영환, 2010, 「韓國端午의特征與韓中端午申遺后的文化反思」, 『중국어문학』, 제55집, 522쪽.

48 李博, 2014, 앞의 글, 147쪽.

반 민중과 네티즌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2021년의 한중 간에 벌어진 김치와 한복 논쟁은 바로 이러한 단오절 논쟁, 중의, 침구, 한복 관련 논쟁의 연상선상에서 나타난 문화쟁탈 논쟁이다. 이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중국문화를 강탈해갔다고 주장한 반면, 최근 논쟁은 주체가 완전히 뒤바뀐 형태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우리 것을 강탈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웃지 못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VI. 단오절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중국의 오해로 비롯된 한중 간의 단오절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서구적 평등한 가치관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고, 젊은 층의 사회주의 이념이 희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K-pop 열풍 속에 중국 어린 학생들이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열광하는 모습은 중국 당국으로서는 용인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단오절 논쟁 이후 바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 확산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러한 서구문화와 외래문화에 대한 인식은 단오절 논쟁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서구적 문화 종교관의 중국 유입 차단

단오절 논쟁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시기의 문제이다. 양국 수교 이후, 한중 우호관계가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1997년 <사랑이 뭐길래> 열풍 이후, 특히 젊은이들이 K-pop의 열풍에 열광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듬해 1998년에 방송된 <별은 내 가슴에> 주인공 안재욱이 원조 한류스타로 등극하며 콘서트 공연 행사장마다 5만~6만여 명의 팬을 끌고 다녔다.⁴⁹ 당시 필자가 아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안자이쉬(안재욱)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였다. 먼저 드라마 열풍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K-pop 열풍이 이어졌던 것이다. 당시 열풍 현상을 대중문화평론가인 최규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지에서 발매한 음반을 통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H.O.T는 2000년 2월 중국 문화부 초청으로 베이징 공련(工人)체육관에서 공연을 열었다. 무려 1만 2,000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놀랍게도 공연장에는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중국 여학생들도 있었다. H.O.T와 함께 클론, N.R.G, 베이비복스, 태사자 등도 중국 팬들의 마음을 달궜다.⁵⁰

한국 드라마의 개방은 중국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중국 당국은 한국 문화에 대해 비교적 호감을 가지고 문화수용의 문턱을 낮추었다. 중국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했고, 아이돌 문화가 생소했던 당시 중국의 방송환경에서 같은 동양인 아이돌 그룹의 공연은 중국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 학생들이 K-pop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SM 대표 이수만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2000년 2월에 처음으로 H.O.T가 중국 베이징의 공인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을 때, 이미 필자는 한류 열풍이 결코 거품만은 아님을 체감할 수 있었다. 당시 H.O.T의 베이징 콘서트를 보러 온 중국의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한국어로 H.O.T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가방에 태극기와 H.O.T 사진을 함께 달고 다녔다. 놀라운 사실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도 아닌 중국 청소년들의 가방에 달려 있는 태극기 배지를 보는 순간의 감동이란! 당시 중국에서 느꼈던 한국 문

49 강수진·박은경, 2012.8.21, 「드라마서 K팝까지 ... 중국 현지화 통해 쌍방향 한류 진화」, 『경향신문』(<https://www.khan.co.kr/culture/tv/article/201208212142245>).

50 최규성, 2012, 「잇따른 히트 ... 1997년 여름 음반시장 '점령」, 『최규성의 대중문화산책』(<https://blog.naver.com/oopldh/10149693615>).

화 열풍과 가능성은 중국 언론에서 ‘한류’라는 신조어로 표현했으며, 그것은 지금
까지 이어지고 있다.⁵¹

어린 학생들이 “가방에 태극기와 H.O.T 사진을 함께 달고 다녔다”는 부분은 중국 당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일회성으로 생각하였는데, 한류 열풍이 드라마, 음반, 콘서트, 게임 등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열기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단오절 문화를 이웃 나라에서 강탈해갔다는 논리는 중국 국민들의 민족주의적인 응집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선 젊은 층이 서양의 명절(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등)을 중시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공산당원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무신론자이며, 공산당만을 믿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에서도 중국 당국의 서구적인 가치관과 종교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굴원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수호하자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국민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고양하였을 것이며, 서양의 명절을 배척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018년 “중국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금지령 재공포, 서양 명절 논란은 관방의 종교에 대한 우려 표시”⁵²라는 BBC 뉴스 제목은 서양명절문화를 배척하고 자국의 전통명절문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중국 유관당국의 “모든 민중이 특히 젊은 층들이 스스로 중국 전통명절을 냉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정책과 동일하다. 이는 바로 자국 문화 유산에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젊은 층이 밸런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명절에 열중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앞의 저우허핑 주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단오절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1 이수만, 2001.9.26, 「[DOT칼럼] 한류 열풍과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이코노미 21』(<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03>).

52 『BBCNEWS 중문』, 2018.12.25(<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6679194>).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저장성(浙江省) 윈저우(溫州)와 항저우(杭州) 등지에서는 기독교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장성 당국은 교회의 십자가 수백 개를 철거하였고, 극렬히 반항할 경우 교회도 철거했다는 『아주주간』의 보도가 있었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정부 이후 저장성에서만 1,200~1,700개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었다고 한다. 2018년 3월 중국에서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서의 성경 판매도 금지했다는 보도다.⁵³ 2016년 연말에 공산당 간부의 이념교육을 담당하는 베이징의 “중앙당교(中央黨校)”가 베이징대 유학원과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주제가 흥미롭다. 서로 부조화를 이룰 것 같은 ‘유학과 사회주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중국 정부 당국 경제이념의 방향, 즉 서구적인 기독교 문화 가치관의 배척과 더불어 전통의 유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중화중심적인 사유를 경제이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런민르바오』, 단오논쟁의 선봉에 서다

흥미로운 점은 단오절 논쟁을 촉발시킨 2004년 5월 6일자 『런민르바오』의 “스스로의 전통명절을 냉대하지 말자”라는 기사가 보도되기 약 20여 일 전인 4월 17일에 이미 『신화왕』에서 유사한 제목과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문화부의 관원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전통명절을 냉대하지 말아야 함을 깨우쳤다”라는 보도였다. 이 기사는 세 방면에서 『런민르바오』 기사와 동일하다. 첫째, 기사의 취재원이 저우허핑 중국문화부 차관이라는 점이다. 둘째, 취재한 장소, 출발점도 동일하게 “중국 민족 민속 문화 보호 프로젝트의 시범 작업에 대한 교류회의”이다. 셋째, 기사의 핵심 내용은 동일하게 “스스로의 전통명절을 냉대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두 기사에 대한 반응은 천양지차였다. 주된 이유는 보

53 『BBCNEWS 중문』, 2018.12.25(<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6679194>).

도 방식의 차이였다.

4월 17일자 『신화왕』의 보도는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 방식이었다. 서방 선진국가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현재 중국의 민간 문화생태에 깊숙한 충격을 주고 있어, 중국의 젊은이들이 서양 명절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전통명절을 홀대해서는 안된다며 독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었다.⁵⁴

5월 6일자의 『런민르바오』의 보도도 유사한 주제였지만, 보도화법이 완전히 상이했다. 먼저 외부를 겨냥함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단순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가 우리의 전통명절문화인 단오절문화를 강탈하려는 것 같다. 우리 단오절 문화가 이웃 나라에 의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우리는 조상을 대할 면목이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조상들이 창조한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해 반드시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젊은 층들이 스스로의 전통명절을 냉대하지 말고, 우리의 전통명절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화살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내부에 자극을 주며 응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자국 문화유산 중요성을 각인시켜 젊은 층의 사회주의 이념 이탈을 막으려는 교육지책이자 유관부서(언론)의 전략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 언론들이 단오절 논쟁을 부추긴 정도도 보인다. 샤샤오리도 이러한 언론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⁵⁵

한국과 중국의 단오의 차이가 명백함에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단오라는 두 글자에만 매달려서 한국이 강탈해갔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저우허핑 부부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언급된 동북의 모대학 교수는 우빙안인데, 5월 6일자 『런민르바오』 보도 뒤, 본인

54 李建敏, 2004, “文化部官員提醒國人不要冷落自己的傳統節日”, 『新華網』, 2004.4.17.

55 주 24) 참고.

이 직접 중국 언론의 보도가 과장되고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5월 11일 『베이징위러신바오』의 보도 내용을 보자.

우빙안 교수는 본 신문이 몇 가지 사항을 해명하도록 위탁하였다. 게다가 그는 (한국)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신청에 대해 (중국 것을) 빼앗아 등재한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고, 더욱이 (중국 단오절에 대한) 보위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과격한 말도 하지 않았음을 재삼 강조하였다.⁵⁶

우빙안 교수가 문화부 부부장에게 연락한 의도는 한국은 1967년부터 이미 강릉단오제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2,500년된 중국의 단오절 등 민속명절은 보호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⁵⁷ 따라서 유관부서에서 민간문화를 중시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호소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설사 다른 나라에서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중국 역시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⁵⁸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5월 6일 『런민르바오』의 보도는 거의 오보에 가깝다. 그 뒤 중국 언론의 보도행태와 특히 2005년 유네스코 등재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에 대한 비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대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국의 전통명절과 문화를 자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오절 논쟁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56 『北京娛樂信報』, 2004.5.11, “烏丙安委托本報澄清一些說法, 并再三強調——‘非物質文化遺產’申報不存在‘搶注’一說, 更沒有什麼保衛戰的‘聳言’.”(<http://www.sina.com.cn>).

57 『北京娛樂信報』, 2004.5.11, “烏教授說, 端午節是我國有着2500多年歷史的傳統節日 … 1967年就被列為韓國國家級‘第13號重要文化遺產’, 可是國內至今沒有把端午節等節日民俗列入保護項目.”(<http://www.sina.com.cn>).

58 『北京娛樂信報』, 2004.5.11, “烏教授說: 我的本意是呼吁有關部門重視民間文化, 保護非物質文化遺產 … 他國申報了, 我們還可申報, 即使聯合國批准了, 我們也可以.”

한 가지 부연 설명할 점은 중국의 전통명절의 폐지와 재지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런민르바오』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67년 “57개의 혁명조반과 조직은 연합하여 구풍속을 파괴하고, 춘절에 쉬지 않을 것을 공포하며, 대중의 권력투쟁을 전개한다”⁵⁹라는 제안서를 『런민르바오』에 게재하면서부터 ‘혁명화된 춘절’을 만들어 춘절을 폐지하였다. 마찬가지로 1980년 중국이 춘절 명절의 공휴일제도를 전면적으로 회복했을 때도 『런민르바오』에 “왜 춘절에 쉬지 못하는가?”, “농민들로 하여금 안정된 설을 지내게 하자”라는 농민이 보내온 편지를 1979년 1월 17일에 게재하는 것을 신호로 정부는 춘절 휴가제도를 회복⁶⁰하였다.

이로부터 25년 뒤에 전개되는 한중 단오절 논쟁도 『런민르바오』의 리우위친 기자가 저우허펑 부부장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오절은 중국의 전통명절이다. 만약 외국의 유네스코 무형문화 신청이 성공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우리는 무슨 안목으로 조상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장을 인용 게재함으로써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분명한 점은 한중 단오절 논쟁이 우연한 발생이 아닌 것만은 명백해 보인다.

3. 음수사원(飲水思源)의 문화인식

송대 주희의 『논어집주』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옛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모든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덜어내어, 그릇 사이에 놓고 먼저 선대에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근본을 잊지 않음이다. ... 이 구절은 공자께서 음식 예절을 기록한 것이다.⁶¹

59 「五十年前革命化春節：過年唱語錄歌」, 『每日頭條』, 2018.2.15(<https://kknews.cc/history/km38pbr.html>).

60 「五十年前革命化春節：過年唱語錄歌」, 『每日頭條』, 2018.2.15(<https://kknews.cc/history/km38pbr.html>).

61 “古人飲食 每種各出少許 置之豆間之地 以祭先代始爲飲食之人 不忘本也, 齊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그것을 있게 해준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논어』의 「향당편」에 나오는 “비록 거친 밥이나 나물국이라고 해도 반드시 고수레를 하셨으며, 엄숙히 하셨다(雖疏食菜羹, 瓜(必)齊, 必齊如也)”라는 구에 주희가 주를 단 것이다.

유사한 용어로 비교적 많이 알려진 음수사원(飲水思源)이란 용어가 있다. 중국 남북조 시기 유명한 문학가인 유신(庾信)이 남긴 것으로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의 은혜를 생각한다’⁶²는 뜻이다.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함을 일컫는 것으로 주자가 강조한 것과 유사한 의미이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중국 주류문화인 유가문화의 전통적인 가치관 “부모는 사람의 근본이다(父母者, 人之本也)”⁶³라는 의미와 내부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나 자신을 있게 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한 이후에도 이 관념은 여전히 환영을 받았다. 현재는 마오쩌둥을 기념하는 홍색 혁명 구호로 자리 잡았다. 1930년대 마오쩌둥은 장시성에서 농민들과 함께 우물을 파서 지역 인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물은 마시면서 우물을 판 사람을 잊지 않고, 언제나 마오 주석을 그리워한다(吃水不忘挖井人 時刻想念毛主席)”라는 비를 세웠고⁶⁴ 현재 이 지역은 홍색 혁명의 중요한 교육장소가 되었다.

2016년 9월 5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국민 방문하여 박근혜 전 대통

嚴敬貌。孔子雖薄物必祭，其祭必敬，聖人之誠也。此一節，記孔子飲食之節。”(『論語集註·鄉黨篇』).

62 원래는 “과일을 먹을 때는 그 나무를 생각하고,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한다(落其實者思其樹, 飲其流者懷其源)”인데, 이를 줄여서 “落實思樹 飲水思源”로 활용한다. 중국 남북조 시기의 유명한 문학가인 유신(庾信)의 『徵調曲』에 나오는 명구이다.

63 “夫天者, 人之始也; 父母者, 人之本也.”(『史記·屈原列傳』).

64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물을 판 사람을 잊지 않는다(吃水不忘挖井人)」는 한 편의 기사문이다. 중국 초등학교 『語文』 교재에 실려 있다. 教育部組織編寫, 2016, 『語文』(一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령과 회담하면서 음수사원을 언급한 적이 있다. 비록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의 ‘음수사원 한중우의(飲水思源 韓中友誼)’ 말을 빌려서 표현했지만,⁶⁵ 당시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은혜’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유교의 근본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다 보니 심지어 중국을 ‘음수사원의 나라’라고 정의하는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이다.⁶⁶ 그만큼 중국에는 ‘음수사원’이라는 문화 인식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유교문화는 중국에서 발생하였기에 모든 유교문화는 중국 것이며, 단오절 문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였기에 그 근원과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음수사원’이라는 근본을 중시하는 유가 문화인식은 ‘동양 문화의 근본은 중국에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과 상호 연결된다. 본말(本末)이 전도되어 말(末: 한국 강릉단오제)이 본(本: 중국 단오절)보다 먼저 등재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신청한 단오제는 아주 깊이 중국인의 자존심을 아프게 찔렀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통문화가 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잘 보호받는 느낌인가? 이런 현상을 어떤 사람은 중국전통문화의 비애라고 직언한다.”⁶⁷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비록 중국 단오절을 빼앗아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⁶⁸이라는 관점에서도 동일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중국인, 학자를 포함해서 정치가들은 모두 중국이 계승하고 있던 2,000여 년의 단오절이 한국

65 최혜정, 2016.9.5, 「“음수사원” 꺼낸 시진핑 속내는 …」,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60034.html#csidx4ac9c826f6a77faa35b4bdeed1ca55b>).

66 유상철, 2013.12.19, 「중국은 음수사원·관시 나라, 한 번 인연 끝까지 간직」,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13433203#home>).

67 「對話中國民俗協會秘書長：韓國人有他們的合理性」, 『國際先驅導報』, 2004. 5.17(<http://www.sina.com.cn>).

68 鄭寅淑·張麗萍, 2009, 「論互聯網中中韓兩國端午文化遺產爭論的認識差異及其作用」, 『當代韓國』, 秋季號, 60~61쪽 재인용.

의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더욱 욕설로 가득 찼고, 한국의 유네스코 신청은 중국문화유산을 절취한 것이라고 여겼다.”⁶⁹ 한중 단오문화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유네스코에 신청하고 등재된 사실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네티즌과 일부 중국 학자들의 시각이다. 이것이 바로 음수사원 문화인식에 기반하는 중화 중심주의의 시각이다. 2005년에 한류 열풍을 분석한 한 중국 학자의 견해 역시 이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대장금〉을 보면 마치 유교전통문화의 정수를 진열한 박물관을 참관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 안타깝게도 〈대장금〉 같은 우수한 드라마가 중국에서 중국인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갑오전쟁 이전 줄곧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받들면서 증원의 조정을 향하여 조공을 납부하던 인접국에서 제작한 것이다.”⁷⁰ 자국의 전통문화실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지만, 이웃 국가의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는다. 고대 조공책봉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말(末)이자 소국인 조공국에서는 우수한 전통유교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본(本)인 대국(화하)이 유가문화를 상실했다고 탄식하고 있다. 문화인식이 대국과 소국 화하와 동이라는 고대 유교의 존왕양이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I. 맺음말

문화에는 유동성과 변이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인도 변방에서 온 불교가 그러하다. 인도 불교가 중국 토착의 도가사유와 결합하면서 중국화된 불교라 불리는 ‘선종’으로 탄생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서 중국 선종을 인도의 문화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를 인정하는 중국인도 없을 것

69 陳連山, 2011, 앞의 글, 13쪽.

70 詹小洪, 2006, 『韓流, 漢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42쪽.

이다. 하나의 문화가 출발하여 두 개의 문화를 만들고, 두 개의 문화는 다시 여러 갈래로 꽃을 피운다. 따라서 문화에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있다. 그런데 단오절 논쟁에서 보인 중국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의 관점은 문화의 변용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히 중국에서 출발한 문화는 모두 중국 것이라는 불변과 획일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중국 대륙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유교복고라는 열풍 속에서 한중 간 단오절 논쟁이 촉발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 문화쟁탈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중국 내부의 결속강화, 서구적인 가치관의 배척, 중국 전통문화 부흥을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서양의 자유주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중국 전통문화로 무장하고자 하는 열풍이 1990년대 후반부터 유교부흥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인 중국 청소년층을 향한 서구화를 차단하고, 중국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단오절 논쟁을 이어간 것이다. 문화대혁명 이후 ‘혁명화된 춘절’을 위해 전통명절을 폐지할 때, 또한 그것을 재복원할 때와 같이 단오절 논쟁도 『런민르바오』가 앞장서고 다른 언론들이 따라간 방식이었다. 결국 이 논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자국 전통명절문화보호시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 동력이 되었고, 중국 내 중화중심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한중 간 새로운 문화쟁탈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한중 간의 갈등도 격화되었다. 반드시 문화 근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유가문화인식도 한중 간의 갈등에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결국 단오절 논쟁은 대내적으로 자국 전통명절문화보호시책을 강화하면서 유교열풍을 가속화시켰다. 대외적으로 한국과 문화쟁탈 논쟁 확대를 통해서 서구적 가치관을 배격하면서 유교적인 틀 안에서 국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고대의 유교는 개인적인 관점,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규정한 인간관계의 원리도 규범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틀에서 보면, ‘존왕양이’의 개념과 더불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수직적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자료

『史記·屈原列傳』, 『論語集註·鄉黨篇』.

『경향신문』,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코노미21』, 『중앙일보』, 『한겨레』.

『國際先驅導報』, 『金羊网-羊城晚報』, 『南方都市報』, 『東方新報』, 『每日頭條』, 『北京娛樂信報』, 『北青网·北京青年報』, 『西网新聞』, 『時代商報』, 『新聞晚報』, 『新華网』, 『人民日報』, 『千龍网』, 『澎湃新聞』.

『BBC NEWS·中文』.

단행본

박영환, 2008, 『문화한류로 본 중국과 일본』, 동국대학교출판사.

教育部 組織編寫, 2016, 『語文』(一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金健人 主編, 2008, 『韓流沖擊波現象考察與文化研究』,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游國恩, 1957, 『楚辭論文集』,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詹小洪, 2006, 『韓流, 漢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논문

박영환, 2010, 「韓國端午의 特征與韓中端午申遺後의 文化反思」, 『중국어문학』 제55집.

최규성, 2012, 「잊따른 히트... 1997년 여름 음반시장 '점령」, 『최규성의 대중문화산책』, <https://blog.naver.com/oopldh/10149693615>

宋洋·郭德剛, 2009, 「由“端午節申遺”談我國傳統文化的流失與保護」, 『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 王作棟, 2010, 「韓國端午節及其它」, 『三峽文化研究』.
- 王宗仁, 「1967-1革新節的命」, 『民間歷史』, 香港中文大學中國研究服務中心主辦,
<http://mjsh.usc.cuhk.edu.hk/Book.aspx?cid=4&tid=1579>
- 劉金·杜文軒, 2010, 「中韓申遺之爭對无形文化遺傳保護的啓示-以端午節和江陵祭爲例」, 『科教導刊』.
- 李博, 2014, 「中韓文化遺產之爭對我國文化遺傳保護的啓示」, 『吉林省教育學院學報』9期(第30卷).
- 鄭寅淑·張麗萍, 2009, 「論互聯網中中韓兩國端午文化遺產爭論的認識差异及其作用」, 『當代韓國』秋季號.
- 陳連山, 2011, 「從端午節爭端看中韓兩國的文化沖」, 『民間文化論壇』3期.
- 夏曉莉, 2014, 「從文化之爭探討中國民間“嫌韓”情緒的解決之道」, 『經濟研究導刊』第23期.

한중문화충돌 서막, 단오 논쟁의 교류사적 의미

박영환

2000년을 전후하여 중국 대륙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유교복고라는 열풍 속에서 한중 단오절 논쟁이 촉발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중 간 단오절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 문화쟁탈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중국 내부의 결속 강화, 서구적인 가치관의 배척, 중국전통문화 부흥을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서양의 자유주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중국전통문화로 무장하고자 하는 열풍이 1990년대 후반부터 유교부흥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인 중국 청소년층을 향한 서구화를 차단하고, 중국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단오절 논쟁을 이여간 것이다. 문화대혁명 전후 ‘혁명화된 춘절’을 위해 전통명절을 폐지할 때, 또한 그것을 재복원할 때와 같이 단오절 논쟁도 『런민르바오』가 앞장서고 다른 언론들이 따라간 방식이었다. 결국 이 논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자국 전통명절문화보호시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 동력이 되었고, 중국 내 중화중심 민족주의를 고양하는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한중 간 새로운 문화쟁탈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한중 간의 갈등도 격화되었다. 반드시 문화근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음수사원

(飲水思源)'이라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유가문화인식도 한중 간의 갈등에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결국 단오절 논쟁은 대내적으로 자국 전통명절문화보호시책을 강화하면서 중국 사회의 유교 열풍을 가속화시켰다.

주제어: 한중교류, 문화충돌, 단오절, 강릉단오제, 음수사원

ABSTRACT

The Prelude to the Cultural Clash between Korea and China,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Dano Festival Debate

Park Younghwan

Around 2000, the Korean-Chinese Dano Festival controversy was sparked amid the craze of Confucianism restoration in mainland China. Strictly speaking, it may seem that the dispute took the form of a cultural struggle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surface. However, it was an arduous strategy to strengthen internal unity in China, rejecting Western values, and revitaliz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fter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in 1989, the frenzy of rejecting Western liberal values and arming with traditional Chinese culture has led to a macroscopic flow of Confucianism revival in the late 1990s. In particular, the debate continued on the Dano Festival to block Westernization towards the future generation of Chinese youth and to establish a Chinese identity. Before and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the traditional holiday was abolished for the “revolutionary Spring Festival”.

The People's Daily taking the lead in the Dano Festival debate and other public opinions following are similar to the way the traditional holiday was restored. In the end, this debate worked as a driving force to establish a new policy to protect traditional holiday cultur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succeeded in promoting Chinese-centered nationalism in China. Simultaneously,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intensified as it expanded into a new cultural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Certainly, the traditional cultural perception of the Chinese called "gratitude for cultural origins(飲水思源)" played a role in this conflict.

Keywords: Cultural Clash, Dano Festival, Gangneung Dano Festival, Korea-China Exchange, Gratitude for cultural origins(飲水思源)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윤경우 | 국민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I. 머리말
- II. 이론적 접근방법과 분석의 틀
- III. 중국의 근현대 외래문화 수용 태도
- IV. 중국의 한류 수용 태도
- V. 맺음말



I. 머리말

‘한류(韓流)’란 용어의 발원지인 중국은 한류가 처음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한류의 열풍(熱風)이 가장 폭발적으로 불었던 지역이다. 또한 그에 대한 역풍(逆風)으로 ‘항(抗)한류’ 또는 ‘반(反)한류’가 처음 발생하고 가장 강하게 분출된 곳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국 대중문화가 가장 사랑받고 있으며 한류 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류의 가장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반한류 정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중국은 시기별로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중국의 한류 수용 태도에 대한 이해도 전통과 연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는 현대 중국 사회의 내부적인 특성의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중국 사회의 내적 요소가 한류의 생성, 열풍, 역풍, 소강상태, 재점화 등의 현상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어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국 한류 수용 또는/그리고 거부 정도와 범위가 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더 나아가 중국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 방안을 제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 투고: 2022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6일, 재심사 완료: 2022년 5월 21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25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37).

II. 이론적 접근방법과 분석의 틀

상호 접촉하여 교류하는 두 문화 사이의 관계는 ‘균형’과 ‘불균형’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균형 관계는 상호 문화적 지배관계를 갖지 않고 교류하는 유형이다. 반면에 불균형 관계는 한쪽의 문화권이 다른 한쪽의 문화권을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압도·지배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문화변화가 일어나는 유형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시각에서 바라보면, 정치적·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공동체의 문화가 비(非)우세적인 공동체에 팽창적으로 침투하여 토착문화의 독창성을 파괴하고 문화 간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형성한다. 선행연구 가운데 한류의 근원이 한국문화의 우수성에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 콘텐츠의 경쟁우위가 한류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기술의 육성과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 정책 등을 제시한다.¹ 이러한 접근방법은 한국의 문화산업 역량 증진에 공헌할 수 있지만, 문화제국주의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식되어 수용자의 정서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정반대로 한류가 한국문화 자체의 우월성으로 만들어진 산물로 논의를 비약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² 이들 중 대부분은 초기에 한

- 1 강철근, 2006, 『한류 전문가 강철근의 한류 이야기: 한류의 근원에서 미래까지』, 이채; 박재복, 2007,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2006년 한국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
- 2 김문수, 2002, 『김문수의 문화디자인: 삶과 철학이 있는 디자인 이야기』, 다우출판사; 김현미, 2002, 「‘한류’담론 속의 욕망과 현실」, 『당대비평』 68, 216~233쪽; 백원담, 2005,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펜타그램; 이동연, 2006, 『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문화민족주의와 문화자본의 논리를 넘어』, 그린비; 조한혜정, 2003,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출판부; 이은숙, 2002,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화과영상학회』 3(11); 한홍석, 2001.11.1, 「한류는 대도시 청소년들 주축 ‘오빠부대’에 불과」, 『주간동아』; 왕이취안, 2001, 「최근 중국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소견」, 비즈니스 포럼 및 세미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류를 국가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저급한 대중문화로 인식하면서, 과거 아시아 대중문화 생산기지였던 일본과 홍콩 문화처럼 곧 사라질 일시적인 유행이나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지나치게 자기비하적인 논리는 일부 반한류 현상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어떤 문화의 우열을 판별해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 문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향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류에 대한 선행연구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제적인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³ 이들 연구의 초점은 드라마, 대중음악, 영화 등과 같은 한류의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와 효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수용국 문화소비자들에 대한 잠재적이고 상징적인 영향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과 대외교역에 유리한 광고효과 등 한류의 다양한 파급효과로까지 연구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산업으로서 한류 현상은 선진국형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한류 연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윤추구 측면에서 지나치게 경도된 접근방법은 문화산업 보호 차원에서 한류 문화 상품 수입에 대한 수용국의 규제 강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류 연구는 문화우월주의나 지나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용국 문화의 특징 이해를 전제로 한국문화의 매력에 대한 수용국의 긍정적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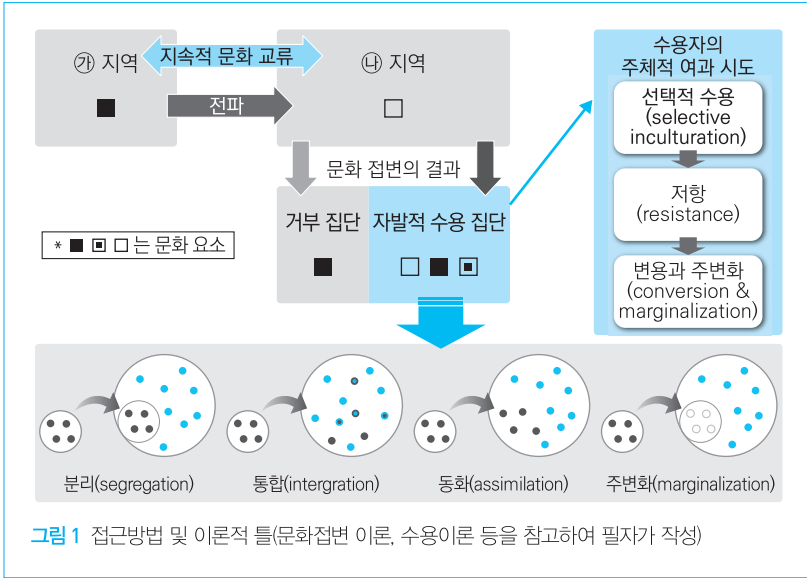
3 고정민, 2005, 『한류 지속화를 위한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김우영, 2004, 「한국적 가치관의 한류화·세계화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1), 171~190쪽; 대한상공회의소, 2005,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한류의 허(虛)와 실(實)』; 박귀현, 2005, 『한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무역협회; 박순찬·최종일, 2009, 「한류의 무역창출효과」, 『경제분석』 15(1), 73~96쪽; 허중욱, 2007,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보편의: 2006년 강릉단오제」, 『관광학연구』 31(2), 105~125쪽;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3, 『2006년 한국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 한은경, 2005, 「한류의 소비자 지각상 경제적 파급효과: 한류 파생 문화산업 및 한국 소비재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9(3), 325~360쪽.

심과 자발적 수용을 유도하는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추구하는 수용자가 나름대로 경험과 내면화된 문화 체계를 통해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외래 문화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은 중국에서 한류 수용과 저항 태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접근방법 및 이론적 틀이다. 중국 사회의 내부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이 한류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변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저항하거나 거부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한류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용 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론’과 ‘수용(reception)이론’에 따르면, 외래문화가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문화 간의 어느 정도 같거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대개 수용자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역량과 주체성을 발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외래문화의 요소를 여과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림 1>과 같이 서로 다른 두 문화 체계가 접촉하여 문화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선택적 수용, 저항, 그리고 변용 및 주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는 변용 과정을 거쳐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이들의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혼재’ 등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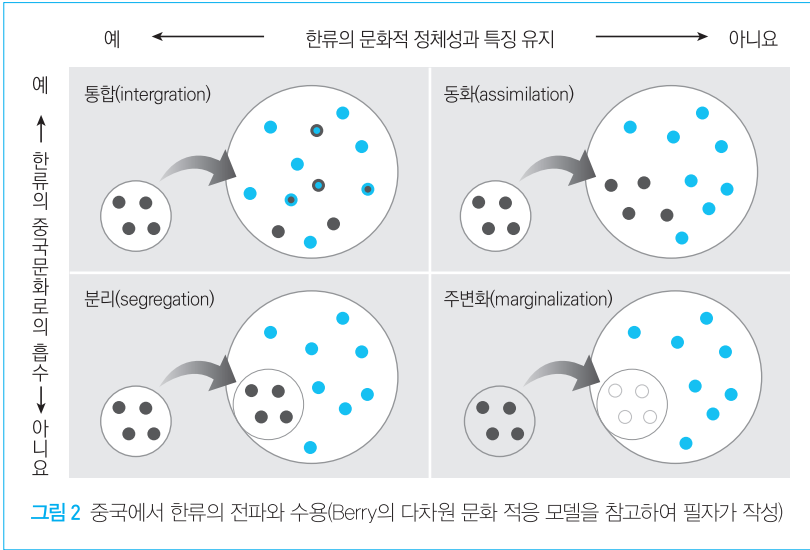
베리(Berry)가 제시한 다차원 문화 적응 모델에 따르면, 문화접변 현상은 문화적 적응(cultural adaptation)과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의 정도에 따라 2차원 모델(two dimensional model)로 측정하면,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등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⁴ 중국에서 한류의 문화접변 성향도 발

4 John W. Berry,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Vol. 30, pp. 69~85; John W. Berry,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pp. 5~68; John W. Berry,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Kevin M. Chun, Pamela Balls Organista, and



원지인 한국의 문화와 수용지인 중국의 문화가 혼합되거나 혼합을 거부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2>와 같이 ‘한류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징 유지’와 ‘한류의 중국 문화로의 흡수’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통

Gerardo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17~37; David F. Lindenfeld, 1998, “Fundamental and Globalism”, *Third World Quarterly*, Vol. 19, No. 4, pp. 607~634; David F. Lindenfeld, 2005, “Indigenous Encounters with Christian Missionaries in China and West Africa, 1800-1920: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16, No. 3, September, pp. 327~369; Judit Arends-Tóth and Fons Van de Vijver, 2006, “Issues i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Acculturation”, Marc H. Bornstein, Linda R. Cote,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Mahwah, Lawrence Erlbaum, pp. 33~62; Beatriz Penas-Ibáñez and María Carmen López-Sáñez, eds., 2006, *Interculturalism: Between Identity and Diversity*, Bern: Peter Lang AG.



합은 한국문화의 정체성 및 특징을 유지하며, 중국도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반면 동화는 한국문화의 정체성 및 특징 유지 정도는 낮고, 중국문화로 수용되는 정도가 높은 유형이다. 분리는 한국문화의 정체성 및 특징 유지 정도는 높지만, 중국의 한국문화 수용 정도는 낮은 유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변화는 한국문화의 정체성 및 특징 유지 정도뿐 아니라 한국문화 수용 정도도 모두 낮은 유형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국에서 한류의 문화접변을 통한 문화 적응 유형 개념은 2가지 차원에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실제 문화 적응 과정에서 한류가 어떠한 문화 적응 유형을 나타내는지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띠 수 있다.

Ⅲ. 중국의 근현대 외래문화 수용 태도

자국 문화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중화주의(中華主義)와 화이사상(華夷思想)을 가진 중국인에게 아편전쟁에서의 패배와 이후 서구열강의 침탈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단순히 군사력 열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명적·문화적 열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구의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의 위력을 실감하고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위신 추락을 경험한 당시 중국의 개혁주의자들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방식으로 서구의 선진적인 근대 문명 수용을 시도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서구 물질문명의 수용방식은 정도와 범위에서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체서용의 기조가 지배적이다.

중체서용은 선진적인 서구의 근대 문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저항의 수단을 모색하다가 주체적으로 서구 문명 요소의 수용·흡수 한도를 설정하고 시도한 서구 문명의 중국식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화 우월주의 전통에 따른 중국인 특유의 자존심이 외래의 선진 문명에 대한 여과장치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도 마찬가지다. 사실 서체(西體)인 사회주의는 중국적인 것의 전면 부정과 철저한 서구화,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서체서용(西體西用)’의 ‘전반서화(全盤西化)’를 요구한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흡수하여 혁명을 추구하는 과정과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도 ‘중국식’ 사회주의에 큰 의미를 두었다.

‘마오주의(Maoism, 毛澤東思想)’는 이념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體)를 지침으로 하면서, 그것을 중국의 실정에 응용·적용(用)한 혁명방식, 즉 ‘중국식으로 지역화(localization)된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내면에 중화 우월주의와 화이사상을 간직한 중국인은 외래 문명을 수용할 때 자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구호로 내세워야만 심적인 부담이 적어진다. 중국인의 외래 물질문명에 대한 저항의 근저에는 지나간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향수(nostalgia), 선진적인 외래 문물을 비굴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존심(自尊心), 아편전쟁 이후 경험한 굴욕(屈辱)에 따른 피해의식(complex) 등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인들이 유독 ‘중국특색(中國特色)’이란 말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중국 경제체제의 중심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가운데 어디에 기준을 맞출지를 두고 ‘성사성자(姓社姓資)’ 공방이 전개되기도 했다. 사회주의를 자신으로 것으로 이미 체화(體化)한 중국은 외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리적 위안이 되었다. 결국 사체자용(社體資用)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틀(體) 안에서 자본주의적 요소(用)를 선별적으로 수혈하며 시장경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접근 방법을 선택했다. 그 결과, 문화 영역에서도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이념적으로 덜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는 문화 요소를 여과 과정을 거쳐 취사선택해 수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중후반 동유럽의 민주화, 1989년 천안문 사건, 1990년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일, 1991년 소련의 붕괴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내부 통제와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서구 사상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자 외래문화 요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시장경제를 확대 수용하며 더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에 근거한 공산당의 통치 정통성이 약화함에 따라, 대내외적 체제위협에 대응하여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확보와 국가의 내적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보완·대체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애국주의교육 운동을 통해 부활시켰다. 이후 서구문화의 침투와 확산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중국문화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한다는 민족주의적 문화안보관에 따라, 민족문화를 주제로 한 가운데 체제 유지에 유익한 외래문화만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2002년 말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三個代表論)’의 공산당 당헌 삽입으로 인한 공산당 집권 정통성의 약화 심화는 정부의 외래문화에 대한 단속(團束) 강화를 유인했다.⁵ 그 결과, 국

5 ‘3개 대표론’은 ①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②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③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자·농민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이 그동안 적(敵)으로 간주했던 자본가·지식인을 품 안에 끌어들었고, 민간·사영·개인 등 비(非)공유제 분야 기업가의 공산당 입당을 공식

가 분열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중화민족의 단결력을 강조하는 ‘애국적인 색채’가 강한 미디어 콘텐츠의 범람을 초래했다.

2003년에 집권한 후진타오(胡錦濤)는 조화로운 사회를 의미하는 ‘화해사회(和諧社會)’ 건설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고도의 압축성장 부작용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불균형·불평등 문제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한 후진타오 정부는 국가의 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애국주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표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까지 했다. 공산당 정부가 체제의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조장하여 사회에 만연하게 된 민족주의는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감을 촉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컴퓨터 보급의 확대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중국의 사이버 민족주의가 외세에 위협적이거나 호전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새로운 표현 형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애국주의교육의 세례를 받은 중국 젊은이들이 온라인 수단을 통해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 편칭(憤靑)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반외세 정서를 보인다.⁶

후진타오 체제에서 드러난 또 다른 특징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철저히 배편당했던 유가(儒家) 사상이 일면 국정 이념과 비슷한 위상으로까지 부활했다는 점이다.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의 부작용 심화로 급증한 서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며 체제 안정을 피하기 위해 국가 지도부로서는 현상 파괴 대신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儒敎)를 불러들인 것이다. 유가사상의 핵심 가치인 ‘조화’ 개념은 정치적 유대와 체제의 단일성, 그리고 국가통일을 강조하며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해결과 양안 통일에 적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실제로 후진타오 정권은 유가의 가치를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급격히 고양되었던 중화 민족주

허용했다.

6 ‘편칭(憤靑)’은 ‘분노한 청년(憤怒靑年)’의 약칭으로, 흔히 ‘인터넷을 통해 극단적 분노를 표출하는 도시 청년’을 일컫는다. 그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애국주의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의와 결합하여 대중 속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후진타오에 이어서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보여주는 민족주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위협해졌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偉大中華民族復興)’을 이끌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신중국(中華人民共和國)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후 세계 최강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국몽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 당했던 역사적 굴욕을 상기시키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축사에서 시진핑은 누구든 중국 인민을 괴롭히는 망상을 하면 “반드시 14억 명이 넘는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를 부딪혀 깨어져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라는 매우 호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⁷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샤오편홍(小粉紅)의 활동이 왕성하다.⁸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로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강화된 애국주의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받아 뺏속까지 세뇌된 사이버 민족주의 세력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대학 이상 졸업자가 73%이며, 이들 가운데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무려 37%를 차지할 정도로 학력 수준도 높은 편이다. 애국심으로 무장한 이들 젊은 세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그에 따른 변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지지층 역할을 한다. 특히 미·중 갈등 문제에서 시진핑 정부 노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중국과 해외의 인터넷을 누비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7 “必將在14亿多中國人民用血肉鑄成的鋼鐵長城面前碰得頭破血流.”

8 ‘샤오편홍(小粉紅)’은 ‘작은 분홍색’이라는 뜻이다. 원래 ‘진강문학성(晉江文學城)’이라는 여성 문학 사이트에서 회원 간 작품을 교환하고 논의하다가 주제를 정치와 시사로 확대했는데, 해당 사이트 첫 화면 색이 분홍색이어서 애칭으로 불렸다. 현재는 ‘홍(紅)’이 붉은 마음으로 당과 국가, 지도자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통하며, 샤오편홍은 중국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을 가리킨다.

옹호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 이들은 외래 콘텐츠에 대한 여과 기능 수준을 넘어서 타국인의 표현에 대해 사소한 부분까지도 공격적으로 해석해 민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무차별하게 공격한다. 이들의 사고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중화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국정 목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GDP 총량 기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경제력이 급속히 커지며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했지만, 부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공부론(共富論)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선부론(先富論)을 이론적인 기반으로 한 성장 일변도 정책을 시행하며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종의 분배 정책이다. 과거에 덩샤오핑도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공동부유는 선부론에 따라 먼저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이 부유하도록 한 뒤에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한다는 ‘낙수경제(落水經濟, trickle-down economics)’ 효과가 전제였다. 반면에 후진타오 정부는 경제 발전방식을 ‘우호우쾌(又好又快)’로 전환해 분배 위주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조화사회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⁹ 하지만 선부론에 따라 심화한 계층 간, 동부 연해와 내륙 등 지역 간, 지역 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문제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시진핑이 집권 2기 후반에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 건설은 파이를 키우는 양적 성장에서 파이를 고르게 나누는 분배를 중시하는 질적인 성장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꿨다는 점에서 후진타오의 조화사회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

9 개혁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해온 중국 사회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다. 후진타오가 ‘우호우쾌(又好又快)’ 경제를 내세운 목적은 이런 사회불안 요인이 체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우호우쾌는 ‘좋고도 빠른’ 경제를 의미한다. 그전까지는 ‘우쾌우호(又快又好)’였지만 후진타오는 쾌와 호의 순서를 바꿔 빠른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추구하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선택했다. 무게중심을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옮긴 것이다.

단지 부(富)의 집중·편중 현상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사회갈등이 증폭되어 체제 위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절박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크다.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하는 방식은 사체자용(社體資用)의 체(體)와 성사(姓社)의 성(姓)인 ‘사(社)’, 즉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자본주의보다 앞에 내세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 상황은 ‘사회주의’ 간판을 전면에 계속 걸고 있기 민망할 정도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과 공산당 집권 정당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질적으로 불균형한 경제구조의 개선을 통해 공산당 집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시장 경쟁력을 통한 소득 분배, 정부의 정책 수단을 통한 재분배, 거부들의 사회 공익 활동과 기부를 통한 분배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 내부의 당원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플랫폼, 교육, 부동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규제 압박을 가하며 기업에 공산당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과 부자들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앞다투어 기부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언론매체는 물론 소셜미디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비롯한 부정적인 시각과 주장을 담은 내용의 전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미디어 플랫폼에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한 글과 작품이 넘쳐나고 있다. 온라인에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글을 경쟁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펀칭과 샤오편홍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용인되거나 뒷받침을 받은 샤오편홍의 공세적 민족주의 태도와 활동은 내적 통합의 구심력을 이루는 중요한 에너지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주의 정서가 지나치게 만연된다면 그 반항의 에너지가 결국 공산당 정부로 향하게 되어 체제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시진핑 사상’을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대학원 교과과정 교재에 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식 사회주의 사상교육 강화는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미래 젊은 층의 공산당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중국식 발전노선을 따르게 하여 공산당의 지속적인 통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대내외 당면한 압력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중문화 검열을 통해서도 젊은 층의 사회주의 이념 이탈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와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대중문화 현상이 공동부유 정치적 구호에 걸림돌이 되며 젊은이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우선 상징적으로 고소득 연예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일탈 행동과 위법 행위를 한 일부 인기 연예인들에 대해 시작한 단속을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연예인들의 고액 출연료나 호화생활이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감을 가져오고, 팬덤 문화와 결합하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명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충실한 사상학습을 통해 애국심과 공산당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역할 모델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사상적·문화적 통제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짐에 따라,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외국 유명 연예인을 추종하는 아이돌 팬클럽에 대한 단속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한 대중문화 통제 여파가 외국 배우와 기획사로서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일부 관영매체는 오늘날 중국 팬클럽 문화의 원조가 한국이라며 중국 정책에 도전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외국의 문화산업 기업은 중국의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¹⁰ 이에 따라 한반도 사드 배치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 이후 중국 시장 내 한류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체서용과 성사(姓社)·

10 Zhang Han, 2021.6, “China regulates fan circles of SK idols, to further impact K-pop industry”, *Global Times*, Sep.

사체자용의 방식으로 중화 민족주의, 유교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문화, 사회주의이론, 국가주의를 통해 서구를 비롯한 외래 선진문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의 유입 한도(限度)를 설정하고 여과를 통해 선별적으로 수용·흡수해 왔다.¹¹ 하지만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정도와 범위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과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이 약화하여 체제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외래 요소의 수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외래 문물의 수용방식 기준에서 체(體)에 해당하는 중국 전통문화 보호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용(用)에 해당하는 외래문화 요소 수용과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외적인 압박으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당 정권에 대한 위협이 강해질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로 대내외적으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위협이 약한 상황에서는 외래문화와 시장경제 유입에 관대한 특성을 보였다.

IV. 중국의 한류 수용 태도

1. 중국의 한류 수용 동인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한류의 역사는 많은 우여곡절로 점철되어 있다. 중국 사회의 내적 요소가 한류의 생성, 열풍, 역풍, 소강상태, 재(再)점화, 재(再)역풍 등의 변화 현상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어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한류의 역사를 검토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류는 한국이 주도한

11 텐안문(天安門) 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개혁·개방의 방향을 놓고 진행되었던 ‘성사성자(姓社姓資)’ 논쟁은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사회주의를 몸통(社體)으로 하여 자본주의를 이용한다(資用)’를 의미하는 ‘성사(姓社)’로 귀결되었다.

전파(傳播)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자발적인 수용(受容) 현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한류 현상은 1990년대 말 중국발 소식으로 한국에 전달되었고, 이후의 열풍이나 반작용도 모두 수용자의 태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화접변은 특정 문화의 요소를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 즉 ‘문화 운반자(cultural carrier)’가 있어야 가능하다. TV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웹툰 등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들은 중국의 한류 수용 과정에서 중요한 운반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들 문화 운반자들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접변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매우 적절한 수단이다. 한류 문화 콘텐츠에 투영된 한국적 이미지를 중국의 수용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왜 중국이 여러 나라 문화 상품 가운데 유독 한국의 것들을 선호하고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글로벌화 수준에서 거시적인 맥락으로 한류 열풍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통·운송 수단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서구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동질화가 빠르고 폭넓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지역문화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글로벌 문화의 형식과 내용을 나름대로 소화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가 재창조되었다. 글로벌 문화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구의 보편적 가치인 개인주의, 시장경제, 민주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서구식 소비패턴과 대중문화를 골간으로 하며,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셋째, 서구적 현대화의 경향이 있으나 각 지역의 기존 문화는 서구와 구별되는 나름대로 특수한 차이를 유지하며 각 지역 간 차이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글로벌 문화는 미국과 구미 중심의 서구적 현대화가 주를 이루면서 각 지역의 특수한 기존 문화와 결합하는 글로컬(global) 현상을 보인다.

한류도 서구적 현대화가 주도하는 글로벌 문화와 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문화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한국문화는 근현대의 서구문화 및 서구문화의 아류인 일본문화를 수용하고 동아시아 문화 및 한국의 전통문화와 절충하면서도 현대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혼성적(混成的) 성격을 띤 한

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의 수용은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¹² 중국에서 한류의 수용은 압축적인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국민의 사회관 및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자국의 문화 콘텐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외국의 문화 상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서구 자본주의 가치와 과거 중국이 주도했던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요소를 혼합하고 내면화한 한국의 대중문화 요소가 중국인에게 친밀감을 주었다.

중국인들은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통적인 유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서구문화를 수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평가한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특징을 표현할 때 서구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내용은 유교적 가족 공동체에서 비롯된 따뜻한 정감, 상대에 대한 배려, 화목과 공동체의 조화, 강력한 도덕성 등을 거론한다. 한류는 단순한 서구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서구의 구성 형식 및 문화 내용이 성공적으로 조합하여 동아시아인의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가공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국 콘텐츠 속에는 서구의 문화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중국인 스스로가 잃어버린, 또는 닦고 싶은 가치관을 발견하고, 자기를 닮은 여러 요소의 재확인(recognition)을 통해 한국과 자국의 문화적 유사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중국인은 한류가 자신의 문화와 다르면서 닮은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에서 유가사상은 그동안 인간해방을 방해하는 봉건시대의 유물로 타도의 대상이었다. 특히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유교 전통은 많은 영역에서 사실상 단절되어, 현대 중국인의 일상 속에 남아 있는 유교적 관습이나 문화는 많지 않다. 중국인의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소재에 대한 친근감 또는 친

12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은 특정한 문화에 친숙하게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대체로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은 동일 문화와 언어권 등에 속해 문화적 근접성도 높다.

숙감은 과거에 대한 공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문화 코드를 서구의 소재와 형식을 빌려 제공하는 한류가 그동안 잃어버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친숙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한류 콘텐츠에 유교적 가치관이 더 잘 보존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것이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근접하고 문화할인율(cultural discount rate)이 낮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렇다고 단지 서구화된 현대적 삶의 궤적에 비친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친근감으로만 중국인들이 한국문화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재현된 인물들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이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닮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 중국인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소박한 일상생활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산업화를 경험한 한국인의 생활 모습에 중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도 개혁개방 이후 계층·지역·도농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사회적 불안 및 갈등이 커지고 있는 중국 사회의 모습과 닮았다. 계층 간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개인의 사회적 야망과 사랑의 선택 사이에서의 방향,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사이의 갈등 등은 모두 중국인들이 현재 직면해 있거나 앞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다. 한국문화 콘텐츠 속에 나타나는 문화적 취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태도와 가치를 제시해주기도 한다.

한류 콘텐츠에 나타난 중국과 문화적 차이가 중국인의 관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인들은 1997년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가부장적 대가족 문화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한국문화에 관심이 커졌다.

13 문화할인율(cultural discount rate)은 문화권 간 대중문화적 내용의 교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문화 간 거리가 크지 않을 경우,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크게 할인하지 않아도 다른 문화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할인율이 낮다고 한다. 반대로 문화권 간 격차가 클 경우,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 할인율이 높다고 한다.

이후로도 1999년 <별은 내 가슴에>, 2005년 <대장금> 등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신선하고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다. 공산화 이후 중국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수입이 남성보다 많은 경우도 흔해졌고, 남성의 가사노동비율이 높아졌다. 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고, 여성의 성격도 남성화되었다. 특히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에서 다루는 여성의 사회적 성공과 주변의 갈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현재 경험하는 현실이어서 수용자들의 입장이 동일시되는 측면이 강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중국 남성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순정적이고 여성스러운 한국 여성들을 동경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 간의 애뜻한 사랑과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한국 드라마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매우 심각한 가족 해체 현상을 경험한 중국인들이 내재화한 가정 회귀 본능을 자극하기도 했다. 반면에 2002년에 중국에서 방영된 영화 <엽기적인 그녀>와 중국에서의 열풍은 이전과 다른 측면에서 발견한 한국문화에 대한 신비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엽기적인 그녀>가 방영되기 전까지 중국에 소개된 한국 사람에 대한 성별 이미지와 정반되는 캐릭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연 배우 ‘전지현 따라하기’ 붐이 일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엽기녀 선발대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2016년에 방영된 <엽기적인 그녀2>도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당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전후로 중국 정부는 외래문화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중국인들이 글로벌인(人)으로의 변신을 도모하던 시기였다. 중국에서 불던 글로벌화 열풍은 문화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국인들이 주변국의 문화와 그 정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초기 한류의 확산에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도 장점으로 크게 작용했다. 또한 WTO 가입은 중국 문화산업에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합류한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커지기도 했다. 중국은 외래문화 상품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을 서구적 가치관을 표준으로 삼는 세계적 보편성과 중국적 특수성의 갈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구의 문화제국주의 및 퇴

폐적 소비주의에 대해 경계한다. 서구와 일본의 문화 상품이 지닐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서구 대중문화의 최신 흐름을 수혈하고 싶어도 정서적 거부감과 경쟁 심리가 작용하여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당시 중국은 서구와 일본의 대중문화를 직접 노골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내심으로는 거대한 문화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서구와 일본의 문화 상품을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 대안으로서 서구와 일본의 대중문화를 주체성을 발휘하여 여과해서 수용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여가기가 더 편했다. 한류가 진출 초기에 쉽게 중국에서 호소력을 높인 이유로는 전통문화 공유로 인한 정서적 공감대를 들 수 있다. 지나치게 서구화되어 있고 극단적인 부분이 강한 일본문화보다 미국과 일본의 장점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독특한 색깔을 보이는 한국문화가 중국인들의 정서에 적합했다. 다시 말해, 서구문화와 일본문화의 장점과 한국의 독특한 스타일이 어우러져 서구의 세련됨과 한국적인 요소가 잘 조화된 한류가 수용하기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었다.

기성세대보다 서구문화에 대해 더 개방적인 중국의 젊은이들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적 팝 음악인 K-pop이 대표적인 예다. 모든 대중음악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문화 혼종화(cultural hybridization) 현상을 보인다. 팝은 원래 영미권의 대중음악이다. J-pop은 서구의 소프트 팝(soft pop)의 영향을 받아 일본문화와 융합해 탄생한 음악이다. K-pop은 특성상 한국의 지역성과 완벽히 분리될 수 없다. 글로벌화한 영미 팝 음악 지형의 보편적 특징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음악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영미 팝과 그 아류인 일본 팝을 적절하게 차용하여 춤추기 좋은 리듬,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댄스, 단순하고 명쾌한 리듬과 비트감,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영어가 많이 사용된 랩이나 가사, 소재와 내용의 참신성, 가수의 외모·의상과 춤·퍼포먼스, 뮤직비디오의 영상미, 이질적 한국문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K-pop의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콘텐츠들이 인기 요인이 되어 중국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견제에도 BTS의 중국 내 인기가 여전한 이유다. 소황제(小皇帝) 세대로 불리는 중국의 젊

은이들은 이미 현대적 감각의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특수한 계층이다. 이들은 세련되고 화려한 서구 대중문화를 독특한 제작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가공한 한류 문화 상품에 열광한다.

중국은 문화적 이질성과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및 전쟁으로 서구와 일본의 문화 상품이 지닐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또한 서구와 일본 문화 콘텐츠의 선전성 및 폭력성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적 근접성이 두드러지며 문화적 할인율이 낮고, 서구와 일본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차별성을 보이고, 중국과 문화적 차이와 이국성도 보이는 한류를 중국 문화산업 시장의 부족한 콘텐츠를 메워줄 대안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일면 한류는 중국 대중문화와의 일정한 문화적 타협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현대성의 지배적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한류의 틀과 구성 내용은 동아시아 전통과 현대의 대중문화가 여러 방향과 수준에서 교차하면서 서구문화 요소와 잘 결합하여 발전한 것이지, 한국이 쇠국 상태에서 비밀병기 개발하듯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서구와 동아시아 문화가 항상 접촉하는 가운데 서로 구별되면서 잘 혼합된 한류의 성공은 중국이 닮고 싶은 모습이다. 서구의 장점을 수용·흡수하면서도 자국의 민족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류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을 통해 축적된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을 가진 중국이 글로벌 시대에 민족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 중국의 한류 저항 동인 및 여과 기제

중국의 한류에 대한 선택적 수용 의지와 저항은 비록 부분적이었지만 중국 진출 초기부터 있었다. 한류가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H.O.T.를 비롯한 한국 댄스그룹의 가요에 열광한 10대들이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하나의 축이었다. 경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기성세대들은 당시 한류라는 외래

자본주의 문화에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경도되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가 연달아 인기를 끌면서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통문화를 담은 한류 문화 콘텐츠가 서구 자본주의 문화보다 덜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가을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중국에서의 한류의 성격은 달라졌다. 이전에는 드라마 및 영화의 특정 연예인과 특정 댄스그룹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주도했으나, 이때부터는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부러움이 한류를 주도했다. 이후 한국 드라마가 물밀듯이 수입되어 한때 중국에서 방송되는 외화의 80%를 장악하기도 했다. 밤 10시 이후에만 방영을 허용하는 중국 방송문화법에 따라 당시 매일 심야에만 방송되었지만, 평균 시청률이 12%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고 각종 매체는 한류 일색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한류의 열기가 폭발적으로 고조되자 먼저 중화권 연예계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이 일기 시작했다. <대장금> 방영 이전에도 중국에서 한류에 대한 일부 불만은 있었다. 주로 내적인 측면에서 드라마의 느린 사건 전개, 가족이나 애정 관계 위주의 편향된 소재 등과 외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수입 가격 상승, 한국에서 중국 드라마의 열세 등이다. 그런 문제들은 중국인들에게 한류가 곧 소멸할 것이니 크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위안을 주었다. 그런데 <대장금>의 폭발적인 열풍이 한류에 대한 저항을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류에 중화권 연예계 종사자들이 앞장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류 열풍이 지나치게 거셌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인들이 보는 항(抗)한류의 원인을 조사한 보고자료를 보면, 중국인의 34.5%가 한류의 확산이 중국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었고, 다음으로 15.0%가 한국이 한류를 통해 이득만 챙긴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문화 잠식 또는 지배에 대한 경계심과 한류의 일방향성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주목했다는 의미다. 중국의 항(抗)한류 발생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자국

문화 수호와 문화산업 보호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전반의 유명 연예인들이 반발에 앞장섰다. 중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그 외 중화권 시장마저 크게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낀 중화권의 방송 및 연예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경계심 내지는 시기심의 발로(發露)로 형성한 항한류 분위기가 중화권 전체로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류에 대한 격한 비난과 함께 중국산 드라마 및 영화를 지지하며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고, 중국 정부에 한류를 규제 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적 규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부터 중국의 외래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까다로웠다. 중국의 문화정책은 자국 문화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및 활동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유지라는 목표에 따라 수립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서구의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의 확산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훼손되고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이 약화하는 것을 막으며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서 자국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호·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상관없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 공식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문화 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위협을 느낀 중국 정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제도를 보완·강화했다. 중국은 자국과 외국 모두의 콘텐츠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방송 채널에서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와 영화는 반드시 국무원(國務院) 직속 기구인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이하 ‘광전총국’)의 심사 및 기준을 받게 되어 있다.¹⁴

14 2013년 7월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을 통합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播電視總局)이 신설되었다. 중국의 TV, 라디오, 신문, 출판, 영화 산업의 관리·감독을 통해 통제하고, 해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및 영화의 방송 금지와 검열을 담당하며 중국 미디어 문

2004년 광전총국이 「TV 드라마 심사관리 규정(電視劇審查管理規定)」을 발표하고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0개의 내용이 TV 드라마 작품 내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했다. 광전총국이 외국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과 비율도 정하도록 규정했다. 각 방송사가 수입한 외국 콘텐츠는 50부작 이내로 제한하고, 각 채널에서 외국산 드라마의 일일 방송 시간도 전체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19시부터 22시까지 황금시간대에는 어떤 외국 드라마도 방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후로 외국 드라마는 22시 이후에 방영되고 있다.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공산당원들에게 서구의 문화적 파급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한 달 만에 내린 지침이다. 중국 사회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해외 자본주의 문화의 범람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외국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해외 콘텐츠 규제 기조는 2014년 집권한 시진핑

<표 1> TV 드라마에 금지되는 내용

- 중국 헌법에 기록된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내용
-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반하는 내용
- 중국의 국가통일과 주권 그리고 영토 완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 중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며, 국가 명예를 훼손하고,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
- 중국 각 민족 간의 복수심과 민족적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간의 단결을 방해하며, 중국 민족의 미풍양속과 생활습관을 해치는 내용
- 사이버 종교와 미신을 전파하는 내용
- 중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외설·도박·폭력을 선양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 타인을 모욕·비방하고, 중국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해치는 내용
- 기타 중국 법률·법규·규정을 위배하는 내용

화산업을 총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2018년 4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다시 국가방송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 국가영화국(國家電影局), 국가저작권국(國家版權局), 국가신문출판총서(國家新聞出版總署)로 분리 개편했다.

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05년 <대장금>의 방영을 기점으로 한류가 최고 절정에 달하자, 광전총국은 2006년 초부터 한국 드라마의 수입과 방송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TV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고시 관리 잠정 판법(電視劇拍攝制作備案公示管理暫行辦法)」을 발표하면서 기존 규정들을 개정했다. 주제별·장르별 심사를 훨씬 강화하면서, 광전총국 산하 국제합작사를 통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드라마를 색출하고, 보다 수준 높은 드라마를 방영한다는 명목 아래 외국 방송 영상물에 대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강화했다. 더 나아가 2010년 광전총국은 「TV 드라마 내용 관리 규정(電視劇內容管理規定)」을 통해 드라마 내용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guideline)으로 6가지 금지령을 선포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표 2>과 같다.

<표 2> TV 드라마 작품 내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추가 지침

- 혁명사극은 영웅과 악역이 분명해야 한다.
- 가족 사의 갈등을 과도하게 묘사한 드라마는 금지한다.
- 사극은 역사 진실을 왜곡하거나 가볍게 다루서는 안 된다.
- 비즈니스 관련 드라마는 사회주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 외국 드라마 리메이크를 금지한다.
- 인터넷 소셜과 게임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2008년 광전총국은 각 지방의 라디오TV방송영화국(廣播電影電視局)에 영화에서 금지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광전총국이 영화심사 기준을 거듭 설명하기 위한 통지(廣電總局關於重申電影審查標準的通知)」를 하달했는데, 영화에서 금지되는 내용은 <표 1>의 TV 드라마에서 금지되는 내용과 같다. 이 밖에도 해당 통지문은 <표 3>에 명시한 것과 같은 장면이 포함되었을 경우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표 1>, <표 2>, <표 3>에 상세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의 방영을 제재하고 있다.¹⁵ 역사를 각색한 퓨전 사극 드라마도 시청자들이 잘못된

〈표 3〉 영화에서 삭제·수정해야 할 내용

- 중화문명과 중국 역사 등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경우, 다른 국가의 문명과 풍속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영웅이나 주요 역사 인물의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입힌 경우
- 악의적으로 인민군대, 무장경찰, 공안과 사법기관의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입힌 경우
- 음란하고 저속한 저급내용이 뒤섞이고, 음란·강간·매음·매춘·성행위·변태·동성애 등 줄거리, 남녀 성기 등 기타 음부, 음란하고 저속한 대사·노래·배경음악·음향효과
- 폭력·공포·유령·요괴 등 내용, 선악·진실·거짓의 가치가 전도되거나 정의와 비(非)정의의 기본 성질이 뒤섞인 내용, 위법한 범죄가 기세를 떨치는 장면을 표현하거나 범죄행위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특수 경찰 수단을 폭로하는 것, 자극적인 잔인한 살인·피비린내·폭력·마약 흡입·도박 등 줄거리, 포로 학대·범인이나 피의자를 고문협박하는 줄거리, 과도하게 놀라게 하거나 공포스러운 화면·대사·배경음악·음향효과
-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인생관·세계관·가치관을 선양하고 민족의 우매하고 낙후한 면 또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과장하는 것
- 종교 극단주의를 선동해 각 종교·종파 간 분규를 도발하거나 신앙이 있는 군중과 신앙이 없는 군중 간 충돌을 조장하고 군중 정서를 해치는 것
- 생태환경 파괴행위를 선양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고 국가가 보호류로 지정한 동물을 죽이거나 식용으로 하는 것
- 과도한 폭음과 흡연 등 누습(陋習, 낡은 관습)을 표현한 것
- 기타 관련 법률·법규·규정을 위배한 경우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자주 규제 물망에 오른다.¹⁶ 이처럼 중국 정부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중국의 정책 기초에 반하는 내용을 다루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 철저히 검열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반하는 미디어 요

- 15 예컨대, 중국 최초의 여자 황제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일대기를 다룬 <무미랑전기(武媚娘傳奇)>는 의상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영 중단 처분을 받았고, 방영이 재개되었을 때는 의상 장면 대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고 얼굴 위주로 클로즈업 편집을 하는 바람에 화면구도가 어색해졌다.
- 16 2019년 6월까지 약 100일 동안 퓨전 사극 드라마 방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도 있다. 중국 정부가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는 중국 전통 황실이 드라마에서 미화될 수 있으며, 이들의 화려한 생활이 중국 서민들의 사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는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외국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중국 내 해외 영화의 개봉 수를 일정 수준으로 철저히 제한해오고 있다. '중국식 스크린 쿼터제'라고 할 수 있다. <대장금>의 폭발적 인기의 여파로 매년 수입하는 해외 영화 가운데 미국 영화, 유럽 영화, 기타 국가 영화를 각각 1/3의 비율로 수입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에서 한국 영화의 방영은 현저하게 감소했다. 외국 영화가 중국으로 수입되는 방법은 분장제(分帳制)와 매단(買斷制) 2가지 방식이 있다. 분장영화(分帳片)는 수출한 측에 상영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수입되는 영화가 중국산 영화와 마찬가지로 제작사가 박스오피스 수익을 제작, 배급, 상영 주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을 취한다. 분장영화의 연간 수입 한도는 2012년 20편에서 34편으로 확대했고, 2016년에 다시 39편으로 확대했다. 매단영화(買斷片)는 연 30편까지만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는 전체 상영 영화의 약 10%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의 규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Netflix, Amazon, Prime Video 등 글로벌 플랫폼의 진출을 불허하고 있다. 2015년 4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외화 방영 규제안을 시행했다. 각 플랫폼은 해외 콘텐츠 수가 전체 콘텐츠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해외 콘텐츠는 스트리밍 전에 사전 검열을 거쳐야 한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해외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Soho, Youku 등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외 콘텐츠의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자, 해외 콘텐츠의 중국 내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었다. 2016년 2월 광전총국은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와 공동으로 해외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 규제안을 추가 발표했다. 같은 해 3월 시행된 해당 규제안은 외국기업이 동영상, 오디오 파일, 애니메이션, 게임, 문서, 지도 등 자사 콘텐츠를 온라인에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 외국기업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중국기업과 제휴하여 콘텐츠를 배포하는 방안은 허용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중국 내 플랫폼 진출은 허용하지 않지만, 중국 미디어 기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허용한 것이다.

2018년 광전총국이 분리·개편된 이후, 방송 콘텐츠 검열을 총괄하게 된 국가방송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은 2018년 9월 더욱 강화된 외국인 콘텐츠 규제 방침인 「해외 영상 프로그램의 도입 및 방송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했다. 동영상 기업도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려면 중국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황금시간대인 19시부터 22시 사이에는 정부의 비준을 특별히 받은 해외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방영이 금지된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각 장르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의 매일 방영 시간 중 해외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도 3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의 시사 뉴스 프로그램의 수입도 금지했다. 국가방송총국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는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함이다. 공산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콘텐츠의 방영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TV 드라마,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은 문화 콘텐츠에 대해 자국산뿐 아니라 외국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이념을 훼손하거나 민족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 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화 콘텐츠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구의 민주주의 가치관이 유입되어 공산당 집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으로, 즉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와 공산당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외국산 수입 문화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제도적 규제뿐 아니라 비공식적·비제도적 규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 상품의 경우, 자국 문화 시장 잠식을 경계하여 상품의 수입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심의를 고의로 까다롭게 하거나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방송 또는 개봉의 시의성을 상실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이 난무하면서 더욱 악화했다. 때로는 한국 드라마의 수입이 결정된 이후에도 관련 부처의 행정적인 방해로 방송을 하지 못한 사례까지 있었다. 또한 양

적으로 수입을 통제하는 쿼터 범위 내에서 이미 수입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중국의 수많은 TV 채널을 통해 일부 콘텐츠만 계속 반복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가 한국 콘텐츠 전반에 대해 질리도록 만드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한류 연예인이나 문화 상품에 대한 관영 언론 매체의 악의적 비난과 왜곡 보도나 온라인 매체를 통한 네티즌의 악의적인 민족주의 편견에 입각한 비난 및 사실무근의 조작 내용 유포를 묵인함으로써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방치하기도 한다.

2016년 한국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즉각 반발하며 즉각 일련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보복 조치는 다른 국가에 대해 제재할 때와 다르게 한국에 대해서만은 문화 영역, 즉 ‘한한령(限韓令)’으로 불리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재에 집중되었다. 중국 연예계로 진출한 한국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으며, 한류 연예인과 콘텐츠에 대해 다양한 비공식적·비제도적 규제가 동원되었다.¹⁷ 그 이유는 여전히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줄곧 추진해온 기존 대외문화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을 때마다 강화된 규제조치를 통해 중국 내 수입을 강경하게 제한해왔다. 반면에 자국산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자국 문화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단지 ‘방아쇠’에 불과하다.¹⁸

17 중국 드라마 전체 분량의 2/3까지 촬영을 마친 한국 배우가 도중에 하차했다. 한국 연극자가 출연한 중국 드라마의 배우가 교체되었고, 한중 합작영화 개봉이 연기되면서 제작이 중단되었으며, 한국 드라마 방영 일정이 심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기되기도 했고, 2016년 11월 한 달 사이에 한국 드라마 16편의 심의가 보류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내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류 스타들의 전 출연분이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통편집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고, 한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최신작 서비스가 금지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 내 한국 예능 및 불법 유통 한국 드라마 등이 삭제되기도 했다. 다수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었고, 한류 톱스타들을 상대로 한 광고 모델이 교체되기도 했으며, 한국 게임의 신규 판호 금지 명령이 하달되기도 했다.

18 물론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주요 표적으로 ‘한류’를 선

V. 맺음말

시진핑의 연임 여부를 포함해 향후 5년의 중국을 이끌 국가 지도부 구성을 결정하는 당 대회를 앞둔 최근 1~2년 동안 중국 국가 지도부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업과 사회, 개인을 향해 전례 없는 규제와 단속을 쏟아내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 기업 모두가 사회주의 체제 내에 존재하고 공산당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며, 그러한 규제와 단속은 갈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함께 잘살자’는 뜻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구호로 내걸고, 정풍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계에 사회주의와 자국중심주의 문화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초 중국 정부는 2가지 상징적인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팬덤 문화를 본격적으로 정화(淨化)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고 나섰다. 첫째, 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아이돌 팬클럽을 단속해 15만 건 이상의 글·사진·영상을 삭제하고, 계정 4,000여 개를 폐쇄, 일시 정지시켰다.¹⁹ BTS 멤버 지민의 중국 팬들이 그의 생일에 그의 사진으로 뒤덮인 전세 비행기를 띄우는 퍼포먼스를 한 직후에 즉각적으로 내린 조치들이다. 둘째, 중국의 방송 감독기관인 국가방송총국은 한 달 동안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정리 작업을 벌였다. 아이들이

택한 배경에는 다른 요인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산업 영역은 WTO의 예외 또는 유보 조항에 해당하여 분쟁의 소지가 적다. 중국과의 WTO, 한·중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부담이 없으면서 한국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산업 간 가치 사슬(value chain)로 긴밀하게 엮여 있어, 한국의 중국 수출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한 보복 조치가 중국 산업계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19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2014년 신설된 인터넷 감독기관으로, 산하 기구를 통해 인터넷상의 모든 내용을 감독하고 인터넷 언론 매체의 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인공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표적이었다. 그동안 팬클럽을 중심으로 아이돌을 숭배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특정 연예인의 인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인 방법도 불사(不辭)하고 있으며,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상대를 온라인상에서 무차별 공격하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팬덤 문화(頂流)’에 대한 정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외국 연예인, 특히 한국 아이돌 팬클럽이 연예계 정화조치의 핵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관영매체는 자국의 잘못된 연예인 팬클럽 문화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중국 팬클럽 문화에서 기인한다며 한국 탓을 하면서 정풍운동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중국의 아이돌 추종 문화는 한국이 근원이라며, 이번 정화운동에서 한국 아이들이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한국 연예인들이 무질서한 팬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란 인식은 한국 연예산업에 추가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면에는 중국 정부가 아이돌 팬클럽이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를 독점하여 정부의 정책 노선의 선전을 가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온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사이버 민족주의 세력인 샤오편홍에 대해 보여줬던 중국 정부의 관대한 태도와 괴리가 있다. 애국심으로 무장한 이들은 중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지지하는 중요한 축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숭배하는 대상이 연예계의 ‘아이돌’인지 아니면 중국이란 ‘국가’인지만 다를 뿐 타인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행태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의 내면에는 두 가지 모순된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문화적 패권을 누려온 전통적 중화사상에서 발로한 ‘우월(優越)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 당했던 역사적 굴욕 경험에서 비롯된 외부세력에 대한 ‘피해(被害)의식’이다. 거기에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향해 21세기 강국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초조(焦燥)’함이 한데 섞여 있다.

이러한 강박 관념과 불안한 욕구로 인해 중국인들은 자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태도가 호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젊은 국수주의자들은 체제와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족주의적 표현을 통해 국가적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국가와 네티즌들 간의 이와 같은 암묵적 타협은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지닌 체제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성격이며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사이버상에서 표출하는 민족주의적 반한 정서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외국의 문화 상품 수입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도적·비제도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열풍을 일으킬 때면 어김없이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이유로 새로운 규제정책을 등장시켜 한국 콘텐츠의 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의 대외문화정책은 사실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 문화의 진입에 대한 제재를, 또 한편으로는 자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독려하는 중국 정부의 대외적 문화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패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의 차원에서 보면 한한령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오랫동안 북한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했던 일본보다 낮아졌다. 더구나 미래의 한중 관계 전망과 관련하여 중국을 협력 상대가 아니라 경쟁 상대 혹은 위협적인 상대로 간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태도를 중국 사회의 내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중국의 한류 수용자가 역사적 경험과 내면화된 문화 체계를 통해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외래문화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문화접변이론과 수용이론에 따라 중국의 내재적인 특성 파악에 주력했다. 과거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큰 중국은 중체서용의 전통에 따라 외래문화의 침투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자국의 문화 수호, 문화산업 보호, 사회주의 이념,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유지 등에 덜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는 문화 요소를 여

과 과정을 통해 취사선택하여 수용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들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 과감하게 공식적·제도적 규제뿐 아니라 비공식적·비제도적 규제까지 동원하여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차단해왔다. 그 결과, 〈그림 2〉 모델의 ‘한류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한류의 중국문화로의 흡수’ 정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중국이 지향해온 한류 수용 및 저항의 양태는 ‘동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철근, 2006, 『한류 전문가 강철근의 한류 이야기: 한류의 근원에서 미래까지』, 이채.
- 고정민, 2005, 『한류 지속화를 위한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권명아, 2013,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 김문수, 2002, 『김문수의 문화디자인: 삶과 철학이 있는 디자인 이야기』, 다우출판사.
- 김인희, 2021, 『중국 애국주의 흥위병, 분노청년』, 푸른역사.
- 대한상공회의소, 2006,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한류의 허(虛)와 실(實)』.
- 박귀현, 2005, 『한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무역협회.
- 박재복, 2007,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 백원담, 2005, 『동아시아의 문화선택 한류』, 펜타그램.
- 윤경우·류춘렬·박순애, 2008, 『한류 확산을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원.
- 윤경우 외, 2000, 『한류포에버: 중국·대만편』,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 _____, 2002, 『한류포에버: 세계는 한류스타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_____, 2008, 『한류포에버: 한류의 현주소와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 윤경우·이광수·양갑용, 2010, 『중국 한류의 성과평가와 지속적 확산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동연, 2006, 『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문화민족주의와 문화자본의 논리를 넘어』, 그린비.
- 조한혜정, 2003,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출판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2003 문화산업백서』.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2006년 한국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0, 『트렌드 리포트: 중국 정부의 미디어 규제』.

Burke, Peter, 2009, *Cultural Hybridity*, Polity Pres: Cambridge.

- Holub, Robert C., 1984, *Reception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Methuen.
- Jauss, Hans Robert, (Timothy Bahti, trans.), 1982, *Toward an Aesthetic of Recep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Liebes, Tamar and Elihu Katz, 1990, *The Export of Meaning: Cross-cultural Readings of Dalla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nas-Ibáñez, Beatriz and María Carmen López-Sáñez, eds., 2006, *Interculturalism: Between Identity and Diversity*, Bern: Peter Lang AG.

논문

- 강내영, 2008, 「중국의 항(抗)한류 현상 연구: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3.
- 강진석, 2006, 「중국인의 '韓流' 수용에 따른 文化意識의 분화성향 연구」, 『중국연구』 38.
- 권기영, 2017,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중국문화연구』 37.
- 김우영, 2004, 「한국적 가치관의 한류화·세계화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1).
- 김은희, 2012, 「중국의 시선에서 '한류(韓流)'를 논하다」, 『담론201』 15(4).
- 김익기·장원호, 2013, 「중국에서의 한류와 반한류」, 『지역사회학』 14(2).
- 김종호·김필수, 2015, 「문화접변 모델을 이용한 한류의 성공 및 제약 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1).
- 김현미, 2002, 「'한류'담론 속의 욕망과 현실」, 『당대비평』 68.
- 리우리리, 2019, 「충돌과 융합: 중국 대륙의 '한류' 연구」, 『지식인문학』 1(1).
- 박순찬·최종일, 2009, 「한류의 무역창출효과」, 『경제분석』 15(1).
- 박영환, 2016, 「중국 지식인층의 문화한류 해석과 수용관점 추이 연구」, 『동아인문학』 37.
- 왕이취안, 2001, 「최근 중국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소견」, 비즈니스 포럼 및 세미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유경진, 박연진, 황화성, 2014, 「신한류 효과: 중국인들의 K-POP 이용이 한국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 윤경우, 2006,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22(3).

- _____, 2009, 「중국의 한류 수용양상: 선택적 수용, 저항 그리고 변용 및 주변화」, 『중소연구』 32(4).
- _____, 2011,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성격과 특징」, 『중국학논총』, 0(34).
- _____, 2012,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사이버민족주의」, 『인문사회과학연구』 03(34).
- 이상욱, 2016, 「K-pop 음악적 성향의 지속과 변이」, 『인문과학연구』 34(0).
- 이은숙, 2002,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영상학회』 3(11).
- 이주형, 2012, 「중국에서의 반한류(反韓流)현상에 대한 연구」, 『외국학연구』.
- 한은경, 「한류의 소비자 지각상 경제적 파급효과: 한류 파생 문화산업 및 한국 소비재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9(3).
- 한홍석, 2001.11.1, 「한류는 대도시 청소년들 주축 '오빠부대'에 불과」, 『주간동아』.
- 허중욱, 2007,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보편의: 2006년 강릉단오제」, 『관광학연구』 31(2).
- 허진, 원춘잉, 류샤오화, 2013, 「중국 네티즌들의 반한류 정서와 인터넷 민족주의: 텐아 논단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7(4).
- 홍석경, 2013, 「세계화 과정 속 디지털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류: 프랑스에서 바라본 한류의 세계적 소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언론정보연구』.

Arends-Tóth, Judit and Van de Vijver, Fons, 2006, "Issues i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Acculturation", Marc H. Bornstein, Linda R. Cote,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Mahwah: Lawrence Erlbaum.

Berry, John 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Vol. 30.

_____,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_____,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Kevin M. Chun, Pamela Balls Organista, and Gerardo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all, Stuart, 1973, Retrieved 29 September 2021, "Encoding and Decoding in the

Television Discourse”, Discussion Paper,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

_____, 1980. “Encoding/decoding”, Stuart Hall, Dorothy Hobson, Andrew Lowe, and Paul Willis, eds.,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Han, Zhang, 2021, “China Regulates Fan Circles of SK Idols, To Further Impact K-pop Industry,” *Global Times*, September.

Lindenfeld, David F., 1998, “Fundamental and Globalism”, *Third World Quarterly*, Vol. 19, No. 4.

_____, 2005, “Indigenous Encounters with Christian Missionaries in China and West Africa, 1800-1920: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16, No. 3, September.

Redfield, Robert, Linton, Ralph, and Herskovits, Melville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 38, No. 1.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윤경우

이 글은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론’과 ‘수용(reception)이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근현대 시대 중국은 시기별로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선별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그 과정에 중국 사회의 내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중국의 한류 수용 태도 역시 이러한 전통과 연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재(再)구성되어왔음을 증명한다. 중국의 한류 수용 또는 거부의 정도와 범위가 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즉 중국에서 한류의 생성, 열풍, 역풍, 소강상태, 재점화 등과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주제어: 한류, 반한류, 중국, 문화, 해석, 수용, 저항, 규제

ABSTRACT

Acceptance and Resistance of the Korean Wave in China

Yun Gyongwoo

This article systematically analyzes China's acceptance and resistance to Korean Wave by using the 'acculturation theory' and the 'reception theory.'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 China has shown an attitude of subjectively interpreting foreign cultures and then selectively accepting and/or rejecting some of them. Internal factors of Chinese society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rocess that China accept and/or reject foreign cultures. Overall, China has shown such a tendency, although there was some differences in scope and degree over time. This article proves that China's attitude toward Korean Wave has also been constantly reorganized with this tradition. It also seeks to answer why the degree and scope of China's acceptance and tolerance of the Korean Wave differ in time.

Keywords: Korea Wave, Anti-Korean Wave, China, Culture, Interpretation, Reception, Resistance, Regul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의 ‘문화 담론’과 한중의 문화충돌

–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김인희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연구위원

- I. 문명의 충돌, 그리고 문화의 충돌
- II.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자신
- III. 시진핑 정부의 문화통치와 한중 문화충돌
- IV. 중화주의와 한중 문화충돌



I. 문명의 충돌, 그리고 문화의 충돌

일찍이 헌팅턴은 탈냉전 이후 “새롭게 태동하는 세계 정치구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위험한 변수는 상이한 문명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될 것이다”¹라고 전망한 바 있다. 헌팅턴은 자신의 책에서 세계 문명을 서방과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힌두교, 유교, 일본 등 7~8개의 문명으로 나누고, 국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전통, 문화, 종교적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헌팅턴의 예언대로 현재 세계는 문명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갈등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동양인에 대한 비하와 조롱, 폭력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헌팅턴은 위의 책에서 “문명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으며, 국가들은 자기 문명권의 주도권 혹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유교 문명권이라 할 수 있는 한중 간에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문화는 정신적인 것과 연관되며 인간 활동의 모든 형식과 그 활동의 결과물을 지칭한다. 문화는 민족주의적 특성을 내포하며 비정치적이다. 그런데 한중 간의 문화기원 논쟁은 민족주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방면에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중 간의 문화기원 논쟁은 단순한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문화정책이 원인이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는 양국의 문화기원 논쟁은 ‘문화충돌’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중 간의 문화충돌이 단순한 갈등 차원이 아님은 최근 전개되는 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4년 강릉단오제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문화도둑’이

* 투고: 2022년 4월 14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10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15일

1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옮김, 2016, 『문명의 충돌』, 김영사.

미지가 형성되었고, 2005년 <대장금> 방영 이후 ‘문화침략자’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문화도둑은 한국이 중국문화를 빼앗아간 것에 대한 분노이고, 문화침략자는 한국문화에 의해 중국문화가 침식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그런데 2016년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을 ‘문화속국’이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문화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 단계에서는 한국은 문화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은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로부터 관복을 하사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중의 문화충돌은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 유사한 문화유산을 소유한 양국이 소유권을 놓고 벌이는 일종의 ‘문화 소유권 경쟁’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그 원인을 두 나라의 강한 민족주의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실제적인 원인을 읽어내지 못하였다. 만약 민족주의가 원인이라면 중국과 오랜 역사적 교류를 경험한 일본, 베트남, 몽골 등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과 같은 문화충돌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보다는 역사적인 원인으로 갈등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중은 계속적으로 문화충돌을 겪어왔는데 2016년 말 단행된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중 간 문화충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였다. “사드 사태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류와 한국문화를 배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기폭제로도 작용하였다.”² 이 외에도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한중 관계의 재인식, 시진핑 정부의 전랑외교, 시진핑 정부 주도의 애국 마케팅, 시진핑 정부의 국내외 문화정책 등 정치적·경제적·문화적·민족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였다.

2 배상률·문수정·Zhang Shuai, 2019,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55~56쪽.

이 글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문화통치를 선택한 이유와 문화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의 문화정책이 한중 문화충돌의 중요한 원인을 지적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자국 및 타국에 대하여 문화통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 문화관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겠다.

II.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자신

1. 문화허무주의 비판과 문화자신

시진핑 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역사허무주의자 혹은 문화허무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 이 두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텐안먼 사건 직후다. 중국 공산당은 텐안먼 사건을 주도한 이들을 역사허무주의자 혹은 문화허무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서구화를 추구하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였다.

역사허무주의는 중국의 고대사와 근대사, 공산당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공산당이 인민을 이끌고 투쟁해온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문화허무주의는 중국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서양화를 통해 문화 부흥을 이루자는 주장을 말한다.³ 문화허무주의가 비판한 주 대상은 1980년대 중국사회를 휩쓴 전반서화론자(全般西化論者)들로 이들의 주장은 텐안먼 사건이 발발하

3 陸正涵, 1990, 「民族文化虛無主義的誤區」, 『人文雜誌』第3期; 杜文君·史春林·李擘, 1991, 「近年來有關民族文化虛無主義評論述要」, 『東北師範大學報』第6期; 王繼平, 1997, 「論近代中國的文化虛無主義-中國近代文化思潮剖析之三」, 『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 李翔海, 2013, 「中華民族偉大復興需要中華文化發展繁榮-學習習近平同志在山東考察時的重要講話精神」, 『求是』第24期; 高長武, 2016, 「科學對待中國傳統文化, 需要反對四種錯誤傾向」, 『紅旗文稿』第14期; 王炳權, 2020, 「警惕文化虛無主義的內在破壞力」, 『世界社會主義研究』第9期.

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전반서화론자들은 중국문명은 이미 생명을 다하였으니 서양의 과학문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전통문화를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마오쩌둥과 공산당의 정책도 비판하였다. 텐안먼 사건이 끝난 후 중국 정부는 텐안먼의 주역들을 역사허무주의자, 문화허무주의자라 비판하였다. 중국에서 이들 두 허무주의자는 민주화 요구세력이며 반정부 세력을 의미한다.

텐안먼 사건 이후 중국 사회에 팽배한 허무주의를 비판하고 공산당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국주의 교육이다. 애국주의 교육에는 역사와 문화가 동원되었다. 역사허무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다양한 역사 관련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익히 알려진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이 대표적이며 한국과 관련 있는 것으로는 동북공정이 있다. 문화허무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전통문화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학교 교육에서는 한국과 기원논쟁이 첨예했던 단오, 중추절 같은 명절이 특히 강조되었다.

그동안 중국에서 전개된 허무주의 비판사업은 주로 역사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역사허무주의와 관련된 각종 역사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화 관련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 이후 문화허무주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문화허무주의가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문화허무주의는 개혁개방 이후 네 차례 고조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은 2010년 이후로, 더욱 은밀하게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논조를 직접 부정하는 외에 학술연구와 영상문학 작품 중 ‘정곡을 찌르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비난하고(高級黑)’, ‘당의 신념과 정치적 주장을 의도적으로 비속화하거나 단순화(低級紅)’하는 현상이 출현하였다”⁴고 한다. 시 주석도 문화허무주의의 목적

4 王炳權, 2020, 위의 글.

을 간파하고 2012년 18대 당 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역사허무주의자나 문화허무주의자가 아니며 조상을 잊지 말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⁵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문화허무주의 개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주로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서구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였으나 최근에는 전통문화도 포함하지만 주로 사회주의 문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 연구자는 “문화허무주의는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서구화하자는 것으로, 특히 중국 공산당이 창조한 혁명문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혁명문화의 가치를 영원히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⁶라고 하였다.

문화허무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문화허무주의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⁷고 한다. 즉, “문화허무주의는 혁명역사와 혁명문화에 대한 멸시와 경멸로 가득 차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중국의 역사적 필연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부정한다. 잘못된 사조가 난무하게 되면 주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4개 자신(四个自信)을 흔들어 국가의 이데올로기 안전과 문화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⁸고 경고한다.

시진핑 정부가 반체제 인사인 문화허무주의자를 문화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문화자신(文化自信)이다. 문화자신은 2012년 18대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처음 제안하였다. 2013년 8월 시진핑은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에서 “문화자신을 가지고 중화민족이 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문화강국을 건설하고, 중국 이야기를 잘

5 習近平, 2014.1.14, 「在中共中央政治局第十八次集體學習時強調牢記歷史經驗歷史教訓歷史警示為國家治理能力現代化提供有益借鑒」, 『人民日報』.

6 于化民, 2020.11.9, 「在文化自信中激發革命文化的活力」, 『中國社會科學網』.

7 張可榮·李艷飛, 2017, 「偏激言辭:五四思潮的論戰策略」, 『長沙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6期.

8 于化民, 2020, 앞의 글.

풀어내어 중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⁹고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공산당 성립 95주년 기념 강연에서는 문화자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자신(道路自信), 이론자신, 제도자신, 문화자신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 하며, 4개 자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자신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자신은 5,000여 년 문명발전 중 잉태된 ‘중화 우수 전통문화’와 당과 인민의 위대한 투쟁 중 잉태된 혁명문화, 사회주의 신진문화의 축적으로 중화민족의 독특한 정신을 대표한다”¹⁰라고 하였다. 2016년 강연으로 ‘문화자신’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을 이끄는 정신적 표지로 확정되었으며, 당의 주요 문건에 첨가되었다.

결국, “문화자신은 본질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자신을 말한다.”¹¹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는 2016년 시진핑 주석의 말로 볼 때 중국 전통문화와 공산당의 혁명문화, 사회주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시 주석도 “고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문화자신’을 확고히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여 문화강국을 건설할 때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 문화자신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중국 학계에서는 문화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문화자신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확대 발전시켜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것이다.¹² 두 번째는 혁명문화를 이용하여 문화허무주의를 극복하

9 習近平, 2013.8.21, 「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的講話」, 『人民日報』.

10 習近平, 2016.7.1, 「在慶祝中國共產黨成立95周年大會上的講話」.

11 吳敏燕, 2019, 「習近平關於文化建設重要論述的邏輯理路」, 『中共中央黨校(國家行政學院)學報』第23卷 第2期.

12 張國勤, 1990, 「論弘揚民族優秀文化-兼評民族文化虛無主義」, 『理論探討』, 第5期; 李翔海, 2013, 앞의 글.

자는 것이다. “혁명문화에 축적된 역사기억은 문화허무주의를 배격하는 강력한 무기로, 혁명문화를 계승하고 학습하여 문화허무주의와 싸우는 것은 신세대 공산당원들의 책임이라고 하였다.”¹³ 세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방식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계승이며 승화”¹⁴로, 중국 사회주의의 근원은 중국 전통문화에 있다고 한다.

앞의 두 방식이 전통문화와 혁명문화를 각각 이용하는 방법이라면 세 번째 방식은 양자를 결합한 방식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세 번째 방식이다. 시주석 또한 마르크스주의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방식을 선호한다. 2021년 푸젠성(福建省) 시찰 중 가진 연설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¹⁵고 강조하였다.

지금 중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유교를 결합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발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중국문화의 결합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결합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25일 배포한 <중화우수전통문화 계승,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關於實施中華優秀傳統文化傳承發展工程的意見)>에서 우수한 전통문화는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풍부한 자양분임을 천명하였다.”¹⁶ 그리고 “신시대 마르크스주의가 중국화하기 위해서는 중화우수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¹⁷고 한다.

13 于化民, 2020, 앞의 글.

14 宋乃慶·賈瑜·廖曉衡, 2015, 「中華優秀傳統文化與社會主義核心價值觀的培育和踐行」, 『思想理論教育導刊』第4期, 64~67쪽.

15 習近平, 2021.4.4, 「以時代精神激活優秀傳統文化生命力-八論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來閩考察重要講話精神」, 『央視網』.

16 朱康有, 2021.11.22, 「“兩個相結合”是馬克思主義中國化的必然途徑」, 『中國青年報』.

17 張艷國, 2021.10.29, 「讓中華優秀傳統文化煥發時代活力」, 『中國社會科學網-中國社會科學報』.

많은 논문과 신문 사설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사상이 유교문화나 중국 전통문화에서 기원하였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자의 정치사상에 보이는 풍부한 지혜는 공산당의 국가 경영에 중요한 문화적 기초다”,¹⁸ “인애(仁愛), 민본중시(重民本), 신용을 지키다(守誠信), 정의숭상(崇定義), 화합융합(尙和尙), 대동추구(求大同) 등은 진승과 승화를 통해 사회주의핵심가치관으로 계승되어 왔다”¹⁹와 같은 주장이 있다. 시 주석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는 중화민족 5,000년 문명 역사가 잉태하고 키운 중화 우수 전통문화에서 근원하였다”²⁰고 한다. 중국 사회주의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주장을 대변하는 논자들은 문화허무주의자들이 “전통문화를 부정하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자본주의 길을 가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해체하고 문화자신에 손상을 입혀 당의 지도를 약화시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²¹라고 한다. 위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을 통하여 교묘하게 반공산당 세력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가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중국 전통문화를 비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통문화가 문화허무주의를 비판하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

18 商志曉, 2021.3.24, 「中華傳統文化與中國現代化進程」, 『光明日報』.

19 韓震, 2019, 『社會主義核心價值觀的話語構建與傳播』,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8쪽.

20 習近平, 2020, 『談治國理政』第3卷, 北京: 外文出版社,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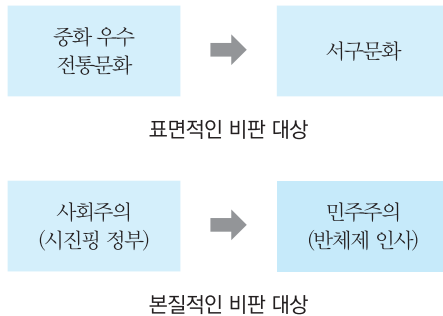
21 賀敬之, 1990, 「關於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文化的幾點看法」, 『求是』第6期; 何承杰, 2019, 『當代中國民族文化虛無主義對大學生的影響及對策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21쪽; 梁大偉·李祺, 2021, 「新時代文化虛無主義的中國樣態, 理論批判及治理對策」, 『思想教育研究』第1期, 77쪽; 夏偉東, 1989, 「論道德文化的承接」, 『中國人民大學學報』第6期; 高長武, 2016, 「科學對待中國傳統文化, 需要反對四種錯誤傾向」, 『紅旗文稿』第14期.

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 사회주의와 전통문화는 동일체다.

둘째, 서구문화와 민주주의는 동일체다.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면 전통문화로 서구문화를 비판한다. 서구문화에는 민주주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를 비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전통문화로 서구문화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산당의 사회주의 문화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비약이 사회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애국의 깃발을 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마르크스주의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이론을 창조(?)하려는 이유는 이미 역할을 다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대신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중국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가 구소련에서 들어온 외국 이론이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이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라는 이론모델을 창출하여 인민이 거부감 없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두 문화의 결합에서도 반드시 마르크스주의가 전통문화를 이끌도록 하여, 핵심은 사회주의의식을 강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 이론'은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위와 같은 논리를 이용하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전통문화를 이용하여 민주화 세력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운동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논쟁이며 정치투쟁이라 할 수 있다.

Ⅲ. 시진핑 정부의 문화통치와 한중 문화충돌

1. 중국의 전통 문화관

고대 중국에서 문화는 다소 만능의 열쇠 같은 인상을 주는데, 최고의 문화지식 일 뿐만 아니라 의례와 예술의 총합이며, 군자가 갖춰야 할 덕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중국 엘리트들은 예약문화로 자국민과 이적을 교화하는 문화통치를 실시하였다. 교화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정신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통치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문화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문화관과 관련이 있다.

고대 중국에서 '문화'는 정신활동 영역을 강조하며 매우 철학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문(文)'자는 '문화지식'이란 의미가 있었다. 文은 당시 문화지식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예약문화로 표현되었다. 공자는 "문왕은 이미 사망하였으니 文은 내가 계승하고 있지 않은가"²²라고 하였다. 즉, "주나라 문왕은 이미 사망하였으니, 예약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이는 공자 자신밖에 없다"라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 文은 예약문화를 말한다. 서주 시기 예약문화는 예절과 음악을 포괄하는 말로, 사람들이 따라야 할 사회질서준칙이며 행위규범

22 『論語·子罕』,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이었다. 고대 제왕은 예악으로 국가를 통치하였으며, 정치, 윤리, 사회교육 분야에서 실행하였다. 고대 중국에서 예악문화는 중법등급사회를 수호하는 명분이었으며 화하문명을 상징하는 의례질서였다.

文은 문화지식과 예악문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야만과 대비되는 선진, 문명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공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공자는 “군자는 ‘질(質)’이 있으면 되지 文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²³라고 하였다. 그리고 “質이 文보다 많으며 저속하고 야만적이며, 文이 質보다 많으면 허황된다. 文과 質이 비슷한 연후에 군자가 될 수 있다”²⁴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文과 質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質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박함을 말함과 동시에 조야(粗野), 저속(粗鄙), 야만이라는 의미다. 이에 반하여 文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지식이나 재능을 말한다. 文은 소박함, 조야, 저속, 야만과 대비되는 선진, 문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 중국 철학에서 文은 미(美)와 선(善)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문덕(文德)이란 말이 파생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문화는 최고의 문화지식이고, 의례와 예술의 총합이며,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층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문화는 통치의 주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예술, 도덕 등을 총괄하는 규범이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화하(華夏)와 이적(夷狄)을 구분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였다. 공자는 “주례(周禮)를 따르면 화하이고, 주례를 따르지 않으면 이적이다”²⁵라고 하였다. 주례는 주나라의 예악문화를 말한다. 즉, 예악문화의 유무로 화하와 이적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예악문화를 따르는 화하는 선진문명에 속하였다. 예악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방의 이적은 금수와 같은 존재로 야만에 속하였다. 고대 중국인의 관념에서 문명은 오직 중국문명으로 중국 이외의 다른

23 『論語·顔淵』,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24 『論語·雍也』,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25 『論語·八佾』, “行周禮者爲華夏, 拒周禮者爲夷狄.”

국가는 야만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화하는 귀하고, 이적은 천하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중국인이 다른 민족을 규정하는 중요한 관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하질서에서 화이는 중국문화에 대한 동질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중국문화에 동질화시키는 방법은 예악문화를 이용한 ‘교화’였다. 중국 고문헌에서 文과 ‘化’가 한 문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주역·분괘·상전』의 “인류의 文을 관찰하여 천하를 化해야 한다”²⁶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천하를 통치하려는 자는 “문화를 이용하여 천하를 교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문화로 야만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이로부터 “문화로써 교화한다(以文教化)” 또는 “문화로 다스려 교화한다(文治教化)”는 말이 나왔다. “선진적인 문화로 야만을 교화하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다.

고대 중국은 예악문화로 천하질서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덕으로 천하를 교화한다(德化天下)”, “화하로 이적을 변화시킨다(用夏變夷)”는 화하의 문화로 이적을 교화하여 화하문화로 동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자는 “먼 곳의 사람들이 복속되지 않으면 인(仁), 의(義), 예(禮), 악(樂)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²⁷라고 하였다. 즉, 이적들을 예악문명으로 개조하여 정치적 통합된 공동체인 천하질서를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예악문화를 통한 문화동질화는 화하문화 우월론의 외적 표현으로 대일통제국이 지리, 정치적으로 계속 외부로 확장하여 천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문화통치와 한중 문화충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 중국 통치에서 문화는 자민족을 통치하고 타 민족을 교화하여 천하질서를 완성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교육이 공식화·규범

26 『周易·賁卦·象傳』,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觀乎人文, 以化成天下.”

27 『論語·季氏』, “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화된 것에 비해 교화는 더욱 융통성이 있으며 수단도 매우 다양하여 서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어 생활의 가장 섬세한 부분에 이르게 된다. 교화의 내용은 교육에 비해 더욱 풍부하고, 교육은 사람들의 지식을 쌓고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치중하지만 교화는 사람들의 전면적인 발전에 치중하며 민간의 풍속이나 습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²⁸ 교육이 지식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단계에 머문다면 교화는 문화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고대 중국의 문화통치 방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근대 이후 중국의 사회변혁 운동이나 정치투쟁이 문화논쟁과 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19년 5.4신문화 운동, 1966년에서 1976년까지 계속된 문화대혁명, 1980년대 전반서화론은 모두 문화를 키워드로 중국 사회를 개혁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 문화운동은 모두 서구의 사상과 문화로 중국 전통사상과 문화를 비판하고 개조하자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다른 문화운동이 서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과학문명의 수용을 주장한 데 반하여,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 문화로 중국을 개혁하자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문화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이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 투쟁이기도 하였다. 이데올로기는 관념적인 주의나 주장, 강령, 신조 등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나 해설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에는 이를 믿고 따르는 주체가 일정한 관념을 갖고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사회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진리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관점만 드러낸 부분적 진리의 체계라 일컬어진다.²⁹ “중국에서는 5.4시대 이후 혁명투쟁의 침예화

28 劉婧, 2020, 『中國古代教化思想現代價值轉換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2쪽.

29 한림학사, 2007,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

와 마르크시즘-레닌리즘의 중국화에 따라 사회비판은 점차 정치투쟁의 무기로 빠져버렸고, 문화비판도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바뀌었다.”³⁰

“이데올로기는 문화와 동일하지 않다. 문화는 가치와 상징적 실천의 문제이지만, 이데올로기는 그 가치와 상징적 실천이 언제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휘말리는 점을 나타낸다.”³¹ 문화를 이데올로기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문화통치는 시진핑 정부 이후 다시 가열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문화는 한 국가, 한 민족의 영혼”³²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문화를 배반하거나 포기한 민족은 역사적 비극을 맞이하였으며, 문화는 국가의 흥망, 문화 안전, 민족 정신 독립과 관련이 있다”³³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문화를 국가와 민족의 ‘영혼’이라 규정하고 중국문화를 보호하고 선양하는 것이 중국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중국에서 ‘문화’는 민족, 국가와 동일시되며 애국의 대상이 되었다. 애국의 대상이 된 ‘문화’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절대적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되었다. ‘문화’에 대한 작은 비판도 자본주의의 길을 가기 위한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문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문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문화’는 전통문화와 사회주의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문화에 전통문화의 외피를 씌워 사회주의문화를 선전하는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효력을 다한 사회주의문화보다는 전통문화를 부흥시키는 방식으로 문화자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강한 중화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 과열된 중화주의 열풍은 자국 내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투사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문화공격이 증가하고 첨예화되었다. 시진

30 孫隆基 지음, 박병석 옮김, 1999, 『중국문화의 심층구조』, 교문사, 439쪽.

31 테리 이글턴 지음, 이강선 옮김, 2021, 『문화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77쪽.

32 習近平, 2017.10.18,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習近平, 2016.11.30, 『習近平在中國文聯十大, 中國作協九大開幕式上的講話』.

33 習近平, 2016.11.30, 위의 글.

핑 정부 이후 과열된 한국문화에 대한 공격은 중국 내의 중화주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외부로 투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IV. 중화주의와 한중 문화충돌

2000년대 중반 시작된 한국문화에 대한 공격은 시진핑 정부 들어 더욱 공세적으로 바뀌고,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문화강국을 이루자는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는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것으로 실제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전통문화의 외피를 씌워 선전, 선동하는 문화통치 방식이다. 중국 정부의 전통문화 부흥정책은 자국 내에서 중화주의가 과열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화적으로 오랜 충돌을 겪어온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고대 중국에서 문화는 화하와 이적이 구분하고, 이적을 교화하여 천하질서를 완성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야만과 차별되는 문명을 의미하던 전통의 문화 담론은 현재 중국어에도 남아 있다. 중국어에서 “문화가 없다(沒有文化)”는 말은 “학력이 낮다”, “무식하다”, “교양이 없다”는 뜻이다. 중국인들이 “한국문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원을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속국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도된 「한복은 몇 명의 스승이 있는가?」³⁴라는 기사에 따르면 조선왕실이 명나라에서 하사한 옷을 입은 것은 명나라와 군신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사를 존중하는 사람은 중화제국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치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송나라 때부터 ‘옷을 내리는 것(賜服)’은 일종의

34 保爾, 2022.2.16, 「韓服有多少位“師師”?」, 『觀察者網』.

제도가 되었으며, 명나라에 이르러 외국 군신에게 옷을 내리는 것은 종번체제 하의 중요한 외교활동이 되었다. 명나라는 조선에 200여 년간 군신의 복식을 하사하였기 때문에 조선 국왕의 옷은 명나라 복식과 매우 유사하며 심지어는 명나라가 하사한 옷을 입고 있다.” 조선왕실에서 명나라가 하사한 관복을 입은 것은 종번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조선왕실의 관복은 명나라가 하사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문화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나라가 하사한 관복을 입었으니 번속국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E. H. 카는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왔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믿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한국문화가 중국문화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한중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도 이러한 관계여야 함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담론이 중국인의 의식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될 수 있다면 그 명백함은 의심해보아야 한다.

문화를 이데올로기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중국 내 습관을 한국에 적용한 것도 한중 문화충돌이 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2016년 이후 중국 정부는 ‘청년 인터넷문명지원자’라는 극좌 네티즌 집단을 조직하여 정권의 나팔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을 확보하며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나 집단, 개인에 대하여 무작위적으로 사이버테러를 가하고 있다. ‘청년 인터넷문명지원자’를 비롯한 중국의 극좌 네티즌 집단은 홍위병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선동과 선전 그리고 대중적 동원과 폭력에 극단적으로 익숙하며, 쉽게 타자를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작은 이슈에도 극단으로 치닫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오직 “중국이 좋다(中國好)”, 공산당이 좋다(共產黨好)”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며,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³⁵

35 중국 우익 네티즌들이 적으로 돌리는 국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이와 같은 흉위병적 투쟁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문화공격은 공세적이고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외에 2016년 이후 한류팬이 애국주의 대열에 투항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그동안 한류팬은 중국에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사드 사건 이후 입지가 좁아지자 애국주의 대열에 투항하였다. 한류팬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공격도 내용이 구체화되고 수량도 증가하였다.

끝으로 한중의 문화충돌을 설명하는 단어로 ‘문화공정’은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 언론에서는 동북공정에 빗대어 종종 ‘문화공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고대사를 겨냥한 역사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공격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중화주의를 강화하는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왜곡되어 외부 국가에 투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공정이란 용어는 쉽게 동북공정을 연상시켜 현재 한중간의 문화충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

국가는 제외된다.

참고문헌

사료

『周易·乾卦』, 『周易·賁卦·象傳』, 『呂氏春秋』, 『論語·季氏』, 『論語·子罕』, 『論語·顏淵』, 『論語·八佾』, 『左傳·成公四年』.

단행본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옮김, 2016, 『문명의 충돌』, 김영사.
孫隆基 지음, 박병석 옮김, 1999, 『중국문화의 심층구조』, 교문사.
테리 이글턴 지음, 이강선 옮김, 2021, 『문화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한림학사, 2007,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

習近平, 2020, 『談治國理政』 第3卷, 北京: 外文出版社.
韓震, 2019, 『社會主義核心價值觀的話語構建與傳播』,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논문

박현숙, 2019, 「“홍콩인이다” 대 “중국인이다”」, 『한겨레21』 제1281호.
배상률·문수정·Zhang Shuai, 2019,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高長武, 2016, 「科學對待中國傳統文化, 需要反對四種錯誤傾向」, 『紅旗文稿』 第14期.
杜文君·史春林·李曄, 1991, 「近年來有關民族文化虛無主義評論述要」, 『東北師範大學報』 第6期.
保爾, 2022.2.16, 「韓服有多少位“師師”?」, 『觀察者網』.
商志曉, 2021.3.24, 「中華傳統文化與中國現代化進程」, 『光明日報』.
宋乃慶·賈瑜·廖曉衡, 2015, 「中華優秀傳統文化與社會主義核心價值觀的培育和踐行」, 『思想理論教育導刊』 第4期.

- 習近平, 2013.8.21, 「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的講話」, 『人民日報』.
- _____, 2014.1.14, 「在中共中央政治局第十八次集體學習時強調牢記歷史經驗歷史教訓歷史警示爲國家治理能力現代化提供有益借鑒」, 『人民日報』.
- _____, 2016.7.1, 「在慶祝中國共產黨成立95周年大會上的講話」.
- _____, 2016.11.30, 「習近平在中國文聯十大, 中國作協九大開幕式上的講話」.
- _____, 2017.10.18,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 _____, 2021.4.4, 「以時代精神激活優秀傳統文化生命力-八論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來閩考察重要講話精神」, 『央視網』.
- 梁大偉·李祺, 2021, 「新時代文化虛無主義的中國樣態, 理論批判及治理對策」, 『思想教育研究』第1期.
- 吳敏燕, 2019, 「習近平關於文化建設重要論述的邏輯理路」, 『中共中央黨校(國家行政學院)學報』第23卷 第2期.
- _____, 2020, 「新時代文化虛無主義的三重理論批判」, 『思想教育研究』第11期.
- 王繼平, 1997, 「論近代中國的文化虛無主義-中國近代文化思潮剖析之三」, 『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
- 王炳權, 2020, 「警惕文化虛無主義的內在破壞力」, 『世界社會主義研究』第9期.
- 王士成, 2013, 『新聞誤讀現象研究』, 山東大學碩士論文.
- 于化民, 2020, 「在文化自信中激發革命文化的活力」, 『中國社會科學網』.
- 劉婧, 2020, 「中國古代教化思想現代價值轉換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陸正涵, 1990, 「民族文化虛無主義的誤區」, 『人文雜誌』第3期.
- 李翔海, 2013, 「中華民族偉大復興需要中華文化發展繁榮-學習習近平同志在山東考察時的重要講話精神」, 『求是』第24期.
- 張可榮·李艷飛, 2017, 「偏激言辭:五四思潮的論戰策略」, 『長沙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6期.
- 張國勤, 1990, 「論弘揚民族優秀文化-兼評民族文化虛無主義」, 『理論探討』第5期.
- 張艷國, 2021.10.29, 「讓中華優秀傳統文化煥發時代活力」, 『中國社會科學網-中國社會科學報』.
- 朱康有, 2021.11.22, 「“兩個相結合”是馬克思主義中國化的必然途徑」, 『中國青年報』.
- 馮顏利, 2021, 「堅持馬克思主義基本原理同中華優秀傳統文化相結合」, 『中國學派』.
- _____, 2021.9.13, 「以高度的文化自信助推文化強國建設」, 『光明日報』.

- 賀敬之, 1990, 「關於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文化的幾點看法」, 『求是』第6期.
- 何承杰, 2019, 「當代中國民族文化虛無主義對大學生的影響及對策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 夏偉東, 1989, 「論道德文化的承接」, 『中國人民大學學報』第6期.

중국의 ‘문화 담론’과 한중의 문화충돌

—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김인희

시진핑 정부 이후 한중의 문화충돌은 더욱 격화되고 이데올로기 투쟁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원인은 시진핑 정부의 문화정책, 전통적 문화관, 문화를 이데올로기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의 문화자신 정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는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전통문화의 외피를 씌워 선전, 선동하는 문화통치 방식으로 중화주의가 과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열된 중화주의는 중국을 넘어 오랜 기간 문화적으로 충돌한 한국을 공격하게 되었다.

과열된 중화주의가 한국을 문화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중국의 우월적 문화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문화의 중국 기원론은 실제로는 한국이 중국에 종속적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한중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미래 한중관계에 대한 암묵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문화공격이 이데올로기 투쟁적 성격을 띠는 것은 자국

내의 문화투쟁 습관을 한국에 대한 문화공격에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문화운동은 홍위병적 성향의 극좌 네티즌 집단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선동과 선전 그리고 대중적 동원과 폭력에 극단적으로 익숙하며, 쉽게 타자를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작은 이슈에도 극단으로 치닫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홍위병적 투쟁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문화공격은 공세적이고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주제어: 시진핑 정부, 문화정책, 문화자신, 중화주의, 이데올로기 도구

ABSTRACT

China's Cultural Discourse and Korea-China Cultural Clash

Kim Inhee

Aft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the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intensified and took on an ideological character. The reason is that China's political situation, which use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ies, traditional cultural views, and culture as tools for ideological struggle, has been applied to Korea.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y is a cultural governance method that incites socialist ideology as a traditional culture, resulting in overheating of Chineseism. Overheated Chineseism has gone beyond China and attacked Korea, which has long been in a cultural conflict. China claims the Chinese origin of Korean culture based on its superior cultural view of Korean culture, which claims that Korea-China relations were subordinate in the past. Understanding the past Korea-China relationship as a subordinate relationship is an implicit demand that the Korea-China relationship should be subordinate in the

future, and it can be said to be very ideological.

China's cultural attack on Korea is characterized by ideological struggle because China's political situation, which uses culture as a tool for ideological struggle, has also affected the attack on Korea. China's cultural movement is led by a group of far-left netizens with a tendency to red guards.

Keywords: Xi Jinping Government, Cultural Policy, Culture Self, Chineseism, Ideological Tools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김성환 | 전 경기도박물관장

- I. 머리말
- II. 단군신화의 지역적인 기반과 전승양상
- III. 단군신화의 역사화 과정과 「고기」·「본기」
- IV. 원의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 편찬 요구와 『삼국유사』·『제왕운기』 찬술
- V. 맺음말



I. 머리말

단군신화는 고조선 건국신화이다. 건국자인 단군(檀君)을 중심으로 단군신화라고 한다. 기자·위만을 포함한 삼조선 인식을 염두에 두고 단군의 건국만 국한하여 그 나라를 단군조선, 그 신화를 단군신화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조심스럽다. 이 신화는 환웅(檀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단군은 환웅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고조선을 건국한 역사적인 존재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둘 다 마찬가지다. 단군이 중심인 『응제시』와 전혀 다르다.

단군신화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다. 시간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시기와 존속기간에 대한 것이고, 장소에서는 중심지에 대한 것이다. 사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고려 후기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불신하는 입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사실을 전하는 현전 최고 자료가 고조선과 수천여 년의 거리가 있는 13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에는 이들 자료를 역사서로 파악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화집 또는 영사시 성격의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의 검토 목적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고조선 이후 단군의 위상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고조선 당대에는 건국시조로, 이후 고려 전·중기까지는 서북한 지역의 지역신(地域神)으로, 고려 후기에는 역사적인 재인식과 조선시대의 국조(國祖)로서, 근대 이후에는 혈연적 민족시조로서의 위상으로 정리된다. 각 지역에서의 단군신화와 단군전승들은 역사학은 물론 문화인류학, 고고학, 민속학, 종교학 등에서 개별 또는 종합적인 성격으로 접근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각각의 전승은 지역과 시대의

* 투고: 2022년 4월 1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10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15일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단군전승의 지역적인 기반과 전승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또 거기서 언급된 자료에 한정하고자 한다. 현전 최고(最古)의 자료로 논점에 집중하고, 그 밖의 자료들은 이후 확대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단군신화를 소개하면서 전거로 인용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시기와 통치기간으로 제시된 시점과 수치를, 단군의 후계로 지목된 부루·주몽과의 관계 등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다.

13세기 후반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담은 두 사서의 편찬은 새로운 역사인식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12~13세기 분열을 경험한 고려사회의 자각과 외세에 대응한 자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마국 체제에서 당대사(當代史)를 포함한 고려 역사 전반에 대한 원의 사서(史書) 편찬 요구와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신화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에서 역사적인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본적인 관점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역사학적인 측면에 있다. ‘만들어진 신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고조선건국신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신화 속의 시공간을 역사 속의 시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¹

1 신화가 그대로 역사일 수는 없기 때문에 신화적 코드를 역사적 코드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이미 여러 연구자가 밝힌 바 있다. 서영대, 2000, 「신화 속의 단군」,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25~27쪽.

II. 단군신화의 지역적인 기반과 전승양상

단군신화는 동북아시아 고민족의 건국신화에서 발견되는 수조신화(獸祖神話)와 한국 건국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천강신화(天降神話)라는 고형(古形)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 신화는 대체로 고조선 당시부터 전해져왔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 이를 환웅신화와 단군신화로 구분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³ 그런데 건국신화에는 시조 선계(先系)의 신성성에 빗대어 그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목적이 있다. 단군의 영웅적인 과정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고조선 건국을 역사적 사실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반영된 문화요소가 고조선사회의 지배계층에서 공유했던 관념체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단군신화에서 전하는 역사적 사실은 천신 후예로 상징되는 신성 집단이 고조선을 건국했고, 그 나라는 주변 정치체와 다른 위상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주세력과 토착세력의 결합은 최소한의 사실로 파악된다.

고조선은 처음에 일정한 지역 명칭이면서 종족 이름이었고, 후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명으로 정해졌다고 한다.⁴ 이 전제를 단군신화에 적용할 수 있다면, 곰과 호랑이로 대표되는 선주민은 조선에 살면서 조선족으로 불렸으며, 환웅 단계를 거쳐 단군에 이르러 정치체가 형성되면서 지명이자 종족명이던 조선을 국명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자』나 『전국책』 등에서 확인되는 중국의 무역 대상으로서 조선은⁵ 그 잔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2 서영대, 2010, 「근대 동아시아 3국의 신화적 국조 인식」, 『단군학연구』 23, 단군학회, 204쪽.

3 최광식, 2015, 「桓雄天王과檀君王儉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고찰」, 『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4 송호정, 2015,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 문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역사와 현실』 98, 한국역사연구회, 206쪽.

5 『관자』 권11, 揆度 및 권13 輕重甲; 『戰國策』 권29, 燕1.

수 없다.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사료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조선 후기의 학자들은 단군신화에 비판적이었다. 안정복(1712~1791)은 『삼국유사』가 이류(異流)의 괴설(怪說)이고, 승려가 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단군신화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고기」를 통해 전하는 단군신화는 허황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의 병화로 정사(正史)인 국사가 없어진 답답한 상황에서 그나마 보존된 이야기로 정사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밝혔다.⁶ 남구만(1629~1711), 한치운(1765~1814), 정약용(1762~1836) 등도⁷ 마찬가지였다. 그 비판적인 접근들은 단군신화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틀에서 검토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정의 입장은 아니다.⁸

고조선은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를 영역으로 하고 있었다. 고조선과 부여·고구려는 이 지역에서 시기를 일정 부분 겹치며 존재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단군을 중심으로 부여와 주몽을 부자와 형제 관계로 서술하고 있음도 이것을 토대로 한다. 또 역사성을 잃어 한계가 있지만, 고구려의 민간에서 단군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가한신(可汗神)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도⁹

6 『동사강목』 제1상, 기묘, 조선 기자 원년.

7 『약천집』 권29, 잡저, 東史辨證, 檀君; 『해동역사』 권2, 단군조선; 『여유당전서』 제6집, 지리집 권1, 강역고, 朝鮮考.

8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이 차지하는 무게 때문에 그 연구와 논의는 치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신화의 구조적인 접근과 함께 거기에 실려 있는 지명은 고조선 중심지 등에 대한 시각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단군신화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진 채 진행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다. 맹목적인 취신론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경계되어야 한다. 우리 학계에서도 ‘만들어진 신화’라는 관점이 있지만, 중·일과 달리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최근 고조선 관련 자료의 정리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2019, 『여주 고조선사료집성』(중국편·국내편), 새문사 참조. 연구동향은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편, 2018, 『고조선사 연구동향』, 동북아연구재단 참조.

9 『구당서』 권199, 열전149 상,동이, 고려.

참고된다. 중국 지린성 지안 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단군신화 모티프와 비교되는 몇몇 요소가 확인된다.¹⁰ 각저총, 장천1호분의 벽화에는¹¹ 곰과 호랑이를 내용으로 「고기」 유형의 모티프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있다. 고구려 국내성 지역에서는 고조선 유민이라는 인식을 지닌 지배세력의 무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류계 송양 집단을 단군의 후예와 관련시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¹² 고구려 문화요소에서 단군신화의 잔편을 찾기 위한 작업이 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곰과 호랑이는 죽은 자가 저승으로 가는 진압의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의미술로 그려진 것이라는 점,¹³ 평양과 황해도 일대에서는 이 같은 모티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¹⁴ 등이 그 비판이다. 그런데 거대한 나무에 의지한 곰과 호랑이는 지상세계의 생명의 뜻

-
- 10 齋藤忠, 1987,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圖」, 『東アツア葬・墓制の研究』, 第一書房; 齋藤忠, 1989, 「角抵塚の角抵(相撲)・木・熊・虎とある畫面について」, 『壁畫古墳の系譜』, 學生社; 강릉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역사과학』 1996-2, 사회과학출판사; 전호태, 1996, 「고구려 각저총 벽화 연구」, 『미술자료』 57, 국립중앙박물관(전호태, 1997, 「고구려 벽화고분 연구」, 서울대학사학위논문); 김성환, 2000,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 『단군학 연구』 3, 단군학회; 조법중, 2005, 「고구려 벽화고분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2, 단군학회.
 - 11 장천1호분의 수목숭배 모습을 중심으로 한 聚戲는 고구려의 제천의식인 동맹과 관련하여 해석된 바 있다. 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48~155쪽;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12 조법중, 2001, 「고구려사회의 檀君認識과 종교문화적 특징」, 『한국고대사연구』 21, 한국고대사학회; 최일레, 2010,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투영 맥락-비류부의 정치적 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5, 한국사상문화학회.
 - 13 송호정, 2007, 「고조선-고구려의 역사귀속성 논란에 대한 하나의 제안: 조법중의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신서원)를 읽고」, 『韓國古代史研究』 47, 한국고대사학회, 261쪽.
 - 14 박찬홍, 2011, 「고조선·부여·고구려의 역사적 계승관계 연구」, 『史叢』 7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2쪽.

과 소망을 하늘세계로 전하려는 단군신화의 의미론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고,¹⁵ 동굴 속 곰 역시 신화적 서사와 관련된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¹⁶ 평양·항해도 일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적극적인 반론이 되지 못한다. 전승의 변전 및 벽화 제재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모티브가 전체 벽화내용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사회에 단군신화가 있었다라도 이것이 고조선 계승의식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역사계승인식이란 왕실 간의 정통성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군신화가 전해졌다는 것과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다르다. 이 벽화는 고구려에서 단군신화의 내용이 전승되고 있었음을 뜻하지만,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조선 이후 그 건국신화와 역사는 고조선 영역 또는 그곳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주한 유민들의 기억과 문화요소로 잔존했다. 그 내용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얼어졌고, 지극히 단편적으로 전해졌다. 그 잔편들은 문화적 영역을 공유했던 부여·고구려에 남았을 것이다.

단군전승의 지역적 분포는 앞서의 벽화고분이 소재한 중국 지안과 한반도의 태백산,¹⁷ 평양, 백악산아사달로 확인된다. 이 지역들은 고조선과 고구려 영역에 있었고, 그 문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진 곳이다. 지역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 역시 일정한 추론이 가능하다. 고조선 이후 고구려 국내

15 최병길, 2020, 「고구려 각저총 씨름도의 도상 해석」, 『동악미술사학』 28, 동악미술사학회, 24쪽.

16 전호태, 2015, 「고구려 장천1호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2, 고구려발해학회, 225쪽.

17 『삼국유사』 찬자는 태백산에 대해 묘향산으로 주석했다. 여기서의 단군신화 양상을 살펴볼 만한 자료는 뚜렷하지 않다(김성환, 2000a, 「고려시대 묘향산의 단군전승」, 『명지사론』 11, 명지사학회, 289~314쪽). 하지만 1131년(인종 9) 묘청이 서경 팔성당에 모신 신격 중 '백두악태백선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백두산 역시 태백산으로도 비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 지역에서는 고조선 유민에게 전해지던 단군전승이 있었다. 그것은 각저총·장천1호분에서 확인되는 곰·호랑이, 수목송배의 모티브로 나타났다. 이 전승은 5세기 전반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평양에서 전하던 단군전승과 함께 「고기」 유형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다.¹⁸ 이때 건국시조인 주몽에 대한 위상의 재정비가 필요했는데, 단군과 부여계 전승도 주몽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었을 것이다. 이후 고구려의 영토 확장과 지방통치를 정비하는 과정, 고구려 멸망 이후 구월산 일대 등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시기는 6~8세기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단군전승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중심지 이동과 확장에 따라 국내성 → 평양 → 구월산에서 전개되었고,¹⁹ 그 과정에서 여러 이진(異傳)이 만들어졌다. 그중에는 고조선의 역사성이 탈락되어 고구려 요소에 흡수된 것도 있을 것이다.

평양에서는 1010년(현종 1) 거란군을 물리친 서경신사(西京神祠)와 그 보답으로 이루어진 훈호 가호,²⁰ 1109년(예종 4) 평양신사에서의 제사²¹ 등에서 평양신(平壤神)의 모습이 확인된다. 묘청의 팔성에도 ‘구려평양선인’이 있고, 『삼국사기』에서는 평양의 유래를 선인왕검으로부터 설명했다.²² 이 둘은 동일한 신격이다. 「조연수묘지명(趙延壽墓誌銘)」에도 평양의 유래로 선인왕검이 거론되었다.²³ 즉, 평양과 관련한 ‘선인’은 팔성당의 ‘구려평양선인’에서, ‘왕검’은 『삼

18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단군의 명칭이 불교설화 중 梅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고, 그 전승은 고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고구려인이 만든 전설이라고 했다.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學習院輔仁會雜誌編纂委員會(白鳥庫吉, 1970, 『白鳥庫吉全集』 제3권, 岩波書店 재수록).

19 구월산의 단군전승이 3세기 초 대방군 설치 과정에서 단군신화를 가지고 있던 평양 일대의 주민(낙랑인)이 구월산 일대로 이주한 결과이거나, 고구려의 영향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남중, 2019, 「안악군 당장경 유적과 단군 전승」, 『동북아역사논총』 65, 동북아역사재단, 168~178쪽.

20 『고려사』 권4, 현종 원년 12월 계해(19일); 『고려사』 권4, 현종 2년 5월 정해(14일).

21 『고려사』 권13, 예종 4년 4월 을유(11일)

22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1년.

23 「趙延壽墓誌銘」(김용선 편저, 2012,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

국사기』와 「조연수묘지명」의 ‘선인왕검’, 『삼국유사』의 『위서』·「고기」의 ‘단군왕검’에서 확인된다. 백악산아사달은 『삼국유사』에서 무엽산(無葉山), 배주의 백악, 개성 동쪽의 백악궁, 그리고 궁홀산(弓忽山, 方忽山) 또는 금미달(今彌達)로 비정되었는데, 궁홀은 『제왕운기』에서 구월산으로 분주되었다.²⁴ 구월산에는 1006년(목종 9) 이전부터 환인(檀因)-환웅(단웅)-단군을 모신 삼성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²⁵

『삼국유사』의 「고기」와 『제왕운기』의 「본기」는 지역적인 전승을 바탕으로 한 자료일까. 「고기」는 평양, 「본기」는 구월산을 배경으로 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기」는 지역에서 태백산(묘향산), 평양과 백악산아사달(구월산)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 내용은 태백산·평양에서 시작하여 백악산아사달로 이도(移都), 장당경으로 이어(移御), 아사달산신으로 좌정하고 있어 그 중심이 오히려 구월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기」의 전승은 평양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구월산만 배경으로 하는 「본기」의 전승과 성격이 다르다. 물론 현전하는 「본기」의 기록에서 왕검성(王儉城)과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의 누락으로 생각하여 「본기」 역시 평양과 구월산을 범위로 하는 전승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에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다.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온 삼위태백(三危太伯)에 대해 「고기」에서는 묘향산, 「본기」에서는 구월산 일대로 비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와 「본기」의 전승은 지역 범위를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단군전승의 지역적인 범위를 이해하는 데는 1131년(인종 9) 묘청이 서경 팔성당에 모신 팔성(八聖)의 지역 범위를 참고할 수 있다. 그 범위는 1135년 묘청 일파가 반란으로 세운 대위(大爲)의²⁶ 영역과 일치할 것으로 추측

연구소).

24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전조선기」.

25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임신. 강화 역시 단군전승의 지역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26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 묘청.

된다는 점에서 서북한 지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중에 백두악태백선인, 구려 평양선인 등은 단군전승과 관련이 있다. ‘태백’, ‘평양’ 등이 「(단군)고기」에 보이는 지명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확인될 뿐 고조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원인은 고조선 이후 부여·고구려를 거쳐 신라·고려로 전해지던 단군전승이 대부분의 역사성을 탈락한 채 전해졌기 때문이다. 팔성은 고려 전중기 단군전승의 존재를 단편적으로 증명하며, 희미하지만 그 범위가 평양에 국한되지 않고 서북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단군전승의 지역적인 전승양상은 구월산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곳에는 환인-환웅-단군을 모신 사당인 삼성사가 있었다. 『제왕운기』 「전조선기」의 원시(原詩)에서 이승휴는 단군을 환인이 아닌 ‘제석의 손자(釋帝之孫)’로 읊었다. 「고기」와 같은 이해 방식이다. 구월산 전승이 불교적인 요소와 교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단군을 모신 삼성사(三聖祠)가 패엽사와의 관계에서 세 차례 이견되었다는 사실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²⁸ 「본기」의 신화에서 불교적인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본기」에서 환인의 성격은 상제(上帝)이다.²⁹ 단웅이 손녀에게 음약(飲藥)하게 하는 모티브 등과 함께 도교적인 요소가 상정된다. 구월산 정상인 사왕봉(四王峯)에는 예전부터 강향치제하며 성수(星宿)를 초례했던 사왕사(四王寺)가 있었다고 한다.³⁰ 이런 점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승휴는 단군신화를 조-부-자로 설정된 환인-단웅(檀雄)-단군의 3대 계

27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 496쪽.

28 김성환, 「고려시대 三聖祠의 단군숭배」, 『백산학보』 46, 백산학회.

29 上帝를 도교에서 모시는 전형적인 神格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도교의례인 醮齋에서도 제사되었음이 확인된다. 『고려사』 권54, 지8, 오행2, 목, 숙종 7년 5월 계유(19일), “親率群臣 醮上帝·五帝於禁中 配以太祖及大明·夜明 謝過祈禳 三夜而罷.”

30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계유(6일) 李芮 馳啓.

보로 이해하면서도 「본기」 신화를 소개했다. 그 사당이 삼성사 또는 삼성당(三聖堂)이었음은³¹ 3대 부계 전승이 삼성사에서 공식적인 전승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고기」와 같은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1452년(단종 즉위) 경창부윤 이선제(1390~1453)는 황해도에 전염병 창궐에 대한 대책으로 평양 단군사당으로 옮겨간 단군 위패를 환원하여 삼성사 제사의 복구를 요청했다. 여기서 그는 『삼국유사(三國遺史)』를 인용하여 「고기」의 전승을 소개했다.³² 이를 감안하면, 고려시대에도 「고기」의 단군신화가 삼성사를 배경으로 전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궁금증이 생긴다. 하나는 3대 부계의 전승으로 삼성사가 구성되고 있음에도 이승휴는 어떤 이유에서 5대 비부계의 전승을 소개하고 있는가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기」와 「본기」의 신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이다. 이들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승휴가 일연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둘은 오래전에 만난 적도 있다.³³ 이 사실이 「고기」와 「본기」 전승의 소통과정에 도움이 되지만, 두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분명한 것은 이승휴가 3대 부계 전승을 알고 있었음에도 5대 비부계의 전승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자에서는 불교와 도교, 후자에서는 도교적인 요소가 확인된다. 그가 두 전승을 동시에 소개한 것은 그의 유·불·도 삼교일원론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⁴

31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6월 을미(14일) 柳寬 상서.

32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28일) 李先齊 상서.

33 『동안거사집』 행록 권2, 「次韻李柳兩令公唱和詩并序」; 김성환, 2001, 「高麗後期の檀君認識」, 『단군학연구』 4, 단군학회(김성환, 2002, 『高麗時代の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재수록).

34 이승휴의 불교 및 도교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변동명, 2000, 「이승휴」,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변동명, 2004, 「이승휴의 『내전록(內典錄)』 저술」, 『한국사상사학』 23, 한국사상사학회; 진성규, 2005, 「이승휴의 불교관」, 『진단학보』 99, 진단학회; 채웅석, 2012, 「『帝王韻紀』로 본 李承休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한국국학진흥원; 김도현, 2015, 「동안 이승휴의 불교 인식과 看藏寺」, 『이사부와 동해』 10, 한국이사부학회.

구월산에서의 단군전승은 불교 영향을 받은 3대 부계 구조의 전승과 도교 영향을 받은 5대 비부계 전승이 함께 전해지고 있었다. 두 유형의 전승에서 삼성사 운영을 둘러싼 유주(儒州)(문화현) 재지세력 간의 관계도 고려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삼성사를 둘러싼 문화현 성씨집단으로 삼성당의 소임인 사직(司直)과 전직(殿直)을 맡았던 최지(崔池)·최득강(崔得江) 등 최씨와 삼성사 제사의 복구를 요청한 류관(柳寬)·류사눌(柳思訥) 등 문화류씨가 확인된다.³⁵ 한편, 삼성은 환인·환웅·단군 또는 단인·단웅·단군으로 기록되었는데, 후자는 그 전승이 어느 시기에 ‘단군’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 시기는 삼성사가 대증산에 있던 소봉(小峰), 그리고 소증산으로 이진되는 과정과³⁶ 관련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단군전승은 고려 초 이전에 이미 단군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고기」와 「본기」가 보여준다고 생각된다.³⁷ 물론 이것이 단군신화의 전거론과 관련한 「고기」와 「본기」의 성립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군전승의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³⁸ 그 중심에 「고기」와 「본기」가 있다. 앞서 필자가 『제왕운기』 유형,³⁹ 『제대조기』 유형, 『동국여지승람』 유형으로 분류한 전승들은 「고기」 유형에서 비롯되었고, 『응제시』 유형은 「고기」와 「본기」 유형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기」와 「본기」 유형의 단군신화는 구조와 내용에서 완전히 다르다.

35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류씨는 來姓, 최씨는 續姓으로 분류되어 있다. 『세종실록』 권152, 지리지, 황해도, 풍천군, 문화현.

36 『세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계유(6일).

37 이에 대해서는 별도 「조선 전기 구월산 三聖祠 제사와 평양 檀君廟 건립」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38 서영대,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영대, 2000, 앞의 글; 김성환, 1999a, 「檀君傳承의 類型(I)」, 『중앙사론』 13, 중앙사학회; 김성환, 1999b, 「檀君傳承의 類型(II)」, 『사학지』 32, 단국대학교 사학과.

39 김성환, 2006,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백산학보』 75, 백산학회.

「본기」에서는 단웅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마시게 해서 사람이 되게 한 후 단수신(檀樹神)과 혼인하게 했다.⁴⁰ 그런데 그 주체를 단웅천왕이 아닌 환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⁴¹ 비부계 중심의 5대 계보로 이해했던 「본기」 전승이 4대로 설명된다. 단군의 계보는 상제 환인-환웅(단웅천왕)-환인의 손녀+단수신-단군으로 설정된다. 이것은 환인에게 적극 역할을 부여하여 웅녀와 혼인한 주체를 환웅이 아닌 환인으로, 환웅과 단군을 형제 관계로 설정한 『동국여지승람』 유형의 전승과⁴² 유사하다. 지고신으로 이해되었던 환인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환인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하게 한다. ‘석제지손(釋帝之孫)’은 후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이승휴는 환인-환웅-단군의 계보를 수용했다. 그렇다면 『제왕운기』에서 신고 있는 구월산 지역의 단군전승은 각기 3대, 4대, 5대를 구성하는 부계·비부계 요소를 가진 다양한 것이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본기」 신화에서는 단군의 도움으로 평양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왕검성(王儉城)도 보이지 않는다. 환웅은 삼위태백인 아사달산에 내려왔고, 단군은 그곳에서 개국했으며 아사달산신이 되었다. 전승양상이 구월산을 배경으로 재구성되었다. 후대이지만 단군릉(檀君陵) 전승이 평안도 강동현에서 단군의 출생 → 성장 → 건국 → 통치 → 죽음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고된다.⁴³ 단군전승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때, 구월산을 중심으로 재편된 단군신화는 전승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40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전조선기」,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曰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敷 故雄受天符印三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云云 令孫女飲藥 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

41 조경철, 2013, 「근대 이전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한국사상사학회, 111쪽.

42 김성환, 1999b, 앞의 글.

43 김성환, 2007, 「일제강점기 「檀君陵記蹟碑」의 건립과 단군전승」, 『사학연구』 86, 한국사학회(김성환, 2009a, 『日帝強占期 檀君陵修築運動』, 경인문화사 재수록).

는 한계로 작용한다. 『삼국유사』에서의 「고기」와 비교하여 역사성이 열어졌기 때문이다.

단군신화는 태백산·평양·구월산(「고기」), 구월산(「본기」)을 지역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내용에서 평양 중심의 전승도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은 대략 “평양의 선조인 선인왕검(仙人王儉)은 삼한 이전부터 평양신(平壤神, 西京神)으로 불렸고, 그 수(壽)는 천년을 넘어 신선이 되었다”는 정도였을 것이다.⁴⁴ 국내성과 평양에서의 전승은 고구려 때부터, 구월산에서의 전승은 8세기 이전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시기와 모티브로 구성된 단군신화가 각 지역을 배경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보다 정치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신화의 역사성과 관련한 작업이기도 하다.

III. 단군신화의 역사화 과정과 「고기」·「본기」

1. 단군역년과 단군기원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다. 「위서」를 인용한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이다. 여기서는 고조선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만 전하고 있는데, 전체에서 서론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고기」를 인용한 단군신화로 본론 부분이며, 이 글의 주요 검토 대상이다. 세 번째는 당의 「배구전(裴矩傳)」을 인용한 고구려로의 계승이며, 결론 부분이다. 『삼국유사』 찬자가 고조선조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계승이었다. 그 문제에 기자가 끼어 있는데, 그 역시 고조선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읽을 필요가 있다. 또 고구려조에서는 「단군기(檀君記)」를 인용해서 단군의 후계를 서술했다. 반면에 『제왕운기』에서는 「본기」를 인용해

44 「趙延壽墓誌銘」(김용선 편저, 2012, 앞의 책).

서 전조선기를 서술하고, 또 「단군본기」를 근거로 역시 단군의 후계를 서술했다.

단군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들은 직접적이 라기보다 다른 자료들과의 관계에서 방증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적 실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기」와 「본기」, 「단군기」와 「단군본기」의 성격과 관계,⁴⁵ 단군의 고조선 건국시기와 통치 기간, 고조선과 전·후 조선의 관계, 단군의 후계 등은 주요 검토대상이다. 여기서는 고조선 건국시기와 통치기간, 단군의 후계 등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시기와 단군기원에 대해서는⁴⁶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찬술 이후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그중에 『동국통감』에 제시된 당요 25년 무진년이 조선시대 이래 적극 수용되었다. 그 시기를 『위서』에서는 요임금과 같은 때(與高同時), 「고기」에서는 요임금 즉위 50년 경인년(唐高即位五十年庚寅), 「단군본기」에서는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竝與帝高興戊辰)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위서』와 「본기」에서의 건국시기는 ‘요임금과 같은 때’,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으로 표현이 다르지만, 그 시기는 ‘요임금 원년 무진년’으로 동일하다. 또 『삼국유사』 찬자는 「고기」의 단군 건국연대에 대해서 “당요 즉위 원년은 무진년으로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 사실이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주석했다.⁴⁷ ‘의기미실(疑其未實)’은 「고기」에 대한 찬자의 존중과 겸양의 뜻을 담고 있지만, 실상은 ‘요임금 즉위 50년 경인년’은 단군의 건국시기로 볼 수

45 단군 관련 자료에는 檀君(檀君)을 표제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고기」·「본기」 등과 같이 독립된 자료로 보이는 것도 있다. 『신지비사』·『고조선비사』 등 직접적인 도참 관련 자료도 있다. 이 자료들은 현전하지 않고, 다른 자료에 실려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방증한다. 이들은 전거론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별고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46 이에 대해서는 최근 관련 자료의 상세한 고증을 통한 연구가 있었다. 그 성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박대재, 2015, 「檀君紀元과 『古記』」, 『한국사학보』 61, 고려사학회.

47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어쨌든 고려시대에 고조선의 건국시기로 ‘요임금 즉위 무진년’과 ‘요임금 50년 경인년’이 확인된다. ‘요임금 50년 경인년’을⁴⁸ 소개한 일연조차 요임금 즉위 원년이 무진년이었음을 밝혔는데, 그 역시 단군의 건국시기를 이때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고조선 건국시기와 관련해서 단군이 요임금과 같은 해에 즉위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동시(同時)’, ‘병여(並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요 즉위 몇 년이 아니고, 이상시대로 동경하던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고려의 역사가 중국 못지않다는 자존의식의 표현이었다.⁴⁹ 고조선은 고려 역사에서 중국의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시대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들어 있다.

단군의 역년과 관련해서는 「고기」의 어국(御國) 1,500년, 수(壽) 1,908세와 「본기」의 리(理) 1,038년, 『제왕운기』 원시에서의 향국(享國) 1,028년 정도가 알려져 있다. 『제왕운기』에서는 단군 이후 그 계통이 북부여로 이어졌다고 서술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들은 단군기원부터 당대까지의 역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게 했다. 「고기」의 어국 1,500년은 기자 동래로 장대경으로의 이어(移都)까지를 포함하는데, 천운설(天運說)의 영향이라고 한다. 수 1,908세는 단군이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된 이후 「고

48 이 설은 唐 開元 15년(727)에 편찬된 一行의 『大衍曆』에 기초했다고 한다. 박대재, 2015, 앞의 글.

49 노태돈, 2000,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9~10쪽. 『동국통감』에서 확인되듯이 조선시대의 단군 즉위년은 요임금 25년 무진년으로 인식되었다. 현재의 檀紀 역시 이에 근거한다. 요임금 원년 갑진년설에 따른 것이다. 조선에서는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친연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요 원년 갑진년부터 당대까지의 역년을 비교하곤 했다. 요임금 원년 갑진년부터 홍무 원년 무신(1368)까지와 단군 무진년부터 조선 태조 원년 임신(1392)까지 3,725년이라거나(『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京都, 「國都」), 당요 원년 갑진년부터 홍무 원년 무신까지와 단군 원년 무진년부터 조선 태조 원년 임신까지 3,785년이라든지(『필원잡기』 권1), 帝嚳 41년 갑자부터 성화 14년 무술(1478)까지와 단군 무진부터 성종 9년 무술(1478)까지 3,800여 년(『사가문집』 권5, 序, 「歷代年表序」)이라는 것은 그 예이다. 조선 전기 명과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중화적인 보편인식의 사례이다.

기」 기록이 성립된 기준시점으로 고려가 건국된 태조 원년(918)까지의 역년이라고 한다. 또 어국 1,500년과 수 1,908세를 합친 3,408년은 단군 원년 무진년부터 「고기」 기록의 상한인 태조 원년까지의 연수를 적산(積算)한 단기(檀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 「본기」의 리(理) 1,038년은 『노사(路史)』의 요 원년 무인년설에 따른 것이고, 향국 1,028년은 단군 원년 무진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1,048년의 오기라고 한다.⁵⁰ 『제왕운기』의 경우 「본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후조선의 역년은 단군 향국 1,028(1038)년+군신(君臣)이 없던 164년+기자 역년 928년을 합산한 2,120(2,130)년으로 「고기」의 1,500년과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고기」에서 기자의 동래에 따라 단군이 장당경으로 이어졌다고 하여 고조선이 지속한 것으로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고조선사 인식에 대한 「고기」와 「본기」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고기」의 단군 어국 1,500년의 범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의 견해를 따른다면 그 어순은 “...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御國一千五百年 ...”이 되어야 한다. 단군의 ‘어국 1,500년’을 앞에 전재하고 후속되는 기자 동래와 단군의 장당경 이어를 그 범위로 해석하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어국 1,500년’의 범위는 백약산아사달로 이도(移都)했을 때까지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자 동래, 단군의 장당경 이어, 아사달 산신으로 좌정은 수 1,908세의 범위에서 해석하려는 것이다. 『제왕운기』에서 단군과 기자의 관계를 단절로 파악하고, 북부여를 단군의 후계로 설정하고 있듯이 단군의 장당경 이어 전승을 북부여와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을까 하는 추측에서이다.

「고기」에서의 단군 어국 1,500년은 백약산아사달, 아사달 등과 함께 천운설 또는 지리도참과 관련되어 있다. 「고기」의 자료적인 성격과도 관련된 것으로, 도참과 관련한 또는 그 영향 아래 찬술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⁵¹ 『제왕운

50 박대재, 2015, 앞의 글, 12~23쪽.

51 김성환, 2015,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동

기』에서는 단군 원년 무진부터 고려 태조 18년(935)까지를 3,288년으로 산출했다.⁵² 이 역시 고려의 역사적 기원으로 고조선을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또 백문보(1303~1374)는 천수순환설(天數循環說)에 입각해 단군기원부터 공민왕 당대까지의 역년을 1대주원(大周元)인 3,600년으로 파악했다. 그의 단군역년도 참위설에 기초하고 있었다.⁵³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전기에서 후기까지 세 종류의 단군기원에 대한 인식이 확인되는 셈이다.

「고기」와 『제왕운기』의 역년은 고려 건국과 일통삼한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고기」와 『제왕운기』의 역년 산출방식이 각각 고려의 건국과 일통삼한을 이루기 직전인 신라 귀부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자료는 다른 역사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제왕운기』에서의 기점이 신라 귀부와 관련한 때였다는 점은 삼국을 통합한 신라의 정통성이 고려로 넘어왔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⁴ 또

북아역사재단.

- 52 이에 대해서는 3,268년의 보정 역년이 제시되었다. 박대재, 2022, 「이승휴의 국사 편년과 역사의식」, 『민족문화논총』 94.
- 53 그는 공민왕 때가 단군에서 시작하는 3,600년의 大周元을 맞아 중흥의 시기임을 천명했다. 그가 상소를 올린 시기는 흥건적의 침입을 막 겪은 후라는 것을 미루어 공민왕 11~12년(1362~1363)경으로 추정된다(『고려사』 권112, 열전25, 백문보). 「고조선」조 고기의 경인년을 요 즉위원년으로 적용할 때 단군역년 3,600년은 1111년(예종 6), 요 즉위 신축년(50년 경인)을 적용할 때는 1161년(의종 15), 무진년을 적용할 때는 1268년(원종 9)이 여기에 해당된다. 백문보의 역년과 차이가 크다. 요 원년 무진년설은 원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던 기년설로 쿠빌라이 조정의 관료이자 성리학자였던 許衡(1209~1281)은 원이 금을 무너뜨린 1234년(계사)을 요 무진년부터의 3,600년에서 34년이 남은 햇수로 계산했다(『魯齋遺書』 권10, 「編年歌括」總數, “始自堯戊辰終于金癸巳 三千六百年內減三十四.”); 『魯齋遺書』 권13, 「國學事蹟」, “先生欲以蒙古生習學算術 遂自唐堯戊辰距至元壬申凡二〔三〕千六百五年 編其世代歷年爲一書 令諸生頌其年數而加減之.” 원에서의 요 역년 3,600년의 참위적인 기년설은 고려에 영향을 주어 백문보에 의해 단군 역년 3,600년설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 54 고려의 일통삼한은 후백제와의 결전을 치른 태조 19년(936)에 마무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태조 17년에 발해태자 大光顯의 귀부와 王繼의 성명 하사 등 고려의 臣民化를 위한 후속조치가 있었고(『고려사』 권1, 태조 17년 7월), 태조 18년에는 아

「고기」의 역년 산출방식은 『제왕운기』와도 차이가 있다. 『제왕운기』가 고려 태조 18년을 기점으로 단군 역년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 반면에, 「고기」에서는 그 방식이 은유적이고 간접적이다. 이 역시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의 정도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료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고기」에서 고려 건국을 기점으로 단군 역년의 산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제왕운기』에서 단군 역년을 산정한 배경과 같은 것이라면, 도참에서는 고려 건국의 지향이었던 일통삼한을 넘어⁵⁵ 조선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896년에 왕건의 아버지인 송악군 사찬(沙粲) 왕융(王隆)은 궁예에게 “송악에 성을 쌓고 왕건을 성주로 삼으면 조선·속신·변한의 땅에서 왕이 될 수 있다”고⁵⁶ 했다. 여기서의 조선은 단군에서 시작하는 『삼국유사』의 고조선과 같은 범주일 것이다. 즉, 고려 건국 초의 역사인식은 삼한을 상한으로 하는 것이 주류였다. 하지만 도참을 중심으로 그 상한을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었으며, 「고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전승은 이미 후삼국시대부터 지리도참설을 중심으로 서북한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그 일부가 고려 건국을 기점으로 하는 「고기」에 채록된 것으로 보인다.

또 『위서』의 “내왕이천재(乃往二千載)”도 역년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위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위의 『위서』(최남선), 왕침의 『위서』(정인보), 위수의 고본 『위서』(박대재) 등 일서(逸書)이지만 중국 사서라는 입장과 위만조선 사서론(정중환)으로 나뉜다. 후자는 고조선조의 『위서』에서 ‘위(魏)’자와 위만조선조에서 위만을 가리키는 ‘위(魏)’자가 같은 데 착목한 것이다. 후한 말에 찬술된 『잠부론(潛夫論)』에서도 위만을 ‘위만(魏滿)’으로 표기하고 있음이⁵⁷ 참고된다.

들 神劍과 불화를 겪은 견훤과 신라의 귀부가 있었기 때문에(『고려사』 권1, 태조 18년 6월 및 11월) 그 도대는 태조 17~18년(934~935)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55 『고려사』, 고려세계; 『고려사』, 권2, 태조 15년 5월 갑신(3일) 및 26년 4월 訓要.

56 『고려사』 권1, 태조 충서.

57 『潛夫論』 권9, 志, 氏姓35. “其後韓西亦姓韓 爲魏滿所伐 遷居海中【案韓西蓋卽朝鮮 朝誤爲韓 西卽鮮之轉 故尙書大傳以西方爲鮮方 史記朝鮮傳云 朝鮮王

그런데 최근에 『위서』의 “내왕이천재”가 부여나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한 견해가 있다.⁵⁸ 부여 또는 고구려 건국신화를 신고 있던 『위서』에서 그 전사(前史)로 2천 년 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실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이 위만조선의 사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위서』의 2천 년 전 역시 단군 역년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2. 단군의 후계

건국신화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신성성(神聖性)이 어떻게 계승되느냐는 것이다. 신화로서 완결성을 갖추려면 단군의 후계 관련 기록은 보조적인 입장이 아닌 원문과 대등한 수준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일문(逸文)으로 전하는 「고기」에서는 이런 측면을 살펴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단군본기」는 「고기」와 비교하여 완결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군기」 역시 이 부분에서만큼은 「단군본기」와 유사하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는 부여의 부루와 고구려의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는 전승을 소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단정했다. 이를 위해 각 자료는 「단군기」와 「단군본기」를 이용했다. 『삼국유사』 고구려조에서는 『국사』 「고려본기」를 인용하여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주몽을 낳았고, 북부여왕 해부루는 동부여로 옮겨간 후 그 계통을 금와에게 전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변에서 해모수가 유화를 사통(私通)하여 주몽을 낳는 과정에서 「단군기」를 인용하여 단군과 서하 하백의 딸 사이에서 부루를 낳았다는 전승을 주석의 형식으로 소개했다.⁵⁹ 이것만으로

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索隱云 按漢書 滿姓衛 擊破朝鮮王而自王之】(『한국고대사료집성』-중국편- 참조).

58 박대재, 2015, 앞의 글, 12~17쪽.

59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구려.

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백녀가 단수이건 복수이건 간에 그를 중심으로 해모수와 사이에서 주몽, 단군과 사이에서 부루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다. 『삼국유사』 찬자의 의견으로 “지금 이 기록(「고려본기」)을 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후에 주몽을 낳았다고 했고,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고 했으니 부루와 주몽은 이모형제일 것”이라고 했다. 『삼국유사』에서 「단군기」는 『국사』 「고려본기」와의 비교를 통해 하백의 딸을 매개로 주몽과 부루가 이모형제 관계에 있다는 『삼국유사』 찬자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일연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왕력에서 또 다른 미지의 고기를 근거로 고구려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로 단정했다.⁶⁰

『제왕운기』에서는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루를 낳았다는 전승을 소개했다. 연이어 「동명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의 후계가 (북)부여왕 부루-금와를 거쳐 동부여로 이어졌음을 기록했다.⁶¹ 여기서 「단군본기」는 단군의 계보가 부루-금와의 (북)부여-동부여로 계승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또 이것은 전조선기에 인용된 「본기」와의 관련 속에서 서술되고 있어 전조선기와 한사군 관련 서술에 인용된 「본기」의 기록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승휴는 사신으로 원나라에 가면서 요동 바닷가 길 옆에서 부여의 부마대왕묘(駙馬大王墓)를 확인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조선-(북)부여로 이어지는 계승관계를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고조선과 후조선의 계승관계보다는 후조선이 있는 상황에서 전조선의 정통성이 북부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⁶² 전조선기에서는 단군과 기자 사이에 164년의 공백을

60 「왕력」을 『삼국유사』의 古本 존재와 관련해서 無極의 초간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따른다면 단군과 주몽의 부자 관계는 무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된다(高橋亨, 1955,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 7, 朝鮮學會, 63~90쪽). 또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왕력의 기록 출처가 『단군기』라는 견해도 있다. 박대재, 2015, 앞의 글, 15~16쪽.

61 『제왕운기』 권하, 因分此地爲四郡.

62 『제왕운기』 권하, 因分此地爲四郡, “又賈耽曰 大原南 鴨綠血 扶餘舊地 則北扶余者 宜在遼濱 其開國 蓋自後朝鮮 而至此幾矣.”

설정하여 “부자 관계는 있었지만 군신 관계는 없었다”고 했다.⁶³ 이것은 전조선-(북)부여로 이어지는 계승관계를 두고 한 말이었다. 물론 『제왕운기』에서 전조선의 계승관계가 북부여과 후조선의 이원적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직접적인 계승관계는 전조선-(북)부여에 있었다.

『삼국유사』와 「단군기」의 관계는 『제왕운기』와 「단군본기」의 관계와 다르다. 『삼국유사』에서 「단군기」는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방증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이용되었다. 반면에 『제왕운기』에서 「단군본기」는 바로 이어지는 「동명본기」와 연결되면서 부루-금와로 이어지는 부여가 단군과 직결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주된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두 자료만으로는 단군-부루로 이어지는 고조선-부여의 계승관계를 살필 수 있으나, 『삼국유사』에서 단군-주몽의 관계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나 이를 통한 추론이 있어야만 방증될 수 있는 것이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서는 「고기」를 주된 자료로 인용하여 그 사실을 서술하고 있으며, 「단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 고구려조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사』 「고려본기」를 주된 자료로 인용하고 있다. 고조선·북부여·고구려의 역사계승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단군기」는 결정적인 자료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자료명에서 단군을 표제하고 있음에도 주된 자료로 이용되지 못했다. 분명히 「단군기」에 대한 일연의 이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고조선-부여의 역사계승성 문제는 「고기」와 「본기」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삼국유사』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북부여조에서도 「고기」라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단군기」와 「본기」도 같은 계통의 자료이지만, 동일한 자료로 추측되지 않는다. 고조선과 부여의 역사적 계통을 단군 → 부루로 이어지는 혈연적인 것으로 정리한 「본기」와 달리 「고기」에서는 그 계보가 조금 복잡하다. 고조선조에서 제석 환인의 손자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과 달리 북

63 『제왕운기』 권하, 전조선기, “一作 爾後一百六十四 雖有父子 無君臣.”

부여조에서 북부여는 천제 해모수가 건국한 나라였다. 북부여는 그 아들인 해부루에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상제의 명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고, 북부여에서는 동명제(東明帝)가 일어나 졸본부여(고구려)를 건국했다.⁶⁴ 북(동)부여는 천제 해모수-해부루로 이어졌지만, 그곳에서는 다시 상제-동명제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즉, 「단군기」에서 단군-부루-금와의 단일계열로 정리된 고조선-(북·동)부여의 역사계승성이 고기류에서는 제석 환인-단군의 고조선, 천제 해모수-해부루의 북(동)부여, 상제-동명제의 졸본부여(고구려)로 나뉘어 있었다. 이 점은 자료의 전승적인 측면에서 고조선조의 「고기」가 「단군기」보다 앞선 시기에 찬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접한 후대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단군과 주몽이 부자관계로 설정된 전승의 형성시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상정된다. 첫 번째는 왕력의 해당 기록을 존중하여 이 전승이 왕력 저술 이전부터 미지의 고기에 전해오고 있었고, 그것을 왕력에서 채록했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단군-주몽의 전승이 일연에 의해 비로소 창안된 추론이었을 가능성이다. 단군이 하백의 딸과의 관계에서 부루를 낳았다는 「단군기」의 기록과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의 관계에서 주몽을 낳았다는 『국사』 「고려본기」의 기록은 모순된다. 이에 일연은 하백의 딸을 매개로 “부루와 주몽은 이모형제일 것”이라고 추론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설정한 왕력의 기록은 일연 자신의 추론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⁶⁵ 그러나 왕력 기록이 미지의 고기일 것이라는 추론도 여전히 유효하다.

주몽을 중심으로 단군과 주몽을 부자관계로 설정한 전승은 주류는 아니었지만, 고구려와 고조선의 친연성을 확장하는 데 일정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또 해모수와 하백녀를 중심으로 하는 부여계 전승과 결합하는 과정에서⁶⁶ 단군과

64 『삼국유사』 권1, 기이1, 북부여.

65 김성환, 2013, 앞의 글, 70~71쪽.

66 「광개토대왕릉비」에서는 시조 추모왕의 출자를 북부여와 천제의 아들로 기록하고

부루를 잇는 전승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전승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단군기」 전승은 「고기」 전승보다 뒤늦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실린 동명왕의 계보와 관련하여 보충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동명왕편」에 잔편으로 전하는 『삼국사』의 「동명왕본기」와 『제왕운기』의 「동명본기」는 동일한 계통의 자료로 보기도 한다.⁶⁷ 『삼국유사』에는 「동명기(東明記)」가 인용되어 있는데,⁶⁸ 이 역시 마찬가지다.⁶⁹ 『삼국사』에서는 동명왕에 대한 계보를 천제-천제의 아들 해모수-동명왕으로 기록했다. 이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도 마찬가지다. 왕력의 단군-동명왕과 「단군기」·「단군본기」의 단군-부루 계보는 주류 전승이 아니었다. 물론 왕력과 「단군기」·「단군본기」의 기록이 ‘혹운’ 형태의 보조 전승으로 실려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들이 『삼국유사』 고구려와 『제왕운기』 고구려기에서 배제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단군본기」가 『삼국사』의 편목이라는 견해⁷⁰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⁷¹ 단군·해모수·부루·주몽이

있다. 「광개토대왕릉비」(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7세기 자료인 「泉男産墓誌銘」에서는 동명은 부여를 開國했고, 주몽은 고구려를 開都했다고 하여 두 나라의 역사계승성을 서술했다. 「泉男産墓誌銘」. “… 昔者東明感氣 踰瀝川而開國 朱蒙孕日 臨溟水而開都 …”(위와 같음).

- 67 김정배, 1987, 「檀君記事와 관련된 「古記」의 性格」,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3~167쪽; 이도학, 2012, 「檀君 國祖意識과 境域認識의 變遷 - 『舊三國史』와 관련하여 -」,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390쪽.
- 68 『삼국유사』 권1, 기이1, 말갈발해. “又東明記云 卒卒城地連鞬鞞[或云今東眞].”
- 69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거론 측면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 70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의 歷史性을めぐって-史料批判의 再檢討-」, 『韓國文化』 4-6, 8쪽; 강인숙, 1984, 「구삼국사의 본기와 지」, 『역사과학』 1984-4, 사회과학출판사, 22~25쪽.
- 71 「단군본기」는 현재 이름조차 전하지 않는 고려시대의 사찬 사서류의 편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 노명호, 2020, 「고려 전·중기에 歷史書는 왜, 어떻게 다시 서술되었나: 『三國史』의 구성과 그 후의 변화」, 『역사학보』 248, 역사학회,

등장하는 고조선·부여·고구려 건국신화에서 해모수-주몽으로 연결되는 전승이 주류였고, 단군-부루 또는 단군-주몽으로 연결되는 전승은 이설(異說)로 전해진 것이 고려시대의 전승양상이었다. 『삼국사』와 「단군기」·「단군본기」, 왕력은 결이 다른 성격의 자료였다. 「단군기」·「단군본기」 역시 고려 전기에 선가(仙家)나 도참과 관련한 저술로 짐작된다.⁷² 한편, 『제왕운기』에서의 송양(松讓)이 단군의 후손이라는 서술은 평양에서의 선인왕검이라는 기록에 기대어 「동명본기」의 선인을 단군의 후손으로 추측한 이승휴의 견해로 파악된다.⁷³

「고기」와 「단군기」 두 자료를 모두 접한 일연은 이런 점들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단정하게 된 것은 단군과 해모수를 동일 객체로 볼 경우 고조선과 북(동)부여 및 고구려의 혼란스런 「고기」의 기록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고기」의 북부여를 건국한 천제 해모수와 졸본부여를 건국하게 한 상제 모두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그는 하백의 딸과 해모수의 관계에서 주몽의 출생을 서술한 『삼국유사』 고구려조(『국사』 「고려본기」)에서 하백의 딸과 단군의 관계에서 부루를 출생했음을 거론하며 부루와 주몽이 이모형제라고 했던 것이다(「단군기」). 여기서 이모형제라는 일연의 언급은 하백의 딸이 단수가 아닌 복수일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왕력의 기록은 단군과 해모수가 동일 객체여야만 가능하다. 하백의 딸을 단수로 파악한 것이다. 단군과 주몽을 둘러싼 왕력과 고구려조의 기록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왕력에서는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로 단정했다. ‘일운’, ‘혹운’, ‘세진’의 의미가 아니었다. 고조선-고구려로

19쪽. 여기에서는 外王內帝하던 고려시대의 역사관을 천하관을 중심으로 고려중심론 계열(천하제일 황제관념), 화이론의 유교정치이념 계열(諸侯制), 천하다원론의 유교정치이념 계열(外王內帝)로 파악했다. 신이사관과 유교사관으로 양분하던 역사관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보려는 시도이다.

72 김성환, 2008, 「檀君傳承과 檀君墓-고려시대 단군묘 전승의 가능성 모색-」, 『역사민속학』 24(김성환, 2009b,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재수록).

73 김성환, 2013, 앞의 글, 69~70쪽.

의 역사계승성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고구려계승의식을 지니고 있는 고려가 고조선을 이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고조선조에서와 같다.

부루와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전승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의 찬술을 전후한 시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전승들은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만, 「고기」 찬술 이후 형성되어 일연에 의해 채록된 것으로 짐작된다.

IV. 원의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 편찬 요구와 『삼국유사』·『제왕운기』 찬술

고려는 원 세조에게 토풍의 보존을 요청했고, 불개토풍(不改土風)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이후 세계제국의 부마국 체제에서 고려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고, 세조구제라는 틀에서 지속되었다.⁷⁴ 그 결과는 우선 고려의 의관 풍속을 유지하려는 것에서 나타났고,⁷⁵ 역사 편찬도 이 기준이 일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원은 고려에 지속적으로 역사 편찬과 그 결과를 보내도록 요구했다. 이 시기 역사 편찬은 당대사(當代史)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특징이 있다.⁷⁶ 다원사회인 고려의 전통적인 외왕내제(外王內帝)의 체제를 천자-제후국의 체제로 변화시킨 원이 그 관계의 확인을 통해 고려를 통제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첫 번째 조치

74 이익주, 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75 김윤정, 2017, 「14세기 고려-원 관계 확장과 고려의 원 복식문화 수용」, 『역사학보』 234, 역사학회. 고려의 풍속, 즉 토풍의 범위는 君臣의 衣服·冠蓋·樂調·禮器로 규정할 수 있다. 『고려사』 권39, 공민왕 6년 윤9월 무신(7일).

76 박종기, 2011,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당대사(當代史)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는 1278년(충렬왕 4) 7월에 확인된다. 원의 중서성에서는 고려의 역대사적과 귀부한 날짜, 황제 등극 이래의 사신 명단, 고려 국왕이 친조한 연월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바치게 했다. 원의 역사 편찬을 담당한 국사원(國史院)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⁷⁷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이다. 이것은 그다음에 언급되는 원과 직접 관련된 당대사 관련 자료들과 성격이 다르다. ‘누조(累朝)’의 의미는 ‘역대 조정’ 정도일 것인데,⁷⁸ 범위는 구체적으로 태조부터 원과의 관계를 맺은 고종 때까지로 지정할 수 있다. 1284년의 『고금록』, 『친추금경록』 등은⁷⁹ 충렬왕 때의 결과였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태조부터 고종까지 본국 역사에 대한 정리였지만, 원의 입장에서는 고려와의 관계를 맺기 이전의 전사(前史)였다. 원과 사대관계를 맺기 이전에 고려가 송·요·금 등 중국 역대왕조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관계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었을 것이다.⁸⁰

원이 고려에 역사편찬을 요구한 사실은 제후국이 된 고려의 입장에서도 당대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을 갖도록 했다. 그것은 세계제국인 원에 함몰될 위기감에서 고려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세조구제 중 하나였던 ‘불개토평’의 논리는 여기에서도 작동될 수 있었다. 원 간섭기 이전에 편찬된 고려 이전의 역사 편찬으로는 『삼국사』와 『삼국사기』가 알려져 있다. 또 예종은 흥관(?~1126)에게 삼한 이래의 사적을 찬집할 것을

77 『고려사』 권28, 충렬왕 4년 7월, “中書省令具錄本國累朝事跡 及臣服日月 與帝登極已來 使介名目 國王親朝年月以呈 因國史院報也.”

78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累朝의 사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고려사』 권3, 성종 9년 12월 및 10년 윤2월 계유(3일).

79 『고려사』 권29, 충렬왕 10년 6월 병자(30일); 『고려사』 권30, 충렬왕 12년 11월 정축(15일); 『고려사』 권107, 열전20, 민지. 1286년에 吳良遇가 수찬의 명을 받은 『국사』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친추금경록』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원의 『제국신복전기』과 고려의 역사 편찬」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80 이런 점에서 원의 三史 편찬과 관련해서 1343년(충혜왕 복위 4) 원이 고려에 송·요·금의 사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고려사』 권36, 충혜왕(후) 4년 5월 임오(18일).

명하기도 했다. 이들 자료에서 고려 역사의 상한은 삼국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 전중기 역사인식의 결과였다. 하지만 정체성의 위기에서, 또 역사까지도 원에 종속을 강제당하는 상황에서 역사 편찬은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삼국부흥운동 등을 경험한 후 이를 극복할 시대인식의 방향이 함께 대두한 것도 물론이다. 그것은 본국 역사로서 삼국 이전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고, 관찬은 아니지만 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기」·「본기」 등의 자료는 주목될 수 있었다.

이런 추측을 하는 데는 물론 「고기」·「본기」류의 자료에 대한 유통 상황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지리도참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고려의 독자층에게는 비교적 알려진 자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역시 단군과 관련한 자료로 알려져 있는 『신지비사(神誌秘詞)』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1096년(숙종 1) 김위제를 앞세워 남경 건설을 추진했다. 이론적 기반은 “3경을 운영하면 36개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이고, 개국한 지 160여 년 뒤에는 목맥양에 도읍할 것”이라는 도참설에 있었다. 『도선기(道詵記)』·「도선답산가(道詵踏山歌)」·『신지비사』 등은 그 이론서였다.⁸¹ 예종 때 은원중(殷元中)도 같은 내용을 상소했다는 점은 3경 운영에 도참설과 그 이론을 제공한 서적들의 유통범위를 짐작하게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신지비사』의 서문에 본문의 주석과 서문을 쓴 사람이 소문(蘇文) 대영홍(大英弘)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⁸² 그 저술이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후대

81 『고려사』 권123, 열전35, 方技, 김위제.

82 이에 대해 『삼국유사』 찬자는 “소문이 職名인 것은 문헌으로 증명되지만, 傳에는 ‘文人 蘇英弘의 서문’이라고 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주석했다. 『삼국유사』 권3, 흥법3, 「寶藏奉老 普德移庵」, “... 自稱姓盖名金 位至蘇文 乃侍中 職也【唐書云 盖蘇文 自謂莫離支 猶中書令 又按神誌秘詞序云 蘇文大英弘序 并注 則蘇文乃職名有文證 而傳云 文人蘇英弘序 未詳孰是】.” 여기서 ‘傳’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알 수 없지만, ‘神誌傳’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神誌와 관련한 별도의 傳記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의 자료에서이지만, 신지(神誌)는 단군 때의 선인(仙人)으로 도참 관련 자료인 「구변도(九變圖)」를 찬술했다고 전한다.⁸³

『신지비사』는 조선 전기까지 전해졌음이 확인되는데, 그 단편이 먼저 『태종실록』에서 확인된다. 1412년(태종 12) 태종은 사관 김상직(金尙直)에게 충주사고에 보관 중인 책들을 조정으로 옮기도록 했는데, 그 목록에서 『신비집(神祕集)』이 확인된다. 이 책이 『신지비사』로 보인다. 특히 다른 책들과 달리 『신비집』은 펴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해서 올리도록 했다. 나중에 이를 살펴본 태종은 “이 책에 실린 것이 모두 괴탄하고 불경한 설”이라며 대인 류사눌에게 불사르도록 했다.⁸⁴ 괴탄하고 불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왕조의 존폐와 직결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다. 물론 11세기 초 고려왕실에서 이용한 도참자료로서 『신지비사』와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면서 보았을 『신지비사』, 그리고 15세기 초 태종이 본 『신지비사』의 내용이 동일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참설이란 시대의 제반 환경과 연동하며 항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변개가 있었을 것이다.

불사르라는 왕명에 따라 『신지비사』는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러면서도 『용비어천가』에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 때까지 일정하게 이용되기도 했다. 이후 그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민간에서 유통되던 『신지비사』 역시 수거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불사를 수 없었고 민간에서 비밀리에 전해졌을 것인데, 그것은 『신지비사』가 아니라 『고조선비사(古朝鮮祕詞)』로 이름이 바뀌어 유통되었다. ‘신지’를 ‘고조선’으로 바꾸어 금서 명령을 피했던 것이다. 1457년(세조 3) 세조는 팔도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를 비롯한 『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노원동중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 등을 민간에서 간직해서는 안 되는 금서로

83 『용비어천가』 권2, 제16장, “高麗肅宗時 衛尉丞同正金謂禪上書 請遷都漢陽 用神誌 道詵圖識也【… 神誌 檀君時人 世號神誌仙人】”; 『대동운부군옥』 권18, 入聲, 沃九變局, “檀君時 神誌所撰圖識之名 言東國歷代定都.”

84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8월 기미(7일).

지정했다. 이를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책으로 바꿔주도록 유도했다.⁸⁵ 두 차례에 걸친 『고조선비사』의 회수 조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예종과 성종 때의 금서목록에서는 빠졌다.⁸⁶

고구려 때의 저술로 가탁되면서 고려사회에서 왕실은 물론 사찰, 민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유통되었던 『신지비사』는 고조선 또는 단군과 관련하여 국도(國都) 운영을 그 내용으로 한 도참서였다. 이 자료는 다른 도참류의 서적과 함께 고려왕실의 연기(延基)를 위한 이론서로 이용되었고, 각 시기마다 제반환경에 따라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개되며 유통되었다. 하지만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그 내용은 조선의 통치이념과 어긋나 금서로 지목되었고, 『고조선비사』로 이름을 바꾸며 전해지다가 두 차례의 걸친 회수조치가 단행된 결과 15세기 중엽 이후 사라졌다.

「고기」·「단군본기」로 대표되는 고려시대의 단군 관련 자료의 유통 상황 역시 『신지비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고려왕실의 연기비보를 위한 도참설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능을 했고, 때로는 묘청이나 이자겸 세력에게 이용되면서 내용의 변개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12~13세기 사회분열의 경험, 세계제국 원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왕정복고와 부마국 체제라는 전대미문의 변화, 자국의 역사문화가 원에 종속될 것이라는 위기감 등은 고려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자각을 하도록 했다. 이 와중에 고려에 대한 원 세조의 ‘불개토평’ 조치는 역사문화에서 원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었고, 그것은 삼한(삼국)에 머물던 고려의 역사인식을 그 이전인 고조선으로 확장할 수 있게 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그 결과였다. 『삼국유사』에서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삼국 시조가 신이한 데서 나온 것을 괴력난신으로 말할 수 없어 기이(紀異)를 제편(諸篇)의 첫머리에 싣는다”고⁸⁷ 밝혔다. 『제왕운기』에서는 중국

85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 5월 무자(26일).

86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 9월 무술(18일);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무오(9일).

과 동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새로운 중화로 등장한 원을 칭송하면서도 고려가 그런 중국과는 구별되는 별건곤이었음과 소중화를 이루고 있음을 드러냈다.⁸⁸ 『제왕운기』의 찬술 목적은 충렬왕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읽혔으면 한다는 바람에 있었다. 이승휴는 몽골과 오랜 전쟁을 끝낸 고려가 원의 부마국왕이 되어 평화를 찾은 것에서 중흥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제왕운기』에서 수(隋)와 금(金)이 방전(傍傳)에서 일어났지만 모두 정맥(正脈)을 얻어 정통왕조가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금을 평정한 대원(大元) 역시 정맥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고려에게 원은 천하의 모든 나라가 내조하여 신하의 예를 취하는 상국으로 그 덕은 개벽 이래 비교할 바가 없었다고 읊었다.⁸⁹ 「금대기(今代紀)」에서는 원의 도움으로 폐위되었던 국왕이 복위할 수 있었고, 원의 빈왕(賓王)이 되어 멀리서도 황제의 은혜를 받아 왕업이 다시 빛날 수 있었다고 읊었다.⁹⁰ 그가 동국 역사를 읊는 모두(冒頭)에서 조선이 중국과 구분되는 별건곤이면서도 예의로 집안을 일군 소중화라고 읊어 다원론적인 천하관과 함께 형세문화론의 화이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확인되는 중국과 구별되며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고려의 역사문화 정체성은 이런 과정의 결과였다. 특히 원에서 ‘본국누조사적’을 요구한 1278년은 이승휴가 두 번째 사행을 한 해였다. ‘불개토평’은 고려가 원의 보편문화에 일정 정도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중국의 보편문화는 기자로, 고려의 전통은 단군으로 상징하여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⁹¹ 『제왕운기』에서 원의 성세를 찬양하면서 고려의 자존의식을 드러낸 것은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고려 후기부터 이루어졌다. 이

87 『삼국유사』 권1, 기이1, 敍曰.

88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지리기.

89 『제왕운기』 권상, 正統相傳頌.

90 『제왕운기』 권하, 今代紀.

91 최봉준, 2016, 「이승휴의 단군 중심의 역사관과 다원문화론」, 『한국사상사학』 52, 한국사상사학회, 190쪽.

색(李穡, 1328~1396)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해동의⁹² 역사적 사실로 인식했다. 그는 당요 즉위년인 무진에 시조가 건국했다고 했지만,⁹³ 시조의 명칭은 단군이 아니라 조선씨(朝鮮氏)였다.⁹⁴ 단군은 평양의 군웅(群雄) 중 하나로 이해되었고⁹⁵ 고조선의 건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물론 삼성(三聖)의 괴이한 일과 천여 년에 이르는 수명을 읊고 있어 「고기」나 「본기」 수준의 단군신화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군을 거론하지 않았다.⁹⁶ 이색에게 고조선은 조선씨가 요임금이 즉위한 무진년에 동시에 건국하여 천년의 수(壽)를 지속한 고려 역사의 시원이었지만, 그 역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증할 수 없었다.⁹⁷ 이런 까닭에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온 신인(神人)을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고 단군이라고 불렀다”는 『응제시』 유형의 단군전승이⁹⁸ 생겨났다.

-
- 92 李穡은 고려가 해동천자의 나라라는 다원적 천하관의 기억 속에 원과 명의 두 천자, 大元天子와 金陵天子를 이야기했다. 『목은시고』 권21, 「驅離行」, “海東天子古樂府, 願繼一章傳汗青”; 『목은시고』 권19, 「金漁友求銘乃祖幽堂 因吟四首」 “大元天子撫桑墟 貞烈公家奉詔初 諸將無功終不問 百年熙洽此權輿”; 『목은시고』 권26, 「十七日 監進色以呈省事請坐 然其間尙有咨決都堂 然後可以措辭者 條具以呈 三色設點心 又蒙宣醞 微醉而歸」, “金陵天子握乾樞 歲貢初徵東海隅.”
- 93 『목은시고』 권3, 「娑婆府」; 『목은시고』 권17, 「君子」; 『목은문고』 권9, 서, 「周官六翼序」.
- 94 『목은문고』 권9, 서, 「送使符寶使還詩序」.
- 95 『목은시고』 권3, 「西京」.
- 96 『목은시고』 권23, 「雜興」 三首 중 (三). “帝堯戊辰歲 東方始有君 其時與天通 祕怪成三墳 壽考至千載 奄有東海濱 質朴禮向簡 麤疎言不文 奈何予之生 世變如浮雲.”
- 97 『목은문고』 권8,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
- 98 『양촌집』 권1, 응제시, 「始古開闢東夷主」【昔神人降檀木下 國人立以爲主 因號檀君 時唐堯元年戊辰也】. “聞說鴻荒日 檀君降樹邊 位臨東國土 時在帝堯天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後來箕子代 同是號朝鮮.” 한편, 권근은 고려 말에 「槧城醮青詞」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참성초제의 유래를 단군에서부터 찾고 있다. 『陽村集』 권29, 靑詞類, 「槧城醮靑詞」; 김성환, 2021, 「甍城醮에서 摩利山塹城醮로」,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전승-塹城醮에서 摩尼山山川祭로』, 민속원.

『응제시』 유형의 단군전승 역시 「고기」와 「본기」 유형의 전승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의 결과였다.⁹⁹

V. 맺음말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풀어낸 이야기이다. 그 구성은 시공간에서 신화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으로 나누어 있다. 그런데 역사 공간인 단군의 고조선 건국과 아사달산신으로의 전환과정 역시 역사 속의 시간이 아니라 신화 속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단군신화에서 역사성을 찾는 작업은 이제까지의 지대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군신화가 역사적인 시공간으로 정착하는 때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이다. 『삼국유사』·『제왕운기』의 편찬 이후 국조(國祖)로서 단군인식의 보편성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14세기에 고조선과 단군의 역사적 사실이 고려 조정이나 이와 관련한 일에서 논의되고 있음은 백문보·이색·권근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그들에게 고려 역사의 출발로서 『삼국유사』·『제왕운기』 수준의 고조선은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고조선을 선행국가로서 수용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고조선을 역대국가의 첫머리에 두고, 이를 공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동국사략』¹⁰⁰·『동국통감』¹⁰¹ 등 관찬 사서에서 삼조선 체계 속의 단군조선, 국가제사에서 역대시조묘로서 평양 단군사당의 건립¹⁰² 등은

99 이색의 상고사 인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 상문하고자 한다.

100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8월 을해(30일).

101 『세조실록』 권14, 세조 4년 9월 병신(12일);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병신(13일).

102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구체적인 사례이다. 단군의 명칭이 ‘조선단군’¹⁰³ 또는 ‘동방시조’,¹⁰⁴ ‘조선시조 단군’¹⁰⁵이었듯이 고조선(단군조선)은 조선 역사의 시원으로 정립되었고, 평양은 역사적 도읍지로 확고하게 인식되었다.

이후 단군 관련 사적과 전승은 역사적 사실로 정리되었다. 고려 원종의 친초(親醮) 이후 단군의 제천단으로 자리하여 구체적인 통치유적으로 자리하게 된 참성단과 삼랑성,¹⁰⁶ 평안도 강동현의 고적으로 언전(諺傳)되던 『동국여지승람』에서의 단군묘(檀君墓)가 조선 후기의 일정한 치제와 수리의 논의를 거쳐 한말 단군릉으로 숭봉되는 사실이 대표적이다.¹⁰⁷ 이와 관련한 정리는 사찬이지만 조선 전기에 단군전승을 역년 형식으로 정리하여 역사화한 류희령(1480~1552)의 『표제음주동국사략』에서 먼저 이루어졌다.¹⁰⁸

단군신화에 대한 스펙트럼은 시대에 따라 논자마다 다양하다. 그것은 한국사 첫머리를 장식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국신화와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신화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들이 엮어내는 신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고조선사의 이해는 달라진다. 그것은 사실 각 시대마다 고조선에 대한 인식론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고조선 당대의 사실(史實)과 정합(整合)하느냐의 문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런 까닭에 단군신화에서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는 작업은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그 작업의 결과들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편타당한 결과물로 축적될 때 단군신화는 고조선 건국신화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3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경신(11일).

104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6월 기미(6일).

105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7월 무진(1일).

106 서영대, 1999, 「강화도의 참성단에 대하여」, 『한국사론』 42; 김성환, 2021, 앞의 책.

107 김성환, 2009, 앞의 책.

108 『표제음주동국사략』 권1, 전조선.

참고문헌

사료

『관자 輕重』, 『戰國策』, 『潛夫論』, 『구당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안거사집』, 『목은집』, 『양촌집』, 『고려사』, 『표제음주동국사략』, 『동사강목』.
『태종실록』,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대동운부군옥』, 『목은문고』, 『목은시고』, 『약천집』, 『여유당전서』, 『용비어천가』, 『해동역사』.

단행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2019, 『역주 고조선사료집성』(중국편·국내편), 새문사.
김성환,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_____, 2009a, 『日帝強占期 檀君陵修築運動』, 경인문화사.
_____, 2009b,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_____, 2021,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전승-甍城醮에서 摩尼山山川祭로』, 민속원.
김용선 편저, 2012,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편, 2018, 『고조선사 연구동향』, 동북아연구재단.
이강래, 1996,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

논문

강릉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력사과학』 1996-2, 사회과학출판사.
강인숙, 1984, 「구삼국사의 본기와 지」, 『력사과학』 1984-4, 사회과학출판사.

- 김남중, 2019, 「안악군 당장경 유적과 단군 전승」, 『동북아역사논총』 65, 동북아역사재단.
- 김도현, 2015, 「동안 이승휴의 불교 인식과 看藏寺」, 『이사부와 동해』 10, 한국이사부학회.
- 김상현, 2014,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한국고대사학회.
- 김성환, 1996, 「고려시대 三聖祠의 단군숭배」, 『백산학보』 46, 백산학회.
- _____, 1999a, 「檀君傳承의 類型(Ⅰ)」, 『중앙사론』 13, 중앙사학회.
- _____, 1999b, 「檀君傳承의 類型(Ⅱ)」, 『사학지』 32, 단국대 사학과.
- _____, 2000a, 「고려시대 묘향산의 단군전승」, 『명지사론』 11, 명지사학회.
- _____, 2000b,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 『단군학연구』 3, 단군학회.
- _____, 2006,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백산학보』 75, 백산학회.
- _____,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_____, 2015,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동북아역사재단.
- 김윤정, 2017, 「14세기 고려-원 관계 확장과 고려의 원 복식문화 수용」, 『역사학보』 234, 역사학회.
- 김정배, 1987, 「檀君記事와 관련된 『古記』의 性格」,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노명호, 2020, 「고려 전·중기에 歷史書는 왜, 어떻게 다시 서술되었나: 『三國史』의 구성과 그 후의 변화」, 『역사학보』 248, 역사학회.
- 노태돈, 2000,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 리상호, 1963,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편문집』, 과학원출판사.
- 박대재, 2015, 「檀君紀元和 『古記』」, 『한국사학보』 61, 고려사학회.
- _____, 2016, 「箕子朝鮮과 小中華」,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 _____, 2022,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의식」, 『민족문화논총』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박종기, 2011, 「원 간섭기 역사학의 새 경향-당대사(當代史)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 박찬홍, 2011, 「고조선·부여·고구려의 역사적 계승관계 연구」, 『史叢』 7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변동명, 2000, 「이승휴,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 _____, 2004, 「이승휴의 『내전록(內典錄)』 저술, 『한국사상사학』 23, 한국사상사학회.
- 사쿠라자와 아이(櫻澤亞伊), 2016, 「근대 일본에서의 단군론의 성립, 『인문학연구』 31,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 서영대,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1999, 「傳統時代의 檀君認識」,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 _____, 2000, 「신화 속의 단군」,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 _____, 2010, 「근대 동아시아 3국의 신화적 국조 인식」, 『단군학연구』 23, 단군학회.
- 송호정, 2007, 「고조선-고구려의 역사구속성 논란에 대한 하나의 제안: 조법종의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신서원)를 읽고」, 『韓國古代史研究』 47,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15,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 문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역사와 현실』 98, 한국역사학회.
- 오강원, 2015, 「진근대시기 단군 세계 인식의 확대 과정과 맥락」,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 이도학, 2012, 「檀君 國祖意識과 境域認識의 變遷-『舊三國史』와 관련하여-」,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 _____, 2018, 「檀君朝鮮, 神話에서 歷史로의 進入過程」, 『단군학연구』 38, 단군학회.
- 이익주, 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이종욱, 1999,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 소나무.
- 전호태, 1997, 「고구려 벽화고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 「고구려 장천1호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2, 고구려발해학회.
- 조경철, 2013, 「근대 이전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한국사상사학회.
- 조법종, 2001, 「고구려사회의 檀君認識과 종교문화적 특징」, 『한국고대사연구』 21,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05, 「고구려 벽화고분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상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2, 단군학회.
- 진성규, 2005, 「이승휴의 불교관」, 『진단학보』 99, 진단학회.

- 채용석, 2012, 『帝王韻紀』로 본 李承休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한국국학진흥원.
- 최광식, 2015, 「桓雄天王과 檀君王儉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고찰」, 『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 최병길, 2020, 「고구려 각저총 씨름도의 도상 해석」, 『동악미술사학』 28, 동악미술사학회.
- 최봉현, 1994, 「고려시대 단군신화 전승문헌의 검토」,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봉준, 2016, 「이승휴의 단군 중심의 역사관과 다원문화론」, 『한국사상사학』 52, 한국사상사학회.
- 최일레, 2010,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투영 맥락-비류부의 정치적 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5, 한국사상문화학회.
-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4-6.
- 井上秀雄, 1980, 「三國遺事と三國史記:その時代背景性格と構成」, 『アジア公論』 9-5.
- 齋藤忠, 1987,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圖」, 『東アツア葬・墓制の研究』.
- _____, 1989, 「角抵塚の角抵(相撲)・木・熊・虎とある畫面について」, 『壁畫古墳の系譜』, 學生社.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김성환

단군신화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다. 시간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시기와 존속기간에 대한 것이고, 장소에서는 중심지에 대한 것이다.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불신하는 입장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고조선 이후 단군의 위상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고조선 당대에는 건국시조로, 이후 고려 전중기까지 서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신(地域神)으로, 고려 후기에는 역사적인 재인식과 조선에서의 국조(國祖)로서, 근대 이후에는 혈연적 민족시조로서의 위상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전승은 지역과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군신화를 전하는 자료는 단군(檀君, 壇君)을 표제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고기」·「본기」 등과 같이 독립된 성격의 자료도 있다. 『신지비사』·『고조선비사』 등 직접적인 도참 관련 자료도 있다. 단군의 건국시기와 역년, 단군기원, 단군의 아들을 둘러싼 계승관계 등이 이 자료들에서 전한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현재 전하지 않고, 다른 자료에 실려서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전한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13세기 후반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편

찬은 새로운 역사인식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12~13세기 분열을 경험한 고려사회의 자각과 외세에 대응한 자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마국 체제에서 당대사(當代史)를 포함한 고려 역사 전반에 대한 원의 사서(史書) 편찬 요구와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정리를 통해 향후 보완하거나 새롭게 검토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작성되었다. 기본적인 관점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역사학적인 측면에 있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고조선 건국신화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신화 속의 시공간을 역사 속의 시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주제어: 단군신화, 고조선, 『삼국유사』, 『제왕운기』, 「고기」, 「본기」, 단군의 후계, 당대사(當代史)

Tangun, from Mythology to History

Kim Sunghwan

When trying to understand Tangun mytholog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one will encounter constraints in determining both its time and location. With respect to time, these constraints lie in determining the period of Ancient Joseon's construction as well as the length of its existence. With regards to location, the difficulty lies in determining Ancient Joseon's geographic center. Related to these constraints is a lack of belief in the historical existence of Ancient Joseon.

After the end of the era of Ancient Joseon, the status of Tangun underwent a series of changes. At first, his status was that of founder of the Ancient Joseon nation and seen as a local deity centered in the northwest Korean region following the mid Goryeo dynasty. Tangun was historically re-recognized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and gained status as the progenitor of the Joseon dynasty. Also, after the Korean Empire, his status was recast as an ancestral founder with blood ties to the people. Each transmission of his cultural legacy reflects the

regional, societ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n aspect which requires further study.

Works passing down the mythology of Tangun include not only records containing his name in the title but also documents such as *Gogi*, *Bongi* and others, each with its own independent characteristics. Also, one can find records such as *Shinji-bisa*, *Gojoseon-bisa*, etc. directly related to books of prophecy. With a lapse of some years following Tangun's creation of the country, these documents conveyed information dealing with his origin, the issues surrounding the succession of his son, as well as other topics. The records, however, did not pass down such content in the form of current news, but as second-hand information gleaned from other documents that they then transmitted as historical fact. This will need to be organized into a coherent narrative.

The compil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thirteenth century of the literary works *Samguk-yusa* and *Jewang-ungi* can be explained through a newly emerging historical consciousness in Goryeo society, which had experienced a split during the twelfth to thirteenth century; it was a consciousness arising from a sense of homeland as a response to foreign pressure and influence. On a related note, a revision to the record is needed with respect to the prevailing son-in-law country structure when considering the demand for the compilation of a Yuan dynasty-era history books dealing with the first half of Goryeo history and including its contemporary history in Late Goryeo period.

With the organization these literary and historical aspects, this essay will approach the parts of the discussion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or newly examined. A shift in perspective is needed away from a

more general point of view toward one focused on the mythology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Ancient Joseon.

Keywords: Tangun mythology, Ancient Joseon, *Samguk-yusa*, *Jewang-ungi*, *Gogi*, *Bongji*, Contemporary history in Late Goryeo period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용선비(慕容鮮卑)의 계성(薊城) 시대와 하북(河北)지역

이춘호 | 중국 惠州學院 歷史系 교수

- I. 머리말
- II. 모용종실(慕容宗室)의 군사적 역할과 모용군권(慕容君權)과의 신관계
- III. 한인사족(漢人士族)의 무수지책(撫綏之策)과 하북 지방관으로의 임명
- IV. 한인호강(漢人豪強)의 귀향과 하북 정세의 신변화
- V. 맺음말



I. 머리말

모용선비(慕容鮮卑)는 다른 오호족(五胡族)과 달리 연왕국[전연(前燕)]을 건국하기 전후에 대내외적으로 맞닥뜨렸던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겨갔으며, 또한 각각 수도를 둔 곳에서 당시 그들이 추구했던 국가발전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즉, 극성(棘城(311~341: 극성시대))에 수도를 두었을 때 부락연맹의 시대를 끝내고 국왕이 국가권력의 정점에 서는 연왕국을 건국하였고, 이어서 용성[龍城(341~353: 용성시대)]으로 천도한 후에는 지금까지 진조(晉朝)에 대해 취해왔던 ‘근왕(勤王)’의 외교노선을 버리고 독자적인 통치체제를 갖춘 왕조로 발전 변모해갔던 것이다.¹ 그런 그들이 이후 그들의 세력근거지 요방(遼邦)²을 떠

* 투고: 2022년 4월 11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10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15일

** 이 논문은 2019년도 惠州學院自主創新能力提升計劃項目(hzu201910) 지원으로 연구하였음.

- 1 『資治通鑑』卷97, 「晉紀」19, 穆帝永和元年(345)條, 3068~3069쪽, “燕王皝以爲古者諸侯卽位, 各稱元年, 於是始不用晉年號, 自稱十二年. 胡注: 燕自是不復稟命於晉矣.” 용성시대로 들어서면 모용선비는 극성시대와 달리 점차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치·경제·군사 등의 통치체제를 갖춘 왕조로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추구해갔는데(이춘호, 2010a, 「五胡시기慕容前燕의建國과그성격-‘勤王’의출현및그운용을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113집, 99~107쪽 참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345년에 이르러慕容皝은 비로소 “不用晉年號, 自稱十二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 『晉書』卷108, 慕容廆載記, 2805쪽, “... 上則興復遼邦, 下則并吞二部 ...”(밑줄은 필자) 주지하듯 당시 요방은 遼西·遼東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사서에서는 이를 遼海[『後漢書』卷73, 公孫瓚傳, 2362~2363쪽, “瓚自以爲易地當之, 遂徙鎮焉. 乃盛修營壘, 樓觀數十, 臨易河, 通遼海”(밑줄은 필자)]로 달리 기록하기도 하였다. 일찍이慕容氏의 선조 莫護跋이 그의部衆을 이끌고 요방으로 이주한 후慕容涉歸·慕容廆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점차 이 지역의 새로운 霸者로 성장한다. 이후 그들이 하북으로 진출하면서 요방은 점차 하북의 후방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시종 정신적인 고향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현상은 모용씨 제왕조(전연·후연 등)의 帝王들이 사후

나 하북(河北)³으로의 진출을 결정하고, 나아가 수도를 용성에서 계성(薊城)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계성에 정도(定都)했을 때 모용선비는 국가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었을까? 필자는 계성에 수도를 둔 이후(계성을 점령하고 정도할 때까지의 약 3년의 시간을 포함해서) 업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약 8년의 시간(350년 3월~357년 11월)은 모용선비가 하북에서 어떻게 통치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나아가 이 지역이 어떻게 요방을 대체하는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해 갔고, 중원에 안주하기 전 기왕의 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제도가 어떻게 준비되고 조정되었는지와 관련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목에서도 밝혔듯 이를 ‘계성시대’⁴로 명명하고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일찍이 필자는 한 연구에서 모용선비가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진출했던 이유를 경작지 부족과 나라 재정의 악화로 인한 경제문제, 열악한 기후환경에서

요방의 용성으로 歸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李海葉, 2015, 『慕容鮮卑의漢化與五燕政權-十六國少數民族發展史的個案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48~151쪽.

- 3 河北은 『十六國春秋』·『晉書』·『魏書』·『北史』 등 五胡十六國·北朝의 사서에서 자주 눈에 띄는 단어로, 黃河 以北 그리고 太行山 以東의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인 개념이다. 이 글에서 하북은 모용선비가 최종적으로 중원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지역, 즉 중원에 안주하기 전 이 지역에서 기왕의 정책들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제도를 새롭게 조정하고 실시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요방을 떠난 모용선비는 바로 薊城을 점령하고 이후 이곳에 定都한 후 약 8년의 시간(계성시대) 동안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들이 일찍이 하북에서 귀향해 온 한인들로부터 이 지역의 상황을 전해 들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지역으로 직접 진출하여 다스려야만 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중원을 차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당시 모용선비는 이런 하북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고, 어떻게 요방을 대체하는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과제에 골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 모용선비는 350년 3월 계성을 점령한 이후 이곳에 하북진출의 전초기지를 두었으며, 그리고 3년이 지난 352년 2월 비로소 용성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였고, 나아가 357년 11월 업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약 8년의 시간 동안 연왕국(대연제국)의 대내외적인 발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준비해갔다. 필자는 이 시기를 편의상 ‘계성시대’로 명명하기로 한다.

벗어나야만 했던 절박함, 그리고 일찍부터 그들이 한문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추진했던 한화(漢化) 등의 조치에서 찾았으며, 동시에 계성에 도읍을 정한 시간은 그들이 막 그곳을 점령한 350년 3월이 아니라 모용준(慕容儁)이 대연황제(大燕皇帝)를 칭한 후 이듬해인 353년 2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모용준은 하북의 한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장래에 중화(中華)의 주인으로서 중원(中原)지역을 차지⁵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요방의 용성이 아닌 하북의 계성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천도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 계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북진출의 전초기지를 둔 모용선비는 이 지역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반연(反燕)’ 세력, 즉 한인호강(漢人豪強)에 대해 군사정벌과 무수지책(撫綏之策)을 동시에 추진해갔으며, 모용종실(慕容宗室)이 전자를, 한인사족(漢人士族)이 후자를 각각 책임지고 완수하고 있다. 특히 상대

-
- 5 『十六國春秋』 卷26, 前燕錄4·慕容儁傳 上, 521下쪽, “初, 庖常言吾積德累仁, 子孫當有中原.” 四庫全書에 수록된 『십육국춘추』는明代屠喬孫·項琳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그體裁가崔鴻의 『십육국춘추』 原著에 부합하지 않고, 그들이 輯佚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清代 四庫館臣 및 王鳴盛·全祖望 등은屠本『十六國春秋』를 偽書라고 비판하기에 이른다(『十六國春秋』 提要, 315下~316上쪽, “臣等謹案, 十六國春秋一百卷舊本題魏崔鴻撰, 實則明嘉興屠喬孫·項琳之偽本也, … 然其文皆聯綴古書, 非由杜撰. 考十六國之事者, 固宜以是編爲總匯焉.”). 그렇지만 그들도 “然其文皆聯綴古書”라고 했던 것처럼 도교손 등이 결코 杜撰했다고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여러 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듯屠本『十六國春秋』는 그가 수차례의 校訂과 校勘 등을 통해 완성한 것이므로 위서일 수 없으며, 오히려 매우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王薇, 1993, 『『十六國春秋』考略』, 『古籍整理研究學刊』 1期, 44~47쪽; 湯勤福, 2010, 「關於屠本『十六國春秋』眞偽的若干問題」, 『求是學刊』 1期, 125~130쪽 참고), 이 밖에 湯球는屠本『十六國春秋』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十六國春秋輯補』를 완성하게 되는데, 編制와 體裁가 합리적이며, 자료를 폭넓게 인용하여 그 내용은 실로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庄華峰, 2000, 「湯球對兩晉十六國史書的輯佚」, 『史學史研究』 2期, 68~73쪽 참고),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十六國春秋』와 『十六國春秋輯補』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인용하고자 한다.
- 6 이춘호, 2021, 「燕王國에서 大燕帝國으로 -慕容鮮卑의 河北進出과 국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74호, 123~164쪽.

방을 회유하기 위한 무수지책이 군사정벌에 비해 가져올 효과는 자연히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만약 하북의 한인호강과 백성들이 연왕국(대연제국)으로 귀향하여 모용씨(慕容氏)의 통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광수(光壽) 원년(357) 10월에 이르러 비로소 하북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는 기록에서 보듯,⁷ 모용선비가 하북으로 들어선 후 이곳을 차지하는 데 대략 8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시 강남에 우거하고 있던 동진(東晉)은 그 국력이 북중국에까지 미치지 못해 도탄에 빠진 한인들을 구제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⁸ 바로 이때 다수의 한인호강과 백성들이 연왕국으로 귀향한 후 모용준을 향해 천명(天命)을 가지고 대의(大義)로서 백성들을 구하고 혼란을 수습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모용준은 요방을 대체할 지역으로 하북을 새롭게 설정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강한 자신감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겠노라 다짐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의 이런 인식이 하북을 종국적으로 연왕국(대연제국)의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모용선비에 대한 연구 중 이 글의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것들로, 이를테면 모용선비가 하북·중원으로 진출한 이후 호·한인(胡·漢人)에 대한 통치방식과 지방통치 형태 혹은 전반적인 발전 변화과정에 주목한 연구,⁹ 그들과 하북지역 한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¹⁰ 그리고 연왕국(전연)

7 『십육국춘추』 권27, 전연록5·모용준전 하, 533下쪽, “… 冬十月, … 盡陷河北之地.”

8 『자치통감』 권90, 「진기」 12, 元帝太興元年(318)조, 2855쪽, “裴嶷言於庾曰: 「晉室衰微, 介居江表, 威德不能及遠. …」”

9 지배선,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150~154쪽; 李海葉, 2011, 「前燕中原時期胡漢分治制度考」, 『內蒙古社會科學』 2期; 高然, 2018,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64~89쪽; 최진열, 2020, 「前燕의 關東 정복과 지방 통치」, 『동양사학연구』 151집.

10 鄒禮洪, 1985, 「論中原士大夫對前燕慕容氏封建化的影響」, 『新疆師範大學學報』 1期; 지배선, 1997, 「李産과 李績에 대하여」, 『역사학보』 154집; 劉國石, 1997, 「鮮卑慕容氏與趙魏士族」,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5期; 高詩敏,

의 강역 변화와 그 정구(政區)에 대한 연구,¹¹ 나아가 모용선비의 한화를 어떻게 진행시켜왔고 적응해갔는지에 관한 연구,¹² 이 밖에 모용선비 지배구조의 변화 과정 및 연왕국(특히 전연)에서 군권(君權)이 가지는 특징에 대한 연구¹³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분명 모용선비의 하북진출 전후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특히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 이후 대연제국의 국가성격, 즉 국가제도와 권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북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했던 모용종실과 한인사족들이 이후 국가관직에는 어떻게 나아갔으며, 그에 상응하는 권력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모용선비의 발전과정에서 한인사족과 모용종실은 대체로 문직(文職(朝權))과 무직(武職(軍權))을 나누어 맡아 그 역할을 달리 수행했다면, 이런 역할의 분배가 하북진출 이후에는 한인사족·호강¹⁴이 대체로 중앙과 지방에서 각

2000, 「十六國北朝時期渤海封氏의變遷」, 『大同職業技術學院學報』 3期; 李海葉, 2001, 「漢土族與慕容氏政權」, 『內蒙古師範大學學報』 4期; 李文才, 2007, 「渤海封氏與慕容鮮卑關係試探」, 『河北學刊』 6期.

- 11 高然, 2014, 「十六國前燕疆域·政區考」, 『中國歷史地理論叢』 3期; 魏俊杰, 2018, 『十六國疆域與政區研究』,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229쪽.
- 12 雷家驥, 1995, 「慕容燕의漢化統治與適應」, 『東吳歷史學報』 1期; 周倩倩, 2018, 「從祥應管窺慕容前燕政權的漢化」, 『敦煌學輯刊』 4期; 趙紅梅, 2019, 『前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8~53쪽.
- 13 谷川道雄, 1971, 「慕容國家における君權と部族制」,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68~99쪽; 小林聰, 1988, 「慕容政權の支配構造の特質-政治過程の検討と支配層の分析を通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6號;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107~182쪽; 姚宏杰, 2004, 「君位傳承與前燕·後燕政治」, 『史學月刊』 3期; 李海葉, 2008, 「關於慕容氏繼承制度的探討」, 『中山大學學報』 2期.
- 14 이 글에서 한인사족과 한인호강은 지연·혈연으로 볼 때 모두 하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즉, 한인사족은 일찍이 모용선비의 근거지 요방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모용귀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수년간 出仕하면서 권력을慕容氏로부터 위임받아 갖게 된 것이라면, 이에 비해 한인호강은 모용선비가 하북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접 맞닥뜨렸던 그 지역의 실력자들로, 그들이 지역의 鄉論을 장악한 후 自守 혹은 自固했으므로, 그들의 권력은 한인사족과 달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렇지만 계

각 중추관(中樞官)과 지방관을 맡는 형태로, 그리고 모용종실은 예전과 변함없이 국가의 군권(軍權)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점차 한인사족과 함께 중추관에 임명되어 국가의 대사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찍이 모용종실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함께 나눠 가지며 그저 그들의 대표에 머물렀던 모용군권(慕容君權)은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 이후 그들의 단순한 대표로서의 자격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군[主君(혹은 主子)]’으로서 과거 최고 권력의 다원화에서 현재 일원화로 전환되고 있다.¹⁵ 그럼으로써 지고무상한 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용준은 책봉지책(冊封之策)을 통해 자신의 이런 신념과 의지를 모든 종실 구성원에게 관철시키고자 했고, 중국적으로는 ‘짐이 곧 국가’라 부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연제국을 세우게 된다.

이 글에서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몇몇 논의는 심도 깊게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계성시대는 분명 이후 업성으로의 천도를 통해 중원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과도기였으며,¹⁶ 동시에 당시 요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즉 요방 시대의 일부 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제도는 이후 모용선비가 중원에서 보다 순조롭게 적응해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조정된 시기였다고 하겠다.

성시대에 모용선비가 후자의 귀향을 받아들이며 그들은 비로소 연왕국(대연제국)의 통치계층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전자 중 지역의 치리에 능했던 이들이 地方官에 임명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중앙에서 中樞官으로 등용되어 국가대사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고, 후자는 중앙의 行政官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과반수 이상이 지방관에 임명되는 등 하북의 사회질서 회복과 유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처럼 한인사족과 한인호강의 개념 설정과 관련하여, 필자는 이들은 모두 한인인 것임에 틀림없으나, 위의 설명처럼 모용씨에 의해 士族의 신분을 인정받아 권력을 갖게 된 전자와, 그리고 스스로 힘을 키워 豪強으로 발전한 후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본 글에서는 이들을 편의상 한인사족과 한인호강으로 나눠 표현하고자 한다.

15 三崎良章, 2006, 『五胡十六國の基礎的研究』, 東京: 汲古書院, 61쪽.

16 高然, 2014, 앞의 글, 70左쪽.

II. 모용종실(慕容宗室)의 군사적 역할과 모용군권(慕容君權)과의 신관계

모용선비가 하북으로 진출하기 전 이 지역은 후조(後趙)의 군주 석호(石虎) 사후(349년) 호·한인들 간의 극심한 민족적 모순과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런 상태였는데, 이는 석호가 그의 재위기간에 수차례의 폭정으로 북중국의 백성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당시 석호의 양손(養孫)으로 정치적 야망이 강했던 염민(冉閔)¹⁷은 정권을 장악한 후 이런 호·한인 간의 갈등을 이용해 한인들을 자극하여 결국에는 살호령(殺胡令)을 반포하기에 이른다.¹⁸ 이 살호령으로 인해 북중국의 민족모순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았으며,¹⁹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으로 들어설 날만 학수고대했던 모용선비에게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기회와도 같았다. 이때 모용준은 장차 하북의 대혼란을 스스로 수습하겠노라 다짐하고,²⁰ 연왕(燕王)을 자칭한 이듬해(349년) 7월 진목제(晉穆帝)로부터 사지절(使持節)·시중(侍中)·대도독(大都督)·도독하북제군사(都督河北諸軍事)·유기병평사주목(幽冀并平四州牧)·대장군(大將軍)·대선우(大單于)·연왕(燕王)으로 책봉된다.²¹ 모용준은 이번 책봉에 대해 매우 만족했었을 것인데, 이는 동진이 비록 강남에 우거(寓居)하고 있었다고 해도 당시 북중국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

17 『진서』 권107, 石季龍載記 下 冉閔傳, 2793쪽, “閔字永曾, 小字棘奴, 季龍之養孫也.”

18 『십육국춘추』 권18, 後趙錄8·石鑿傳, 468上쪽, “(冉閔)頒令內外趙人, 斬一胡首送鳳陽門者, 文官進位三級, 武官立拜牙門. 一日之中, 斬胡首數萬人. 閔親率趙人以誅胡羯, 無貴賤男女少長皆斬之. 胡人死者二十餘萬, 於時有高鼻多鬚者, 無不濫死尸諸城外, 悉爲野犬豺狼所食. 其屯戍四方者, 閔皆以書命趙人爲將帥者誅之.”

19 이춘호, 2010b, 「오호시기 한인왕조 冉魏와 그 성격-胡漢對立과 그 克服의 한계를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23집, 123~136쪽.

20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31쪽, “趙魏大亂, 僞將圖兼并之計 ….”

21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상, 522下쪽.

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²² 그가 특히 도독하북제군사와 유기병평사주목의 관직을 가지고 마치 동진의 지방장리(地方長吏)처럼 하북에 들어섰을 때 한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²³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350년 2월 그는 20여 만의 병사를 셋으로 나눠 하북진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주지하듯 모용황(慕容皝)은 일찍이 유언으로 모용준에게 이후 하북으로 들어설 때 모용각(慕容恪)을 중심으로 한 충실세력과 양무(陽鶩)를 위주로 한 한인사족들을 중용하라고 분부한 바 있고,²⁴ 이에 따라 모용준은 하북의 ‘반연’ 세력에 대한 군사정벌을 모용종실에게, 그리고 무수지책을 한인사족에게 각각 맡겨 진행시켜갔다.

일찍이 요방에서 무문선비(宇文鮮卑)·단선비(段鮮卑) 그리고 고구려 등과 경쟁하며 세력을 키워가야만 했던 모용선비에게 특히 군권을 장악한 모용종실은 통병장군(統兵將軍)으로 군사정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지켜왔는데, 이후 하북으로 진출한 후 근거지를 확보해 가던 중에도 이런 역할을 계속 수행해갔다. 이를테면 모용준은 연왕국 국왕의 신분으로 친히 병사를 이끌고 중간 길(中道)을 따라 하북으로의 진출, 즉 후조의 군사정벌에 참여했으며, 이후 계성을 함락하고 나서는 후조의 잔여세력 등항(鄧恒)·왕오(王

22 박한제,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60~61쪽. 前趙·後趙 兩政權下에서의 포악한 정치실태는 야만, 잔폭,嗜殺 등의 극단적인 용어로 사서에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후조의 石虎 재위기간 동안의 폭정은 중원의 호·한인들에게 극도의 고난을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배경하에서 북중국의 호·한인들은 종족적인 정치원리와 체제로의 回歸의 희망이 ‘民心思晉’으로 결정되어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東晉이 북중국의 정세 변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자치통감』 권98, 「진기」 20, 穆帝永和五年(349)조, 3092~3093쪽, “(封奕)對曰:「… 大王自上世以來, 積德累仁, 兵強士練, 石虎極其殘暴, 死未瞑目, 子孫爭國, 上下乖亂, 中國之民, 墜於塗炭, 延頸企踵以待振拔, 大王若揚兵南邁, 先取薊城, 次指鄴都, 宣耀威德, 懷撫遺民, 彼孰不扶老提幼以迎大王!」”

24 『십육국춘추』 권25, 전연록3·慕容皝傳 下, 521上쪽. “引世子儁屬以後事曰, 今中原未平, 方經建世務, 委賢任哲, 此其時也. 恪智勇兼濟, 才堪任重, 汝其委之, 以成吾志, 又曰, 陽土秋志行高潔, 忠幹貞固, 可托大事, 汝善待之.”

午)를 노구(魯口)에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기주(冀州)에 이르러 장무군(章武郡)과 하간군(河間郡) 등을 차지하였다.²⁵ 모용준의 이런 군사행동이 일찍이 부락연맹시기 부락추장이 지니고 있던 특징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²⁶처럼, 모용황이 337년 연왕을 칭하기 이전에 모용군주는 주로 친정에 나섰다는 점²⁷에서 이런 견해는 비교적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용각은 종실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염민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를 생포하여 용성으로 압송했으며, 다른 ‘반연’ 세력과의 전쟁에서 적지 않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단선비 출신 단간(段龕)을 격파하고 그의 귀향을 받아들이자 황하 이남 여(汝)·영(潁)·초(譙)·패(沛) 등의 지역이 모두 연왕국의 세력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밖에 중산(中山)과 노구 등 하북의 요충지를 차례로 점령한 모용평(慕容評)은 특히 염위(冉魏)의 수도 업성을 점령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이어서 사주자사(司州刺史)의 신분으로 이곳에 진수하게 된다. 그리고 모용패(慕容覇[이후慕容垂로 개명])는 연왕국과 후조 사이에서 귀향과 반란을 반복하며 계속 도전해왔던 단선비 출신 단간(段勤)·단사충(段思聰) 형제를 공격한 후 그들의 항복을 받았으며, 동시에 중군장군(中軍將軍) 모용건(慕容虔) 등과 함께 북쪽에서 큰 위협이 되었던 정령(丁零)·칙륵(敕勒)을 정벌한 후 포로로 삼았거나 혹은 참수한 자들이 10여 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이때 노획한 말이 30여만 필, 그리고 소와 양은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던 것이다.²⁸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 하북진출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군사행동이 거의 모두 모용종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현상은 모용의 때부터 모용위(慕容暉) 때까지 약 60여 년을 통틀어 통병장군에 임명되었던 인물, 군의 요직을 차지했던 인

25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상, 524上쪽.

26 雷家驥, 1995, 앞의 글, 49쪽.

27 강문호, 1999, 앞의 책, 119~121쪽.

28 『十六國春秋輯補』卷27, 前燕錄5·慕容儁傳, 209쪽, “遣其撫軍慕容垂·中軍慕容虔·與護軍平熙等, 率步騎八萬, 討丁零敕勒於塞北, 大破之, 俘斬十餘萬級, 獲馬十三萬匹, 牛羊億餘萬.”

물,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행동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활약상 등으로 볼 때, 모용종실이 수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는지 모르나 국가의 군권이 이들에 의해 장악되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²⁹ 그렇다면 이상의 논지에 근거해서 필자는 하북이 요방을 대체한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용종실이 국가관직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국가권력의 분배에는 어떻게 대응해갔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당시 그들은 주로 장군·도독(都督) 등 군권과 직접 관계된 군의 요직을 꿰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점차 시중 및 녹상서사(錄尙書事) 등 국가의 중추관에 임명되어 국가대사의 결정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모용준은 요방에 머물렀을 때와는 달리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하북으로 들어선 이후 이런 새로운 지역적 여건에 맞닥뜨려 국가제도에 변화를 준 것이다. 우선 계성시대 모용종실이 맡았던 관직과 그 변경상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리는 <표 1>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몇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모용종실 중 통병장군으로 군태수에 임명된 자는 모두 셋으로, 모용평, 모용각, 모용구(慕容鉤)가 그들이다. 이들은 어느 한 지역을 집중 관리할 목적 때문에, 혹은 어느 특정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방관에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새(元璽) 3년(354) 6월 낙릉태수(樂陵太守)에 임명된 모용구는 청주자사(靑州刺史) 주독(朱禿)과 함께 염차(厭次)에 진수했는데, 이는 모용선비의 세력이 황하 하류에까지 다다르면서 당시 제(齊)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단감과의 결전에 즈음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밖에 하간태수(河間太守)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일부 학자는 『자치통감』·『십육국강역지』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하간태수를 봉유(封裕)가 맡았다고 주장하는데,³⁰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① 이번 지방관의 임명은 모용준이 모용평과 모용각을 인솔하고 남쪽으로 기주에 이르러 장

29 강문호, 1999, 앞의 책, 114~131쪽.

30 高詩敏, 2000, 앞의 글, 17쪽; 高然, 2018, 앞의 책, 69, 324쪽.

〈표 1〉 모용종실의 관직 임명과 변경상황 일람표³¹

순서	이름	관직명	임명 시기/ 新任·已任	진수지 (鎭守地)	비고
1	慕容霸	前鋒都督·建鋒將軍 給事黃門侍郎 使持節·安東將軍·北冀州刺史 冀州刺史 侍中·右禁將軍·錄留臺事 撫軍將軍	350. 2/已 353. 12/已 353. 12/新 354. 4/新 354. 4/新 357. 5/已	常山 信都 龍城	平狄將軍 吳王
2	慕容恪	輔國將軍 河間太守 侍中 衛將軍·侍中 大司馬·侍中·大都督·錄尚書事 大司馬·侍中·征討大都督·撫軍將軍	350. 2/已 350. 9/新 352. 11/新 353. 2/已 354. 4/新 355. 11/新	樂城 薊城	太原王
3	慕容評	輔弼將軍 章武太守 司州刺史 鎭南將軍·都督秦雍益梁江揚荆徐兗豫十州 河南諸軍事 司徒·驃騎將軍	350. 2/已 350. 9/新 352. 8/新 354. 3/新 354. 4/新	東平舒 鄴城 洛水 薊城	上庸王
4	慕容宜	代郡城郎 散騎常侍	350. 4/新 354. 4/已		廬江王
5	慕容彪	左將軍	351. 8/已		武昌王
6	慕容軍	廣威將軍 撫軍將軍	352. 5/已 353. 12/已		襄陽王
7	慕容强	前鋒都督·都督荆徐二州緣淮諸軍事	354. 3/新	黄河 以南	洛陽王
8	慕容勵	散騎常侍	354. 4/已		下邳王
9	慕容度	寧北將軍	354. 4/已		樂浪王
10	慕容鈞	樂陵太守	354. 6/已	厭次	
11	慕容塵	鎭南將軍	356. 11/新	廣固	
12	慕容蘭	守將	356. 11/新	汴城	
13	慕容虔	中軍將軍	357. 5/已		

무군과 하간군을 차지한 후 취한 조치 중의 하나로, 따라서 최홍(崔鴻)은 모용평을 장무태수에, 모용각을 하간태수에 임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³² ② 사서기록에 의하면, 영화(永和) 7년(351) 2월 봉유는 기실참군(記室參軍)의 신분으로 용성에서 염위의 사신 상위(常煒)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가 5개월 전인 영화 6년 9월에 하간태수에 임명되고, 그 이듬해에 모용준을 대동하여 용성으로 귀환한 후 상위를 맞이했다면, 이는 시간적으로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간태수에 그를 임명한 목적이 불분명해진다. 그리고 ③ 한 학자의 주장처럼 기실참군은 당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관직으로 연왕이 가장 믿을 만한 관료이기도 하였다. 봉유가 오랫동안 이 관직을 역임했다는 것은 그가 중요한 나라의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는 뜻으로 그의 정치적 위상 역시 가늠할 수 있는데,³³ 이런 중요한 관직에 있었던 자를 굳이 불러 일개 지방관에 임명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면 당시 하간태수에 임명된 자는 봉유가 아니라 모용각이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둘째, 앞에서 언급했듯 모용구 등이 군태수에 임명된 것은 전적으로 임시방편책에 속하는 조치인데, 그렇다면 주자사(州刺史)·도독 등의 관직에 임명된 모용종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진수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영화 8년(352) 8월 모용평은 사주자사로 업성에 진수하게 되는데, 이는 염위의 수도였던 이곳을 점령한 후 사회치안 혹은 질서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 취해진 조치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 모용준이 대연황제에 올랐으므로, 대연제국의 제

31 이 글에서 필자가 완성한 2개의 표는 모두 『十六國春秋』·『晉書』·『資治通鑑』·『十六國春秋輯補』·『僞燕將相大臣年表』를 참고했으며, 시간적인 범위는 계성이 함락된 350년 3월부터 357년 11월 업성으로 천도될 때까지의 7년 8개월로 한다.

32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상, 524上쪽, “九月, 僞南狗冀州, 取章武·河間…遂以評爲章武太守, 恪爲河間太守.”

33李文才, 2007, 앞의 글, 118左쪽.

국화의 일환으로 지방행정단위에 제제(帝制)의 주(州)를 설치하고 자사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³⁴ 그리고 원세 2년(영화 9년) 12월 사지절(使持節)·안동장군(安東將軍)·북기주자사(北冀州刺史)에 임명된 모용패는 상산(常山)에 진수하는데, 홍량길(洪亮吉)은 그것과 관련하여 지금 북기주를 조사해보면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것이 분명하고 이후에 기주로 통합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⁵ 그의 견해를 따르자면, 북기주는 어느 특정 목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모용패의 상산 진수 역시 모용평의 경우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원세 3년 3월 모용평은 진남장군(鎭南將軍)·도독진옹익량강양형서연예십주하남제군사(都督秦雍益梁江揚荊徐兗豫十州河南諸軍事)의 신분으로 낙수에 진수(權鎮於洛水)³⁶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에 대해 탕구(湯球)는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특별히 그 앞에 ‘권(權)’ 자를 붙여 기록하고 있다. 한편, 모용강[慕容强(혹은慕容彊)]은 전봉도독(前鋒都督)·도독형서이주연회제군사(都督荊徐二州緣淮諸軍事)의 자격으로 ‘하남(河南)’에 진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남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지칭한다기보다 황하 이남의 불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용선비가 이후 중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하 이남을 차지해야 하는데, 비록 당시로서는 아직 이 지역에까지 세력이 미치지 못했지만, 모용강의 하남 진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이다. 그리고 원세 3년 4월 모용패는 기주자사로서 신도(信都)에 진수하고 있는데, 홍량길의 언급대로 이때 기주는 이미 북기주를 통합한 상태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북의 어느 중요한 지역 혹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한 후 모용종실은 장군·도독의 직함을 갖고 지방관의 자격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진수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전란으로 혼란스

34 강문호, 1999, 앞의 책, 128쪽.

35 『十六國疆域志』卷3, 前燕·冀州, 147쪽, “今攷北冀州, 當屬權時所立, 後仍併入冀州也. 觀後徙治于信都可知.”

36 『십육국춘추집보』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205쪽.

럽던 하북의 사회질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나아가 이 지역이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믿고 의지할 자들은 분명 같은 피를 나누고 통병장군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종실세력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모용준은 바로 그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주요 거점에 진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결과를 보다 빨리 완수하고자 하였다.

모용선비는 영화 8년(352) 중순에 이르러 ‘반연’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정벌과 무수지책을 진행하여 하북의 정세가 그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었는데, 즉 중산·상산 등 이 지역의 요충지가 점령되고, 가견(賈堅)·봉방(封放)·유준(劉準) 등 한인호강과 정령의 적서(翟鼠)·단선비의 단근(段勤) 등 호인추장이 귀향했으며, 같은 해 5월 염위의 군주 염민이 생포된 후 용성으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참수되는 등의 혁혁한 전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같은 해 10월 모용각을 위시한 제신들은 모용준에게 황제를 칭할 것을 상서했으나 그는 덕이 부족한 자신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업성이 함락되고 염민의 처 동씨(董氏) 및 여러 요속(僚屬)이 귀향해 오자, 모용준은 일전의 태도를 바꿔 이곳을 함락하고 염위를 멸망시킨 것이 분명 천명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이 역운(曆運)을 갖고 있다고 공언한다.³⁷ 그런 후 천지신새(天之神靈)³⁸로 불리는 전국새(傳國璽)를 자신이 동씨로부터 받아 소지했다고 선언한 후,³⁹ 곧 이어 대연황제에 등극하고 ‘중국방식(中國方式)’의 관료기구를 설치하였다.⁴⁰ 그럼으로써 연왕국의 국가형태는 왕국(kingdom)에서 제국(empire)인 대연제국으로 바뀌었다. 대연황제를 칭한 모용준이 요방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북에 남

37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4쪽, “僞答曰:「吾本幽漠射獵之鄉, 被髮左衽之俗, 曆數之錄寧有分邪! 卿等苟相褒舉, 以覲非望, 實匪寡德所宜聞也。」… 先是, 蔣幹以傳國璽送于建鄴, 僞欲神其事業, 言曆運在己 ….”

38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2쪽.

39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八年(352)조, 3128쪽, “燕王僞詐云董氏得傳國璽獻之, ….”

40 谷川道雄, 1971, 앞의 글, 80쪽.

아 한인들을 포함한 이 지역 백성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⁴¹ 모용군권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과거 모용군주가 호·한인에 대해 가졌던 권위는 이중적(二重的)인 것이었다. 모용종실은 모두 나라에 자신들의 ‘뭉’이 있다고 언급했던 것⁴²과 같이 모용군주와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지금 대연황제에 등극한 모용준이 천자의 신분으로 한인들의 근거지 하북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중적인 특징을 가졌던 과거의 모용군권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일원화(一元化)로 변하게 된 것이다.⁴³ 앞에서 언급했듯, 모용준이 후조에 대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군사정벌에 나선 것을 부락연맹시기 부락추장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대연황제 모용준과 모용위는 다시는 친정에 나서지 않고 군사행동을 모용종실에게 명령하여 수행하도록 조치했는데⁴⁴ 이런 사실 역시 모용군권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동진의 사신이 계성에 도착해 있었는데, 모용준은 그를 향해 너는 되돌아가 너의 천자에게 고하라고 하면서 나는 북중국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한인들에 의해 새로 추대된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⁵ 그렇다면 당시 큰 혼란에 휩싸

41 이춘호, 2021, 앞의 글, 150쪽.

42 『자치통감』 권95, 「진기」 17, 成帝咸和八年(333)조, 2990쪽, “昭曰:「吾輩皆體正嫡, 於國有分. …」” 모용군주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종실세력과 함께 이를 나누어 가졌다는 ‘分治’ 의식은 匈奴 등 유목민족이 부락연맹체를 구성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의 부락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방식이 다른 유목민족에게로 계승되어 유래된 ‘傳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종실세력인慕容昭 등은 군주慕容皝과 구별된 독립적인 통치구역 혹은 통치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吾輩皆體正嫡, 於國有分’로 표현한 것이다. 胡三省은 특히 ‘於國有分’을 ‘分可以得國也’로 註解했는데, 바로 국가의 최고 권력을 모용군주와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모용종실이 요방에 머물렀을 때 모용군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分治’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43 田村實造, 1985, 『中國史上の民族移動期-五胡·北魏時代の政治と社會』, 東京: 創文社, 140쪽.

44 강문호, 1999, 앞의 책, 121~122쪽.

45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八年(352)조, 3131쪽, “僞謂曰:「汝還白

인 하북에서 황제를 칭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여긴 모용준은 본인이 다수의 한인에 의해 추대(爲中國所推)된 대연황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동진의 황제를 대신해서 새로운 중화의 주인으로서 천하에 군림할 것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왕국은 지금까지 장기간 동진과 맺어왔던 군신(君臣)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고 완전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⁴⁶

한편, 대연황제를 칭하고 지고무상한 권좌에 오른 모용준은 ‘짐이 곧 국가’라는 대연제국의 이상(理想)에 걸맞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을 것인데, 특히 요방의 시대에 모용군주와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나눠 가졌던 모용종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의식을 주입시키려고 했을까? 사서기록에 의하면, 그는 대연황제를 칭하고 계성에 정도한 후 약 1년쯤이 지난 원새 3년(354) 4월 종실 구성원 모두를 왕공으로 책봉했는데, 필자는 이번 책봉지책이 모용준 본인이 진정한 주군임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때 왕과 공으로 책봉된 자는 각각 22명과 3명이었다.⁴⁷ 모용종실은 과거 국가권력에 자신들의 ‘뭉’이 있다고 여겨 이를 얻지 못하면 그 불만을 실제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했는데,⁴⁸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은 아닐 뿐더러 그 ‘뭉’은 그들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연황제가 분배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뭉’을 분배받아 자기 것으로 승인되었을 때, 그들은 비

汝天子，我承人乏，爲中國所推，已爲帝矣!”

46 彭豊文, 2009, 『兩晉時期國家認同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22쪽.

47 『십육국춘추』 권27, 전연록5·모용준전 하, 530上下쪽, “四月戊申, 封撫軍將軍軍爲襄陽王, 左將軍彪爲武昌王, 衛將軍恪爲大司馬·侍中·大都督·錄尚書, 封太原王, 鎮南將軍評爲司徒·驃騎將軍, 封上庸王, 安東將軍霸爲吳王, 左賢王友爲范陽王, 前鋒都督疆爲洛陽王, 散騎常侍厲爲下邳王, 散騎常侍宜爲廬江王, 寧北將軍度爲樂浪王, 又封弟桓爲宜都王, 遂爲臨賀王, 徽爲河間王, 龍爲歷陽王, 納爲北海王, 秀爲蘭陵王, 嶽爲安豐王, 德爲梁公, 默爲始安公, 僕爲南康公, 又封子臧爲樂安王, 亮爲渤海王, 溫爲帶方王, 涉爲漁陽王, 暉爲中山王.”(밑줄은 필자) 『資治通鑑』에도 같은 기록이 보이지만, 밑줄 친慕容疆의 책봉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48 『자치통감』 권95, 「진기」 17, 成帝咸和八年(333)조, 2990쪽.

로소 대연황제의 진정한 ‘신자(臣子)’가 될 수 있었다. 정권 내부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났으며, 이번 책봉이 종실 구성원을 대연황제의 진정한 ‘신자’로 그 신분을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조치로 작용했다면, 그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조치가 모용준이 제국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⁴⁹ 이상에서처럼 모용군권의 성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면, 지금의 모용준은 결코 모용종실 모두의 명목적인 대표가 아니며, 더더욱 과거 부락연맹 때의 추장 역시 아니므로 그들의 진정한 주군이자, 나아가 대연황제로서 모든 호·한인을 통치하기 위해 그것에 걸맞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에 대해 모용종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쉽게도 사서기록의 부족으로 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가 무척 힘들다. 그럼에도 종실 세력의 대표라 할 수 있던 모용각의 언행을 통해서 당시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게 된다. 모용준은 말년에 이르러(359년) 태자 모용위가 충유(沖幼)하므로 순조롭게 대연황제에 등극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이에 그는 모용각에게 내가 나라의 사직(社稷)을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며 그의 속마음을 떠보고 있다.⁵⁰ 이에 모용각은 “태자가 비록 어리지만 하늘로부터 충성(聽聖)을 받았으니 반드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것입니다. 저는 정통(正統)을 어지럽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폐하께서 만약 신이 천하의 임무를 담당할 만하다고 여기셨으면, 어찌 어린 주군을 보좌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라면서 주자(主子)와 신자(臣子)로 맺어진 모용군권의 정통을 어지럽힐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졸견에 의하면, 당시 침질(寢疾)을 앓고 있던 모용준이 제일 염려했던 일은 바로 자신의 사후 이런 정통이 훼손되어 국가의 권력체계가 다시 과거로 회귀한 뒤 대연황제가 단지 종실세력의 대표로 전락하는

49 지배선, 1986, 앞의 책, 134~135쪽.

50 谷川道雄, 1971, 앞의 글, 82쪽.

것이였다. 이는 모용준이 책봉지책을 통해 모용군권의 확립에 힘쓴 후 약 5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 종실세력이 모용군주의 권위를 함부로 넘볼 수 없고, 그 정통 역시 쉽게 훼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⁵¹ 모용각의 대답에 만족한 모용준은 “네가 옛날 주공이 성왕(成王)을 보필했듯 모용위를 보좌한다면, 내가 어찌 다른 걱정이 있으랴!”라고 하여 자신이 세운 지고무상한 권위를 가진 모용군권이 본인의 사후 훼손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⁵² 이렇게 모용각의 언행을 통해서 대연황제의 충직한 신자로 바뀐 종실세력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 정통을 어지럽힐 수 없다(不可以亂正統也)고 언급한 모용각은 차라리 어린 주군을 보좌(輔少主)함으로써 당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즉 모든 종실세력을 대표해서 대연황제 모용준, 그리고 그다음의 대연황제 모용위를 향해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51 필자는 “不可以亂正統也”에서 ‘正統’을 종실세력이 대연황제를 자신들의 주군으로 인정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자가 이젠 후자의 권위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되었으니, 더더욱 국가의 최고 권력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일부 학자는 이상의 ‘정통’을 적장자 계승원칙 혹은 적장자 계승제도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강문호, 1999, 앞의 책, 147~148쪽; 李海葉, 2008, 앞의 글, 113쪽.

52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42쪽, “俄而僞寢疾, 謂慕容恪曰:「吾所疾悒然, 當恐不濟… 景茂幼沖, 慮其未堪多難, 吾欲遠追宋宣, 以社稷屬汝。」恪曰:「太子雖幼, 天縱聰聖, 必能勝殘刑措, 不可以亂正統也。」… 恪曰:「陛下若以臣堪荷天下之任者, 寧不能輔少主乎!」僞曰:「若汝行周公之事, 吾復何憂!…」”

53 『晉書·慕容暉載記』의 기록에 의하면, 모용선비의 하북진출과 대연제국 건설 등에 혁혁한 공을 세운 慕容輿根은 대연황제 모용준 사후 慕容恪과 함께 輔政大臣으로 기용된다. 그런데 帝位에 오른 慕容暉가 庸弱하여 모용각에게 국가의 대사를 위임하자, 그는 이에 불만을 품고 교만한 나머지 ‘無上之心’을 품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반란을 도모할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모용각에게 모용위를 폐한 후 스스로 尊位에 오를 것을 청하게 되는데, 이에 모용각은 그를 향해 曹臧과 吳札의 교훈을 잊었는가? 지금 태자가 나라의 적통을 이었으며(諸君嗣統), 국내외로 걱정할 일이 없다(四海無虞). 先帝의 유언을 받은 내가 어찌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일 수 있겠는가(宰輔受遺, 奈何便有私議)라고 하여 모용위의 宰輔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당시 모여근처럼 모용각이 篡位하기를 바랐던 자들이 적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姚宏杰, 2004, 앞의 글, 32右쪽), 모

이상에서 필자는 모용군권과의 신관계에서 모용종실은 대연황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권력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실 국가의 중추(中樞)계층에 머물면서 예전과 변함 없이 적지 않은 권한 혹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의 군권을 계속 장악하고 수차례의 군사정벌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중추관에 임명되어 나라의 여러 대사를 처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연왕국은 모용종실의 힘에 의해 요방에서 흥기했던 것이고, 이후 하북으로 진출한 후에도 그들의 노력에 의해 국가형태가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뀐 것처럼, 대연황제가 통치기만을 더욱 공고히 한 후 계속해서 국력을 증원으로 뻗치기 위해서는 종실세력과의 협치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모용각·모용패·모용려(慕容勵), 모용의(慕容宜)는 이미 시중·급사황문시랑(給事黃門侍郎)·산기상시(散騎常侍) 등의 중추관에 임명되어 대연황제를 옆에서 직접 보좌하고 간쟁(諫諍)을 고하는 등 국가 대사의 결정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중 특히 ‘명세지재(命世之才)’를 갖춘 모용패는 모용각·모용군(慕容軍)·모용표[慕容彪(혹은慕容彭)] 등에 의해 대연제국의 ‘대임(大任)’을 맡을 인물로 추천되기도 했지만,⁵⁴ 모용각과 달리 쉽사리 중용되지 못하였다. 그가 중용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모용준이 처한 상황, 즉 자신의 권위에 도전적이었던 종실을 배척했기 때문일 수도

용각의 언행을 통해서 그의 대연황제에 대한 충직함과 宰輔로서의 강직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慕容君權이 예전처럼 종실세력의 대표에 불과했다면, 모용각을 중심으로 한 그들은 모용위와 함께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나누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직접 나섰을 것이며, 모용각은 모여군의 말에 궁정의 뜻으로 無言으로 회답했다든지, 적어도 그렇게 강하게 반발(公醉乎? 何言之勃也!)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모용위가 庸弱했으니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의 모용각은 예전처럼 ‘於國有分’을 추구했던 반독립적인 ‘分治’의 세력은 아니며, 전적으로 대연황제에 복종하는 세력집단, 즉 종실세력의 대표에 불과했던 인물이었다. 게다가 종실세력은 侍中·尙書令·尙書僕射 등의 중추관을 역임하면서 대연황제를 직접 보필하고, 나아가 대연제국의 발전과 번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54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九年(353)조, 3137쪽.

있다.⁵⁵ 여하튼 모용패와는 달리 모용각은 원세 원년 이래로 시중을 맡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세 3년부터는 대사마(大司馬)·시중·대도독(大都督)·녹상서사에 임명되어 대연황제를 보좌하는 등 국가의 군권(軍權)과 조권(朝權)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⁵⁶ 이렇게 모용패, 모용각 등 종실세력의 경우를 통해 일찍이 통병장군으로서 군사적인 임무만 수행했던 그들이 하북진출 이후 문무를 겸비한 채 국가의 대사에도 참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⁵⁷ 일찍이 요방의 시대에 모용종실은 나라에 자신들의 ‘몫’이 있다(於國有分)고 주장하며 ‘분치’의 경향을 드러냈다면, 계성으로 천도한 이후 그들은 대연황제의 신자로서 그 뜻을 받들고 대연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공치(共治)’의 운명에 맞닥뜨렸던 것이다. 분명 모용군권의 성격 변화와 함께 모용종실이 처한 상황도 바뀌었는데, 그들이 중추관에 임명되어 나라의 대사에 참여하면서 이런 현상은 이후 중원으로 들어서고 더욱 분명해졌으며, 심지어 전진(前秦)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통치를 받았던 10여 년의 시간을 포함하여 이후 후연(後燕)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모용종실 다수가 상서령(尙書令)·상서복야(尙書僕射) 등 중추관을 역임하면서 그들의 신분은 일전의 군사장군에서 하북의 이름난 ‘명족(名族)’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⁵⁸ 이처럼 계성시대에 모용군권은 그 성격과 특징 면에서 이미 큰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모용종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대연황제의 신자로서 국가의 군권과 조권을 함께 행사하는 중추계층으로 새롭게 탈바꿈해가고 있었다.

55 강문호, 1999, 앞의 책, 152쪽.

56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十年(354)조, 3140쪽.

57 李海葉, 2001, 앞의 글, 109쪽.

58 小林聰, 1988, 앞의 글, 59~60쪽.

Ⅲ. 한인사족(漢人士族)의 무수지책(撫綏之策)과 하북 지방관으로의 임명

하북으로 들어선 이후 모용준은 무력에 의한 군사정벌만으로는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없고 한인들의 진정한 귀항 역시 힘들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 지역이 모용선비의 최종 정착지도 아닐 뿐더러 이후 황하 중하류를 완전히 장악한 후 새로운 중화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우선 하북 각 지역의 향론(鄉論)을 장악하고 있던 한인호강들의 진정한 귀항 혹은 협조가 없다면, 설사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후 자신들의 통치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무수지책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일찍부터 연왕국에서 관직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모용 귀족과의 교류가 빈번했으며,⁵⁹ 그 통치이념⁶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한인사족들이 맡고 있다.⁶¹ 봉혁(封奕)·고개(高開)⁶² 등은 하북 출신이면서 일찍부터 이

59 劉國石, 1997, 앞의 글, 68左右쪽.

60 여기에서 연왕국의 통치이념이란 모용선비의 지도자 모용섭귀, 특히 모용외가 ‘法制同於上國’하기 위해 한문화를 崇慕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인사족 및 백성들을 우대하고,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국가적 성격은 자연스럽게 魏晉 등 한인왕조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시종일관 ‘親漢人’·‘親漢化’를 견지하며 유관 정책의 실시와 이에 상응하는 국가제도의 설치를 좌우했던 基本原則이라 할 수 있다.

61 이춘호, 2021, 앞의 글, 146쪽.

62 하북진출이 있기 전 고개는 昌黎太守를 역임했다. 창려군은 당시 연왕국의 수도 용성을 포괄하고 있던 郡으로, 이런 중요한 지역의 지방장관 고개를 모용준은 후조의 군사정벌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아마도 하북(渤海郡) 출신인 그를 이 지역의 한인호강을 회유하는 데 활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개 지방장관을 굳이 군사정벌에 참여시킬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渤海高氏는 자신의 고향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갖고 있던 名門으로, 즉 고개의 부친 高瞻은 일찍이 永嘉의 亂 때 도성 낙양을 떠나 고향 발해로 귀환하여 지역 父老들과 협의한 후 지역민들의 안위를 위해 수천 家를 이끌고 당시 薊城에 웅거하고 있던 幽州刺史 王浚에게 귀부했던 것이다.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高瞻傳, 560下쪽 참고.

곳에 지연·혈연 등의 인적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⁶³ 무수지책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절한 인물이었다.

주지하듯 일찍이 서진말 팔왕의 난·영가의 난을 피해 하북의 한인들이 대거 모용선비의 근거지 요방으로 이주하여 생존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모용선비의 인구를 대략 3만 정도로 추산한다면 한인은 30만을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⁶⁴ 모용외(慕容廆)는 교군현(僑郡縣)을 설치하여 그곳에 이들을 안배했는데, 즉 기주 사람들을 기양군에, 예주 사람들을 성주군에, 청주 사람들을 영주군에, 병주 사람들을 당국군에 안치시켜 통치한 것이다.⁶⁵ 특히 이들 중 현재(賢才)를 갖춘 자들을 모주(謀主)·고굉(股肱)·추요(樞要)·빈우(賓友), 동상제주(東庠祭酒) 등의 측근막료로 발탁하여 정권의 요무(要務)를 맡도록 했고,⁶⁶ 모용외의 한화정책에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용선비는 정치·사회·문화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⁶⁷ 이런 변화는 사실 모용황의 시기를 지나 모용준의 하북진출, 그리고 대연황제 등극, 그 이후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그렇다면 당시 무수지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사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봉혁이 방약(逢約)을 어떻게 회유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회유를 진행하고 당했던 쌍방이 각각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당시 수천 가(家)의 무리를 거느린 방약은 자신의 고향 발해군(渤海郡)에서 자수하려 했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깨닫고 염민에게로 귀향한다. 그 후 그는 발해태수에 임명되었다. 발해군은 하북에서 내로라하는 기름진 땅⁶⁸으로, 이곳이 연왕국의 세력권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지역으로 막

63 小林聰, 1988, 앞의 글, 45~46쪽.

64 李海葉, 2001, 앞의 글, 105쪽.

65 『진서』 권108,慕容廆載記, 2806쪽.

66 박한제, 1988, 앞의 책, 41쪽.

67 『진서』 권108, 모용외제기, 2806쪽, “…平原劉讚儒學該通, 引爲東庠祭酒, 其世子勉率國胄東脩受業焉. 廆覽政之暇, 親臨聽之, 於是路有頌聲, 禮讓興矣.”

68 『진서』 권108, 모용외제기 高瞻傳, 2812쪽, “…此郡沃壤, 憑固河海 ….”

들어선 모용선비는 이후의 판세를 더욱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다. 무력으로 방약을 굴복시켜 발해군을 차지하기보다 당시 판세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의 귀향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이므로, 봉혁은 바로 이런 계책으로 그를 회유하기로 한다. 특히 자신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방약이 일시적인 영달 때문에 곧 멸망할 염민을 위해 목숨을 건다면, 이는 봉혁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무모한 것이었다. 그래서 봉혁은 방약에게 서로 만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청하게 되고, 방약 역시 일찍부터 봉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비로소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봉혁은 방약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당신과 동향으로 수년을 같이 살아왔으므로 서로 간의 우정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 진정으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지금 서로 만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내 속마음의 생각을 전달할까 한다. 염민이 석씨지난(石氏之亂)을 이용해 나라를 세운 것은 천하가 그의 강함을 인정한 것과도 같다. 그러나 사실은 이로써 화난(禍亂)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천명이란 결코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연왕 모용준은 수년간 덕으로 연왕국을 통치하였고, 동시에 대의에 입각해 불의한 자들을 정벌해왔는데, 이에 대적할 자들이 없다. 계성을 차지하고⁶⁹ 남쪽으로 조·위(趙·魏) 지역에까지 이르자, 원근 각처의 백성들이 성심으로 귀향해 오고 있다. 이는 이들이 혼란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안정적인 사회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염민의 패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만, 반대로 모용

69 봉혁은 당시 연왕국은 이미 계성에 수도를 두었다(今已都薊)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필자는 방약을 반드시 회유해야만 했던 그가 계성에 하북진출의 전초기지를 둔 것을 마치 수도를 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약을 회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봉혁의 입장을 확인하면 그 이유는 쉽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즉, 봉혁의 입장에서 모용준은 염위를 멸망시키고 나아가 하북 및 중원을 차지할 계 분명하므로, 염민에게 충성하고 있던 방약의 심리적인 방어선을 무너뜨려 그를 연왕국으로 귀향하도록 회유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춘호, 2021, 앞의 글, 145~148쪽 참고.

준은 새롭게 왕업(王業)을 열어 허심으로 현준(賢僞)을 구하고 있으니, 당신도 마음을 바꿔 일찍이 주발(周勃)과 관영(灌嬰)이 한고조 유방(劉邦)을 도와 천하를 얻었던 것처럼 연왕국으로 귀향하여 모용준을 보필한다면, 복록은 후대에까지 미칠 것이다. 어찌 망국의 장수가 되어 홀로 된 성을 지켜 이대로 화난을 당하려고 하는가?⁷⁰

봉혁의 말에 방약은 상황이 여러모로 녹녹지 않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悵然不言). 봉혁은 연왕국이 염위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하북을 차지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염민에게 충성하고 있던 방약의 심리적인 방어선을 무너뜨려 결국 그를 연왕국으로 귀향하도록 회유한 것이다.⁷¹ 봉혁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① 대의에 입각한 모용준에 대적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것이며, ② 원근 각처에서 연왕국으로 귀향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③ 어지러운 세상에서 복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군을 잘 만나야 하는데, 마침 모용준이 현준을 찾고 있으니, 그에게 귀의하여 공을 세워 그 복록이 본인과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기를 바란다 고 했던 것이다. 이에 방약이 염민의 사람 됨됨이·염위의 발전 가능성 등을 모용준, 연왕국과 서로 비교했을 것인데, 결정을 미루고 주저하자 봉혁의 장수 장안(張安)은 그를 사로잡아 균영으로 되돌아온다(張安突前持其馬韉, 因挾之而馳, 至營). 이때 봉혁은 방약을 향해 당신이 결정을 못하고 주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으로 결코 당신을 사로잡아 공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며, 당신과 발해군의 모든 백성이 안전하기를 바랐기

70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전 상, 525上~525下쪽, “與君累世同鄉, 情相愛重, 誠欲與君享祚無窮, 今既獲展奉, 不可不盡所懷. 冉閔乘石氏之亂, 奄有成資, 是宜天下服其強矣, 而禍亂方始, 固知天命不可力爭也. 燕王奕世載德, 奉義討亂, 所征無敵, 今已都薊, 南臨趙魏, 遠近之民, 襁負歸之. 民厭荼毒, 咸思有道, 冉閔之亡, 匪朝伊夕, 成敗之形, 昭然易見. 且燕王肇開王業, 虛心賢僞, 君能翻然改圖, 則功參絳灌, 慶流苗裔, 孰與爲亡國將, 守孤城以待必至之禍哉.”

71 彭豊文, 2009, 앞의 책, 242쪽.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君計不能自決, 故相爲決之, 非欲取君以邀功, 乃欲全君以安民也). 사실 봉혁은 방약이 귀항하지 않고 저항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장안에게 경계시키기도 했는데(張安有勇力, 奕豫戒之), 이는 그가 이번 무수지책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후 방약은 참군사(參軍事)에 임명되었고, 다른 사람에 의해 회유된 후 사로잡혔다고 하여(誘於人而遇獲) 이름을 방조(逢鈞)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로써 발해군 전 지역이 연왕국의 세력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⁷²

방약이 비록 사로잡힌 후 귀항했지만, 그는 당시 한인호강들 중 회유되어 귀항을 선택했고, 그 후 연왕국에서 벼슬을 한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관련 기록이 없어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귀항을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유준·봉방 등도 방약처럼 무리를 거느리고 자수한 적이 있고,⁷³ 고개의 군대가 다다르자 결국 항복을 결정했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사(出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방약·유준·봉방처럼 ① 회유된 후 ② 귀항을 결정하고, ③ 벼슬을 한 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다만 관련 기록이 없어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을 뿐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들은 연왕국에서 지방관·행정관·장군 그리고 무관·부주(府州)의 속관(屬官) 등에 임명되어 연왕국의 통치계층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분명 하북이 국가 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것이며, 동시에 연왕국의 통치기반이 막 이곳으로 들어섰을 때보다 훨씬 더 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통계로도 나타나듯이 지방관에 임명된 한인호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한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서기록에 의하면, 한인호강과 달리 한인사족들, 즉 봉혁·양무·황보진(皇甫眞)·장희(張悺 혹은 張希)·송활(宋活)·한항(韓恒) 등은 태위(太尉)·사공(司空)·상서령(尙書令)·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중

72 魏俊杰, 2018, 앞의 책, 200쪽.

73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高瞻子開傳, 561上쪽, “聚衆自守, 不附于僞.”

서감(中書監)·중서령(中書令)에 각각 임명되었는데,⁷⁴ 이는 그들이 모용선비와의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친 협력관계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⁷⁵ 계성시대에도 이런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대연제국의 중추관에 임명된 한인사족이 정치·경제·문화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⁷⁶ 즉, 이들은 대연제국은 정치적으로 진조(晉朝)의 금덕(金德)을 계승하여 수덕(水德)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문화적으로는 하조(夏朝)의 시력(時曆)과 주조(周朝)의 면복(冕服)을 시행하는 중화의 정통왕조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모용준은 그들의 주장에 완전히 찬성하였다.⁷⁷ 이는 그가 하북의 한인을 포함한 호·한인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특히 자신이 한인들에 의해 추대된 진조의 정통을 이은 대연황제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⁷⁸ 이렇듯 한인사족의 노력에 의해 대연제국의 국가성격은 요방의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화의 정통왕조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었다.⁷⁹

한편, 하북에서 어떻게 통치기반을 공고히 했는지, 어떻게 사회질서의 회복

74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八年(352)조, 3131쪽.

75 陳琳國, 2010, 『中古北方民族史探』, 北京: 商務印書館, 355쪽.

76 鄒禮洪, 1985, 앞의 글, 4쪽.

77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34쪽. “羣下言: 「大燕受命, 上承光紀黑精之君, 運曆傳屬, 代金行之后, 宜行夏之時, 服周之冕, 旗幟尚黑, 牲牡尚玄,」 僬從之.”

78 이춘호, 2021, 앞의 글, 151쪽.

79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給事黃門侍郎 申胤의 上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35~2836쪽 참고). 염위의 대신이었던 申鍾은 352년 8월 업성이 함락되면서 연왕국으로 귀향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신운이다. 원새 4년(355) 신운은 당시 대연제국의 ‘名尊禮重’과 ‘冠冕之式’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상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大燕受命, 侔蹤虞夏, 諸所施行, 宜損益定之, 以爲皇代永制”할 것을 강조하였다. 줄건에 의하면, 모용준이 그의 요구에 따라 虞舜·夏禹의 전통문화에 근거하여 ‘名尊禮重’과 ‘冠冕之式’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고 이를 ‘皇代永制’로 삼게 된다면, 대연제국의 국가성격은 더더욱 중화의 정통왕조에 가깝게 변할 것임에 틀림없다.

에 노력했는지와 관련하여 모용선비가 특히 유념한 것은 ① 종실세력이 군사정벌을 수행하던 외중에 지역 민심에 각별히 주의했으며, ② 지역의 치리에 능했던 한인사족을 지방관으로 등용하여 사회혼란을 극복하는 데 전념하도록 조치하였다.

첫째, 모용각 등 통병장군은 ‘반연’ 세력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엄한 군령으로 병사들을 단속하여 백성들을 해하거나 재물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⁸⁰ 그들에게 자신들은 정복자가 아닌 협력자로 비쳐질 수도 있었다. 특히 제 지역으로 단선비의 추장 단감을 공격할 때, 모용각이 그곳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자 단감의 치하에 있던 백성들이 앞다투어 군량을 모용각에게로 보내왔던 것이다. 이에 단감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지역은 비로소 연왕국의 강역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⁸¹ 당시 ‘제인(齊人)’들이 모용선비를 정복자로 여기고 반항했다면, 어떻게 자원해서 군량을 자신들의 적인 그들에게 보내 더 큰 화를 자초했겠는가? 분명 하북 민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모용선비의 노력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모용장군이 하북의 민심을 얻기 위해 그때그때 맞닥뜨렸던 상황에 따라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 지역의 치리에 재능이 있던 자들을 지방장리로 등용한 것은 아마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서기록에 의하면, 계성시대 한인사족 출신으로 하북의 지방관에 임명된 자는 손영(孫泳)·손흥(孫興)·고상(高商)·국은(鞠殷), 선우량(鮮于亮)

80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七年(351)조, 3118쪽, “恪入中山, 遷其將帥·土豪數十家詣藪, 餘皆安堵, 軍令嚴明, 秋毫不犯.”

81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穆帝永和十二年(356)조, 3158~3159쪽, “燕大司馬恪圍段龕於廣固, 諸將請急攻之, 恪曰: 「… 龕兵尙衆, 未有離心, 濟南之戰, 非不銳也, 但龕用之無術, 以取敗耳. 今憑阻堅城, 上下戮力, 我盡銳攻之, 計數日可拔, 然殺吾士卒必多矣. 自有事中原, 兵不斲息, 吾每念之, 夜而忘寐, 柰何輕用其死乎! …」 諸將皆曰: 「非所及也.」 軍中聞之, 人人感悅. 於是爲高牆深塹以守之. 齊人爭運糧以饋燕軍, 龕嬰城自守, 樵采路絕, 城中人相食, … 龕面縛出降, 并執朱禿送藪. 恪撫安新民, 悉定齊地.”

등 다섯이다.⁸² 일찍이 북평태수(北平太守)로 있었던 손흥이 이 지역의 치리에 능력을 발휘하자, 백성들의 삶은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한다. 그런 그를 중산태수로 전임시켜 치리하도록 조치하자, 중산은 과거의 혼란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다.⁸³ 그리고 고상이 범양태수(范陽太守)에 임명된 이유 역시 손흥과 비슷하다. 그는 발해군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에 엄중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특히 일처리에 탁월했으므로 이 지역 태수에 임명되었다.⁸⁴ 이렇게 하북의 지방관으로 한인사족을 임명하는 데 가장 중요시했던 요건이 ‘유사간(有事幹)’이었던 것이다. 이밖에 국은이 동래태수(東萊太守)로 부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① 그의 조부 국선(鞠羨)이 본적으로 진조의 동래태수에 임명된 이래 국씨(鞠氏)는 이 지역에서 향문을 장악하는 등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⁸⁵ 이런 현상은 그의 아들 국팽(鞠彭) 때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는 영가의 난 때 조역(曹巖)의 침공을 받고 그의 백성들이 그를 위해 결사항전하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자신이 동래를 떠나는 것이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해로를 통해 요방에 이르러 모용선비에게 귀의하게 된다.⁸⁶ 이렇듯 본적인을 본적지의 지방관에 임명

82 계성시대에 지방관에 임명된 한인사족들 중 사서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는 모두 5명이다. 다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그리고 손영과 선우량이 각각 廣寧태수와 齊郡태수에 임명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지역의 治理에 재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특히 후자는 선우량을 鮮卑族 출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趙紅梅, 2019, 앞의 책, 203쪽), 기록에 의하면 그는 范陽 출신 한인사족임에 틀림없다.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鮮于亮傳, 565上쪽, “鮮于亮, 范陽人也. …”

83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七年(351)조, 3119쪽, “以北平太守孫興爲中山太守, 興善于綏撫, 中山遂安.”

84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高瞻子商傳, 561上쪽, “開弟商剛毅嚴重, 好學, 有事幹, 爲僞范陽太守.”

85 『자치통감』 권86, 「진기」 8, 懷帝永嘉元年(307)조, 2725쪽.

86 『자치통감』 권91, 「진기」 13, 元帝太興二年(319)조, 2874~2875쪽.

하는 것이 동래 지역을 치리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국은은 이 지역 태수에 임명되었다. ② 국은은 손흥·고상과 마찬가지로 ‘유사간’이었던 것인데, 동래태수로 부임할 때, 그의 부 국팽이 그에게 서신으로 동래 지역에 생존해 있던 왕미(王彌)·조억의 자손들을 찾아 위무할 것을 당부한다. 국은이 동래를 치리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부에 적극적으로 응한 국은이 왕립(王立)과 조암(曹巖)을 찾아 이들과 깊은 유대를 맺게 되자, 이 지역의 ‘난원(亂源)’은 해결되었으며, 백성들은 비로소 ‘대화(大和)’할 수 있었다.⁸⁷ 이처럼 지역의 치리에 재능을 갖춘 국은은 본적인 신분으로 본적지인 동래의 지방관에 임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인사족은 하북의 한인호강들을 회유하는 데 직접 나섰으며, 이후 국가의 중추관으로 출사하거나 그들 중 지역의 치리에 능했던 자들은 지방관에 임명되어 사회질서의 회복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 의해 회유되어 연왕국으로 귀향한 한인호강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IV. 한인호강(漢人豪強)의 귀향과 하북 정세의 신변화

4세기 중순 이후로 접어들면서 하북의 정세는 후조와 염위 간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와중에 적지 않은 한인호강이 자신들의 부곡(部曲) 혹은 향당(鄉黨)을 거느린 채 자립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립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 중 일부는 이를 깨닫고 후조 혹은 염위에게로 몸을 의탁하여 세력을 유지한다. 이때 모용선비는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남하하

87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穆帝永和十二年(356)조, 3159쪽, “殷推求, 得彌從子立·巖孫巖於山中, 請與相見, 深結意分, 彭復遣使遺以車馬衣服, 郡民由是大和.”

기 시작하였다. 모용선비의 힘이 점차 후조와 염위를 압도하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거취를 또다시 정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맞닥뜨렸고, 생경한 지역으로 들어와 통치기반을 하루 빨리 확보해야만 했던 모용선비에게 이들의 귀향 여부는 이후 왕조의 발전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 그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킨다고 해도 그들의 진정한 귀향 혹은 협조가 없다면 하북에서 모용선비의 근거는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무수 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인호강과 백성들이 귀향을 결정하고 연왕국의 통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다. 모용준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하북에서 원래부터 있어왔던 기층조직 및 관리경험을 인정하고, 사회질서의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왕조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게 된다. 따라서 본적인을 본적지 혹은 그 부근의 지방관에 임명하여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지역을 치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한 학자는 위진남북조시대 본적인을 본적지의 지방관에 임명하여 치리하도록 한 것은 대체로 일반적인 현상이며, 거의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오호왕조(五胡王朝)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⁸⁸ 하북으로 들어선 모용선비가 후조·염위와의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강역은 자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통치해야 할 백성들의 숫자 또한 증가했을 것이므로 하루 빨리 사회질서를 회복·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방통치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 지역 한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래의 기층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앞 장에서 이미 약 8년에 이르는 계성시대에 모용준은 하북을 국가 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방치리에 능력이 있던 한인사족, 이 지역의 한인호강을 주로 본적지 혹은 그 부근의 지방관에 임명하여 치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이런 조치는 일찍이 모용외가 요방으로 들어온 하북의 한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두었던 교군현의 장리(長吏)에 그들의 지도

88 窪添慶文, 2003, 『魏晉南北朝官僚制研究』, 東京: 汲古書院, 288~289쪽.

자를 임명하지 않고, 그 대신 장군이나 중앙의 관료, 혹은 타 군현의 장리로 전임시켰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⁸⁹ 요방을 떠나 생경한 지역 하북으로 들어선 모용선비가 하루속히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방식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모용준은 한인호강이 귀향하기 전 갖고 있던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던 백성들과의 관계에 따라 본직지 혹은 그 부근의 지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지방관으로 임명하게 된다.⁹⁰ 계성시대에 한인호강들이 귀향한 후 맡았던 관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통해 계성시대에 연왕국(대연제국)에서 관직을 역임한 한인호강은 모두 19명이며, 그중 10명(53%)은 지방관에, 나머지 9명은 각각 행정관·장군 혹은 무관·부주의 속관 등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¹ 모용준은 한인호강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세력이나 향론을 사회질서의 회복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의 다수를 지방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후조의 범양태수였던 이산은 모용선비의 공격을 받아, 자신의 휘하에 있던 현령(縣令)들을 이끌고 귀향했는데, 얼마 후 다시 이곳의 태수에 임명된다. 그의 귀향으로 범양군이 모용선비의 세력권 내로 들어왔으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후조의 백성으로 남느냐 연왕국의 백성이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모용준은 이 지역에서 이산이 갖고 있던 세력을 활용해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예전그대로 범양태수에 임명하였다.⁹² 또한 봉혁의

89 박한제, 1988, 앞의 책, 38쪽.

90 窪添慶文, 2003, 앞의 책, 301~302쪽.

91 계성시대에 연왕국(대연제국)으로 귀향하여 관직에 임명된 한인호강들 중 사서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는 모두 19명이다. 다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용준이 귀향을 선택한 한인호강들 중 반 이상을 하북의 지방관으로 등용한 것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92 『자치통감』 권98, 「진기」 20, 穆帝永和六年(350)조, 3103쪽.

〈표 2〉 연왕국(대연제국)에서 한인호강의 출사(出仕) 일람표

번호	이름	본적	관직명	임명시간/ 新任·已任	임명 전의 상황	비고
1	李産	范陽	范陽太守	350. 3/新	後趙 范陽太守	
2	李續	范陽	太子中庶子	350. 3/新	後趙 幽州別駕	李産 子
3	賈堅	渤海	樂陵太守 太山太守	350. 9/新 358. 12/已	後趙 章武太守	혹은 泰山太守
4	封放	渤海	渤海太守	351. 4/新		渤海 ‘土豪’
5	劉準	彭城	左司馬	351. 4/新	後趙 太尉·冉魏 幽州刺史	
6	逢約	渤海	參軍事	351. 4/新	冉魏 渤海太守	351. 11 叛燕
7	侯龕	上谷	中尉	351. 8/新	冉魏 中山太守	
8	申鍾	魏郡	右長史	352. 8/新	冉魏 太尉	
9	夔逸		秦州刺史	352. 10/新	後趙 將軍	
10	李歷		兗州刺史	352. 10/新	後趙 將軍	
11	高昌		安西將軍	352. 10/新	後趙 將軍	
12	劉寧		車騎將軍 後將軍	352. 10/新 355. 5/新	後趙 將軍	
13	呂護		河內太守	353. 3/新 ⁹³		361. 2 叛燕
14	朱禿	樂陵	青州刺史	353. 11/新	後趙 將軍	354. 6 叛燕
15	杜能	平原	平原太守	353. 11/新	後趙 將軍	
16	丁嬈	清河	立節將軍	353. 11/新	後趙 將軍	
17	孫原	陽平	兗州刺史	353. 11/新	後趙 將軍	혹은 孫元
18	梁琛	廣平	中書著作郎	353. 3/新 ⁹⁴	呂護 參軍事	
19	王騰		徐州刺史	356. 2/新	段龕 徐州刺史	

93 『십육국춘추』 권27, 전연록5·모용준전 하, 529下~530上쪽, “元璽二年(353) … 三月, 拔之, 護遁走, 遣前將軍悅綰追及於野王, 護使弟奉表請降, 乃以護爲河內太守.” 『십육국춘추』와 달리 『자치통감』에는 呂護가 연왕국으로 귀향하여 하나 태수에 임명된 시간을 354년 3월로 기록하고 있는데, 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취하였다.

종제(從弟)로서 발해군에서 토호(土豪)로 불렸던 봉방은 연왕국으로 귀향한 후 발해태수에 임명되었는데,⁹⁵ 이 역시 그의 토호란 신분이 이 지역을 치리하는데 분명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본인의 고향 발해군에서 수천 가의 부곡을 거느리고 자수했던 가견은 모용평에게 사로잡힌 후 발해군 이남의 낙릉태수에 임명되어 고성(高城)에 진수하게 된다.⁹⁶ 가견의 재능을 높이 아낀(愛賈堅之材) 모용준은 그를 지방관에 임명하여 그가 재능(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견은 약 10년 가까이 지방관을 역임했던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한인호강이 본군(本郡)의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본적지 혹은 그 부근의 지방관에 임명된 경우인데, 이제부터 연왕국의 관리로 하북을 치리하게 되었으니 모용선비의 통치기반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공고히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하북 정세의 신변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의 모든 한인호강은 연왕국으로 귀향하기 전 수천 혹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어느 한 지역에서 자수 혹은 자고(自固)했던 자들이었다. 가견은 수천 가의 부곡을 거느렸다고 하며, 방약 역시 수천 가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수한 경력이 있고, 유준과 봉방 또한 적지 않은 무리를 이끌고 자수를 도모한 적이 있었다.⁹⁷ 이 밖에 후조의 장수였던 기일(夔逸)과 이력(李歷) 등은 자신의 주군(州郡)에서 병사들을 옹유하고 있다가⁹⁸ 연왕국으로 귀향한 경

94 『십육국춘추』 권32, 전연록10·梁琛傳, 572下쪽, “梁琛廣平人也, 初爲呂護參軍, 護敗遂仕慕容氏, 爲中書著作郎, 轉給事黃門侍郎.” 주지하듯 353년 3월 呂護는 연왕국으로 귀향한 후 하내태수에 임명되었다. 위 기록에서 보듯 呂護의 參軍이었던 양침 역시 같은 해 연왕국으로 귀향하였고, 얼마 후 中書著作郎에 임명되었다.

95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七年(351)조, 3117~3118쪽.

96 『자치통감』 권98, 「진기」 20, 穆帝永和六年(350)조, 3109쪽.

97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 상, 525上쪽, “趙故太尉劉準·土豪封放別聚衆自守.”

98 『십육국춘추』 권26, 전연록4·모용준 상, 528上쪽, “故趙將擁兵據州郡者, 各遣

우이며, 연왕국으로 귀향하기 전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세력을 가진 주독·두능·정요·손원은 각각 청주자사·평원태수·입절장군·연주자사에 임명된 후 예전과 변함없이 자신의 군영을 통령하였다.⁹⁹ 이상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인호강이 연왕국으로 귀향한 후에도 그전과 큰 차이 없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모용준은 왜 이런 방법을 통해 하북의 치리에 나섰던 것일까? 빠른 시간 내에 하북을 차지하고 치리하려면 향론과 민심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한인호강들과 협력해야만 했고,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치리의 방법은 사실 한인호강을 자신의 본적지 혹은 그 부근의 지방관에 임명한 조치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둘째, 모용장군이 군사활동 중 하북의 지역 민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은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그들은 정복하려 했던 자가 임명했던 인물을 그대로 지방관으로 등용하여 그 지역 백성들에게 협력자로서의 인상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새 5년(356) 2월 모용각은 단감을 공격하던 중 그의 밑에서 서주자사(徐州刺史)를 맡았던 왕등(王騰)의 귀향을 받게 되고, 그 후 그를 예전 그대로 서주자사에 임명하여 그 지역을 계속 치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왕등은 곧바로 양도(陽都)로 되돌아가 진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조치는 정복하려 했던 단감이 지배하고 있던 제 지역의 여러 성을 신속히 초무하고자 한 것이다.¹⁰⁰ 이처럼 왕등을 재차 그 지역 지방관으로 등용하고 있는 것은 모용선비가 지역 민심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혹시 이후에 있을지도 모

使來降.”

99 『자치통감』 권99, 「진기」 21, 穆帝永和九年(353)조, 3136쪽, “趙末, 樂陵朱禿·平原杜能·清河丁嬈·陽平孫元各擁兵分據城邑, 至是皆請降於燕, 燕主僞以禿爲青州刺史, 能爲平原太守, 嬈爲立節將軍, 元爲兗州刺史, 各留撫其營.”

100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穆帝永和十二年(356)조, 3153쪽, “燕太原王恪招撫段龕諸城, 己丑, 龕所署徐州刺史陽都公王騰舉衆降, 恪命騰以故職還屯陽都.”

를 백성들의 이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의 두 사실에 유념하면서 연왕국으로 귀향한 한인호강이 모용선비를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인식태도가 연왕국의 성격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북 정세의 신변화와 직접 관계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북이 진정으로 요방을 대체하는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가와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모용선비 곁에서 관직을 했던 배역(裴嶷)은 하북·중원으로 진출하여 북중국의 혼란을 평정한 후 중화의 주인이 될 자는 모용외임에 틀림없다¹⁰¹며 화하문화·한인왕조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드러낸 바 있고,¹⁰² 앞 장에서 언급했듯, 봉혁은 방약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모용준이 이미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었고, 동시에 대의에 의거해 ‘반연’ 세력을 정벌하고 있으므로 하북의 화난은 그에 의해 제압될 것이 틀림없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배역·봉혁 등은 연왕국에서 일찍부터 출사했던 자들로 그들의 언행이 하북으로 진출하기 전후 한인사족의 입장을 대체로 대변한다면, 연왕국으로 귀향한 한인호강들 중 이들과 비슷한 언행을 보인 인물들이 있었을까? 만약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그 언행이 귀향한 한인호강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면, 하북은 정치·사회·문화 등에서 연왕국의 중심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모용준은 이적(李績) 등에 의해 대의에 입각해 천하를 차지할 인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중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곤란에 빠진 호·한인들을 구제할 책임자로 낙점되기도 하였다. 이는 기실 배역·봉혁 등의 언행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적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십육국춘추』와 『차지통감』에는 이적이 연왕국으로 귀향하기 전후의 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적은 일찍이 후조의 유주자사

101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裴嶷傳, 559下쪽, “嶷言於虜曰, 晉室衰微, 介居江表, 中原之亂, 非明公不能拯也.”

102 鄧樂群, 2004, 「十六國胡族政權的正統意識與正統之爭」, 『南通師範學院學報』 4期, 86左쪽.

왕오 밑에서 주부(主簿)와 별가(別駕)¹⁰³ 등의 속관을 맡은 적이 있다. 모용선비가 하북으로 남하하자, 그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왕오를 따라 호타수(摩沱水) 남쪽의 노구(魯口)로 달아났다. 당시 등항은 왕오에게 이적의 가족이 이미 연왕국으로 귀향했고, 그 또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권한다. 그렇지만 왕오는 유가정신을 충분히 구현하고 직무를 수행했던 이적의 재능을 아끼며¹⁰⁴ 그가 대의를 세우기 위해 가족까지도 버린 것인데(能立義捐家), 상대를 시기하여 해친다면 하북의 한인들이 이를 듣고 우리를 도적떼로 여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궤멸하고 말 것이라며 등항을 꾸짖었다. 이때 이적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많자, 왕오는 더 이상 그를 자신의 곁에 둘 수만은 없었다. 이에 이적은 왕오와 이별을 고하고 연왕국으로 귀향하기로 한다. 모용준은 그를 향해 경(卿)이 천명을 알지 못하여 부모를 버리고 명리(名利)를 좇은 것인데, 지금에야 비로소 귀향해 온 것이냐며 나무랐다. 이에 이적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A] 신이 그렇게 한 것은 옛 주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작은 절개라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관직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떤 일이라도 자신의 주인을 위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의로 천하를 취하려 하시는데, 신이 그래도 아주 늦게 뵈게 된 것이 아닙니다.¹⁰⁵

[B] 신이 듣자 하니 예양(豫讓)이 옛 주인 지백(智伯)의 원수를 갚기 위해 했던 일

103 혹자는 “産子續爲幽州別駕，棄其家從王午在魯口”(『자치통감』 권98, 「진기」 20, 穆帝永和六年(350)조, 3104쪽)에 근거해서 이적이 모용준에 의해 유주별가에 임명되었다고 주장한다(趙紅梅, 2019, 앞의 책, 27, 200쪽). 그런데 전후 사정을 통해 보았을 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104 지배선, 1997, 앞의 글, 154쪽.

105 『자치통감』 권98, 「진기」 20, 穆帝永和六年(350)조, 3104쪽, “雋讓之曰：「卿不識天命，棄父邀名，今日乃始來邪！」對曰：「臣眷戀舊主，志存微節，官身所在，何事非君。殿下方以義取天下，臣未謂得見之晚也。」”

들이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관직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떤 일이라도 자신의 주인을 위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폐하께서 당요(唐堯)·우순(虞舜)과 같은 태평의 세상을 열고자 하시는데, 신이 실로 아주 늦게 귀순한 것은 아닙니다.¹⁰⁶

이적의 대답에 모용준은 매우 만족하며 이것이야말로 주인을 섬기는 진정한 절개라고 칭찬한 후 그를 태자중서자(太子中庶子)에 임명한다.¹⁰⁷ 위 안용문 [A]와 [B]는 각각 『자치통감』과 『십육국춘추』의 기록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자에서 이적은 모용준이 의로서 천하의 민심을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과 후자에서 이적은 모용준이 결국 당요·우순과 같이 전란에 빠진 하북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태평의 세계를 열 것이라고 한 사실이다. 후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전자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심원한데, 이적의 눈에 비친 모용준은 요·순 임금처럼 덕정을 펼칠 유일한 인물로 비쳐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런 아부성 발언을 했던 것일까? 이후의 일이지만, 모용준이 포지(蒲池)에서 대신들과 연회를 열었을 때, 당시 화제가 된 일이 태자의 조사(早死)에 관한 것이었다. 일찍 죽은 태자 모용엽(慕容曄)이 어떠했냐는 모용준의 물음에 이적은 여덟 가지 덕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고하는데, 지금의 태자 모용위는 어떠한 물음에 그는 모용엽에 비해 두 가지 덕이 부족하고, 이는 바로 평소에 유렵(遊獵)을 좋아하고 늘 풍류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에 모용준은 모용위를 향해 이적의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경계할 것을 당부하였다.¹⁰⁸ 이런 사정을 통해 볼 때, 이적이 결코 목숨을 부지하기 위

106 『십육국춘추』 권32, 전연록10·李産子績傳, 568上쪽, “績曰, 臣聞豫讓報智伯仇稱於前史, 既官身所在, 何事非君. 陛下方弘唐虞之化, 臣實未謂歸順之晚也.”

107 『십육국춘추』 권32, 전연록10·李産子績傳, 568上쪽, “僞曰, 此亦事主之一節耳, 拜太子中庶子.”

108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41쪽, “績曰: 「皇太子天資岐嶷, 聖敬日躋, 而八德

해서, 특히 모용준에 대한 아침을 통해 개인의 영달을 도모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하다. 한편, 이적은 연왕국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귀향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럼 그가 염두에 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느 관직에 임명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가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서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태자증서자에 임명된 그가 태자 모용엽의 스승으로서 유가경전·치국방략·처신처세·행동거지 등의 교육을 책임졌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모용준을 이을 다음 세대의 대연제국을 설계하고, 애민지도(愛民之道)에 입각해 나라를 치리하는 현군(賢君)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의 역할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¹⁰⁹ 여하튼 모용준은 이적과 같은 한인호강의 언행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此亦事主之一節耳), 따라서 신 점령지 하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여 이 지역을 연왕국의 새로운 통치지역으로 바꾸고자 노력했을 것이 분명하다. 만약 귀향해 온 한인호강들 중 이적과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고, 모용준에게 비슷한 인연을 한 자들이 있었다면, 연왕국 자체는 중화의 정통을 가진 새로운 왕국으로, 국가의 성격은 위·진처럼 화하 왕조로 탈바꿈해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적의 언행에서 우리는 한인호강이 종족적인 정치원리를 초월하여 이민족 왕조의 군주 모용준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인왕조 군주가 하지 못했던 과업을 그가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적만큼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부 이산(李産)과 가견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闕然，二闕未補，雅好遊田，娛心絲竹，所以爲損耳。」僑顧謂曄曰：「伯陽之言，藥石之惠，汝宜戢之。」”

109 태자의 스승으로서 이적은慕容曄에게賢君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교육시켰을 것인데, 모용준의 물음에 이 8개의 덕에 대해서 고하고 있다. 혹시 그는 자신의 가르침으로 인해 모용엽이 이들 덕목을 갖추게 되었다고 은연중 드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8개의 덕을『진서·모용준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至孝自天，性與道合，此其一也。聰敏慧悟，機思若流，此其二也。沈毅好斷，理詣無幽，此其三也。疾諛亮物，雅悅直言，此其四也。好學愛賢，不恥下問，此其五也。英姿邁古，藝業超時，此其六也。虛襟恭讓，尊師重道，此其七也。輕財好施，勤恤民隱，此其八也。”

고 있다. 이산은 연왕국으로의 귀향을 결정할 때 모든 일은 천명이 정한 대로 돌아가듯 모용선비에 대항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은연중 모용준이 천명에 의거해 하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모용준은 그의 말 속에 의기가 충만함을 보고 그가 진정 당시 자신이 찾던 인재라고 하여 중용하기로 결정한다. 이후 그는 범양태수와 상서·태자태보(太子太保)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¹¹⁰ 이 밖에 모용준 밑에서 10년 가까이 지방관을 역임했던 가견은 광수 2년(358)에 이르러 동진의 장수 순선(荀羨)의 공격을 받고 곤경에 빠진다. 그는 이렇게 된 것이 천명이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며 굴욕을 받고 사느니 차라리 모용준에 대해 절개를 지켜 죽는 편이 낫다며 탄식한다. 가견은 이후 순선에게 사로잡히기는 했으나, 연왕국에 대한 충성과 모용준에 대한 절개를 포기하지 않은 채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 우리는 그의 언행을 통해 하북의 한인들을 버리고 도망한 사마씨(司馬氏)에게 어떻게 충성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런 사마씨를 대신해 모용씨가 하북의 새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한편, 가견의 죽음으로 잃었던 태산군(泰山郡)의 치소 산치(山茌)는 청주자사 모용진(慕容塵)이 병사를 보내 순선을 대파한 후 재차 차지하게 되었고, 가견의 아들 가활(賈活)은 임성태수(任城太守)에 임명되었다.¹¹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산의 연왕국으로의 귀향 내력과 가견의 연왕국에 대한 충성 등은 이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인호강이 모용선비를 보다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이 지역이 연왕국

110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李産傳, 2844쪽, “産泣曰:「誠知天命有歸, 非微臣所抗. …」 僞嘉其慷慨, 顧謂左右曰:「此眞長者也,」 乃擢用之, 歷位尙書. 性剛正, 好直言, 每至進見, 未曾不論朝政之得失, 同輩咸懼焉, 僞亦敬其儒雅. … 轉拜太子太保.”

111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穆帝升平二年(358)조, 3171~3172쪽, “燕泰山太守賈堅屯山茌 … 堅歎曰:「吾自結髮, 志立功名, 而每值窮厄, 豈非命乎! 與其屈辱而生, 不若守節而死,」 … 堅曰:「晉自棄中華, 非吾叛也. 民旣無主, 強則託命. 旣已事人, 安可改節! 吾束脩自立, 涉趙歷燕, 未嘗易志, 君何忽忽相謂降乎!」 … 燕青州刺史慕容塵遣司馬悅明救泰山, 羨兵大敗, 燕復取山茌. 燕主僞以賈堅子活爲任城太守.”

의 새로운 정치·사회·문화 등의 중심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 없다.

필자가 이 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시 기일·이력·고창(高昌)처럼 일부 한인호강이 모용준에 성심으로 귀항하지 않고 자립 혹은 자수할 기회를 엿봤을 수 있으며,¹¹² 연왕국에서 관직에 임명된 기록은 없으나 조합(趙樞)·소림(蘇林)·이독(李犢)과 같이 반란을 도모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이다.¹¹³ 그렇지만 이들이 자립을 획책했거나 반란을 도모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북이 요방을 대체한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되어가는 현상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¹¹⁴ 하북의 모든 한인호강이 이적처럼 종족적인 정치원리를 초월한 채 모용선비를 맞이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모용선비는 이런 사실들로 인해 하북 전체를 차지하고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아가 사회질서의 회복과 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지역 백성들의安居樂業(안거낙업)을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사서기록에서 보듯, 광수 원년(357) 10월에 이르러 황하 이남의 여·영·초·패 및 이북 전체가 대연제국의 강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¹¹⁵에서 모용선비는 이때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112 張儉生, 1985, 『魏晉南北朝政治史』 2,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306쪽.

113 『자치통감』 권98, 「진기」 20, 穆帝永和六年(350)조, 3106쪽, “代郡人趙樞帥三百餘家叛燕歸趙并州刺史張平”; 권99, 「진기」 21, 穆帝永和八年(352)조, 3131쪽, “中山蘇林起兵於無極, 自稱天子, 恪自魯口還討林”; 穆帝永和九年(353)조, 3132쪽, “趙故衛尉常山李犢聚衆數千人叛燕 … 燕主僞遣衛將軍恪討李犢, 犢降.”

114 혹자는 모용선비는 하북으로 진출하던 초기 지방통치가 대단히 불안해서 계성과 업성을 중심으로 한 거점 통치에 만족해야만 했고, 하북 각지의 ‘반연’ 세력을 제압하기에도 무척 버거웠다고 주장한다. 최진열, 2020, 앞의 글, 91쪽.

115 『십육국춘추』 권27, 전연록5·모용준전 하, 533下쪽, “恪遂進兵渡河, 略地河南, 汝·潁·譙·沛皆陷, 分置守宰而還 … 盡陷河北之地.”

V. 맺음말

동서고금 이래로 한 왕조의 정치·사회·문화 등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수도는 강역 전체의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발전의 주된 변화의 흐름을 대변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오희시기 모용선비는 4세기 초 극성에 수도를 두었을 때 부락연맹의 시대를 끝내고 연왕국을 건국했으며, 용성에 수도를 두었을 때에는 과거 진조에 대해 취해왔던 근왕의 외교노선을 버리고 점차 독자적인 통치체제를 갖춘 왕조로 발전 변화해 갔던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각각 수도를 두었던 곳에서 국가발전의 주된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성에 정도한 후 국가발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국가성격의 변화과정·하북에 대한 효과적인 치리방법, 그리고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하북이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4세기 중반 경각지의 부족과 나라 재정의 악화로 심각한 경제문제에 맞닥뜨렸던 모용선비는 당시 북중국에 밀어닥친 춥고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요방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지역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이 하북이었다. 특히 팔왕의 난·영가의 난으로 고통받던 하북의 한인들이 요방으로 이주한 후 그 지역의 제반정세에 대해 전해주었으며, 그들 중 현재를 갖춘 자들이 모용외의 모주·고굉 등 측근막료로 등용되어 그의 한화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모용선비는 정치·사회·문화 등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350년 연초에 이르러 모용준은 20여 만의 대군을 이끌고 후조에 대한 군사정벌에 나선 후, 같은 해 3월 계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북진출의 전초기지를 두었다. 그리고 이후 이 지역의 정세가 모용선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던 352년 11월 그는 대연황제를 올랐으며, 그 이듬해 2월 계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

모용준이 대연황제를 칭하면서 국가형태가 기존의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뀐 것 외에 특히 국가성격, 즉 국가제도와 권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은 분명하다. 요방의 시대에 종실세력이 모용군권과 더불어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나눠 가지며 ‘분치’의 경향을 드러냈다면, 이제 그들은 시중·대사마·녹상서사 등 국가의 중추관에 임명되어 대연황제를 직접 보좌하고, 나아가 그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전처럼 국가의 군권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대사까지도 처리하는 ‘공치’의 존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지고무상한 권좌에 오른 모용준이 책봉지책을 통해 자신이 종실세력의 진정한 주군임을 선언하고, 나아가 그들 위에 군림함으로써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가의 일원적인 지배를 완성하고 결국에는 ‘짐이 곧 국가’라는 대연제국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다. 모용종실이 대연황제가 허락한 한도 내에서 국가권력의 일부를 자신의 ‘뒀’으로 분배받은 후 자기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비로소 대연제국의 진정한 신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그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하기란 무척 힘들다. 하지만 당시 종실세력의 대표에 해당하는 모용각의 언행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연황제는 이제 그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정통’의 존재, 즉 신성한 ‘권위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북에서 ‘반연’ 세력을 상대로 주로 군사정벌을 수행했던 모용종실은 중요한 지역 혹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한 후 군태수 혹은 주자사의 신분으로 장군·도독의 직함을 갖고 그곳에 진수하는데, 이는 어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방편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인사족은 한인호강에 대해 주로 무수지책을 책임졌는데, 이는 그들이 대부분 하북 출신으로 모용선비의 통치이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수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인호강과 백성들이 성심을 다해 연왕국으로 귀향한다면, 이는 모용준이 당초 다짐했던 극심한 민족적 모순과 갈등으로 야기된 하북의 대혼란을 수습해간다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모용선비의 통치기반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공고히 되는 것이고, 하북은 요방을 대체하는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간다는 뜻일 것이다.

필자는 방약이 봉혁에 의해 회유된 후 모용선비에게로 귀항을 결정하고 벼슬을 했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사례를 통해 당시 회유를 진행하고 당했던 쌍방이 각각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의 한인호강이 회유된 후 귀항을 결정했고, 관직을 역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 과반수 이상이 지방관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과거 한인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교군현을 두고 그들의 지도자를 타 군현의 지방관으로 전임시킨 방법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모용준은 예전과 달리 지방통치에 변화를 주었다. 이 밖에 모용준은 하북에서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의 민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국가의 중추관에 등용되었던 한인사족 외에 지역의 치리에 능했던 자들을 직접 지방관으로 발탁하여 사회질서의 회복에 힘쓰기도 하였다.

특히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적 등 한인호강은 귀항한 후 모용준이 요·순 임금처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나아가 하북의 혼란을 안정시킨 후 대외로 천하를 통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아침에 의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게 아닌 이상, 모용준은 이런 한인호강들의 언행에 큰 감명을 받아 하북을 보다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여 그 지역에 대한 통치에 강한 자신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인호강들 중 누군가가 이적과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모용준에게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면, 연왕국은 분명 중화의 정통을 가진 한·위·진 등의 왕조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하북은 연왕국의 새로운 통치지역으로 탈바꿈해갈 것임에 틀림없다. 하북의 모든 한인호강이 이적, 이산, 가건처럼 종족적인 정치원리를 초월하여 모용준을 대하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호족 군주인 모용준이 한인왕조 군주가 이루지 못한 위업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설사 귀항한 자들 중 일부는 자립 혹은 자수할 기회만 엿봤을 수 있고, 연왕국에서 관직을 역임하지 않은 채 반란을 도모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하북은 요방을 대체해가고 있었으며, 연왕국은 중화의 정통을 가진 왕조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용선비는 광수 원년(357) 11월 업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계성에서 중원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의 정치·사회체제 등에 변화를 주었으며, 이후 업성으로의 천도를 통해 ‘당유중원(當有中原)’을 실현한 후 명실상부한 중화의 왕조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업성에 정도한 후 대연제국은 어떤 시대적·지역적 환경에 맞닥뜨렸는지에 대한 연구는 후속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사료

- 『後漢書』·『晉書』·『資治通鑑』(北京:中華書局에서 출판된 標點校勘本을 이용함).
萬斯同, 1998, 『僞燕將相大臣年表』, 北京:『二十五史補編』第三冊, 中華書局影印本.
崔鴻, 1986, 『十六國春秋』, 臺北:文淵閣四庫全書463冊, 臺灣商務印書館影印本.
湯球, 1936, 『十六國春秋輯補』, 上海: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단행본

-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박한제,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지배선,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高然, 2018,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北京大學出版社.
魏俊杰, 2018, 『十六國疆域與政區研究』, 上海:復旦大學出版社.
李海葉, 2015, 『慕容鮮卑의 漢化與五燕政權-十六國少數民族發展史의 個案研究』,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儉生, 1985, 『魏晉南北朝政治史』2, 臺北:中國文化大學出版社.
趙紅梅, 2019, 『前燕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陳琳國, 2010, 『中古北方民族史探』, 北京:商務印書館.
彭豐文, 2009, 『兩晉時期國家認同研究』, 北京:民族出版社.

谷川道雄, 1971,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筑摩書房.
三崎良章, 2006, 『五胡十六國の基礎的研究』, 東京:汲古書院.
窪添慶文, 2003, 『魏晉南北朝官僚制研究』, 東京:汲古書院.
田村實造, 1985, 『中國史上の民族移動期-五胡·北魏時代の政治と社會』, 東京:創文社.

논문

- 이춘호, 2010a, 「五胡시기慕容前燕의 建國과 그 성격-‘勤王’의 출현 및 그 운용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13집.
- _____, 2010b, 「오호시기 한인왕조 冉魏와 그 성격-胡漢對立과 그 克服의 한계를 중심으로」, 『중국고증세사연구』 23집.
- _____, 2021, 「燕王國에서 大燕帝國으로-慕容鮮卑의 河北進出과 국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74호.
- 지배선, 1997, 「李産과 李續에 대하여」, 『역사학보』 154집.
- 최진열, 2020, 「前燕의 關東 정복과 지방 통치」, 『동양사학연구』 151집.
- 高詩敏, 2000, 「十六國北朝時期渤海封氏의 變遷」, 『大同職業技術學院學報』 3期.
- 高然, 2014, 「十六國前燕疆域·政區考」, 『中國歷史地理論叢』 3期.
- 雷家驥, 1995, 「慕容燕의 漢化統治與適應」, 『東吳歷史學報』 1期.
- 鄧樂群, 2004, 「十六國胡族政權의 正統意識與正統之爭」, 『南通師範學院學報』 4期.
- 小林聰, 1988, 「慕容政權의 支配構造의 特質-政治過程의 檢討と支配層의 分析を通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6號.
- 王薇, 1993, 「『十六國春秋』考略」, 『古籍整理研究學刊』 1期.
- 姚宏杰, 2004, 「君位傳承與前燕·後燕政治」, 『史學月刊』 3期.
- 劉國石, 1997, 「鮮卑慕容氏與趙魏士族」,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5期.
- 李文才, 2007, 「渤海封氏與慕容鮮卑關係試探」, 『河北學刊』 6期.
- 李海葉, 2001, 「漢士族與慕容氏政權」, 『內蒙古師範大學學報』 4期.
- _____, 2008, 「關於慕容氏繼承制度的探討」, 『中山大學學報』 2期.
- _____, 2011, 「前燕中原時期胡漢分治制度考」, 『內蒙古社會科學』 2期.
- 庄華峰, 2000, 「湯球對兩晉十六國史書的輯佚」, 『史學史研究』 2期.
- 周倩倩, 2018, 「從祥應管窺慕容前燕政權的漢化」, 『敦煌學輯刊』 4期.
- 鄒禮洪, 1985, 「論中原士大夫對前燕慕容氏封建化的影響」, 『新疆師範大學學報』 1期.
- 湯勤福, 2010, 「關於屠本『十六國春秋』真偽的若干問題」, 『求是學刊』 1期.

모용선비(慕容鮮卑)의 계성(薊城)시대와 하북(河北)지역

이춘호

4세기 중반 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모용준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맞닥뜨린 경제위기·기후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의 진출을 결정한다. 이때가 바로 350년 2월이었다. 그 후 염위의 군주 염민을 생포하는 등 하북의 정세가 모용선비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던 352년 11월 그는 자신이 역운을 갖고 있다고 공언한 후 대연황제에 등극했으며, 그 이듬해 2월 수도를 계성으로 옮겼다. 이로써 연왕국의 국가형태는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모용준은 계성에서 하북에 대한 효과적인 치리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의 일원적인 지배, 즉 과거 국가의 최고 권력을 종실세력과 나눠 가졌던 ‘분치’의 경향을 끝내고 그들의 진정한 주권임을 선언한 후 결국에는 ‘짐이 곧 국가’라는 대연제국의 이상을 실현하였다. 이는 사실 모용선비가 계성을 함락한 후 이곳에 하북진출의 전초기지를 두면서부터 시작하여 정식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3년을 포함하고 이후 업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약 8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이다. 이 시기는 하북으로 진출한 모용선비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음에 틀림없다. 필자는 이 시기를 ‘계성시대’로 명명하고 그 변화

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모용준은 하북에서 향론을 장악하고 세력을 키운 한인호강들을 제압 혹은 회유하여 통치기반을 확보해가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모용종실이 군사정벌을, 한인사족이 무수지책을 각각 맡아 추진해갔다. 그런데 무수지책이 군사정벌에 비해 하북의 한인호강과 백성들에게 미칠 파급력은 자연히 클 수밖에 없었으며, 모용각 등의 통병장군이 지역 민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얻는 효과와 함께 이들의 귀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사회혼란을 극복하면서 통치기반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계성시대에 귀항해 온 한인호강들 중 과반수 이상이 지방관에 임명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지역의 치리에 능했던(有事幹) 한인사족들을 지방관으로 등용하여 사회질서 회복에 힘썼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연왕국(대연제국)의 관리로서 하북을 치리했을 때, 이 지역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더 큰 환영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이들은 후조 혹은 염위의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적은 귀항한 후 모용준을 향해 대의로 천하를 얻을 것이며, 심지어 요·순 임금처럼 태평의 세상을 열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족적인 정치원리를 초월하여 그의 본심에서 우려난 것이었다면, 분명 한인호강이 모용선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하북이 연왕국(대연제국)의 새로운 정치·사회·문화 등의 중심지역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357년 10월에 이르러 하북 전체와 하남의 일부 지역이 대연제국의 강역으로 편입되면서 약 8년에 걸친 모용선비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보게 되었다.

주제어: 연왕국, 대연제국, 계성, 하북, 모용준, 모용선비

ABSTRACT

The Ji City Era of Murong Xianbei and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Lee Chunho

Murong Jun, based on the combined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decided to leave the region of the Liao in February 350. After that, he tried to transfer the center of the Yan kingdom to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In November 352, Murong Jun believed that he could transform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into the hinterland of the Yan kingdom, so he decided to call himself Yan emperor. And then, he finally moved the capital from Long City to Ji City in February of the next year. In the seven years and nine months since Ji City was conquered and became a new capital, it made Murong Xianbei continue to follow the Chinese culture and accumulate strength to enter the region of the ZhongYuan. During this period, the Murong clan and the Han gentry attacked and appeased many “anti-Murong Xianbei” groups, and therefore good results were achieved. The “anti-Murong Xianbei” groups mainly refers to the powerful landlords of

Han. We found that a lot of the powerful landlords of Han and the Han people surrendered to the Yan kingdom(the great Yan empire). They hoped that Murong Jun would unify China with justice, and he would save the people in trouble. The powerful landlords of Han and the Han gentry became local officials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They placated the local Han people in the name of the Yan kingdom (the great Yan empire). This proved to play a decisive role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becoming the new center of the great Yan empire.

Keywords: the Yan kingdom, the great Yan empire, Ji City, the northern region of the Yellow River, Murong Jun, Murong Xianbei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대일 육상 전력 강화

– 1596년 강화협상 결렬 전후를 중심으로

이정일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조선에서 본 일본군의 원거리 공략과 진지전
- III. 조선의 대응책 논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1593년 상반기에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내려가자 명군은 약 5,000여 병력만 남긴 채 하반기에 압록강을 건너 되돌아갔다. 이듬해 2월 만력제는 강화협상에 집중하되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서 절강·천진 등 동남부 해안 전역에는 경계 강화를 명하고 조선에는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며 강온의 이중 전략으로 확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¹ 명은 1594년 9월 조선에 잔존한 자국 부대마저 철수시켰고² 12월 책봉사 파견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남해안 일본군의 완전 철수를 책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조선에 대해서 조선군의 부대 구성, 병력 배치, 주둔지, 지휘관의 직책과 성명까지 요청하면서 대(對)일 방어력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³ 1595년 2월에는 조선 조정에 군사 관련 정보뿐 아니라 명군 재투입 시 조선의 군량 조달 상태, 일본군 포로 및 피로인 처리 문제, 훈련, 병중, 군수 등 보다 포괄적인 전력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⁴ 명

* 투고: 2022년 4월 13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10일, 재심사 완료: 2022년 5월 21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25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 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1-기획연구-20)

- 1 『事大文軌』卷8(영인본 1책, 391~322쪽), 萬曆 22년 2월 4일 顧軍門咨會勅諭事理; 영인본 1책(360~372쪽), 萬曆 22년 3월 17일 都司恭報倭情咨. 이 글의 연월일은 사료에 의거하여 음력임을 밝혀둔다.
- 2 1594년 9월 선조가 총병 유정을 전송하면서 명군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철수한다. 『宣祖實錄』卷55, 선조 27년 9월 11일 병술.
- 3 『事大文軌』卷12(영인본 2책, 72~73쪽), 萬曆 23년 1월 10일 查問本國軍兵. 1597년 상반기에도 명은 파병 시 기병과 보병이 주둔할 지역, 조선군 병력 수, 정보 상태, 지원 가능한 군량, 필요한 화기류, 지리지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조선에 요구했다. 『事大文軌』卷19(영인본 2책, 415~421쪽), 萬曆 25년 3월 19일 兵部咨議防倭務要協力固守.
- 4 『事大文軌』卷12(영인본 2책, 112~119쪽), 萬曆 23년 2월 5일 布政咨會封倭善後.

의 이중 전략은 강화협상을 위주로 하되 유사시의 군사적 대비에도 소홀하지 않는 한편 조선의 자체 방어력 증강을 요구하며 확전 방지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 대일 전략 방침은 1596년 9월 협상 결렬까지 약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1595년 상반기 책봉사 파견 이전에 일본군의 완전 철수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중앙 관리를 부산으로 파견해 일본군을 면유하는 등 압박하면서⁵ 동시에 사후 대비와 만약의 사태를 위한 조선의 자체적인 방어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⁶ 심지어 1596년 하반기 협상 결렬 직후에도 명 조정은 일본군의 재침을 완전히 확인하기 전까지 일부 병력만 압록강 부근에 대기시키되 조선 스스로 재침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자국의 동부 해안 방어에 만전을 기했다.⁷ 즉,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이후 정유 재란 발발 직전까지 명 조정은 일본군의 완전 철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책봉과 불의의 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는 확전 불가의 두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폈다.⁸

-
- 5 『事大文軌』 卷12(영인본 2책, 92~93쪽), 萬曆 23년 2월 6일 都司偵探倭賊渡海; 영인본 2책(98~99쪽) 兵部責差陪臣修好日本, 2년 뒤인 1597년 5월에도 명은 조선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가 어떤 의도로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부산에 계속 머물러 있던 일본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조선군의 배치 상황, 병력 수, 전함과 군기 상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事大文軌』 卷20(영인본 3책, 120~123쪽), 萬曆 25년 5월 25일 劉都司責報軍務等事.
 - 6 『事大文軌』 卷12(영인본 2책, 112~119쪽), 萬曆 23년 2월 5일 布政咨會封倭善後.
 - 7 『事大文軌』 卷17(영인본 2책, 292~295쪽), 萬曆 24년 9월 6일 都司暫住兵馬鴨綠西邊. 명 조정의 이러한 안보 의식은 전라도·서해안 공격설 등 조선 조정이 지속적으로 공유한 일본군의 재침 가능성과도 관련이 깊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정일, 2018, 「임진왜란 전반기 조선의 對명 전략」, 『歷史와 實學』 66, 309~318쪽; 김한신, 2022, 「임진전쟁기 조선조정의 對明 일본재침 경보와 양국 공조」, 『歷史學報』 253, 207~208쪽.
 - 8 『事大文軌』 卷17(영인본 2책, 281~284쪽), 萬曆 24년 8월 11일 都司善後事宜; 영인본 2책(296~309쪽), 萬曆 24년 8월 22일 兵部善後事宜. 최소한의 개입을 구상하는 모습은 전쟁 초기부터 참전 여부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게 논의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김영진, 2019, 「임진왜란 초기 명의 파병과 조명관계의 실제」, 『한국

여기서 특기할 점은 자국 안보 우선의 대일 전략을 수립한 명에게 조선의 자체적인 대일 방어력 증강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국 부대가 투입될 경우 최소의 희생으로 승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조선군이 일본군을 최전방에서 막아 버틸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만 하는 사실과도 맞물렸다. 우리는 조선의 군사 대응력 강화를 자국 영토에서 재침을 노리는 외적을 격퇴해야 하는 자주 국방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확전 불가의 원칙에 의거한 명의 대일 전략과의 상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볼 때, 1593년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이후 1596년 책봉사의 도해(渡海)까지의 시기 동안 조선이 명과의 군사 협력 유지, 자체 군사 대응력 강화, 일본과의 막후교섭이라는 세 방면의 대일 전략을⁹ 추구한 점은 조명 군사 협력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1592년 전쟁 발발 이후 1596년 하반기 강화교섭 결렬까지 조선이 어떻게 적의 핵심 육상 전술로서 전격전식 원거리 공략과 진지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일 전수(戰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1593년 4월 중순 이후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내려갔지만 자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의 30개에 달하는 방어 시설을¹⁰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란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자 조선 조정은 적이 진지전으로 전선을 재구축하되

정치외교사논총』 41집 1호, 16~38쪽;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31~42쪽.

9 김경태, 2018,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수집과 재침 대응책」, 『한일관계사연구』 59, 259~264쪽.

10 『事大文軌』 卷8(영인본 2책, 271쪽), 萬曆 22년 2월 20일 回咨, “左道則蔚山郡靑鑛也, 西生浦也, 機張縣也, 豆毛浦也, 梁山郡仇法谷也, 林郎浦也, 下龍堂也, 萊府也, 左水營也, 釜山浦也, 多大浦等鎮也, 右道則金海府也, 竹島也, 德橋也, 山城也, 安骨浦也, 熊川縣也, 薺浦·加德·天城鎮也, 巨濟縣也, 右水營也, 玉浦·栗浦·所珍浦·場門浦·知世浦·助羅浦·永登浦等鎮也…” 여기에 열거된 일본군의 남해안 거점들은 159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쟁 종료 때까지 그대로 존속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일본군의 배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다른 원거리 공략을 통해 재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체 전력의 증강에 신경을 기울였다.¹¹ 필자는 지역 방어와 기동 방어를 결합한 혼합 전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조선군의 대일 육상 방어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되 전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전술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작용한 정보력·관찰력 그리고 인적 자원도 같이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앙의 대신들뿐 아니라 일본군의 전력을 최전방에서 경험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본 최현(崔暉, 1563~1640)·이준(李峻, 1560~1635)·고상안(高尚顔, 1553~1623) 등 지역 인사들이 파악한 적의 원거리 공략이 지닌 문제점과 진지전 전개 양상도 다름으로써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정보와 경험을 끌어내어 들어보고자 한다. 비록 이들의 대일 활동이 여타의 의병장들과 비교해볼 때 팔목할 만한 성과를 성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정에 상소를 올리거나 이원익(李元翼, 1547~1634)·유성룡(柳成龍, 1542~1607)·김성일(金誠一, 1538~1593)·한효순(韓孝純, 1543~1621)·박진(朴晉, 1560~1597) 등 당시 대일 방어의 최전선에 선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적군과 아군의 장단점을 관찰하고 대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3대 전략 중 하나인 군사 대응력 강화를 고찰하는 데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호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군사적 전문성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들의 개별적인 정보는 일정 정도 현실적인 관찰을 담보하고 있었고 주관적인 의견은 적의 장단점과 대응 전술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지적이고 파편적인 정보 속에서도 이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적의 원거리 공략이 가진 한계와 진지전의 전개 양상, 즉 장기전으로의 태세 전환은 조정과 주요 책임자들이 국가 차원의 대일 전술 및 전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력·관찰력과 대응 전술 수립과의 상관성은 조선

11 유성룡의 경우, 지나치게 명군에 의지하는 대신 주도권을 조선이 갖고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룡, 『西厓集』 卷5 筭 陳時務筭 癸巳十二月.

의 대일 전략으로서의 군사 대응력 강화에 대한 심화 연구를 위해 유의미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 방어 전술과 기동 방어 전술의 성공적인 수행에 절실한 병력과 군수의 확충을 위해서 조선 조정과 지역 인사들이 전시 체제에 상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기본 토대로 인식한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당시 지역 방어는 지역사회의 주요 생산자인 농민들의 물적 기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디로 (재)배치하고 어떻게 군량을 조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시 지역 방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된 병력 보충 및 군량 수급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도(道) 내에서의 부대 간 상호 협력 그리고 도(道) 간 군사 협력의 필요성이 대응 전술 수립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실에도 착목해서 대응 전술이 지역사회-도-국가라는 세 단계의 상호 유기적 연결을 기저에 두고 안출되었다는 점에도 비중을 두고자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국가가 방어 전술을 공동의 과제로 전제했을 뿐 아니라 온전한 방어 전술 능력의 구비를 농민과 군사라는 두 인적 자원의 성공적 동원과 구조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사실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조선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심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동원과 대응 전술 수립과의 상관성은 조선의 대일 전략으로서의 군사 대응력 강화에 대한 심화 연구를 위해 유의미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전술과 정보·인적자원의 상관성에 착안한 상기 접근은 조선이 어떻게 대일 육상 방어 전술을 수립했으며 대일 전략의 하나인 군사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는가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 속에서 Ⅱ장에서는 조선이 일본군의 원거리 공략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진지전을 준비하는 또 다른 국면을 포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수 전략을 모색해나가는 계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지역 방어와 기동 방어를 결합한 형태의 혼합 전술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진지전, 도내 부대 간 협력, 도 간 공조 체제 등 수비와 반격을 겸비한 형태의 방어 전술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한다. 지역적으로 볼 때, 전쟁 초기에 가장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았고,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이후 약 5년간 최전방으로서 적과 대치한 경상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조선에서 본 일본군의 원거리 공략과 진지전

1. 원거리 공략에서 진지전으로(1592년 4월 전쟁 발발 ~ 1593년 4월 한성 퇴각)

6월 평양성 함락을 포함해서 개전 이후 약 3개월간 평안도와 함경도까지 진격 한 일본군의 원거리 공략은 전격전의 성공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서해안을 통한 제2전선의 구축 없이 부산부터 평양·함흥까지 500여 킬로미터가 넘는 육상 내륙의 주요 전선에만 의존한 채 인근 지역으로 분산해서 조선 전역의 점령지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난제였다. 전격전 식의 강습(強襲)을 통한 원거리 공략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음은 조선 측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쟁 발발 한 달여가 안 된 시점에서 조정(趙靖, 1555~1636)은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 내륙으로 너무 깊이 들어왔기에 시간을 끌면서 오래 머문다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¹² 김복(金功, 1540~1616) 역시 일본군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병력 분산과 보급 부족의 문제점이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¹³ 적이 관청에 집을 마련하고 직로에 진영을 갖추면서 진퇴를 정하지 않고 모였다 흩어지기가 다반수인데 성읍을 공격할 때는 협력하고 노략질할 때는 병력을 나누는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일본군이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진영을 옮기며 전투 수행하는, 즉 병력 배치의 불안정한 상태를 언급했다. 더불어 우마와 재화를 닦치는 대로 약탈해서 이 지역 인민의 피해가 극에 달했음을 전했는데 거꾸로 일본군이 자국으로부터의 군량 수급이 어렵기에 현지에서 물자를 보충

12 조정, 『黔澗集』, 「辰巳日錄」 壬辰.

13 김복, 『栢巖集』 卷5 狀啓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 ○ 壬辰.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군은 적이 자초한 병력 배치와 군량 수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반격을 시도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일본군의 한성 점령 이후 약 일주일이 채 안 된 5월 초순 김륵은 경성으로 진격한 일본군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경상도에 남은 일본군이 죽령을 넘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 즉 전방과 후방의 적을 차단하는(首尾斷截) 방안을 제시했다.¹⁴ 원거리 공략으로 인한 전선의 지나친 확대를 역이용해서 전면 공격보다는 매복이나 기습으로 후방의 적을 압박하고 교란시키는 전술이 효과적임을 알게 된 것이다. 7월 중순 조선군이 조금씩 적의 정세를 익히면서 조금씩 타격력을 높여가는 모습을 알린 김륵의 장계는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 김륵은 조선군이 결진해서 정면 승부를 걸지는 못하지만 복병과 야습으로 공격력을 높이는 부대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으며 일전을 겨루는 상황이 아니라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기에 급궤(級馘)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설명했다.¹⁵

하반기 경상도 지역 일본군의 동태를 보고한 이덕홍(李德弘, 1541~1596) 역시 영남과 호남에 적이 없는 곳이 많아 한 곳에 주둔하는 병력이 수백 명 정도로 세력이 분산되어 있다고 증언했다.¹⁶ 여기서 이덕홍은 조선군의 경우 의병이 일어나 많은 희생을 거두면서도 교전·후방 교란·야습 등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우고 있고 권응수(權應銖, 1546~1608)의 영천성 탈환과 박진(朴晉, 1560~1597)의 경주성 탈환 등 정규 부대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조선군은 7월 초순 호남에서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그리고 남해안에서 한산도대첩을 통해 일본군을 패퇴시켰을 뿐 아니라 한강 이북에서도 9월 연안성 전투에서 구로다 나가마사의 일본군 주력을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정인홍(鄭仁弘, 1536~

14 김륵, 『栢巖集』 卷5 狀啓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 ○ 壬辰.

15 김륵, 『栢巖集』 卷5 狀啓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 ○ 壬辰.

16 이덕홍, 『良齋集』 卷2 疏 上行在疏并圖. 1592년 8월~9월 경주성 전투 이후의 상황으로 추정된다.

1623)은 이 시기 조선군의 분전으로 인하여 일본군의 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서쪽으로 진격해 호남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시간만 끝다가 명군의 참전으로 남해안으로 철수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¹⁷ 이들의 전언과 관찰의 공통점은 조선의 내지(內地)로 너무 깊숙이 진입함으로써 진격을 스스로 지연시킨 일본군의 원거리 공략을 전술상의 약점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확대된 전선과 전쟁의 장기화는 조선군에게도 불리할 수 있었다. 1592년 하반기부터 일본군이 점령 지역에서 지구전으로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선 수군에 의해 해로를 위협받아 자국으로부터의 군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일본군은 주요 요해지들에 병력을 나누어 배치할 뿐 아니라 병참에서도 약탈과 회유 등 조선 현지에서 군수물자 보급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구전 태세를 갖춰나간다. 김륵은 1592년 하반기 북상한 일본군 부대와 영남에 남은 부대가 조령을 통해 왕래하는 상황을 장계 속에 남겼다.¹⁸ 적들이 조령의 길목인 당교에 둔거하며 조선군의 척후와 기습에 대비할 뿐 아니라 성책과 굴혈을 만들어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상주·문경의 적들과도 서로 성원(聲援)하며 한성을 오가는 적들을 응접했는데 문서를 전달할 때는 깃발과 소리를 갖추고 집단적으로 무장한 호위 진용을 갖췄다. 지형지물로 인해서 아군의 야습이 어렵고 비상시 적이 반드시 서로 연락을 취하며 지원하기에 아군의 기습도 쉽지 않아 적을 앞에 두고도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했다. 김륵의 보고는 당시 일본군이 확대된 전선을 지키고자 전방 부대와 후방 부대 간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후방 부대 내에서도 거점별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며 진지전을 준비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남 뿐 아니라 죽령과 조령 등을 넘어 평양과 한성으로 북상한 일본군 역시 점령 지역과 그 인근에 할거하며 진지전으로 돌입하는 양상을 띠었다. 1592년

17 정인홍, 『來庵集』卷2 疏 辭尙州牧使疏 甲午二月初九日.

18 김륵, 『栢巖集』卷5 狀啓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 ○ 壬辰.

11월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은 양주가 속한 경기 북동 방면의 상황을 보고 하면서 적이 대응에 나누어 둔거하며 요해지를 점거하고 굴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명군이 평양을 수복한다고 해도 온전히 대비하고 공격한 후에야 성공할 것으로 예측했다.¹⁹ 이정암(李廷蘊, 1541~1600) 역시 한성과 평양의 중간지대인 황해도 황주와 강음에 걸쳐 일본군이 요해처를 나누어 점거해 성책과 굴혈을 만드는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²⁰ 여기에 덧붙여 일본군의 분탕으로 인해 12월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조선군은 제대로 걸칠 옷과 의갑이 없고 전구(戰具)도 궁핍한 현장을 중앙에 보고했다.²¹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군이 지구전을 펼치려는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군으로서의 변경이 아닌 자국 내에서 원거리 공략뿐 아니라 진지전에도 능숙한 적과 대치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군이 약탈을 통해 조선 현지에서 일정 정도 자체적인 군수 보급을 이룰 수 있게 되자 조선군은 군량과 물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정암의 증언과 같이 일본군은 군량·의복·재화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군수 물자에 소요되는 필수품들을 일소하고 있었다.²² 투항·납치·포로 등 인력 이탈 역시 병력 보충과 군수 운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했다. 최현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산곡으로 몸을 숨기거나 적에게 기탁함으로써 조선군에게 끼치는 가용 인적 자원의 손실을 지적하며 일본군이 주인이 되고 조선군이 객(客)이 되는 상황(彼反爲主而我反爲客)에 울분을 토로했다.²³

19 이덕형, 『漢陰文稿』 卷8 啓辭 請經略京畿東道江原黃海隣邑啓 壬辰大憲. 이 기록은 『宣祖實錄』에도 등장한다. 『宣祖實錄』 卷32,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1번째.

20 이정암, 『四留齋集』 卷9 書狀 黃海道招討使時 十二月. 1592년 12월.

21 이정암, 『四留齋集』 卷9 書狀 黃海道招討使時 十二月. 1592년 12월.

22 김록은 조선군의 전력 약화를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일본군에 의한 전마 탈취도 지적했다. 김록, 『栢巖集』 卷5 狀啓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 壬辰.

23 최현, 『訥齋集』 卷8 書 與兵使朴晉請先討豐山賊書 壬辰八月在義城. 임진왜란 기간에 이원익·김성일·한효순·박진에게 경상도 지역의 정세를 논하고 실상을 전

이정암도 일본군이 조선에서 하나의 주(州)나 성(城)을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팔도의 요해처를 모두 나누어 차지하고 심지어 기기와 물화도 모두 빼앗아 주객이 뒤바뀌게 되었다며(客反爲主) 개탄했다.²⁴ 최현과 이정암은 각각 인력 확보와 물자 확보라는 물적 토대의 측면에서 주객전도를 지적했는데 이는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지구전을 전개할 경우 인력과 병참에서 조선군이 불리할 것임을 예측한 것이다. 막강한 전력으로 국도를 포함해 전국의 많은 주요 거점을 함락시켰고 더군다나 인력과 군수를 조선에서 해결하며 지구전으로 돌입하려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조선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개전 후 약 4개월이 지난 8월 최현은 일본군이 장기 주둔을 모색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인 격퇴 방안을 제시했다.²⁵ 우선, 일본군이 수개월 적지에 머무르는 것을 힘들어 할 터이니 수세를 취하면서 스스로 지쳐 물러가기를 기다리자는 견해에 반대했다. 일본군은 조선의 상황을 살피고 파악한 지 이미 오래이며 한성과 기타 지역에 웅거면서 약탈을 수시로 자행해 조선 인민의 음식을 먹고 조선 인민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를 방치하고 물러선다면 적은 더욱 할거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장기 주둔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었다. 막강한 일본군의 전력과 뛰어난 전술 구사력은 전장의 현실이었고 이를 체험하고 있는 최현으로서는 일본군이 스스로 퇴각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²⁶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최현은 분산된 일본군을 상대로 조선군이 서로 협력해 타격력을 높임으로써 기회가 생길 때마다 초멸하는 전술을 제시했다.²⁷ 적이 내륙

하는 서신을 보냈다. 사후에 그를 추념하는 글들은 17~18세기 남인계 인사들에 의해 지어졌다. 예를 들면, 행장은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작성했고 묘지명은 권두인(權斗寅, 1643~1719)·정범조(丁範祖, 1723~1801)가 썼으며 신도비명은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지었다.

24 이정암, 『四留齋集』 卷9 牒關 呈分備邊司 招討使時 壬辰十二月.

25 최현, 『訥齋集』 卷8 書 與兵使朴晉請先討豐山賊書 壬辰八月在義城.

26 최현, 『訥齋集』 卷7 書 上右巡察使鶴峯先生書 壬辰九月.

27 최현, 『訥齋集』 卷8 書 與兵使朴晉請先討豐山賊書 壬辰八月在義城. 이정암은 신속한 기동력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진지전을 전개하는 일본군을 한 번의 결전

에서의 길어진 전선과 군수 지원의 미비라는 상황에 빠져 있으므로²⁸ 경상좌도와 경상우도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 적의 좌우를 끊고 집중 타격으로 차례 차례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을 영남 전체에 적용해 후방에 둔 거처는 적을 먼저 고립시켜 전방의 복잡한 적과 차단하고 나서 복잡한 적의 주력을 함께 궤멸시키는 거시적인 격퇴 방안도 구상했다.²⁹ 그는 이 전술이 곧 참전할 명군에게도 유용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평양과 한성을 중심으로 복잡한 적이 명군을 버티지 못하고 후퇴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영남 지역은 조선군에 의해 이미 탈환된 이후일 것이므로 적이 내지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이었다.³⁰

연안성 전투 이후 약 한 달 만에 조선군은 또다시 10월 진주성 전투에서 그리고 이후 12월 독산성 전투와 1593년 행주성 전투에서 대규모 일본군의 공세를 꺾었다. 급기야 명군과의 연합 작전으로 평양성마저 탈환되자 조선군은 1592년 하반기 이후 내륙 전선의 장기화 조짐, 특히 일본군의 진지전 구축 기회를 근절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으로 속전속결에 의한 완전 구축을 제시한다.³¹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은 평양성 패배 이후 한성에 결집한 일본군이 몰래 도망가려고 하고 봄철로 접어들면서 해운을 통한 명군의 군량 수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적을 공격해서 완전히 패퇴시키는 것이 최상임을 강변했다.³²

이 절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약 8개월 동안 지휘관들과 피해 지역의 인사들

으로 격퇴하기란 어렵고 내실을 다지며 점차로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암, 『四留齋集』卷9 書狀 黃海道招討使時 十二月.

28 최현 『訥齋集』卷7 書 上右巡察使鶴峯先生書 壬辰九月.

29 최현 『訥齋集』卷7 書 上右巡察使鶴峯先生書 壬辰九月.

30 최현, 『訥齋集』卷8 書 與兵使朴晉請先討豐山賊書 壬辰八月在義城.

31 윤두수, 『梧陰遺稿』卷3 文 上宋經略書. 평양성 수복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신에서 윤두수는 경략 송응창에게 속전속결의 일본군 격퇴에 대한 아홉 가지 이유를 밝혔다.

32 김우옹, 『東岡集』卷16 書 與袁主事黃.

이 간의 교전 경험을 통해 적이 원거리 공략과 진지전에 모두 능숙할 뿐 아니라 두 전술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자국 땅을 계속 점거하려는 조짐을 알아차리고 적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자국 경내에서 일본군과 대치한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적의 지구전 전개는 향후 또 다른 원거리 공략의 전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한시바빠 막아야만 했다. 지구전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할 때, 일본군의 침입과 약탈로 인한 인력과 물자의 부족은 차치하고 명군 참전으로 인한 군수 지원 때문이라도 불리한 전황을 계속 맞닥뜨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이 1593년 1월 초 명군의 대규모 참전 이전부터 일본군에 의한 원거리 공략과 지구전의 병용 가능성을 간파하면서 대일 방어의 기본 방침을 마련해나간 사실을 정보력의 관점에서 새롭게 짚어볼 수 있다. 또한 1593년 상반기 명과 일본이 강화협상을 재개한 이래로 조선은 적이 결코 쉽게 자국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완전 격멸이 종전(終戰)의 상책이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그 근거가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관찰과 분석을 통해 진행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와도 상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임진왜란의 전개 양상을 대일 전술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2. 새로운 원거리 공략의 우려(1593년 4월 남해안 철수 ~ 1596년 9월 강화협상 결렬)

1593년 5월 선조는 남해안으로 철수 중인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보고를 접하고서 지구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언급했고³³ 신잡(申礫, 1541~1609)은 일본군이 앉아서 적을 골탕 먹이자는 수법으로 분명 명군이 떠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선주의 근심에 동감했다.³⁴ 현장에서도 비슷한 건

33 『宣祖實錄』卷38, 선조 26년 5월 16일 기사 4번째.

34 『宣祖實錄』卷39, 선조 26년 6월 21일 갑진 7번째.

해들이 제기되었다. 정인홍은 명군이 참전했음에도 일본군이 남쪽에서 버티려는 이유로 시간이 흐를수록 멀리서 들어온 명군이 버티기는 힘들고 군량 지원을 맡은 조선 역시 경제적으로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전선의 현실을 지적했다.³⁵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지구전을 전개할 경우 조선은 적의 노략 이외에도 명군 지원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인 부담을 더함으로써 대일 전력이 더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위험성은 1592년 하반기 아직 오지도 않은 명군의 군량 마련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 인력도 더 궁핍해져 조선군이 큰 지장을 입고 있다고 토로한 이정암에 의해서 예견된 바이기도 했다.³⁶

그런데 육상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김록은 적을 끌어내 싸워 이기려면 화포를 동원하면서 궁시를 쏘거나 기병이 활을 쏘면서 돌격하는 전법(馳射突擊)으로 적의 전열을 붕괴시키는 대책을 제시했다.³⁷ 그러나 이런 전법은 일본군이 진지나 거점 밖으로 나오면 활용할 수 있지만 방어전을 고수할 경우에는 요새화된 적의 진지들을 각개격파로 탈환하거나 철저한 봉쇄로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일본군을 끌어낼 모수가 없었다. 유성룡은 남해안 철수 이전 일본군이 구축한 평양과 한성의 방어 구조를 복기하면서 적이 다방면으로 유사시에 대비함이 철저하다고 평가하며 설진(設陣)에 뛰어나고 참호전에 강한 일본군의 장점을 선조에게 전달했다.³⁸ 보통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의 병력이 하나의 진지를 구축했는데 진지들은 중간에 터놓은 하나의 길 양편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상호 연결된, 마치 개미의 행렬과도 같은 하나의 선으로 늘어서 있었다. 이러한 대형은 날로 길어지는 전선 속에서 이동과 더불어 병참·통신망·정보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

35 정인홍, 『來庵集』 卷2 封事 辭義將封事 癸巳九月二十日.

36 이정암, 『四留齋集』 卷9 書狀 黃海道招討使時 十二月.

37 김록, 『栢巖集』 卷5 狀啓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 ○癸巳.

38 유성룡, 『西厓集』 卷5 筭 陳時務筭 癸巳十二月.

의 생명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유성룡은 단순히 조직과 배치의 측면만이 아니라 형세를 온전히 파악해 점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緣賊倭最善占得形勢) 적의 진지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유성룡은 일본군이 각 진지마다 대단히 공고한 방어 구조를 갖추고 있어 격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다.³⁹ 진지를 설치할 때마나 반드시 좌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높은 산의 꼭대기를 택했고 견고한 목책을 세움과 더불어 전체 주변을 참호로 둘러쌌다. 목책에는 반드시 진흙을 발라 시석(矢石)을 일차적으로 막고 동시에 많은 총구를 내어 적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유성룡은 황주부터 중화를 거쳐 평양의 모란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본군의 진지가 이런 방어물의 형태였다고 증언했다. 한성의 경우에는 성의 주위가 대단히 넓음을 알고 여기 보다는 남산의 여러 기슭에 연락망을 배치하고 토굴을 만들되 굽이마다 반드시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병력이 소수일 경우에는 긴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진지를 만들었다고 기술했다.

한편, 명군의 잔여 병력이 완전히 철수하는 1594년 하반기부터 1596년 하반기 강화협상의 결렬까지 약 2년 동안 조선은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를 지구전의 전개로 간주하며 또 다른 원거리 공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조선 땅에 대한 일본군의 장기 점거 계획이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로 인해서 오히려 현실화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전방의 첩보들이 전하는 전라도 공격을 포함한 일본군의 재침 가능성은 이러한 예측의 신빙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 1594년 1월 김응서(金應瑞, 1564~1624)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이 약 500여 척의 선박에 증원군을 싣고 와 동래와 부산 등에 투입했고 해안가에 투항한 조선인들을 모아 둔락(屯落)을 조성하되 책임자를 뽑아 농사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일본군도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실태를 알렸다.⁴⁰

상황이 이와 같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세 가지

39 유성룡, 『西厓集』 卷5 筭 陳時務筭 癸巳十二月.

40 『宣祖實錄』 卷47, 선조 27년 1월 26일 을사 9번째.

방식의 대일 방어를 예상했다. 첫째는 정예 병력과 충분한 군수 지원을 통해서 곧바로 적을 격퇴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적 열세를 감안해 각각의 담당 방어 지역을 지켜 적이 스스로 퇴각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수적 열세에 처하고 군량도 부족할 경우 병력을 규합해 산성 등 적이 공격하기 힘든 곳에서 설험(設險)하면서 기습·매복·청야 등을 통해 적을 고립시키고 군수 보급을 차단하는 것이었다.⁴¹ 첫 번째는 적극적 방식의 방어였고 나머지 두 방식은 전쟁으로 인해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조선군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전제하에 수세적 방어를 기조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이항복은 세 번째 방법으로 방어선을 재구축해 교란전과 소모전을 전개하며 적을 격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유성룡 역시 일본군이 전라도를 목표로 재침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설하면서 이항복과 유사한 방식으로 육상에서 곡식을 산성으로 옮겨 청야(淸野) 전술을 전개하며 적의 규모에 따라 험준한 지역에 방어하거나 매복과 기습을 통해 적의 공격 라인을 절단할 것을 주장했다.⁴²

김우옹도 일본군의 재침은 원거리 공략을 의미하기에 진지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성 등 주요 지역을 잇는 대로의 요해처나 국경 지대의 요충지에서는 철저한 파수가 필요했다. 동시에 그 외 지역의 경우, 중앙에서 파견된 장관 및 그 휘하는 산성으로 들어가고 지방의 각 지역 담당 장관 및 그 휘하는 산채(山寨)로 들어가거나 녹각 형태의 목책을 만들어 일본군의 재침을 대비해야 했다.⁴³ 최현 역시 이항복·유성룡·김우옹과 마찬가지로 조선군이 부족한 병력으로 목책에 의존해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언제든지 일본군이 다시 원거리로 공략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선군은 또 다시 일거에 와해될 것이므로 차라리 산성 등 험준한 방어지에서의 수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⁴⁴ 아군이 지역 방어를 공고히 한다면 적에게 더

41 이항복, 『白沙集』卷2 紱 全羅道山城圖後紱 甲午四月.

42 유성룡, 『西厓集』卷9 書 與劉總兵縉書.

43 김우옹, 『東岡集』卷9 筭 陳時務十六條筭 丙申二月吏曹參判時.

많은 노력과 힘이 소모되기 때문이었다. 몇 번의 결전으로 적을 격퇴할 수 없는 전장의 현실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 방어의 필요성을 높인 목소리였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이항복·유성룡·김우옹·최현 모두 육상 방어에서 산성을 위주로 하는 실험과 적의 현지 군수 조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청야를 전개함으로써 원거리로 공략하는 적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한 사실이다. 일종의 지역 방어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청야는 군수 보급원에 대한 차단책으로서 적이 일정 지역에 진입해 험준한 아군의 방어지를 공략하더라도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596년 강화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진 11월 이원익이 선조에게 누차 청야를 강조하면서 일본군은 해로를 통해 군량을 수급하는데 조선군과 명군은 남해안까지 원거리 배치, 군량 수송, 수송에 동원되는 병사들의 고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진달했다.⁴⁵ 적의 원거리 공략을 저지하는 물적 토대가 청야일 뿐만 아니라 조명 연합군에게도 장거리 이동 및 군량 보급

44 최현, 『初齋集』 卷8 書 修軍政之實有三. 審形勢以制要衝. 고상안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전 왕조의 외적과는 달리 지금의 적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자 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하고자 하려는(以戰必勝攻必取爲心) 특성이 있었다(고상안, 『秦村集』 卷2 書 上西厓先生 附八策 丁酉). 고상안은 1592년 상주(尙州)의 속현인 산양(山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이여빈, 『炊沙集』 卷3 雜著 龍蛇錄). 이순신은 1594년 3월 말에 고상안이 방문해서 12일 동안 머물다 복귀했다고 기록했다(이순신, 『李忠武公全書』 卷6 「亂中日記」 二 甲午 三月, 四月). 이준 역시 장기전 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산성과 같은 방어 전술이 대일 전수의 급선무임을 조정에 진달했다(이준, 『蒼石集』 卷4 疏劄 論守城及修德之要疏). 그는 전쟁 초반의 패인으로 산성을 버리고 내지에서 적을 맞아 싸우려고 한 것을 지적했다. 당시 조선군은 사방이 트인 평지에서 적을 맞이하여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 대열 가운데의 한 지점이 열리면 거세게 돌파하는 전법을 구사했는데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산성을 오직 위기가 닥칠 때 들어가 지키는 곳으로 간주했고 그럴 경우에서조차 죽기까지 싸워 지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준은 정경세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이후 정경세와 함께 유성룡의 학풍을 계승하며 인조 연간 남인의 대표 주자로 활약했다.

45 『宣祖實錄』 卷82, 선조 29년 11월 17일 기유 2번째.

이 일본군과의 승부에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공급선의 유지 내지는 차단이 전세의 향방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이항복과 유성룡은 수세적 방어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습·매복을 통해 반격과 차단을 반복하며 적을 격퇴시켜야 한다는 데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김우옹도 단순히 각각의 방어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형세에 따라 서로 연락을 취하며 병력을 합쳐 구원하고 적의 후미를 견제하는 상호 협력의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의 재침 시 내륙으로의 진격을 봉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⁴⁶ 반격을 위한 기동 방어는 최현의 방어책에서도 필수였는데 그는 도내(道內) 각각 3,000명의 정예 병력으로 구성된 타격대를 두 군데 배치해서 적의 재침에 대응할 것을 제시했다.⁴⁷ 산성 등 특정 지역의 요새화를 추구하는 설함과 군량 공급원을 원천봉쇄하는 청야를 지역 방어라고 한다면 내지 및 후방에서 적의 전력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반격전을 기동 방어라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항복·유성룡·최현·김우옹은 지역 방어와 기동 방어를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모색했다. 명군의 완전 철수가 진행된 1594년부터 조선이 설함·청야의 수세적 방어와 더불어 매복·기습과 같은 적극적 방어를 동시에 전개하는 방향으로 대일 전력을 증강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은 초반의 열세 속에서 일본군 전술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전선의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나 피해 지역의 인사들을 통해 다방면으로 접했다. 습득된 정보에는 적의 원거리 공략이 가진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전으로의 전환 조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정보에 함께 담긴 관찰과 향후 대처는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대일 전술을 구체화·다각화시키고 전력을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일종의 정보원(情報源)으로 기능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조선이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46 김우옹, 『東岡集』 卷9 筭 陳時務十六條筭 丙申二月吏曹參判時.

47 김우옹, 『東岡集』 卷9 筭 陳時務十六條筭 丙申二月吏曹參判時. 보다 상세한 내용은 Ⅲ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 전략적 후퇴일 뿐 진지전으로 전선을 재편성해 새로운 원거리 공략을 준비하는, 즉 재침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전수 방략을 통한 완전 진멸을 역설한 근거도 바로 개전 이래로 확보한 정보력과 이에 수반된 관찰과 분석이 조선군 내부에서 공유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Ⅲ장에서는 1594년 하반기 명군의 완전 철수 이후 강화협상 결렬까지 조선이 원거리 공략과 지구전의 병용에 뛰어난 일본군에 대해서 산성이나 산보 등 험준한 지세의 방어물에서 수비하고 자국 내지에서 적의 군량 보급원을 사전에 봉쇄하는 초토화 작전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매복·기습 작전도 수행함으로써 적을 고립시키고 전력을 분산시키며 적시에 집중 타격하는 전술, 즉 수비와 반격이 결합된 방어 전술을 모색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한다. 설함·청야를 위주로 하는 지역 방어와 기각·요해를 위주로 하는 기동 방어를 중심으로 수비와 반격이 혼합된 대일 방어력 증강에 대한 논의를 조선의 대일 전술이 갖는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는 것이다. 대응 전술에 대한 논의가 병력 보충과 군수 보급의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동원 문제, 특히 인적 자원의 활용과도 맞물려 진행되었음도 언급하고자 한다.

Ⅲ. 조선의 대응책 논의

1. 지역 방어로서의 설함과 청야

기존 연구에서는 1594년 명군 철수 이후 조선에서 산성의 수축·개수와 청야 전술이 함께 논의된 점에 주목했다.⁴⁸ 조선군의 자체 군사력 신장이라는 문제의식

48 이장희, 2007, 『개정·증보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310쪽. 산성을 포함해서 험준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방어 시설의 설치 및 통합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조

속에서 산성전과 청야전을 조선군 방어의 주요 부분으로 파악한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⁴⁹ 이 장에서는 1592년 개진 초부터 조선이 일본군의 원거리 공략과 지구전이 가진 장단점을 관찰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했으며 바로 이러한 경험과 분석을 근거로 1593년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이래로 1596년 강화협상 결렬까지 3여 년간 또 다른 국면의 원거리 공략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비와 반격이 결합된 지상 방어전을 구상한 사실을 대일 전략 중 하나인 군사적 대응력 강화의 일단으로서 재해석해보도록 한다.

1593년 일본군의 한성 퇴각 직전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유성룡은 한성에 모인 일본군이 용산창에 쌓인 곡식에 의지하면서 성을 쌓아 견고히 방어하는 반면에 조선군의 경우 식량과 병력이 모두 부족해 지리멸렬할 상태에 빠졌음을 지적했다.⁵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유성룡은 조선군이 수성에 뛰어나고 야전에 뒤떨어지기에 대일 방어에서 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군의 한성 퇴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남해안으로 철수한 이후 약 2~3개월이 지났지만 일본군이 자국으로 물러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⁵¹ 전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오히려 일본군이 전력을 보강하고 명군이 철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경상도를 병탄하고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유성룡의 생각은 억측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어송의 주력 부대가 철수하고 한 달여가 지난 11월 초순 경주 인

정기의 논문이 참조된다. 조정기, 1990, 「西厓 柳成龍의 國政政策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2~141쪽.

49 학계에서는 육상에서의 요해지 지역 방어를 대표하는 독산성의 구조와 수축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화기 사용의 극대화를 위해 설치한 보루 등 당시 독산성 관리를 통한 조선군의 전술과 병종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는 심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심승구, 2021, 「임진왜란 중 독산성의 축성과 성곽사적 의미」, 『백산학보』 119; 김호준, 2021, 『오산 독산성의 조선시대 축성사적 검토-경기도지역 산성과 비교하여-』, 『백산학보』 119.

50 유성룡, 西厓集 卷6 書狀 天兵退駐平壤後條列軍中事宜狀.

51 유성룡, 西厓集 卷9 書 答吳遊擊惟忠書 癸巳八月.

근의 안강현에서 일본군의 습격이 있자 조정에서는 설함의 필요성이 긴급 현안으로 제기된다. 유성룡은 설함과 청야를 대일 방어에의 요체로 간주하면서 설함의 경우 바둑에서 바둑알 두듯이 지킬 수 있는 곳을 적절히 선택해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⁵² 이러한 논의가 있던 지 한 달 반이 지난 뒤 비변사 역시 산성 방어를 기본으로 하는 설함과 청야의 시행을 주문했다.⁵³ 설함하되 적이 올라다 보고 공격할 수 있는 높이로까지 돌을 쌓도록 하고 유성룡의 제안한 것과 같이 군사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함께 들어가 적세가 멀어지면 나와서 경작하고 적세가 급하면 들어가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듬해인 1594년 2월 명 조정은 현재 주둔하는 유정 휘하 5,000여 병력 외에는 조선에 추가 파병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⁵⁴ 이 시기 이항복은 평지성이 아닌 산성 전술이 가장 현실적인 대일 방어책이라고 주장했는데⁵⁵ 근본적인 이유로 조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들었다. 군사는 쇠약하고 군량은 떨어졌으며 인심도 잡기 어려운 상태에서 설함을 통해 지구전을 펼치고 여기에 청야로 적의 노략질을 막아 군량 보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당시 조선이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술(要術)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성벽이나 지면에 어떠한 시설물을 증설하거나 수선할 필요가 없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운제나 비루 등 다양한 공성기를 동원하고 해자나 인공산 등을 설치해야 했기에 설함이 최상책이었다.⁵⁶ 유성룡은 일 년 전 조선군이 거둔 행주대첩을

52 『宣祖實錄』卷45, 선조 26년 윤11월 2일 임오 3번째.

53 『宣祖實錄』卷46, 선조 26년 12월 21일 경오 3번째.

54 『事大文軌』卷8(영인본 1책, 360~372쪽), 萬曆 22년 3월 17일 都司恭報倭情咨.

55 이항복, 『白沙集』卷2 敍 全羅道山城圖後敍 甲午四月.

56 유성룡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다. 조선의 전통적인 육상 방어 중 하나가 산성이고 이전의 외적들은 궁시만 사용했기에 산성전을 전개할 때 주도권과 높이에서 방어자가 유리할 상황이라 적을 격퇴하기가 용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군의 경우 사정거리가 조선의 궁시보다 훨씬 먼 조총을 사용하고 평지성의 경우 토루나 비루를 설치해 적을 내려다보면서 사격하기에 성안의 방어자가 움직이기 힘들어 함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유성룡, 『西厓集』卷14 雜著 戰守機宜十條 并序

설험의 성공과 연관 지어 설명했는데 행주성의 상부에 돌로 성을 만들고 그 하단에는 가시나무 장책을 설치하고 돌수레를 사용해 크게 효과를 보았음을 상기 하며 설험 시 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⁵⁷ 이항복과 유성룡 모두 산성에서의 방어가 당시 열악한 조선군의 전력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육상 방어 전술로 평가한 것이다.

조선은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과 가토 기요마사의 2차 회담이 열린 1594년 7월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설험과 청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조는 유성룡이 이전에 설험과 청야에 대해 진언한 것을 상기하면서⁵⁸ 굳게 방어하며 청야를 전개하고(堅壁淸野) 앞뒤에서 적을 저지하도록 군사를 배치하자는(布置兵陣前後, 使賊不得前進) 의견에 힘을 실어 주며 비록 폐해가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선결과제로 삼았다. 유정의 잔여 명군이 완전 철수하기 얼마 전인 8월에 일본군이 조선에 화친의 서신을 보내자⁵⁹ 유성룡은 총병 유정에게 재침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내지 방어를 위해 의령의 정암진 등 전라도로 가는 관문인 낙동강 이서 지역의 주요 지점들에서 설험하고 곡식을 모아 산성에 축적한 뒤 적이 대규모로 공격하면 청야 전술로 방어하고 수시로 유격전을 통해 전방과 후방을 분리시키는 대책도 공유했다.⁶⁰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이후 3년째로 접어드는 1596년에도 설험과 청야는 조선군 방어의 핵심이자 기본 전제였다. 최현은 당시 최전방에서 일본군과 대치 중인 조선군이 버드나무로 엮은 울타리 정도의 방어시설에서 버티고 있는 저열한 상태를 고려할 때 적의 원거리 공략을 막기에 태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⁶¹ 그렇지만 재정적·물질적·군사적으로 피폐한 상황하에서 병력 분산의 위험성

○ 甲午冬.

57 유성룡, 『西厓集』 卷7 啓辭 條列戰守機宜啓 六月.

58 『宣祖實錄』 卷53, 선조 27년 7월 17일 계사 3번째.

59 『宣祖實錄』 卷54, 선조 27년 8월 27일 임신 3번째.

60 유성룡, 『西厓集』 卷9 書 與劉總兵縝書.

61 최현, 『訶齋集』 卷8 書 修軍政之實有三.

을 고려할 때 산성을 마음대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도 없었기에 사수할 수 있는 견고함을 갖춘 지점에 실험하여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적이 내지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도록 해야 했다. 이런 구도에서 실험지 간 협력을 통해 청야를 전개하고 후방의 보급로를 차단해서(野無所擄掠, 後無所繼續) 적을 진퇴양난에 빠트리는, 즉 실험과 청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 방어를 육상 전력 증강의 토대로 간주했다.⁶²

1596년 하반기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은 이항복·유성룡과 마찬가지로 적의 재침 시 양도(糧道)를 끊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청야와 실험(據保山城)으로 맞설 것을 건의했다.⁶³ 비변사도 육상에서 실험으로 적의 예봉을 꺾으면서 청야로 양도(糧道)를 차단하고 부산 이남의 해상에서 적세(賊勢)를 끊어 후방을 교란시켜 함부로 내지로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실험과 청야를 일선 지휘관들에게 유시할 것을 주문했다.⁶⁴ 또 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 1537~1598)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약 두 달 뒤인 11월 도원수 권율(權慄, 1537~1599)이 제시한 전술도 실험·청야·해상 봉쇄의 유기적 연계라는 이호민과 비변사의 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⁶⁵ 그는 남해안의 일본군이 주둔하는 모든 거점에 대응할 수 있는 실험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서 적의 군량 보급 차단과 관련해서는 당해년 작황이 부진하기에 반드시 자국에서의 군량 보급이 이어져야만 재침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해상에서는 견제·봉쇄 전술을 전개하고 내륙으로 진격할 때는 청야 전술을 전개한다

62 실험과 청야를 기본으로 하는 對일 방어의 측면에서 볼 때 천연 요새와 같은 조령의 험준함을 포기하고 배수의 진으로 적을 맞은 신립의 전술은 창과 방패를 거꾸로 쥐고 적에게 창끝을 건네준 것밖에 되지 못했다. 최현, 『訥齋集』 卷8 書 修軍政之實有三, “申位不能料敵審勢, 而舍此天險, 背水結陣, 是倒持戈矛 以鐔授寇也. 寧有不敗之理乎.”

63 이호민, 『五峯集』 卷9 筭 憲府筭子 丙申大司憲時. 이호민이 대사헌으로 제수된 때는 1596년 10월 초순이다. 『宣祖實錄』 권81, 선조 29년 10월 9일 임신 1번째.

64 『宣祖實錄』 권82,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7번째.

65 『宣祖實錄』 권82, 선조 29년 11월 16일 무신 5번째.

면 적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처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권율은 산성 수축 등 설함의 어려움을 논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석성을 쌓을 필요가 없이 녹각처럼 엮어서 만든 목책을 배치하고 그 위에 잡석을 포개어 쌓은 뒤 돌마루로 버티도록 하면 비록 다년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충분하다며 행주성 전투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

협상 결렬 이후인 1596년 하반기부터 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정에서는 설함과 청야의 시행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96년 11월 선조는 적의 양도 차단으로 청야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으나 신잡은 실행 시에는 관가에서 상명하달 방식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평시에 농사를 짓다가 유사시에 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⁶ 비변사에서도 일순간에 청야를 결정해서 한꺼번에 모든 백성을 산성으로 가게 하기는 어려우니 산성과 가까운 자들 중 원하는 자들부터 들어가도록 하고 먼 자들은 당장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움속에 파묻는 등 적에 의해 식량이 넘여가지 않도록 대안을 먼저 강구하는 방안을 주문했다.⁶⁷ 1597년 1월에도 비변사에서는 산성 주변의 경우 백성들이 가재도구를 갖고 들어왔다가 적의 침입이 없으면 내려가 농사를 할 수 있어 장기간 머무를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경우는 곡식을 멀리 운반하기 힘들고 적의 침입이 없더라도 산 속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선조에게 전달했다.⁶⁸ 봄철이 다가 오면서 파종 등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이동은 녹록지 않은 문제이고 생계 자체와도 상관된 문제라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면서 완급 조절로 합당하게 조치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⁶⁹

66 『宣祖實錄』 권82, 선조 29년 11월 1일 계사 2번째.

67 『宣祖實錄』 권82, 선조 29년 11월 5일 정유 5번째.

68 『宣祖實錄』 권84, 선조 30년 1월 9일 경자 2번째.

69 『宣祖修正實錄』에서는 1596년 현재 남부 지방에서 청야가 실행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宣祖修正實錄』 권30, 선조 29년 11월 1일 계사 1번째). 1597년 1월에도 청야전 수행과 관련해서 일본군이 바로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이고 백성들의

전운이 더 고조된 1597년 초반 최현은 설함과 청야의 병행에서 민호(民戶)를 군제 아래 하부 조직으로 구성하여 병농(兵農)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산성에서의 설함을 위해서 일단 인근의 모든 민·관·군 인력이 들어간 뒤 철저한 관리 속에 10명을 통(統)으로 하고 10통을 초(哨)로 하는 준군사 조직을 갖추는 방안이 그것이다.⁷⁰ 이 제도에 의하면 산성으로 차출된 농가는 30~40리 내의 거리에서 함께 모여 경작하되 흩어지지 않도록 한 뒤 적이 가까이 오면 청야전을 전개해서 모두 산성으로 들어가고 적이 없으면 추수기에 10%만 군량 명목으로 납세하는 것이었다. 산성이 없이 청야를 하는 경우도 산성의 사례에 의거해 여러 읍의 백성들을 산으로 들어가도록 한 뒤 설책(設柵)하고 예외 없이 함께 모여 진을 형성하되 10명을 통으로 조직해 산골짜기에서 경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각 읍에서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모병장으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운량장으로 뽑도록 했다. 모병장은 민정의 수를 점검·감독할 뿐 아니라 통 단위로 군기를 갖추고 10일에 한 번은 작은 규모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대규모로 열병을 거행하여 국지적인 전투에서 적을 격퇴시키는 임무도 부여받도록 했다. 운량장의 경우는 빈부에 따라 군량을 거두어 산골짜기에 보관했다가 적을 초멸할 때 군량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군량 공급을 거부하면 경중에 따라 운량장이 임의로 조치하거나 상부에 보고해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취지는 백성들이 집으로 오가며 물건을 운반하는 불편을 없애는 것이었고 산성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시에 본업과 휴식을 고르게 하면서도 상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정유재란 발발 약 두 달 전 권율은 첩보를 조정에 전하면서 일본군 장수들이 조선의 설함과 청야를 걱정한다는 정보를 전달했다.⁷¹ 수로와 근접한 지역에 위

반발과 어려움이 잇따라 실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宣祖實錄』 권84, 선조 30년 1월 16일 정미 1번째.

70 최현, 『訥齋集』 卷10 雜著 與書金道源論擇定山城將設柵便民之策 丁酉 時金公涌爲體府從事官.

71 『宣祖實錄』 卷88, 선조 30년 5월 18일 무신 5번째.

치한 산성은 군수 수송이 용이하고 지속성이 있어 장기전으로라도 점령할 수 있지만 내륙의 궁벽한 산성은 공격에 한계가 따르고 노략질을 할 수 없어 군량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파가 쉽지 않음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약 한 달 뒤인 1597년 6월 김응서가 이중첩자로 알려진 요시라(要時羅, ?~1599)의 정보를 토대로 일본의 재침이 확실시되는 전황을 조정에 보고했는데⁷² 여기에 담긴 야나가와 시게노부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의 언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³ 히데요시를 만난 시게노부는 조선군의 육상 전력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수군이 있기에 재침이 쉽지 않다고 진달했는데 히데요시는 조선의 강화를 받아 내기 위해서 하루가 안 되는 거리뿐 아니라 오륙 일의 권역에 있는 곳까지 수시로 침략하도록 하고 산성이 있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파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을 명했다고 한다. 유키나가 역시 조선이 산성전과 청야를 제대로 전개하면 일본군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히데요시의 명을 따라 끝까지 공격해서 함락시킬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물론 요시라의 반간계일 수 있음은 김응서도 경계했지만 일본군이 조선군의 방어 전술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권율이 올린 치계 속에도 조선의 산성을 일년이 걸리더라도 격파하라는 히데요시의 명령서 내용이 있어 일본군 지휘관들이 공성전을 생각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⁷⁴ 조선과 일본 양측 모두 산성·설함의 공수(攻守)와 청야를 육상전의 승패를 가르는 요건으로 인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72 『宣祖實錄』卷89, 선조 30년 6월 14일 계유 6번째.

73 이 장은 일본군의 재침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 어떠한가를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군이 조선의 방어 태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가를 조선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선 측 기록을 활용한다. 따라서 일본 측 사료에 나타난 일본의 對조선 정보 수집과 대응을 함께 비교하면서 양국이 서로의 전력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비교 연구는 국제전으로서의 임진왜란의 성격을 상호작용(성)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 반드시 깊고 가야 할 사안이다.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74 『宣祖實錄』卷89, 선조 30년 6월 14일 계유 7번째.

정유재란 발발 직후 남원성이 함몰된 지 수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성룡은 남원성과 같은 평지성의 단점을 재차 언급했다.⁷⁵ 그는 개전 직전인 1591년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해 영남과 호남에 성지를 개수하거나 증축했는데 모두 평지성이었기에 전쟁이 발발한 후 사정거리가 먼 조총을 난사해 성안에서 대응할 수 없도록 하면서 목석과 초속(草束)으로 해자를 메워 성곽으로 진입하는 일본군의 공성 기술에 완전히 압도되었음을 지적했다. 반면에 산성의 험준한 지세에서는 조총의 사격 고도가 평지성보다 훨씬 높기에 난사에 한계가 있고 운제와 같은 공성구를 동원하기 어려워 일본군이 아무리 돌격에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산성까지 올라오면 이미 지쳐 조선군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에서 접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군이 행주성의 승리뿐 아니라 그 직후 주변에 마주 보는 다른 봉우리들이 없고 홀로 돌출해 튀어나온 토산에 위치한 파주산성으로 옮겨 수비했기에 일본군의 추가 공격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쌓은 산성에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적의 강약 그리고 전세의 변화에 따라 아군에게 유리한 곳을 선별하여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정유재란 발발 직전까지 조선군은 산성과 청야를 육상 전략 증강의 핵심으로 전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최현과 유성룡의 주장처럼 효율적인 설침과 청야 방어는 단순히 병력과 병기의 재배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한 초토 작전의 전개를 의미했기에 일반 백성들의 생활 기반과 직결된 사안이었다. 모든 산성이 아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성들을 선택하더라도 증개축하는 데에는 대규모 인력 동원도 필요했다. 이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부역 및 부세 증가와도 직결될 수 있었다. 또한 초토 작전은 적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물적·생활 기반의 손실과 직결되기에 경솔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 이미 정유재란 발발 이전부터 이항복과 유성룡은 수성(守成)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임에도 백성들이 진주성 함

75 유성룡, 『西厓集』卷15 雜著 山城說 丁酉冬.

락 이후 동참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는데⁷⁶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항복은 산성이 최선책이지만 강제로 백성들을 산성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청야를 포함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언하면, 설함과 청야는 군사적인 수행 능력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제의 구축과도 따로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요약하자면, 남해안 철수 이후 일본군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해상을 통해 군수를 안정화시킨다면 조선군으로서는 방어해야 할 지역이 너무 많아 병력이 분산되어 일본군의 재침을 막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⁷⁷ 설함과 청야는 다시 몰려올 일본군의 돌파력과 지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었다.⁷⁸ 설함은 다양한 진법을 구사하며 야전(野戰)에 뛰어난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산성 등 자연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형태의 방어 전술이었다. 청야는 초토 작전의 일환으로서 원거리 공략으로 인해 전선이 길어질 경우 자국 내에서의 적의 자체 군수 조달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

76 이항복, 『白沙集』 卷2 敍 全羅道山城圖後敍 甲午四月; 유성룡, 『西厓集』 卷14 雜著 戰守機宜十條 并序 甲午冬.

77 설함·청야 전술의 성공과 관련하여 해상에서의 봉쇄 및 차단도 증시되었다. 유성룡은 설함·청야와 더불어 수군이 거제 해역을 봉쇄하고 부산 앞바다로 진격하여 적의 해상 보급로를 요격함으로써 지상의 적이 배후 차단을 염려하게 만들어 기세를 꺾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유성룡, 『西厓集』 卷9 書 與劉總兵縱書). 이호민 역시 설함과 청야를 전개하면서 한산도의 수군을 동원해 해로를 차단시킬 것을 선조에게 건의했다. 이호민, 『五峯集』 卷9 筭 憲府筭子 丙申大司憲時.

78 1597년 상반기까지 조선 조정이 명 조정에 알린 하삼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지역에서 신축되거나 개축·증축된 산성을 지역별로 보면 총 15개로 다음과 같다.

도(道)	지역 및 산성 이름
충청도	공주 공주산성 / 보은 삼년산성 / 충주 덕주산성 / 연풍 조령산성 / 청주 상당산성
전라도	전주 만경산성 / 남원 교룡산성
경상도	선산 금오산성 / 인동 천생산성 / 대구 달성산성 / 성주 용기산성 / 삼가 악전산성 / 영천 공산성 / 경주 부산성 / 창녕 화왕산성

『事大文軌』 卷19(영인본 2책, 421~432쪽), 萬曆 25년 4월 25일 回咨.

어 전술이었다.⁷⁹ 바로 이 지점에서 적의 돌파력과 지구력을 저지하기 위한 육상 방어 전술로서 설험과 청야의 유기적 결합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설험과 청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동원이 함께 논의됐다.

그런데 유성룡이 역설한 바와 같이 나가서 싸우는 일과 물러서 지키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개념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고 굳이 선후를 논한다면 물러서 지키는 일이 우선이었다.⁸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육상전의 경우 설험과 청야를 통한 지역 방어가 기본 필수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적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 간 협력 속에서 수시로 적을 타격하고 압박하는 기동 방어를 통해 설험과 청야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술도 필요했다. 기각과 요해가 육상 전력 강화의 또 다른 핵심 요소로 부상한 까닭을 이러한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기동 방어로서의 기각(擣角)과 요해(要害)

평양까지 올라간 일본군이 이후 선적(線的) 점령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병력과 전력이 분산되자 조선군은 견제·압박·매복·습격 등을 통해 국지적으로 적을 교란시키며 반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최현은 1592년 9월 김성일(金誠一)에게 보낸 서신에서 경상도 전체로 볼 때 아군과 적군의 분포가 2:1 비율이라 적군이 전력과 병력에 허장성세를 부리는 중이니 우도와 좌도의 부대들이 긴밀한 상호

79 정유재란 시 남원 함락 이후 공주로 진격한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 1579~1650)와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 그리고 직산에서 패배한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1568~1623)의 부대가 충청도 이북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다시 남해안으로 철군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의 청야 전술 때문이었다. 김한신, 2017, 「임진왜란기 유성룡의 경기 방어구상과 군비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82, 137~138쪽.

80 유성룡, 『西厓集』卷15 雜著 山城說 丁酉冬.

협력 체계를 갖춰 단계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¹ 첫째, 죽령과 조령의 험준한 지형에 매복해서 복상한 적의 왕래를 차단한 후 좌도의 인동과 대구, 우도의 개령과 성주를 회복하여 경상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북쪽으로부터의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했다. 둘째, 좌도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는 척하면서 우도에서 적 후미의 약한 지점들을 공격해 도내(道內) 중부 지역에 둔거하고 있는 적들을 초멸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적이 분산과 고립을 면하고자 일정 지점에 집결할 것이고 아군이 좌도와 우도의 병력을 모아 교대로 실 틈 없이 공격한다면 적의 예봉은 날로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셋째, 좌도와 우도에서 대규모 정병을 동원해 서로 기각을 이루며 나란히 진격해(掎角并進) 적의 전후를 협공하고 의병들도 사방에서 습격해 날로 약해지는 적을 괴멸하는 것이다. 넷째, 복상하는 부대, 중간에 주둔하는 부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남쪽의 적군을 좌도와 우도의 대군이 섬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은 도내의 한 부대가 도내 다른 구역 심지어 타도(他道)의 부대들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속에서 가능했고⁸² 따라서 기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월 조선군은 응치와 이치에서 권율을 비롯한 여러 부대가 합동으로 적의 전라도 진입을 좌절시켰다. 최현 역시 8월 박진에게 보낸 서신에서 분산된 적을 여러 부대가 연합해서 기각한다면 적을 고립시켜 격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⁸³ 유성룡은 김성일에게 보낸 서신에서 적의 예봉이 매우 강력하니 대규모 야전이나 결전을 감행한다면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수들을 선별해 요해처에 나누어 배치하고 계속 척후 활동을 벌여 적의 동태에 따라 교대로 출정하여 공격한다면 초멸할 수 있는 기회가

81 최현, 『訥齋集』 卷7 書 上右巡察使鶴峯先生書 壬辰九月.

82 유성룡은 한강 지역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충주-경기 남부 방어선을 공고히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과 경상 지역을 각각 연계하는 도(道) 간 유기적 협력 체계의 구축을 강조했다. 김한신, 2017, 앞의 글, 118~121쪽.

83 최현, 『訥齋集』 卷8 書 與兵使朴晉請先討豐山賊書 壬辰八月在義城.

많아질 것으로 판단했다.⁸⁴ 10월에 거둔 진주성 승리는 연안성 전투와 더불어 대규모 일본군 공격을 격퇴했기에 소중하기도 했지만 또한 성 외곽의 요해처에서 다른 부대들이 함께 적의 배후·측면을 견제하고 압박함으로써 성 안팎의 부대들 간 유기적인 합동 작전으로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⁸⁵ 기각과 요해의 효과를 입증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진주대첩 이후 11월 비변사가 전달한 경성 수복을 위한 군사 동원 계획에서도 기각 전술이 제시되었다.⁸⁶ 서부 방면에서 전라도의 권율 부대가 경성 인근으로 북상해서 강화도에 주둔한 김천일(金千鎰, 1537~1593)·우성전(禹性傳, 1542~1593)·최원(崔遠, ?~?)이 통솔하는 부대와 함께 기각을 이루며 경성을 공격하고 동부 방면에서는 한성의 동북 방면에서 다수의 적을 사살한 고언백의 부대와 안성에서 거병한 후 적 사살에 성과를 올린 홍계남(洪季男, ?~1597)의 부대가 병진해서 선봉에 서게 하는 작전이었다. 무엇보다도 비변사가 동서 양면 작전, 즉 기각을 통한 대일 반격을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약 한 달 뒤 12월 독산성에서 권율은 인근 부대와 상호 연계로 기각 전술을 펼쳐 일본군의 대규모 포위 공격을 막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각을 통한 반격의 실효성을 확인시켰다.⁸⁷

1593년 2월 해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⁸⁸ 조선은 여세를 몰아 보다

84 유성룡, 『西厓集』 別集 卷3 書 答金士純 壬辰, “觀此賊千里遠鬪, 其鋒甚銳, 而我軍烏合, 不閑戰鬪, 若結爲大陣, 與之相當, 似難收功. 惟當精抄射手, 分據要害, 多設斥堠, 隨其動靜而迭出功之, 則勦殺甚易, 亦須留意.” 김수와 곽재우의 갈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6월 이후로 추정된다. 김수와 곽재우의 갈등 공식적으로 드러난 때는 1592년 6월이다. 『宣祖實錄』 卷27, 선조 25년 6월 28일 병진 4번째.

85 하태규, 2018, 「진주성전투에 있어서 경상우도관찰사 김성일의 역할」, 『남명학연구』 57, 136~145쪽.

86 『宣祖實錄』 권32, 선조 25년 11월 3일 기미 3번째.

87 심승구, 2012, 「임진왜란 중 독산성 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전술적·전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7, 134~138쪽.

88 『宣祖實錄』 卷35, 선조 26년 2월 24일 기유 6번째.

강력한 반격을 모색했는데 여기서 기각과 요해가 중시되었다. 유성룡에 의하면, 행주성 전투 직후 권율은 파주에서 이빈과 함께 북쪽에 주둔하면서 고안백으로 하여금 동쪽에서 출몰하는 적을 초격하는 한편 서쪽에서도 북병진으로 적을 초격하게 했다.⁸⁹ 더욱이 정걸(丁傑, 1514~1597)의 충청 수군이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와 용산 인근에서, 즉 경성의 적을 남쪽에서 견제했다. 달리 말하면, 조선군은 동서 방면과 북쪽의 세 방향에 요해처를 마련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협력했고 한강 남쪽 방면에서도 적의 배후를 압박함으로써 기실 네 방면에서 부대 간 합동으로 기각 전술을 전개한 것이다. 유성룡은 참획의 성과가 많았고 예초하러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해 굶어 죽은 말이 셀 수 없었음을 상기하며 기각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음을 증언했다.

1593년 남해안으로 철수한 일본군은 조선군의 기각과 요해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1593년 2차 진주성 공격에서 일본군은 성을 사면으로 포위한 뒤 잔여 부대로 하여금 나흘 거리에까지 주변 지역의 요해처가 될 수 있는 산과 계곡에서 매복하도록 함으로써 성 내부의 조선군과 성 밖의 조선군을 차단시켜 인근 조선군의 배후지원·측면지원(外援)을 철통같이 막았다.⁹⁰ 1차 진주성·독산성·행주성 전투에서 조선군이 보여준 기각과 요해를 통한 압박과 견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주성을 완전히 고립시킨 것이다.

진주성 함락의 충격 속에서도 조선 조정은 기각과 요해를 통한 매복과 기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의 함천군에 속한 초계에서 요해처를 마련해 매복하며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박진이 의령에서 올라온 일본군으로부터 5갈래의 공격을 받았음을 조정에 보고했다.⁹¹ 진주성이 함락된 지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동북쪽의 의령을 거쳐 대구로 북상하는 길목에 있는 초계에 대한 적의 공격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본군이 요해처를 찾아내 공격한 사실

89 유성룡, 『西厓集』 卷6 書狀 封上吳遊擊書 兼陳禦賊形勢狀.

90 『宣祖實錄』 卷40,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4번째.

91 『宣祖實錄』 卷40, 선조 26년 7월 20일 임신 7번째.

은 조선군 전수에서 기각과 요해가 핵심이었음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이후 일본군이 경주를 공격할 조짐을 보이자 선조는 부산에서 북상하는 적이 좌도의 경주와 우도의 진주에서 조선군이 중병으로 수어하며 기각을 펼치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진주를 함락시키고 이제 경주를 노리는 것으로 인식했다.⁹²

9월 선조는 비망기를 내리면서 반격할 경우 각각 담당할 방어지에 따라 분포해 상호 협력 체재를 구축하되 정희현(鄭希賢, ?~?)과 홍계남 등 경험 있는 지휘관의 경우 한 곳만 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요해처를 중심으로 기각 전술을 통해 도내 여러 부대 간 공조를 지휘할 수 있는 조방장으로 임명할 것을 지시했다.⁹³ 경주의 안강현 전문가가 벌어지고 약 한 달 반이 지난 11월 말 조경(趙倬, 1541~1609)은 각 도의 정병들을 집결시켜 결전을 벌이자는 이일(李鎰, 1538~1601)의 주장에 대해서 경솔히 움직여 패할 경우 재수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⁹⁴ 그 대신 조경은 유성룡의 전수 균형론과 같은 취지에서 진격하면 싸우고 후퇴하며 지킬 수 있는 요해처를 택해 방어와 반격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술이 가장 현실적임을 역설했다. 이때 비변사는 적과의 싸움에서 늘 싸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지키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기회를 보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 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해야 한다며 조경의 견해를 상책으로 평가했다. 더 나아가 조정에서는 도내뿐 아니라 하삼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방어에 충청도를 후방 지원의 거점으로 삼아 적의 재침 시 본도 병마절도사는 적의 최우선 목표인 전라도를 방어하고 본도 조방장은 경상도를 방어할 것을 조치했다.⁹⁵ 단, 적이 한 도로 집중해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경우에는 병마절도사와 조방장이 함께 기각 전술로 해당 도의 부대들과 협력해 방어하도록 했다.

92 『宣祖實錄』 卷41,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5번째.

93 『宣祖實錄』 卷42, 선조 26년 9월 6일 정사 7번째.

94 『宣祖實錄』 卷45, 선조 26년 윤11월 28일 무신 11번째.

95 『宣祖實錄』 卷46, 선조 26년 12월 3일 임자 8번째. 당시 충청도 병사는 변양준이었다. 『宣祖實錄』 卷47, 선조 27년 1월 17일 병신 2번째.

1594년 상반기 명 조정의 추가 파병 거부 의사를 전달받고 고니시 유키나가로부터 전라도 해안에 침몰한 일본군 난파선 조사를 위한 진입 요청을 받는 등⁹⁶ 조선 조정은 자체적인 전력 증강에 매진해야만 하는 국면에 처했다. 비변사는 경상도에 배치된 부대들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 전술을 위한 협력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⁹⁷ 특히, 각 부대마다 요해처에서 소규모의 적을 맞아 매복과 기습을 수행할 경우는 다소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적을 상대로 해서는 요해 전술만으로 승부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小散出之賊, 則猶可如此而收功, 若遇大隊之賊而如此, 則必致失利) 판단함으로써 보다 큰 규모의 기각·요해 방어가 미비함을 우려했다. 부대마다 요해처를 확보해 적을 견제한다고 할지라도 대규모 적군을 상대로 지상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내의 부대 간 상호 협력 속에서 기각 전술로 작전을 수행해야만 아군의 반격력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도 단위의 방어라는 큰 틀에서 기동 방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적이 재침할 것이라는 정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성룡은 행주성 전투에 참가한 군관을 뽑아 경상도와 전라도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⁹⁸ 또한 주요 지점에 산성을 쌓되 삼면이 접근하기 어렵고 적이 사격하기도 어려운 곳으로 택하고 나머지 한 면에는 지형적으로 상하좌우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요해처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는 이전의 수성전에서처럼 성 밖 부대들과의 기각을 통한 방어가 아니라 성곽 구조 자체의 방어력 증강을 통한 기각 전술의 극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잔존 명군마저 철군한 이후인 9월에는 홍이상(洪履祥, 1549~1615)이 장계를 올려 경주에서 죽령으로 이어지는 적의 예상 침입로 중 청송과 안동에 조방장을 두어 해당 요해처들을 통솔하게 함으로써 경주가 공격 받을 때 기

96 이정일, 2021, 「조선의 對일 전략에 대한 일고찰: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직후(1593.07~1594.02)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4, 197~198쪽.

97 『宣祖實錄』 卷49, 선조 27년 3월 30일 무신 4번째.

98 유성룡, 『西厓集』 卷7 啓辭 條列戰守機宜啓 六月.

각 전술로 후방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⁹⁹

한편, 비변사는 수륙 합동의 기각 작전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역설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울산 최남단의 서생포와 부산의 임랑포에 둔거하는 일본군이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와 울산 중심부의 태화강 인근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육상으로 경주를 침입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이었다.¹⁰⁰ 적은 육해 양면으로 교란 작전을 펼치는데도 조선군은 개별 부대들이 소규모 병력으로 요해처를 방어할 뿐 수륙 합동의 기각 체제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약 4개월이 지난 8월에도 비변사는 육상 방어에서 군량 수급과 병력 증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륙 부대 간 소통하며 기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을(且水陸之軍, 相通約束, 合勢掎角, 此最爲今日急務) 재확인했다.¹⁰¹ 이러한 비변사의 주장은 한도(道) 내부의 부대 간 협력 및 제도(諸道)의 부대 간 협력과 더불어 수륙 합동 작전이 함께 가동되는 입체적인 기각·요해 전술을 구비해야 반격까지 가능한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유성룡이 육상에서의 기각·요해 및 수륙 양면 작전을 모두 철저히 준비하며 적의 재침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로서 오랫동안 변경의 험한 요충지를 점거한 적이 자국의 허실을 상세히 알고 병탄할 계책을 이미 수립해놓은 사실을 거론한 점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²

도내 그리고 도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각·요해 전술에 대한 논의는 1596년에도 계속되었다. 최현의 경우, 경상도 북단 지역은 조령에 인근의 충청도 부대와 경상도 부대를 합쳐 1만여 병력으로 주둔시키고, 중간 지역은 대구의 공산성과 합천·거창·고령·성주에 걸친 가야산성에 각각 5,000의 도내 병력

99 『宣祖實錄』 卷55,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9번째, 이에 대해 비변사는 청송부사 박유인과 안동부사 우복룡 모두 조방장의 역할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100 『宣祖實錄』 卷50, 선조 27년 4월 14일 임술 1번째.

101 『宣祖實錄』 卷54, 선조 27년 8월 4일 기유 3번째.

102 유성룡, 『西厓集』 卷14 雜著 戰守機宜十條 并序 ○ 甲午冬.

을 주둔시키고, 일본군과 대치한 남단 지역은 진주·초계 그리고 경주·밀양에 각각 3,000의 정예 병력을 유격대로 편성해 작전 계획을 미리 정하고 서로 명확하게 약속함으로써 요해처에서 서로 번갈아 타격하는 데(要其陬險, 迭相突擊)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³ 그리고 도내 최동단 해안가에서는 강원도의 부대가 견제하고 최서단에서 전라북도의 부대를 함양과 함양-거창 간에 위치한 안음에 배치해서 요격하거나 견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상도 지역에서의 대일 방어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이 남원, 장수 등 전라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러한 경상도 도내의 협력 체제는 경상도 방어를 위해서 충청도·전라도·강원도의 병력이 함께 움직여 적의 진격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에 따라 방어와 반격을 전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도 간 협력으로까지 연결되는 기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해상에서 좌우 수군이 적의 귀로를 차단하고 퇴각하는 적을 요격할 것을 제시해 도 간 협력 체제에 수록 합동 작전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최현의 제안은 당시 기각 전술의 확장성을 반영한다.

고상안도 유성룡에게 보낸 서신에서 제도(諸道) 간 협력에 의거한 기각 전술로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⁴ 그의 추산으로는 1597년 당시 충청·전라·경상·강원 네 도의 부대를 총동원하면 약 8만여 병력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 도에서 모인 혼성 부대가 협력하면서 적의 경주-밀양·언양-창원 라인을 따라 요해처를 확보하고 실험한다면 적의 대규모 재침에 대해 수비와 반격에 균형을 둔 방어 전술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적이 최동단 경주를 공격하면 중부의 밀양과 최서단 창원에서 적의 최대 거점 부산으로 바로 나가 반격해야 했다. 만약 창원을 공격하면 경주와 언양에서 부산을 견제하고 밀양과 언양을 공격하면 경주와 창원에서 반격해야 했다. 적의 공세 시 기각으로 맞받아치되 적의 최대 거점까지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의 적극적인 기동 방어

103 최현, 『詡齋集』卷8 書 修軍政之實有三.

104 고상안, 『泰村集』卷2 書 上西厓先生 附八策 丁酉.

작전을 구상한 것이다.

요약해 보면, 개전 초 적의 전격전식 돌파에 궤산된 조선군은 매복·기습을 통해 적의 배후와 측면을 차단하거나 부대 간 합동 작전으로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 등 기각과 요해의 방어 전술을 구사하며 전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1592년 10월부터 1593년 2월까지 진주성·독산성·행주성에서 대규모 일본군을 상대로 수성전을 벌이면서 동시에 인근 부대와 기각·요해 전술을 함께 전개해 승전했다. 1593년 4월 남해안으로 철수한 일본군이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자 조선은 설함·청야와 같이 적의 원거리 공략을 약화시키고 군수 보급을 차단하는 수세적인 지역 방어 전술과 더불어 기각·요해를 통한 반격·차단·견제·압박 등 적극적인 기동 방어 전술도 준비했다. 특히, 수비와 반격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육상 전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에서 진지전식 방어뿐 아니라 도내 공조 체계와 도 간 공조 체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군사 작전이 논의되었다. 지역 방어와 기동 방어를 겸비한 육상 전력의 증강 방안은 조선이 자국 땅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현실에 맞서 어떻게 군사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IV. 맺음말

개전 이래 일본군이 원거리 공략과 진지전에 능숙하고 양자를 병용할 능력도 보유했음을 파악한 조선은 적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 전술을 위한 논의를 멈추지 않았다. 1593년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이후로도 채침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대비책을 강구했는데, 한편으로는 또다시 원거리로 공략할 경우 내륙 깊숙이 진입한 적의 공격력을 상쇄시키는 설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군량·군수를 완전히 봉쇄하는 청야를 결합한 지역 방어를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내 부대들 및 도 간 부대들 간 합동 작전을 골자로 하는 기각과 매복·기습 공격을 위한 요해를 두 축으로 하는 기동 방어를 수

립해서 지역 방어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 글은 조선군의 대일 전술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보력·관찰력 그리고 인적 자원의 동원도 같이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설함과 청야의 경우, 일반 백성들에게는 삶의 터전과 생활기반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희생이 따를 수 있었다. 기각과 요해의 경우, 특정 지역을 넘어 타도의 부대들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규모의 군사 작전이 필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글은 대일 전술 수립의 계기들을 추적하고 전술의 특성과 당대적(當代的)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조선의 3대 대일 전략 가운데 하나인 군사 대응력 강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대일 전략과 명의 대일 전략 간 비교뿐 아니라 조명 군사 협력의 실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역내(闕內) 국제전으로서의 임진왜란이 갖는 내적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¹⁰⁵ 국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의 상관성을 환기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105 김문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수습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인 긴장 상태를 조성했다고 전제하면서 일본의 국내 정국(政局)과 전쟁 발발의 상관성을 지적했다. 국제전으로서의 임진왜란이 지닌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전국의 내적 상황을 보다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문자, 2020, 「임진왜란 연구의 제 문제-임진정유재란 발발 원인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7, 146~152쪽.

참고문헌

사료

『事大文軌』, 『朝鮮王朝實錄』, 『西厓集』, 『黔澗集』, 『栢巖集』, 『炊沙集』, 『良齋集』, 『來庵集』, 『漢陰文稿』, 『四留齋集』, 『訥齋集』, 『梧陰遺稿』, 『東岡集』, 『象村稿』, 『白沙集』, 『秋浦集』, 『亂中雜錄』, 『泰村集』, 『蒼石集』, 『五峯集』.

단행본

이상희, 2007, 『개정·증보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논문

김경태, 2018,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정보수집과 재침 대응책」, 『한일관계사연구』 59.
김문자, 2020, 「임진왜란 연구의 제 문제-임진정유재란 발발 원인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7.
김영진, 2019, 「임진왜란 초기 명의 파병과 조명관계의 실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1집 1호.
김한신, 2017, 「임진왜란기 유성룡의 경기 방어구상과 군비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82.
_____, 2022, 「임진전쟁기 조선조정의 對明 일본재침 경보와 양국 공조」, 『歷史學報』 253.
김호준, 2021, 「오산 독산성의 조선시대 축성사적 검토-경기도지역 산성과 비교하여-」, 『백산학보』 119.
심승구, 2012, 「임진왜란 중 독산성 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전술적·전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7.
_____, 2021, 「임진왜란 중 독산성의 축성과 성곽사적 의미」, 『백산학보』 119.
이정일, 2018, 「임진왜란 전반기 조선의 對明 전략」, 『역사와 실학』 66.
_____, 2021, 「조선의 對일 전략에 대한 일고찰: 일본군의 남해안 철수 직후

- (1593.07~1594.02)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4.
- 조정기, 1990, 「西厓 柳成龍의 國政政策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태규, 2018, 「진주성전투에 있어서 경상우도관찰사 김성일의 역할」, 『남명학연구』 57.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대일 육상 전력 강화

— 1596년 강화협상 결렬 전후를 중심으로 —

이정일

1592년 4월 임진왜란 발발 이래 약 3개월간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조선군은 일본군이 한두 번의 야전(野戰)이나 결전(決戰)으로 격퇴할 수 있는 적수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자국 내륙으로 너무 깊숙이 진입함으로써(長驅) 진격을 스스로 지연시킨 적의 전술적 패착을 목도했다. 하반기 이후에는 적이 확장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군량을 포함한 군수 문제를 조선 현지에서 해결하며 지구전으로 돌입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 글은 개전 후 8개월여 동안 일본군의 전격전과 지구전을 경험한 조선이 1593년 본격적인 명군의 참전 이전부터 이미 대(對)일 방어의 방침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명-일 강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자국의 대일 군사 대응력 증강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고자 한 사실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산성이나 산보 등 자연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인 설험(設險)과 자국 내지에서 초토 작전으로 적의 군량 보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술인 청야(淸野)가 결합된 지역방어가 대일 육상 전력 증강의 요체로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도내(道內), 도(道) 간 합동 작전을 전제로 하는 기각(掎角)과 매복·기습 등을 통해 적을 고립시키고 전

력을 소모시키는 요해(要害)가 결합된 기동방어가 지역방어를 지원하는 전술로 제시되었다. 즉, 일본군과 대치하는 전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수비 위주의 지역방어와 반격·타격 위주의 기동방어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일본군의 돌파력과 지구력을 상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어 전술을 수립한 것이다. 지역방어와 기동방어를 겸비한 형태의 육상 전력 증강 방안은 조선이 어떻게 자체 군사력 강화를 통한 종전 해결책을 추구했는가를 고찰하는 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전으로서의 임진왜란의 내적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기각(擣角), 기동방어, 설험(設險), 요해(要害), 장구(長驅), 지역방어, 청야(淸野)

ABSTRACT

Strengthening the Anti-Japanese Combat Power of Ground Force during the Imjin War (1592-1598)

Lee Jeongil

For three months since the Imjin War began, the Chosŏn armies learned the harsh lesson that the Japanese armies were not a merely manageable enemy that could be knocked out through one or two big field battles. At the same time, the Chosŏn armies also witnessed the tactical mistake made by their enemy whose overly deep penetration into the inland areas of the Chosŏn territory inadvertently left themselves susceptible to isolation with an overextended (about 520 kilometers) front from Pusan to Seoul to Pyŏngyang·Hamhŭng. After the second half of 1592, the Chosŏn military pursued a comprehensive tactical measure against the Japanese armies that would engage themselves in attrition warfare able simultaneously to resolve their shortage of military supplies, including provisions, within the territory of Chosŏn proper and maintain their unexpectedly expanded battlefield. In this article, I explore how the Chosŏn court and military

prepared the anti-Japanese countermeasures even before the large-scale overseas deployment of the Ming armies in the beginning of 1593 and sought for the strengthening of their own military power in the middle of the peace negotiations between the Ming and Japan after the first quarter of 1593. In specific, what emerged as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how to strengthen the anti-Japanese combat power of ground force was a set of regional defense, or 1) mountain fortification (設險), such as mountain fortress or mountain barricade, in terms of maximizing the capacity of natural defense and 2) scorched earth policy (淸野) in terms of blocking completely any access to supply sources for local procurement of the Japanese armies. Moreover, not only joint operations (掎角) within the troops of a province and among the troops of multiple provinces, but also ambush (要害), geared towards surprise attack, encirclement or obstruction, were brought out as a set of mobile defense intended to complement the regional defense as above. This approach will enable us to chart further research that probes how the Chosŏn court and military made effort to increase the anti-Japanese defensive power, centered on combat strength of Chosŏn armies, examine what kinds of military tactics the Japanese armies employed for a new offensive as opposed to Chosŏn, and shed light on internal structures of the Imjin War as an international war in Northeast Asia at that time.

Keywords: Chosŏn-Ming military cooperation, Ming-Japan peace negotiations, joint operations, regional defense, mobile defense

포로를 향한 음악

–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기 라디오 방송음악과

프로파간다

이경분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기 라디오 방송
- III. 방송시간과 청취 인원수 변화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선호도
- IV. 포로를 향한 방송음악: 레코딩 음악과 심리전
- V. 포로를 향한 음악: '라이브 방송음악'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약 17만의 북한군, 중국군이 수용되어 있었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루어진 포로들의 문화예술적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¹ ‘친공’, ‘반공’ 포로들의 대립으로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 유엔군의 수용소정책 실패로 인한 폭동의 인상이 강한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음악이나 미술, 연극 등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이 존재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포로수용소에서의 삶과 죽음의 처절한 생존 문제에 비해 음악, 연극, 미술 등의 문화예술활동은 부차적인 영역이라 여겨지는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² 그러나 거의 모든 포로수용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거제도 포로수용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포로들 중에는 뛰어난 판소리 명창이나, 남인수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 일제 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했거나 해방 후 동구권 유학을 한 음악가도 있었다.³ 이들이 포로들의 즉흥적 오락시간이나 수용소 내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높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 투고: 2022년 4월 11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10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15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2041840).

- 1 그나마 음악에 관해서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 「6.25전쟁기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음악: 냉전이데올로기와 노래」(이경분, 2020, 『군사』 제117호)가 유일하다.
- 2 포로들의 일상에 대해서는 최근 『6·25전쟁 시기 포로수용소와 포로들의 일상생활』이 출판되었으나 포로들의 천도교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성강현, 2021, 『6·25전쟁 시기 포로수용소와 포로들의 일상생활』, 선인.
- 3 주영복은 포로송환 때 제3국을 선택했다가 함께 브라질로 가게 된 음악가 김시봉이 차우세스쿠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음악도라고 회고한다. 주영복, 1993, 『76인의 포로들: 第3의 選擇』, 대광출판사, 323쪽.

많은 포로의 증언이 알려주듯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처음부터 폭동과 폭력이 난무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포로들은 포로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하게 된 계기를 휴전협상으로 보았고, 무엇보다도 큰 원인은 휴전협상에서 중심 이슈였던 미군 측의 포로 ‘자유송환 원칙’이었다.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거제도 포로수용소 포로들의 폭력과 저항의 정도는 1951년 7월 휴전협상 전후로 격해지기 시작했고, 1952년 4월 포로심문과 5월 프랜시스 도드(Francis Dodd) 수용소 소장이 포로에게 납치되는 사건 전후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유엔 측이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 Education, CIE)(이하 CIE)을 통해 기획한 포로재교육(Reorientation)⁵ 시행 시기와 겹치는데, 포로재교육은 포로의 자유송환 원칙과 함께 ‘송환’ 포로 측의 격렬한 저항을 야기한 바 있었다. 유엔군 측이 포로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포로들에게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는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⁶ 포로들의 폭력사건과 폭동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끝맺기 위해 포로재교육 프로그램은 1952년 5월 포로들의 분리 수용 및 격리 작전과 함께 중단된다.

4 “포로들에게 송환문제는 사활의 문제”였다. 주영복, 1993, 위의 책, 263쪽.

5 포로교육을 칭하는 용어는 재교육, 교화, 문화교육 또는 재관점 “Re-Aspection” (Bernarr Cooper, 1956, “Radio Broadcasting to Chinese and Korean POW’s: A Rhetorical Analysis”, Diss, Stanford University, p. 17)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친공 이데올로기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바꾸는 정치적 의미가 들어 있는 ‘재교육’으로 칭하고자 한다.

6 포로재교육에 대한 비판은 친공포로나 공산 측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나 미군 측 및 거제수용소를 운영하는 사령관들에게서도 흘러나왔다. 미8군 사령관도 극동군 사령부에 교육을 당장 중단하도록 권고하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 보트너도 교육의 중단을 명령했다. 조성훈, 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169, 179쪽. 포로재교육의 책임자였던 오즈본(Monta L. Osborne)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때, 현장 수용소 사령관들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현장 사령관의 반발과 비판의 원인이 불충분한 물류지원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고바야시 소메이, 2018, 『M. L. 오즈본의 포로교육경험과 실전사(Trans-War History)로서의 심리전』, 『이화사학연구』 56집, 125쪽.

‘송환’ 포로들의 포로재교육에 대한 저항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통제 불능에 이를 정도로 격렬한 사건도 있었지만, 동시에 포로재교육을 통해 대다수 ‘미송환’ 포로들은 스포츠 경기, 운동회, 음악회, 미술전시회, 연극, 방송 공연 등의 조직적인 문화예술 활동도 철조망 생활 안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노래로 시끄러웠던” 거제도 포로수용소⁷에서 음악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포로재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951년 여름부터 시작된 포로를 향한 라디오 방송이다. 각 수용동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로시니의 오페라 서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유명한 왈츠 음악, 브람스의 〈헝가리무곡〉 등과 같은 세미클래식 음악이나 〈스타 더스트(Star Dust)〉, 〈라 팔로마(La Paloma)〉⁸와 같은 서구대중음악 등이 거의 매일 아침, 저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엔군 측이 ‘포로들을 향해 보내는 음악’으로서 포로들이 시위할 때나 밤낮으로 목청 높여 불러대는 행진곡, 전투가 등과 같은 육성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음악이었다.

다시 말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음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포로들이 직접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연주하는 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CIE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악대 및 밴드를 만들어 연주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방송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주로 포로들의 유희를 위한 즉흥적인 음악연주나 시위를 위한 노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육성의 노래 등으로 상상할 수 있다.⁹ 반면, 후자는 CIE에 의해 통제되는 음악인데, 무엇보다도 라디오 방송 음악이 대표적이다.

7 이경분, 2020, 앞의 책, 36쪽.

8 이 노래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도 항상 즐겨 듣고자 하는 음악이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음악가로 살아남았던 코코 슈만(Coco Schumann)은 자신이 만난 SS군인은 모두 이 노래를 듣고자 했다고 증언한다. Susanne Beyer and Martin Doerry, 2015, »*Mich hat Auschwitz nie verlassen*«: *Überlebende des Konzentrationslagers berichten - Ein SPIEGEL-Buch*, Deutsche Verlags-Anstalt, p. 24.

9 이한, 1952, 『거제도일기 석방포로들의 피의 기록』, 국제신보사, 60~61쪽.

지금까지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라디오 방송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는 베르나르 쿠퍼(Bernarr Cooper)의 박사학위논문 “Radio Broadcasting to Chinese and Korean POW’s: A Rhetorical Analysis”(1956)가 유일하다. 쿠퍼는 도쿄에 본부를 두었던 유엔군의 민간정보교육국(CIE) 산하 자료출판부(Materials Production Division) 중 라디오 방송분과(Radio Broadcasting Division)의 책임자였는데, 원래 일본 NHK의 무선 고문이자, GHQ 산하 민간정보교육국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¹⁰ 자신의 경험과 일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쿠퍼의 박사학위논문은 당시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한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포로 정책에 대한 정치적 토론을 피하기 위한 듯,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¹¹ 쿠퍼의 논문은 오히려 대본이 있는 ‘드라마’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이 초기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은 쿠퍼의 논문과 차이를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CIE의 라디오 방송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쿠퍼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라디오 방송은 억류국 측에서 포로들에게 매일 2~4시간의 “정보, 교육, 오락” 방송 프로그램을 시도한 ‘첫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고 주장하면서,¹² 포로를 향한 ‘프로파간다 방송’이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¹³

10 M. Lee Osborne, 1981, *Life has Loveliness to Sell*, (Edward Freimuth Collection), Okinawa National Archive, Chapter 11, pp. 12~13.

11 또한 쿠퍼는 대본이나 원고가 없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및 뮤지컬 등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12 Bernarr Cooper, 1956, 앞의 글, p. 5.

13 실제로 1952년 3월의 방송 프로그램 구성표를 보면, 뉴스, CIE 어록 및 CIE 레코드 프로그램, 세계의 음악, 영어레슨, 오늘의 감성, 레츠 고 싱잉, 당신을 위한 정보, 할머니의 이야기, 책꽂이, 일요음악, 버라이어티 쇼 등 포로들을 위한 ‘오락과 정보, 교육’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 꾸며진 프로그램의 인상이 강하다. CIE 어록과 CIE 녹음자료 등을 빼면, 당시 부산 중앙방송국(HLKA)의 프로그램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HLKA 방송 스케줄 표는 Bernarr Cooper, 1956, 앞의 글, p. 66). 프로그램의 영어 표기는 CIE Speaks, CIE Record program, Music of the

이 글에서는 이러한 쿠퍼의 주장과 달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반공서사뿐만 아니라, 비정치적으로 여겨지는 음악방송도 심리전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방송 재편성 이전의 초기, 즉 1951년 방송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방대한 내용과 자료를 하나의 논문에 담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던 방송 초기에 음악을 통한 포로재교육의 프로파간다적 의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로파간다 개념은 흔히 생각하듯이 직접적인 세뇌 교육만 의미하지 않는다. 포로들의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일은 세뇌 교육보다 더 고차원적인 심리전이 필요한 동시에 세뇌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인 프로파간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CIE의 라디오 방송은 포로들이 북한과 중국본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의도로 실행되었고, 강압적인 오리엔테이션 수업보다 오히려 세련되게 CIE 재교육의 목표에 더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포로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음악 라이브공연 프로그램은 라디오방송을 포로 자신들의 매체인 듯 친근하게 여기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이 글의 가설이다. 다만 이 글의 논의에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친공 측’ 포로들보다 ‘반공 측’ 포로들의 음악활동에 더 집중하였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world, Today's Emotion, For your Information, Your Story Grandmother, The Bookshelf, Sunday Music, Serenade to Industry 등이다. "Second Interim Report on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OW's(이하 Second Interim Report)",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문서번호 AUS009_45_00C0001, Table E (Details of Broadcasting Program Korean Language During a typical Week: Week ending 7, March 1952). 자료에 도움을 주신 전갑생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II.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기 라디오 방송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라디오 방송 청취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포로들의 자
율에 맡겼으므로, 포로들의 청취율은 방송에 대한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가 된다. 청취 인원수는 청취 구역의 인원수와 함께 점차 늘어났는데, 청취 구역
에서 약 10만 명이 된 것은 8월 중순 이후였다. 포로재교육의 부분으로서 라디
오 방송도 시작되었지만,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재교육 수업의 시기와 참여 인원
수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총 27개 수용동의 14만 명이 넘는 포로가 수용된 거제도에서 포로재교육은
195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바로 모든 포로를 대상으로 시작한 것은 아
니었다. CIE 당국은 먼저 6월 11일부터 63수용동 인민군 포로 7,500명을 대상
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였다. CIE 포로교육 1차 중간 보고서
(Interim Report on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OW's)에 따르면 포
로재교육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인 7월 9일 7개 인민군 수용동(62, 65, 73, 76,
78, 82, 83)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다시 한 달 후 8월 6일에는 5개의 인민군 수
용동(64, 74, 81, 84, 85)이 추가되었으며, 동시에 중국군포로 수용동 2개(72,
86)도 “긴급 프로그램(Emergency Programm)”을 실시하였다. 1951년 9월 2일
에는 4개 인민군 수용동(91~94)이 추가되어 총 19개 수용동이었지만, 1951년
12월 21일 보고서에는 84수용동과 64수용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이 중
단되었고 대신 77동이 포함되어 총 27개 수용동 중 18개 수용동의 11만 4,962명
이 정기적으로 재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9개
수용동의 3만 5,700명은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⁵

14 이 숫자는 1951년 12월 21일 보고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Interim Report on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OW's (이하: Interim Report)”,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문서번호 AUS009_45_00C0001, p. 4.

15 1952년 3월 7일 작성된 제2차 CIE 보고서를 보면, 총 26개 수용동에서 총 14만

반면,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방송기기의 설비가 우선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오리엔테이션 수업 프로그램보다 늦은 1951년 11월 16일이 되어서야 16개의 수용동에 배선이 완료되었고, 대부분 수용동이 중앙방송시스템에 연결되었다. 원래 방송기기의 설비는 18개 수용동에 설치되었으나, 총 16개 수용동으로 줄어든 것은 62수용동과 66수용동에서 방송을 거부하여 청취 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민군장교들로 구성된 66수용동에서는 라디오 유선과 스피커 장비를 파괴했으며, 민간인 포로들이 집중 수용된 62수용동에서도 교육 센터가 철거되고, 도서실도 설치하지 못했을 정도로 CIE 재교육에 대한 ‘친공’ 포로들의 저항이 컸다.¹⁶

CIE 당국의 포로를 향한 방송은 방송기기의 설비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점차 모양새를 갖추어 나갔다. 초기 방송은 1951년 9월까지도 뉴스와 음악으로만 구성된 간단한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예를 들어, 8월 16일 아침 방송은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음악 프로그램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동시 방송) 꾸며졌고, 저녁 방송은 7시부터 7시 45분까지 한국어 뉴스와 음악으로 구성된 초보적 수준이었다.¹⁷ 중국어 뉴스와 음악방송은 7시 45분부터 8시 30분까지 45분간이었으므로 각각 하루 방송시간은 총 1시간 15분이었다. 물론 초기에는 이것마저 일관적이지 않고 불안정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심한 폭풍으로 정전된 경우, 또는 기계 및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계획된 방송시간은 지켜지지 못했다. 특히 중국어 프로그램 쪽 방송기계가 불에 타거나, 정전된 경우가 잦았다.¹⁸ 포로의 다수를 접하는 북한군에 비해 소수였던 중국군

5,755명의 포로가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71수용동(7,336명)의 경우 부분적 교육이 실시되었다. “Second Interim Report”, TAB A.

16 1951년 6월 초기에 재교육이 실시되었던 남한의용군 62수용동은 후에 친공 수용소가 되어 방송을 거부했다.

17 “Weekly Reports Radio”, Reports Broadcast 8/18/1951~10/5/1951, Entry A1 108, Box 1, RG 554, 1951.8.16.

18 예를 들어, 1951년 9월 9일 중국군 수용동의 프로그램 후반부터 방송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후 10일 이상 결방되었다. 한국어, 중국어의 동시 방송은 1952년

포로들을 위한 방송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고, 결방 및 단축 방송도 자주 발생했다는 인상을 준다.¹⁹

그럼에도 방송시간은 점차 확대되면서 1951년 12월에는 아침 6:30~7:00, 점심 12:00~13:00, 저녁 17:00~19:00으로 하루 3회, 3시간 30분의 한국어 방송으로 정착된다. 반면 중국어 방송은 매일 7:00~7:30/12:15~13:00/18:00~19:00으로 하루 3회 2시간 15분으로 한국어 방송에 비해 짧았다.²⁰ 1952년에는 방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한국어 방송만 하루 4시간, 주당 28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²¹

이 시기 방송에서 어떤 실험적 시도가 있었는지, 포로들이 선호하는 음악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는지, 포로들의 반응은 어땠으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의 문서 RG 554의 “주간방송 보고서(Weekly Reports Radio)”를 통해 분석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어 방송에 대한 포로들의 흥미로운 반응이나 시행착오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1951년 8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의 “주간방송 보고서” 자료를 미시적으로 집중 분석하여 방송 시간의 변화와 청취 인원수의 변화,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Ⅲ. 방송시간과 청취 인원수 변화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선호도

방송 프로그램의 의미와 성공은 청취자가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에 달려 있다.

1월 12일부터 가능해졌다. “Second Interim Report”, p. 6.

19 “Weekly Reports Radio”, 1951년 9월분 참조.

20 “Interim Report”, p. 11.

21 아침 방송이 1시간으로 늘어났다. “Second Interim Report”, p. 6.

당시 포로수용소의 라디오 방송의 청취자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용소 전체에 확성기가 울려 퍼진다고 해서 모든 포로가 방송의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엔군 측의 주간 방송보고서를 보면 ‘청취 구역(Listening area)’ 인원수와 ‘청취 추측(Estimated spectator man hours)’인원수로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다.

초기 6구역 수용동을 중심으로 스피커 설치가 시작되어 1951년 8월 청취 구역 포로 숫자는 북한군, 중국군을 모두 포함하여 7만 6,000명에 이르고, 8월 14일이 되면 8만 7,000명, 8월 15일에는 10만 3,290명으로 증가한다.²² 이는 캠프본부와 가까워서 기술적으로 방송기와 전선을 연결하기 편리했던 63수용동에 가장 먼저 스피커가 설치된 이래 점차 다른 수용동으로 신속하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²³

청취 구역 인원이 총 10만 3,290명이었던 방송 초기, 1951년 8월 중순부터 중국어 방송의 기술적 문제가 생기기 전인 9월 8일까지 약 3주 반의 기간에 국한하여 추측 청취 인원수의 변화를 표로 작성해 보면 <표 1>과 같다.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이 하루 총 4시간(중국어 방송 포함 총 6시간)으로 확대되었던 1952년 3월 22일의 CIE 제2차 중간보고서(Second Interim Report on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risoners of War)에 따르면, “각 수용동마다 정기적으로 한국어 방송을 듣는 사람은 평균 2,000~2,500명”이고,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정기적 청취자 수는 “평균 5만~6만 2,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⁴ 이와 비교하면, 1951년 8월, 상대적으로 아직 프로그램이 불안정하고 단순한 방송 초기의 청취 인원수는 매우 높다. <표 1>의

22 “Weekly Reports Radio”, 1951.8.15.

23 1951년 11월에는 거의 모든 수용동에 스피커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북한군 장교들이 모여 있는 66동은 재교육을 거부하면서 스피커 등 방송기기를 파괴하여 청취가 불가능했다.

24 “Second Interim Report”, p. 8. 반중국어 방송 청취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정한다.

〈표 1〉 방송 시간과 청취 추측 인원수 (1951년 8월 15일~9월 8일)

날짜/요일	방송 시간	총103,290명 중 추정 청취 구역 인원수 (중국군 포로 포함)	비고
8.15/수	19:00~21:00	75,000	아침 방송 없음
8.16/목	6:30~7:00/ 19:00~20:30	75,000	아침/저녁 방송청취자 구분 없음
8.17/금	같음	75,000	아침 방송은 모두 음악 프로그램. 청취 구역에 있는 모든 이가 들었을 것
8.18/토	19:00~20:30	75,000	아침 방송 없음
8.19/일	6:30~7:00/ 19:00~20:30	75,000	아침/저녁 방송청취자 구분 없음
8.20/월	상동	75,000	상동
8.21/화	상동	75,000	상동
8.22/수	상동	50,000	강한 폭풍우 경보
8.23/목	상동	50,000	아침 방송 없음/강한 폭풍우 경보
8.24/금	19:00~20:30	85,000	아침 방송 없음
8.25/토	6:30~7:00/ 19:00~20:30	60,000	아침/저녁 방송청취자 구분 없음
8.26/일	상동	80,000	아침 2만/저녁 6만
8.27/월	상동	85,000	아침 2만/저녁 6만 5,000
8.28/화	상동	85,000	아침 2만/저녁 6만 78동 라이브 음악 광고
8.29/수	상동	90,000	아침 2만 5,000/저녁 6만 5,000 78동 라이브 음악 방송 광고
8.30/목	19:00~20:00	90,000	아침 방송 없음 78동 라이브 음악 방송(저녁)
8.31/금	6:30~7:00/ 19:00~20:30	95,000	아침 3만/저녁 6만 5,000
9.1/토	상동	90,000	아침 2만 5,000/저녁 6만 5,000
9.2/일	상동	100,000	아침 4만/저녁 6만

9.3/월	-	-	방송보고서 없음
9.4/화	상동	110,000	아침 3만/저녁 8만 78동 라이브 음악 방송
9.5/수	상동	90,000	아침 2만/저녁 7만
9.6/목	6:30~7:00/ 19:00~20:00	115,000	아침 2만/저녁 9만 5,000 82동 라이브 음악 방송
9.7/금	6:30~7:00/ 19:00~20:30	80,000	아침 2만/저녁 6만
9.8/토	상동	90,000	아침 2만/저녁 7만

* 출처: "Weekly Reports Radio", 1951.8.15~1951.9.8.

** 굵은 체는 높은 청취율을 보여주는 통계를 강조한 것임.

청취자 통계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주로 대다수 포로가 라디오 활성화에 귀를 기울이는 때는 아침보다 저녁 방송임을 알 수 있다. 폭우로 정전되거나 사고가 있었을 때 5만 명이 청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녁 방송만 평균 약 6만 정도의 포로가 방송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라이브(녹화) 음악방송’일 경우 포로들의 청취율이 매우 높았다. 예를 들면, 9월 6일의 경우 총 9만 5,000명이 저녁 방송을 청취했는데, 이것은 전체 10만여 명 중 거의 95%의 포로가 이날 방송을 들었다는 의미이다. 중국어 청취자 수를 제외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 이유는 82수용동의 음악 프로그램 때문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9월 6일자 주간방송보고서에는 82수용동의 CIE 요원들이 철저히 준비하여, 그동안 수용동에서 내보낸 방송 중 ‘최고’였다는 평가가 특기 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⁵ 인기가 높았던 82수용동 음악그룹의 라이브 방송은 이후에도 자주 반복되었는데, 방송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남아 있다.

25 "Weekly Reports Radio", 1951.9.6.



그림 1 82수용동의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는 광경(1951.10.5)

출처: RG 111, SC-Box 812-382451,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도서관

각 수용동에는 거의 모두 자체 합창단과 음악밴드가 있었다. <그림 1>에도 82수용동 음악부대원들이 트럼본 등 악기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표 1>을 보면, 82수용동의 인기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9월 4일 프로그램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78수용동에서 남성합창단의 라이브 공연이 저녁에 방송되었는데, 8만 명의 청취자를 모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포로들이 매우 즐거워했고, 한국음악에 대한 유엔군 측의 관심에 기쁨을 표현했다”고 한다.²⁶ 이 코멘트에서 78수용동 공연 레퍼토리에 민요 등 전통음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처럼 포로들의 높은 청취율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포로 자신들이 꾸민 프

26 “Weekly Reports Radio”, 1951, 9, 4.

로그램이 유리했음을 암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1951년 9월 15일 추석 특별 프로그램은 9월 6일 프로그램 못지않게 청취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쉽게도 보고서 자료에는 추측 청취자 인원수가 누락되어 알 수 없다.²⁷ 추석날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진행된 방송은 음악 프로그램과 연극프로그램이 포함된 특별 이벤트였는데, “CI&E라디오 방송 스태프 외에 모든 출연자는 자원 봉사자로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간 방송일지에 기록되어 있다.²⁸

〈표 1〉의 경향성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아침의 레코딩 음악방송보다 저녁 라이브 음악방송에서 포로들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어떤 레퍼토리로 구성되었는지, 프로그램 뒤에 숨은 심리전의 의도는 없었는지 분석해보자.

IV. 포로를 향한 방송음악: 레코딩 음악과 심리전

이미 암시되었지만 라디오를 통한 음악, 즉 ‘포로를 향해 보내는 음악’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일본에서 구매해 온 음반의 음악 및 부산의 중앙방송(HLKA)에서 픽업(pick-up)해 온 것으로 ‘레코딩 음악’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포로들이 직접 생산하지만 확성기를 통해 내보내는 ‘라이브 방송음악’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라디오 방송은 1951년 7월 실험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방송시간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HLKA 방송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보완되었고, 1951년 12월 중순 ‘프로그램의 재편성’ 이후 1952년에는 한국어 방송이 하루 4시간(중국어 방송 2시간)까지 늘어날 정도로 프로그램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했다.

27 1951년 9월 10일에도 84컴파운드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라이브로 진행했으나, 주간 라디오 보고서에는 추측 청취자 수 및 자세한 코멘트는 없고, 중국어 방송의 기고장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짧게 보고되어 있다.

28 “Weekly Reports Radio”, 1951.9.15.

1951년 방송에도 HLKA에서 픽업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지만, 1952년에 비해 음악 프로그램은 세분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CIE에 의해 통제되는 포로를 위한 방송음악을 ‘레코딩 음악’과 ‘라이브 방송음악’으로 구분하여, 직접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음악이 어떻게 심리전에 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레코딩 음악’ 프로그램의 특징과 심리전의 가능성을 고찰해보자.

1. 레코딩 음악 프로그램의 특징

〈표 1〉에서 보았듯이, 하루 총 2시간 방송을 하던 초기의 아침 방송은 음악 프로그램이 전부가 할 수 있다(〈그림 3-1〉 참조). 아침 6시 30분부터 7시까지 30분간 한국어와 중국어 방송이 각각 거의 같은 음악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아침 프로그램 청취자 인원수는 (북한군, 중국군 합쳐서) 평균 2만 명 정도로 저녁 방송에 비해 1/3 정도로 적었는데,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Star Dust, Neapolitan nights, Down south, Goin’Home, Tommy Dorsey, Shep Fields 등 재즈 및 팝 음악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비엔나의 피〉, 〈집시 바론〉, 〈남국의 장미〉 등과 같은 왈츠음악, 로시니의 〈빌헬름 텔〉,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같은 유명한 오페라 서곡,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등의 대중적 오페라 아리아, 또는 〈로자문데〉, 〈트로이메라이〉, 〈터키 행진곡〉 등 귀에 익숙한 세미클래식 음악이 많았다. 또한 가끔 세미클래식보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드뷔시의 〈바다(La Mer)〉, 바흐의 칸타타 〈죽음의 속박에 놓인 그리스도(Christ in den Todesbanden)〉와 프렐류드와 푸가, 훔퍼딩크(Engelbert Humperdinck)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서곡 등도 방송을 탔다.

이 외에도 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그랜드 캐년〉 모음곡이나 거슈윈의 〈랩 소디 인 블루〉 등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데, 인민군 포로들에게는 재즈음악과 함께 ‘미 제국주의’ 음악으로서 낯선 것들이었으리라 짐작된다. 프로그램 재편성 이후인 1952년 음악 프로그램과 비교해보았을 때, 눈에 두드러지는 초기 음악 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52년 방송에는 장르별 음악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초기 1951년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아직 장르 구별 없이 레퍼토리가 혼합된 인상을 준다. 아침 방송 시간에 재즈음악에 이어서 세미클래식음악이 나오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했다. 반면, 1952년 음악 프로그램은 서구의 대중음악(Music of the World, Modern Music), 한국 노래(Let's go singing), 노동자 노래(Serenade to Industry), 찬송가(Religious Hour), 클래식(Sunday Music), 민요와 애국적 노래(National Songs) 등으로 장르에 따라 개별적 프로그램이 운용되어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했다.²⁹

둘째, 당시 포로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 한국 전통음악³⁰이나 한국 대중가요의 부재라 할 수 있다. CIE 라디오방송부는 방송에 사용되는 레코딩 음반을 “클래식, 세미클래식, 포퓰러 뮤직”의 세 장르로 구분하여 주로 일본에서 구매·조달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³¹ 그렇다고 포로들이 전통음악을 전혀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포로들이 직접 생산하는 라이브 음악공연에서 들을 수 있었고 HLKA 부산방송국에서 픽업해 올 수 있었다.³² 한국 대중가요 역시 일본에서 조달해 오는 음반에는 포함되기 힘든 장르였다. 남인수, 이난영 등의 식민지 시기에 히트를 쳤던 인기 대중가요는 전통음악과 비슷하게 북한 인민군이나 남한 의용군, 남한 국군을 막론하고 한국인이 라면 다 아는 노래였을 것이다.³³ 이것 역시 포로들의 라이브 음악공연을 통해

29 물론 이 중에서 중앙방송국(HLKA)에서 픽업한 것이 대부분이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자체 제작한 것은 Let's go singing과 Sunday Music, 포로들의 라이브 공연 등에 국한된다. “Second Interim Report”, Table E, pp. 1~5.

30 오스본의 기록에 따르면, 방송에서 포로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뉴스 및 뉴스 해설, 한국 전통음악(중국 전통음악), 드라마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순이었다고 한다. M. Lee Osborne, 1981, 앞의 책, p. 21.

31 “Interim Report”, p. 12.

32 1952년 3월 포로들의 설문 조사도 컴파운드에서 생산하는 ‘라이브 음악방송’이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였음을 말해준다. “Second Interim Report”, p. 7.

33 1952년 방송에서도 따로 한국의 대중가요를 내세운 프로그램은 없지만, 점심 휴식



그림 2 스튜디오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와 밴드

출처: RG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2003,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문서 번호 53-11740

향유되었고, 정확한 촬영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림 2>에서 보듯이 스튜디오에서 포로 음악가들이 직접 녹음한 대중가요도 방송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셋째, <표 1>의 방송 초기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한국 가요나 전통음악이 부재한 반면, 엔카와 같은 일본 노래가 오락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8월 21일 아침 음악방송 프로그램에는 일본의 “그리운 멜로디 (Nostalgic Melodies)”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なつかしのメロディ”[약어 ‘나쓰 멜

시간에 부르는 노동자들의 노래(Serenade to Industry) 프로그램에 가요나 민요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 2〉 일본어 방송프로그램과 주간 방송 보고서의 코멘트

횟수	날짜	일본 프로그램	주간 방송 보고서 코멘트
1	8.17	일본 코메디 쇼 [음악: 지나의 밤(China Night)]	소수만이 일본어를 이해하고 즐김. 일부는 일본에 대한 증오로 청취를 거부함
2	8.20	일본 엔터테인먼트	일본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반응
3	8.21	일본 나쓰 멜로 (Nostalgic Melodies)	한국군 장교가 달려와서 일본 노래가 포로들에게 좋지 않다고 전해줌.
4	8.24	일본 엔터테인먼트 (Twenty Questions)	일본 방송이 시작되자 많은 청취자가 자리를 떴음
5	8.25	일본 엔터테인먼트 (Stars of this Week)	일본 레코드의 대중가요가 포로들을 우울하게 하고 도덕성에 상처를 줌. 한국인 요원들이 일본 음악, 코미디 등을 방송하지 말기를 간청함.

출처: "Weekly Reports Radio", 1951.8.17~8.25. 코멘트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로(ナツメロ)]'의 영어 번역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1945년부터 NHK 라디오방송에서 사용한 것으로 일본 제국 시기의 지나간 유행가를 의미했는데, 주로 엔카를 떠올리게 한다. 이날 방송일지에는 “한 한국군 대위가 아주 흥분하면서 뛰어와서 아침 프로그램의 음악은 포로들에게 좋지 않다고 우리에게 충고했다”³⁴고 보고되어 있다. 국군 장교의 부정적 반응을 보아 이날 엔카가 방송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엔카 외에도 다른 일본 오락 프로그램은 8월 15일 광복절 이후 1주일간 집중적으로 방송되었는데, 〈표 2〉와 같다.

일본 프로그램에 대한 포로들의 부정적 반응은 북한군 포로들뿐 아니라, 중국군 포로들도 마찬가지였다. 1951년 8월 25일 자 주간 방송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가 적혀 있다.

한국인은 일본의 탄압을 받는 동안 일본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34 원문: “A korean Capt. very excitedly ran from his quarters to inform us that the music (morning program) was “not good” for the PW’s”.

일본어에 대한 혐오를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인들도 일본어와 일본 음반을 한국인 들만큼이나 싫어한다.³⁵

포로들의 회고에 의하면, 포로들은 반공과 친공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싸웠지만, 일본에 대한 태도만큼은 진영의 구분 없이 같이 단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주간 방송보고서에는 일본어 오락방송에 대한 포로들의 부정적 반응이 여러 번 보고되었지만, <표 2>에서 보듯이 일본 프로그램은 그대로 지속되다가 8월 25일 유엔민간정보 교육국 측이 신뢰하는 한국인 요원들(“The most respected of pur Korean personnel”)이 간청한 후에야 일본 오락은 중단되었다.³⁶

하지만 6개월간의 CIE 재교육 실행을 종합하여 작성된 1951년 12월 21일자 1차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는 “일본어 오락 프로그램 녹음은 일본 방송 협회에서 무료로 입수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듣는 것을 분개한다는 의견이 자주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들 사이에서 널리 인기를 얻었다”고 결론짓고 있다.³⁷ 이런 결론은 앞의 주간 방송보고서의 코멘트와는 모순적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포로들에게 일본과 일본어에 대한 반감은 진영을 넘어선 것으로서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다른 한편, 포로들은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본어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엔카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일본어를 통한 감성적인 자극은 일본적이어서 거부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지만, 영어로 된 영화나 책일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술한 한국어 번역이나 한국어 번역이 아예 없는 경우) 일본어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

35 “Weekly Reports Radio”, 1951.8.25.

36 “Weekly Reports Radio”, 1951.8.25.

37 “Interim Report”, p. 6.

38 주영복도 “한국인은 과거 아무리 일본화(황민화)를 강요당해도 일본 장기는 두지 않았다. (당국이) 일본 장기를 대량으로 보낸 것은 일본 상인들이 팔아먹기 위해 선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복, 1992.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2권』, 고려원, 165쪽.

어 사운드 트랙으로 된 레크리에이션 영화는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주로 미국 다큐멘터리에 일본어 사운드 트랙이 있는 영화가 포로들에게 상영되었다.³⁹ 1952년 3월 2차 중간보고서의 다큐멘터리 영화 리스트에서도 총 11개의 제목 중 3개만 한국어이고 그 외 8개는 모두 일본어 사운드 트랙으로 되어 있다.⁴⁰ 물론 영화와 방송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일본어를 거부하는 포로들과 일본어를 요구하는 포로들에 대한 상충되는 보고는 겉으로 보기에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어 사용에서 포로들의 ‘실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CIE 2차 중간보고서에서도 일본어 도서에 대한 포로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서술되어 있다.

처음에는 일본어와 일본 것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때문에 컴파운드 도서관에 일본어 자료를 배치하는 것을 다소 망설였다. 하지만 일본 책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포로들은 한국 도서보다 일본 도서가 읽기 쉽고 자료는 신뢰성이 높다고 여겨서 일본 도서에 대한 선호도를 표명했다. 일본 도서는 삽화가 더 많고 형식과 인쇄가 한국 책보다 확실히 나았다.⁴¹

물론 영화의 경우와 달리, 독서에 관심을 가지는 포로들은 적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교육수준의 포로들이었으므로, 포로 전반의 반응으로 보기는 힘들지도

39 “Interim Report”, p. 17.

40 “List of Instructional Materials prepared by or produced by the Tokyo Office of CIE/UNC from 1, January 1952 to 7 march 1952 and shipped to Kojedo”, “Second Interim Report”, TAB I, CIE 국장 오스본의 회고에 따르면, 1950년 전쟁 초기에 500명의 선발된 포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실험교육에서 일본어 사운드트랙의 영화를 상영할 때, 한국어 내레이션을 하여 일본어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경우, 포로들은 일본어 내레이션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단 5%의 포로만 일본어를 거부했다고 회고했는데, 거제도 포로수용소와는 다른 경우였으므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M. Lee Osborne, 1981, 앞의 책, pp. 6~7.

41 “Second Interim Report”, p. 13.

모른다. 방송에서 일본어에 호의를 표하는 포로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⁴² 1952년 확장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어 프로그램은 확실히 자취를 감추었다.⁴³

2. 레코딩 음악의 심리전 기능

초기 음악방송에 특별히 장르별 구분이 있기 전, 라디오 방송부는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포로들의 반응을 축적해나갔다. 대다수 포로들에게 낯선 재즈음악이나 클래식음악은 포로들의 귀를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우월한 서구사회, 즉 전 체주의와 대비되는 ‘자유 세계’를 상징하는 소리로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예를 들어 세미클래식 중에서도 특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왈츠음악은 선진적인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자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중에 특정 음악을 통해서 특정 메시지를 발신하는 음악적 심리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는 <터키 행진곡>인데 1951년 8월 29일, 9월 5일 아침에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연속해서 전 캠프의 확성기를 통해 울리게 했던 것이다.⁴⁴

<표 1>의 1951년 9월 5일 방송일지를 보면, 아침 방송은 먼저 낭만적인 볼프 페라리(Wolf Ferrari)의 <성모의 보석(I gioielli della Madonna)>, 멕시코 작곡가 카데나스(Juventino Rosas Cadenas)의 왈츠 <파도를 넘어서(Sobre las Olas)>, 유명한 <라 팔로마>가 먼저 나온 후, 갑자기 경쾌한 베토벤의 <터키 행진곡>과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대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물론 <터키 행진곡>이 너무 유명하니까 방송되었다고 간단하게 생각

42 해방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젊은 포로들 사이에서 일본어가 중요한 정보와 소통의 수단으로 선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3 “Second Interim Report”, Table E 참조.

44 1951년 9월 6일 중국어 저녁방송시간에도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이 방송되었다.

할 수 있지만, 베토벤과 모차르트 곡을 연속으로 대조한 것은 ‘강조’의 의미를 내포한다. 포로 김종호도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터키 행진곡〉, 〈마왕〉, 〈헝가리무곡〉을 들었다고 회고하고 있다.⁴⁵ 모두 유명한 세미클래식 곡인데, 수많은 음악프로그램 중에 〈터키 행진곡〉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욱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연일 포로들이 투쟁적인 4/4박자 행진곡이나 전투가를 부르며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행진곡 음악은 거의 제외되었다. 그 대신 부드러운 춤을 연상하는 3/4박자의 왈츠음악이 자주 반복적으로 확성기를 통해 전체 수용소 막사로 울려 퍼졌다. 다시 말해, 방송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음악이 행진곡인데, 4/4박자의 경쾌하고 빠른 베토벤의 〈터키 행진곡〉과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이 그 드문 예에 속한다. 물론 이 음악은 포로들이 고향치며 부르는 전투가와와는 다른 기악음악으로서, 실제 행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진을 형상화한 예술적인 행진곡이라 할 수 있다.

또 〈터키 행진곡〉을 단순히 유명 세미클래식 곡이니까 방송되었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성보의 보석〉, 왈츠음악 〈파도를 넘어서〉, 〈라 팔로마〉 후에 분위기가 반전되어 청취자의 귀를 쫓긋하게 만드는 방송기획의 숨은 전략뿐만 아니라, ‘터키’라는 키워드가 당시 화제가 되었던 터키 군대를 떠올리게 하는 연상작용 때문이다. 터키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 3개의 여단을 한국에 보냈는데, 제1여단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8월까지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으며, 이어 제2여단이 1951년 8, 9월에 교대하기 위해 입항하기로 되어 있었다. 터키여단은 1950년 11~12월 ‘군우리’ 전투에서 공산 측에 포위되어 전멸당할 위험에 처한 10만의 유엔군을 구해내는 용맹으로 ‘기적’의 군단으로 여겨졌다.⁴⁶ “한국전

45 김종호, 2011, 『하나님을 그린 노화백의 이야기(한 거제도 반공포로의 삶)』, 영상복음미디어, 103쪽.

46 터키군은 이 전투의 승리로 다른 참전국으로부터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알리 데 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2014, 『터키인이 본 6.25전쟁, 1950-195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42쪽). 러스크(Rusk) 극동담당 차관보(Asst. Secretary, FE)는

쟁에서 뜻밖에 놀라운 것은 중공군이 아니라 터키군이었다는 보도나 터키군의 “용맹을 표현할 단어를 찾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찬사,⁴⁷ 또는 터키 군대가 “중공군을 떨게 했다” 등과 같은 칭송이 쏟아졌다.⁴⁸ 중공군의 제2차 춘계 총공세가 있었던 1951년 4월 ‘장승천 전투(1951.4.22.~23.)’에서도 대대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터키군의 승리에 대해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이어졌다.⁴⁹ 1951년 8월과 9월, <터키 행진곡> 방송음악이 3~4개월 전 전선에서 용맹을 떨친 터키군을 떠올리게 했다면, 이는 곧 유엔군 경비병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송환’ 포로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의미했다.

이처럼 음악이 특정 사건이나 시기와 연관되어 일으키는 연상작용은 심리전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죽음의 속박에 놓인 그리스도>도 비슷한 예라 할 수 있다.

저제도 포로수용소의 방송 음악에서는 주로 가볍고 경쾌하거나 낭만적인 음악의 비중이 컸고, 무겁고 진지한 음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드물었다. 따라서 수용소의 확성기에서 바흐의 칸타타 <죽음의 속박에 놓인 그리스도>와 같이

1950년 11월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무부가 최근 중국의 개입과 관련된 한국 전쟁의 전개 상황을 알리고 미국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주요 국가 대표들과 회의’에서 “터키군이 치른 매우 용감한 전투에 경의를 표했다.” (FRUS 1950. Korea, Volume VII, 795.00/11-3050)

47 서독의 한 신문 보도이다. 김진우, 2013, 「6·25전쟁기 터키군 참전에 관한 연구-참전 동기와 군우리 전투를 중심으로」, 『군사』 87호, 123쪽.

48 알리 테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2014, 앞의 책, 53쪽.

49 알리 테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2014, 위의 책, 77~78쪽. 더글러스 맥아더는 “터키인들은 영웅들의 영웅이다. 터키 여단에 불가능은 없다”고 찬사를 보냈다 (<https://web.archive.org/web/20080917031845/http://www.korean-war.com/turkey.html>). 경향신문 1951년 2월 20일자에도 UN 해군항만사령관 I. A. 색어리 해군중장이 “터키군은 훌륭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투정신은 가장 용감스럽습니다”라고 찬양했다는 보도가 있다(「터키군의 유엔해군본부, 인천항에서 24시간 군 보급물자 운반 발표」, 『경향신문』, 1951.2.20). 터키군을 칭송하는 미국과 유럽의 매체 보도와 미군 사령관 및 미정치가에 대해서는 김진우, 2013, 앞의 글, 122~123쪽.

진지한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느낌을 준다. 더욱이 이 칸타타는 매우 명량한 〈알제리의 이탈리아인〉과 낭만적인 〈성모의 보석〉의 멜로디와 대조되는 다성 음악으로서 죽음과 삶의 투쟁을 통해 결국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내용이다. 부활절도 아닌 9월 8일 저녁에 이 음악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을 때, 이 음악을 아는 청취자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연상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전날인 9월 7일 64수용동에서 ‘친공’ 포로들의 인민재판 후 살해당한 ‘반공’ 포로 유동기의 죽음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유동기는 부산 수용소 시절 ‘정보제공자’ 출신으로 미군들 사이에서는 “Mike”라 불렸을 정도로 미군과 친분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⁵⁰

또한 이 칸타타는 9월 16일 아침 방송에서도 울려 퍼지는데, 평소 경쾌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여느 아침 방송과는 다른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며 9월 8일과 마찬가지로 칸타타 〈죽음의 속박에 놓인 그리스도〉 후에 바흐의 오르간 음악 g단조 푸가도 이어진다.⁵¹ 전날, 9월 15일에도 친공 조직의 ‘인민재판’에서 반공포로들이 유엔군과 남한군의 정보제공자라는 혐의로 여러 명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⁵² 이 음악을 모르는 포로들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이 음악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왈츠나 로시니의 경쾌한 세미클래식과는 전혀 다른 종교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죽음의 속박에 놓인 그리스도〉를 아는 소수의 ‘미송환’ 포로들과 유엔군 경비병이나 미군 병사들은 이 음악을 들으며, 단순히 종교적인 분위기를 넘어 그 전날 살해된 ‘반공’ 포로들에 대한 애도와 동시에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살해자를 고발하는 무언의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다.

50 최혜린, 2017,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 정책의 전개 양상: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쪽. ‘친공’ 포로 측의 입장에서는 유동기가 ‘배반자’였다.

51 이 외에 라흐마니노프의 폴카(Polka De W.R.), 차이코프스키의 〈썰매 끄는 삼두마차(Troika En Traineau)〉 프렐류드(2번, 3번)로 구성되었다.

52 최혜린, 2017, 앞의 글, 71쪽.

얼마나 많은 포로가 이 음악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음악의 연상작용을 이용하고자 한 흔적은 시도의 차원이라고 해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곧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방송음악 프로그램을 오락과 유희으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심리전의 차원을 고려하여 더욱 세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V. 포로를 향한 음악: ‘라이브 방송음악’

1. 82수용동의 예

물론 레코딩 음악 중 (전통음악이나 가요보다) 클래식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포로 청취자들은 소수였으리라 추측된다. 반면, 라이브 음악방송의 경우 포로 청취자 인원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했듯이, <표 1>의 1951년 9월 6일자 저녁에 방송된 82수용동의 라이브 음악콘서트는 청취 구역의 거의 모든 포로가 귀를 기울였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러한 반응은 프로그램 제작팀에게 포로들의 라이브 음악방송이 가지는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이브 공연이라도 76수용동의 프로그램보다 82수용동의 공연 프로그램의 인기가 더 높았던 것은 연주의 ‘완성도’와 연관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주간 라디오 방송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가 있다.

82컴파운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질이 매우 좋았을 뿐 아니라 라디오섹션이 작동하는 조건도 최고였다. 82컴파운드의 CI&E 요원들은 확실하게 방송을 준비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컴파운드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고, 완벽한 것이었다.⁵³

53 “Weekly Reports Radio”, 1951, 9, 6.

1952년 1월 12일 국제적십자사보고서에 따르면, 82수용동은 “우익 수용동의 대표격”이었다.⁵⁴ 다시 말해, 82수용동에서 이러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친공’ 포로들과 달리 ‘반공’ 포로들이 장악한 수용동에서는 CIE 재교육에 대해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82수용동의 라이브 공연은 어떤 레퍼토리와 순서로 구성되었는지, 1951년 11월 2일자 프로그램을 클로즈업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1〉을 참고로 1951년 11월 2일 한국어 방송 전체를 개괄해보면, 아침 방송(6:30~7:00)에서는 평소처럼 로시니의 오페라 〈비단 사다리(La Scala Di Seta)〉 서곡, 프란츠 폰 주페(Franz von Suppe)의 〈비엔나에서 아침, 점심, 저녁(Ein Morgen, ein Mittag, ein Abend in Wien)〉,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집시 남작(Der Zigeunerbaron)〉 서곡과 왈츠 〈예술가의 생애〉 등의 세미클래식 음악으로만 구성되었다. 점심 방송(12:00~12:30)은 CIE 녹음 프로그램,⁵⁵ 저녁 방송(18:00~19:00)은 82수용동의 라이브 음악 콘서트와 뉴스로 구성되었다. 저녁 1시간 방송에 뉴스도 포함되었으니, 음악콘서트는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레퍼토리는 애국가, 서양 가곡 및 포크송, 찬송가, 대중가요, 경기민요 등 골고루 구성되었고, 솔로, 합창, 듀엣, 기악의 다양한 연주 장르가 동원되었다. 곡명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알려진 음악이 아닐 경우 한국어 제목의 음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영어로 된 레퍼토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표 3〉과 같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남인수의 노래이다. 9번째 독창 〈물방아 사랑〉, 〈인생 출발〉, 〈울며 헤진 부산항〉, 〈청춘야곡〉은 모두 남인수가 부른 노래인데, 포로 중에 남인수 노래를

54 조성훈, 2010, 앞의 책, 81쪽 재인용.

55 1952년의 CIE 녹음 프로그램은 “북한에 관한 진실”, “소련 점령하의 동독” 등과 같은 정치적인 주제로 도쿄 GHQ 심리전부에서 녹음디스크를 제공했다. “Second Interim Report”, p. 4.

〈표 3〉 1951년 11월 2일, 82수용동의 라이브 공연 방송 레퍼토리

	장르	곡목	비고
1	합창	남한 국가 〈애국가〉	
2	솔로	〈아이 아이 아이〉 ⁵⁶	외국 가곡
3	듀엣	〈가을〉	
4	솔로	나폴리 민요 〈바다로 오라〉	외국 가곡
5	기타(Harmonic) 솔로	〈고향 그리워〉 ⁵⁷	기악
6	듀엣	〈고향 생각〉 ⁵⁸	
7	오르간	〈내 고향〉 ⁵⁹	기악
8	찬송가 합창	〈기쁨의 노래(Wake the song)〉 ⁶⁰	
9	노래 솔로	〈물방아 사랑〉(1937)	남인수 노래
		〈인생 출발〉(1940)	
		〈울며 헤진 부산항〉(1941)	
		〈청춘야곡〉(1939) ⁶¹	
10	한국고전음악	〈청춘가〉, 〈까투리타령〉, ⁶² 〈한강수 타령〉, 대중적인 것	민요
11	솔로	〈세레나데〉	
12	합창	〈안녕, 내 고향〉	

56 스페인 작곡가 오스만 프라이어레(Osman Rerez Freire)의 곡이다.

57 이흥렬의 곡일 가능성이 크다.

58 현제명, 홍난파, 스페인 노래도 ‘고향 생각’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지만, 제목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59 오르간 독주의 〈내 고향〉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북한 노래 〈내 고향〉의 멜로디가 연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0 전체 제목은 “Wake the song of Joy and Gladness”이다. 미국침례교회 음악가 윌리엄 셔윈(William F. Sherwin)이 작곡했다.

61 모두 남인수가 일제 시기인 1937~1941년 사이에 부른 노래이다.

62 영어 〈Forage of Net〉로 번역될 수 있는 전통음악을 찾기 힘들다. 짧고 신나는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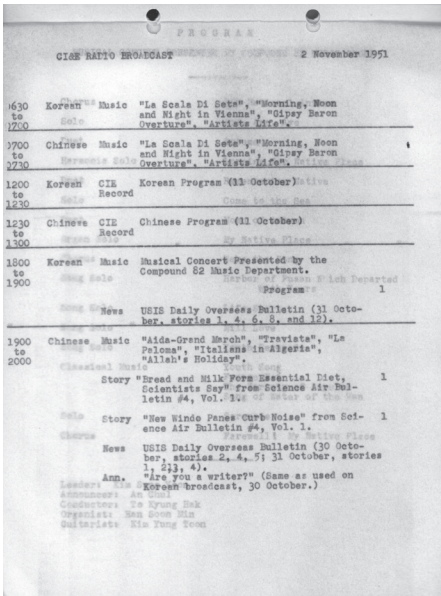


그림 3-1 1951년 11월 2일 주간 방송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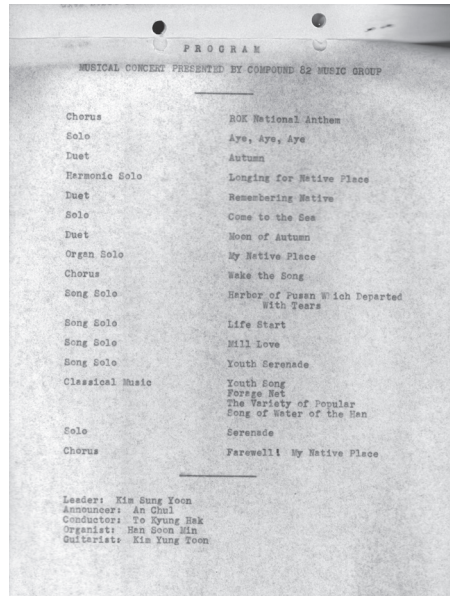


그림 3-2 82수용동의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⁶³

출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전시관 전시회 <캠프 넘버원. 거제도 포로의 일상>(2021.10.15.~2022.3.31.)

몇들어지게 부르는 가수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청춘가>, <한강수 타령> 등 경기민요를 잘 부르는 명창, 나폴리 민요 <바다로 오라(Vieni Sul Mar)> 등 서양가곡을 잘 부르는 성악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련 유학을 했던 성악가 김시봉이 군악대장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고,⁶⁴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하고 오페라운동을 펼쳤던

<까투리 타령>으로 추정하는 것은 먹잇감 까투리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내용과 짧은 방송시간을 고려한 결과이다.

63 자료의 도움을 주신 거제시청의 이진옥 학예사와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전시관 정지연 학예사에게 감사드린다.

64 김시봉은 제3국 브라질로 가서 무국적 이민자로 살다가 1989년 사망했다. 정병준,

박영근⁶⁵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 교원으로 임명된 흔적이 있다.⁶⁶ 또한 배뱅이굿을 잘 불렀던 명창 이은관이 포로가 되어 약 1년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것이 2013년 (구술과정을 통해) 밝혀졌다.⁶⁷

〈그림 3-2〉 82수용동의 프로그램이 암시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포로들에게 인기가 컸던 만큼 뛰어난 명창과 가수, 성악가 등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기타와 오르간 독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가 있었고, 〈그림 1〉의 배경에 보이는 82수용동의 밴드부가 가요와 민요 등을 반주했으리라는 것, 또한 포로들이 선호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레퍼토리 제목 중에 “고향”과 관련 있는 곡이 기타 솔로, 오르간 솔로, 듀엣 그리고 합창으로 4곡이나 될 정도로 포로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고향’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의 아래쪽에는 음악공연의 주요 인물이 5명 제시되어 있는데, 〈표 4〉와 같다.

-
- 2018, 「중립을 향한 ‘반공포로’의 투쟁: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76인의 선택과 정체성」, 『이화사학연구』 56집, 57쪽.
- 65 박영근은 일본음악학교에서 유학한 후, 경성에서 오페라운동을 시도했던 성악가로, 해방 공간에서 조선음악동맹의 중앙서기장으로 활약하다가 1947/1948년에 월북했다. 전쟁 중에 남하했다가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가 포로였던 전기만의 구술(2018)에는 일본 유학을 한 나이 든 음악학교 교장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COH015_02_00A0006), 박영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력으로 인해 박영근은 포로 교원으로 뽑혔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포로 송환 이후 박영근의 흔적은 묘연하다. 1950년대 북한의 음악잡지 『조선예술』, 『조선음악』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했거나, 귀환하였어도 CIE의 포로교원으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되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
- 66 전갑생, 2020,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포로수용소 설립과 포로 재교육 운영」, 부산대학교 통일연구원,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집』, 71쪽.
- 67 윤중강, 2015, 「국악살롱: 로기수와 이은관」, 월간 『춤』 통권 471호. 하지만 2013년이 된 시점에서 이은관은 이 사실을 밝히기를 꺼렸다고 한다. 이은관은 포로 신분에서 벗어난 후 국악인의 대거 월북으로 공백이 컸던 한국 국악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표 4〉 82수용동 음악공연의 주요 인물

리더: 김성윤, Kim Sung Yoon
아나운서: 안철, An Chul
지휘자: 도경학, To Kyung Hak
오르간: 한순민, Han Sun Min
기타: 김영돈, Kim Yung Toon

이 중에서 리더 김성윤은 82수용동 문화부에서 1951년 8월 1일 창간한 『문화신문』의 발행인이었던 것으로 보아 ‘포로 대표’이고, 아나운서 역할을 맡은 안철은 『문화신문』의 주필이었다.⁶⁸ 오르간 연주자 한순민의 생일이 1930년 12월 28일이 맞다면, 그는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의 전사 포로(PVT)였다.⁶⁹ 지휘자 도경학과 기타리스트 김영돈은 지금까지 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아쉽게도 스페인 가곡과 나폴리 민요를 누가 불렀는지, 대중가요 가수나 경기민요 명창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2. 라이브 음악공연의 선전적 효과

이렇게 포로들이 직접 노래하고 연주하여 만들었던 라이브 공연은 CIE 당국이 제공하는 레코딩 음악과는 다른 방식으로 심리전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곧 음악 레퍼토리 자체보다는 포로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1951년 포로들이 자체로 생산하는 프로그램 중 인기가 높았던 것은

68 『문화신문』, 1951.8.1.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전시관 전시회 〈캠프 넘버원, 거제도 포로의 일상〉(2021.10.15.~2022.3.31.). 자료의 도움을 주신 거제시청의 이진욱 학예사와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전시관 정지연 학예사에게 감사드린다.

69 포로번호 0002000/HAN SUN MIN/계급PVT/처리상태ESC/처리일자1953-06-18/생년월일 1930-12-28/아버지 성명 N/A/통지자 주소 PYUNG BUK SIN UE JU NOO CHAE RI #66 (평북 신의주 누채리 66).

1951년 12월 프로그램 개편 시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1952년 3월 초(3.1.~7.)의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중간보고서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월요일에는 <KBS뮤직 홀>이라는 타이틀로 63수용동 밴드와 보컬이 30분간 공연하였고, 수요일은 <컴파운드 리뷰>라는 타이틀로 65수용동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직접 만든 악기로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금요일은 <버라이어티쇼>라는 타이틀로 91수용동 오케스트라와 보컬리스트의 음악 공연이 방송을 탔다.⁷⁰ 포로들의 관심을 끄는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은 포로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포로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흥겨운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오락을 즐기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라디오를 당국의 일방적인 권력자의 매체로 인식하기보다 포로들이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친근한 매체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대다수 포로들에게 강압적인 CIE의 오리엔테이션 수업보다 친미 반공적 선전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포로들이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자체가 포로들에 대한 심리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각 수용동에서는 공연준비를 위해 음악수업과 리허설 등 할 일이 많아지고, 포로들이 직접 참여하는 라이브 음악방송은 많은 동료 포로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때문에, 포로들 간의 폭력이나 시위할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1951년 8월 15일자 주간 방송보고서에서도 포로들의 시위와 폭력사건이 방송시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코멘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날 “방송이 끝난 후 62동에서 27명이 다치고 한 명이 살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¹ 또한 8월

70 “Second Interim Report”, Table E.

71 “Weekly Reports Radio”, 1951.8.15. 주영복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적고 있다. 주영복, 1992, 앞의 책, 279쪽. 이 사건은 8.15 제창사건을 암시하는데, 부산포로수용소에서 같은 날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산포로수용소의 8.15 제창사건의 사상자 수에 대한 보고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사상자 수가 다르다. 사망 6명, 부상자 24명이 발생하여 사상자 수가 총 30명이라는 것은 국제적십자 조사단의 비에리 보고서의 것이다(전갑생,

16일에도 방송 후, “6구역의 포로들이 칼을 조립하면서 쿵쿵대며 흥분한 상태”였고, “특히 65수용동에서는 매일 밤 방송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폭동이 있었다”고 한다.⁷²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예 처음부터 방송기기를 파괴하고 방송을 차단했던 66수용동의 ‘친공’ 인민군 장교들은 라디오 방송의 심리전 효과를 잘 간파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용소 당국의 입장에서는 포로들이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일수록 시위, 폭동,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CIE 라디오방송부가 포로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특별 프로그램에서도 잘 나타난다. 1952년 3월 1일의 예를 들면, ‘송환’, ‘미송환’ 포로 모두 관심이 있었을 ‘삼일절’ 특별방송은 「삼일 정신」과 「독립선언문」 낭독과 슈베르트의 가곡 연주 및 삼일절 노래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는데,⁷³ 많은 포로가 화성기 앞에 모여 귀를 기울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1951년 초기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라디오 방송 음악의 중요한 역할은 오락과 선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락을 통한 선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을 통한 선전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및 정치적 성격이 짙은 CIE 오리엔테이션 수업 프로그램의

2020, 앞의 글, 64쪽). 8.15 해방일에 인민군 포로나 남방 의용군 포로가 8.15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수용소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노래에 대한 수용소 당국의 민감한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1952년 12월 봉암도 사건은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72 “Weekly Reports Radio”, 1951.8.16.

73 “Second Interim Report”, Table E, p. 4.

내용⁷⁴과는 다른 차원에서 고찰해보아야 그 의도가 드러나는데, 음악방송을 통한 오락과 선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오락의 의미는 포로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매일 무료로 수용소 외곽에서 경비를 서야 하는 유엔군, 국군 경비병 및 미군 인력 등도 수용소 전체에 울려 퍼지는 확성기의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 재즈 음악과 유명 팝음악은 유엔군에게 오히려 오락과 위안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⁷⁵ 반면, 포로들에게 낯선 재즈음악이나 세미클래식음악, 특히 왈츠음악은 ‘자유세계’를 상징하는 청각 이미지로서 각인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포로들에게 실제로 오락과 위안의 역할을 했던 것은 이런 레코딩 음악보다 동료 포로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한국 대중가요나 전통음악이었다. 이런 친숙한 음악에서 포로 생활의 고달픔과 불안을 잠시 잊을 수 있고, 고향 노래에서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초기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장르별 세분화가 되지 않은 채, 클래식, 세미클래식, 대중음악의 세 장르가 혼합된 상태였지만, 나름대로 심리전도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터키 행진곡〉이나 〈죽음의 속박에 놓인 그리스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특정 음악이 특정 사건을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전의 효과를 줄 수 있다. 〈터키 행진곡〉이 한국전에서 용맹을 떨친 터키 군대를 떠올리게 하거나, 바흐의 칸타타 〈죽음의 속박에 놓인 그리스도〉가 미군의 정보원으로서 활약하던 ‘반공’ 포로의 살해 사건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승리에 대한 희망이나 죽은 이에 대한 애도 등 무언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음악방송의 심리전 기능은 포로들이 라디

74 예를 들면, 1951년 8월 20일 ‘소련과 중공의 알력’에 관한 한국어 뉴스 방송처럼,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권력다툼에 대한 코멘트에서 반공산주의적 의도가 분명하다. “Weekly Reports Radio”, 1951, 8, 20.

75 유엔군들의 휴식 시간에는 따로 유희과 오락이 제공되었지만, 잦은 폭동과 시위로 긴장감이 팽팽한 경비병들이 근무시간에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 완화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 매체에 친숙함을 느끼고 방송 청취와 방송 프로그램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은 포로가 자유 의사에 따라 라디오 방송 듣기를 좋아하게 될수록 라디오의 선전기능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CIE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직접적인 반공 선전 프로그램으로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 결국 1952년 5월에 중단되었던 것과 달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1953년 9월 22일 마지막 포로가 판문점으로 떠날 때까지 유지되었다. ‘친공 측’ 자료를 통해 더 연구되어야겠지만, 송환을 원했던 대다수 포로에게도 라디오는 유익하고 친근한 매체로 여겨졌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라디오가 포로들에게 친근한 매체로 여겨지는 것은 이것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방송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라디오 방송부 책임자 베나르 쿠퍼도 논문에서 서술했듯이, 보다 많은 포로가 ‘송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⁷⁶ 실제로 공산 측은 휴전협상에서 송환거부 포로가 1만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포로의 송환 심사에 동의했지만, 결과는 비송환포로가 (송환포로 8만 3,000보다 많은) 총 8만 7,000여 명으로 예상을 뛰어넘었다.⁷⁷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음악에만 집중하여 서술하다 보니, 거의 매일 발생했던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시위와 폭동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우려가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포로 간의 폭력과 살인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밤사이엔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 자체를 거부했던 62수용동과 66수용동의 존재는 1952년 4월 밤낮으로 시위와 폭동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과도 관련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1952년의 방송 음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추후 이어져야 할 것이다.

76 Bernarr Cooper, 1956, 앞의 글, p. 7.

77 조성훈, 2010, 앞의 책, 423쪽; M. Lee Osborne, 1981, 앞의 책, p. 39.

참고문헌

자료

- “전기만 구술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문서번호 COH015_02_00A0006.
- “Interim Report on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OW’s”,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문서번호
AUS009_45_00C0001.
- RG 111, SC-Box 812- 382451,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도서관.
-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2003, 국사편찬위원회 전
자사료관 문서번호 53-11740.
- “Second Interim Report on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OW’s”,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문서번호
AUS009_45_00C0001.
- “Weekly Reports Radio”, Reports Broadcast 8/18/1951~10/5/1951, Entry A1 108,
Box 1, RG 554.

단행본

- 김종호, 2011, 『하나님을 그린 노화백의 이야기(한 거제도 반공포로의 삶)』, 영상복음미
디어.
- 성강현, 2021, 『6·25전쟁 시기 포로수용소와 포로들의 일상생활』, 선인.
- 알리 데니즐리저, 이선미 옮김, 2014, 『터키인이 본 6.25전쟁. 1950-1953』,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이한, 1952, 『거제도일기 석방포로들의 피의 기록』. 국제신보사.
- 조성훈, 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 주영복, 1992,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2권』, 고려원.
- _____, 1993, 『76인의 포로들: 第3의 選擇』, 대광출판사.
- Beyer, Susanne, and Doerry, Martin, 2015, »*Mich hat Auschwitz nie verlassen*«:

Überlebende des Konzentrationslagers berichten - Ein SPIEGEL - Buch,
Deutsche Verlags-Anstalt.

Osborne, M. Lee, 1981, *Life has Loveliness to Sell, A Sort of Autobiography*
(Edward Freimuth Collection), Okinawa Natioanl Archive, Chapter 11.

논문

고바야시 소메이, 2018, 「M. L. 오즈본의 포로교육경험과 실전사(Trans-War History)로서의 심리전」, 『이화사학연구』 56집.

김진우, 2013, 「6·25전쟁기 터키군 참전에 관한 연구-참전 동기와 군우리 전투를 중심으로」, 『군사』 87호.

윤중강, 2015, 「국악살롱: 로기수와 이은관」, 월간 『춤』 통권 471호.

이경분, 2020, 「6.25전쟁기 거제포로수용소의 음악: 냉전이데올로기와 노래」, 『군사』 제117호.

전갑생, 2020,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포로수용소 설립과 포로 재교육 운영」, 부산대학교 통일연구원,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집』.

정병준, 2018, 「중립을 향한 '반공포로'의 투쟁: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76인의 선택과 정체성」, 『이화사학연구』 56집.

최혜린, 2017, 「6.25전쟁기 미군의 포로 정책의 전개 양상: 전범조사부와 민간정보교육국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rnarr Cooper, 1956, "Radio Broadcasting to Chinese and Korean POW's: A Rhetorical Analysis", Diss. Standford University.

기타 자료

군사편찬연구소 DB, <https://www.imhc.mil.kr/cop/search>

전기만 구술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The Turkish Bridgarde", <https://web.archive.org/web/20080917031845/http://www.korean-war.com/turkey.html>

포로를 향한 음악

-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기 라디오 방송음악과 프로파간다 -

이경분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의 음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포로들이 직접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연주하는 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CIE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악대 및 밴드를 만들어 연주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방송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포로들의 유희를 위한 즉흥적인 음악연주나 시위를 위한 노래, 친공 vs 반공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포로의 육성 노래 등으로 상상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CIE에 의해 통제되는 음악인데, 무엇보다도 라디오 음악이 대표적이다. 라디오를 통한 음악, 즉 ‘포로를 향해 보내는 음악’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일본에서 구매해 온 음반의 음악 및 부산의 중앙방송(HLKA)에서 픽업(pick-up)해 온 것으로 ‘레코딩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포로들이 직접 생산하여 확성기를 통해 내보내는 ‘라이브(녹화) 방송음악’이다. 라디오 방송은 1951년 7월 실험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방송 프로그램이 보완되었고, 1951년 12월 중순 ‘프로그램

의 재편성' 이후 1952년에는 한국어 방송이 하루 4시간까지 늘어날 정도로 프로그램은 질적, 양적으로 발전했다.

이 글에서는 CIE에 의해 통제되는 포로를 위한 방송음악을 레코딩 음악과 라이브 방송음악으로 구분하여, 음악의 프로파간다적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서는 특히 방송 재편성 이전인 초기 1951년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그 이유는 방대한 내용과 자료를 하나의 논문에 담기에 역부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전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를 잘 엿볼 수 있으며, 음악을 통한 포로 재교육의 의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디오 음악방송은 오락을 통한 심리전의 수단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주제어: 거제도 포로수용소, CIE 재교육, 라디오 방송, 심리전, 라이브 음악공연 방송

ABSTRACT

Radio Broadcasting Music for POW's: A Study on Music Propaganda of Early Radio Broadcasting at Koje POW Camp

Lee Kyungboon

Until today, music performances have been rarely studied at Koje POW camp.

Music ther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music played by prisoners' needs and desires, and the other is broadcast music played as a CIE program or played through radio loudspeakers. The former can be imagined mainly as improvised musical performances for the entertainment of prisoners, or songs for demonstrations etc.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music controlled by CIE, above all radio music. Music through radio can be divided into two forms again, one is music from albums purchased in Japan and pick-up from Busan's Central Broadcasting HLKA, which can be called "recorded music." The other is "live broadcast music" produced by the prisoners themselves and sent through the loudspeakers.

Radio broadcasting began experimentally in July 1951, and broadcasting programs were supplemented and gradually increased, and af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gram in mid-December 1951, the broadcasting programs were diversified and operated stab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role of music by dividing broadcast music for prisoners controlled by CIE into recorded music and live broadcast music.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focus on early broadcasting music programs, because, above all, in the early, 1951, various experimental attempts were made, so it could be regarded, that the intention of radio program should be more directly revealed than later, 1952. In conclusion, it can be summarized that radio broadcasting music contributed not only to entertainment but also to psychological warfare.

Keywords: Koje POW camp, CIE(Civil Information & Education), Re-education, Radio broadcasting, Psychological warfare, Live music performance broadcast

중국사 연구에서 문화적 접경 연구의 필요성

– 중국의 ‘성씨공정(姓氏工程)’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중심으로

안광호 |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 I. 머리말
- II. 접경사 연구의 현황과 한계
- III. ‘성씨공정(姓氏工程)’과 문화적 접경 연구
- IV. 맺음말



I. 머리말

접경사 이론은 2000년대 한국 역사학계가 주변국들과 ‘역사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한국 역사학계는 1990년대부터 일본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 중국과 고구려·발해에 대한 역사 주권 문제 등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역사적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유행하던 접경사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접경사 이론이 한국 역사학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아마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사학계는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국가 주권’과 ‘역사 주권’의 충돌로 파악하고, 이를 접경 공간의 설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였다.¹ 그 후, 한국 역사학계에는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은 물론, 동북아시아 안의 역사 갈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갈등과 같은 유럽 사회의 역사 갈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²

한국 역사학계에서 접경사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2017년 이후 크게

* 투고: 2022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11일, 재심사 완료: 2022년 5월 24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25일

- 1 임지현 엮음, 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변경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다-』, 휴머니스트.
- 2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차용구, 2008,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접경지역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3, 전북사학회; 김승렬 외, 2008,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한운석 외, 2008,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동북아역사재단; 에드가 볼프룸 저, 이병련·김승렬 옮김, 2007, 『무기가 된 역사-독일사로 읽는 역사전쟁-』, 역사비평사.

발전하였다. 중앙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의 도움을 받아 2017년에 접경인문학연구단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이 연구단에서는 접경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물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으며, 서양의 접경사 관련 서적을 번역하여 한국학계에 소개하기도 하였다.³ 2017년 이후 접경사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접경 공간을 ‘외적 공간’과 ‘내적 공간’으로 분리하여 접경사 연구의 시각을 넓혔다는 사실일 것이다.⁴

그러나 지금까지 접경사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외적 접경’ 연구, 즉 ‘공간적 접경’ 연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간적 접경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다소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내적 접경’, 즉 ‘문화적 접경’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통시대적 고찰이나 비교사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접경사 연구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적 접경과 내적 접경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적 접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글에서는 한·중 간의 역사 갈등으로 남아 있는 ‘성씨공정(姓氏工程)’이라

-
- 3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연구단 기획, 2019, 『접경 공간의 형성-조우와 충돌-』, 소명출판;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연구단 기획, 2020, 『접경의 기억-초국가적 기억의 장소를 찾아서-』, 소명출판; Yongku Cha et al., 2020, *The borderlands of China and Korea: historical changes in the contact zones of East Asia*, Lanham : Lexington Books; 존 W.I. 리·미하엘 노스 지음, 중앙대·한국외대 HK+ 접경인문학연구단 역, 2020, 『유럽과 북미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 소명출판; 프레더릭 잭슨 터너 지음, 손병권 옮김, 2020, 『미국사와 변경』, 소명출판. 이 이외에도, 2000년대에 들어 한국 역사학계의 커다란 반향을 가져온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ory)의 입장에서 접경을 다룬 연구도 있다.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7, 『제국과 변경』, 해안;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8, 『변경과 경계의 동아시아사』, 해안.
- 4 접경인문학연구단에서는 ‘접경 공간을 크게 외적 접경과 내적 접경으로 나누고, 외적 접경과 내적 접경을 아우르는 연구를 접경인문학으로 정의한다는 표현을, 사업단 홈페이지는 물론 그들의 연구 성과 서두에 나오는 발간사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본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는 문제를 가지고 문화적 접경 연구의 필요성, 즉 내적 접경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성씨공정이란 한국 성씨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중국 관련 기록을 통해서 한국인의 조상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주장하는 중국학계의 견해이다. 이 성씨공정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의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성씨공정으로 인한 역사 갈등이 접경사적 시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또한 한국 접경사 연구의 한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접경사 연구의 현황과 한계

1. 접경사 연구의 도입

접경 공간에 관한 이론은 1990년대 초반에 메리 루이스 프랫(Mary Louise Pratt)에 의해 처음으로 이론화되었고, 이후 역사학에서 이 이론을 도입하여 접경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역사 현상을 다루게 되었다.⁵ 최근에 출판된 한 접경사 연구에 따르면, 접경사에서 말하는 접경 공간은 국가의 변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물리적 접경 공간과, 계급 간의 양식·종교적 신념·문화적 관행 등이 부딪히는 개념적 접경 공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⁶

접경사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크게 활기를 띠었다. 1960~70년대에는 ‘전체 사회사(History of Society)’가 역사학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1980년대에는 이에

5 반기현, 2017, 「'접경사'의 정의와 연구 방법론의 적용」, 『중앙사론』 4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197쪽.

6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연구단 기획, 2019, 앞의 책, 7~8쪽; 존 W.I. 리·미하엘 노스 지음, 중앙대·한국외대 HK+ 접경인문학연구단 역, 2020, 앞의 책, 18쪽.

대한 반감으로 ‘일상생활사(History of Everyday Life)’가 나타났으며, 1990년대에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신문화사(New Cultural History)’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사(World History)’, ‘지구사(Global History)’,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ory)’ 등과 함께 ‘접경사(History of Contact Zones)’도 널리 유행하였다.⁷

접경사 연구는 근대 민족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근대성’에 대한 반감으로 출현하였으며, 접경 공간을 일국사적 시각이 아닌 초국가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⁸ 200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역사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유럽 중심의 단선적인 근대성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원적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다.⁹ 또, 민족주의에 기반한 일국사적 시각을 넘어서 초국가적인 관점을 추구하고, 이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근대 국가에 의해 형성된 국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애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다양한 이론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대학 내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소와 그 성과를 언급해보면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와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의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ory),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로컬리티(Locality) 인문학,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횡단적 역사학과 서발턴(Subaltern) 연구, 그리고 중앙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의 접경사 연구가 그것이다.

7 정현백, 2008,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가능성과 한계」, 『역사교육』 108, 역사교육연구회, 187~188쪽(이찬행 외, 2015, 『횡단적 역사 담론의 형성』, 선인. 재수록).

8 차용구, 2018, 「국경(Grenze)에서 접경(Kontaktzone)으로-20세기 독일의 동부국경 연구-」,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302쪽.

9 조지 이거스 지음, 임상우·김기봉 옮김, 2003,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36~37쪽.

이 시기 새롭게 도입한 역사 이론들은 한국 역사학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역사학계는 일본 역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과는 또다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라는 시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 역사학의 체계는 경성제국대학에 사학과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사회를 비교하는 비교사적 연구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시대적으로 바라보는 통시대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¹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역사 이론이 도입되면서 비교사적 연구나 통시대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다양한 역사 이론들이 한국 역사학계에 도입된 이후, 그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역사 이론이란 역사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기 위하는 일종의 방법론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역사 이론을 표방하는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새롭게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방법에 새로운 인식론만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새로운 역사 이론을 도입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근대에 관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역사 이론을 도입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그 주제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 연구들의 시각은 언제나 ‘근대성’에 대한 고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 이론이 한국 역사학계에 도입된 이후, 이상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이론들의 대부분이 서구 역사학계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19세기 근대 역사학이 등장한 이후 서구 역사학계에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럽 중심적인 역사 서술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근대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10 김기봉, 2015, 「글로벌 시대 한국 역사학의 해체와 재구성-한국사·동양사·서양사 3분과 체제의 역사화를 위하여-」,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9쪽.

이에 비하여, 한국 역사학계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보다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역사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국 역사학계는 태생적으로 강력한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로는 민족주의적 연구에 기반한 한국사 분과가 역사학계의 절대적인 주류를 형성하면서 민족주의적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이후에 들어서야 지나친 민족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근대성을 성찰하는 연구는 풍족한 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접경사 이론 연구 현황

사실, 접경사 이론을 한국 역사학계에 소개하였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대다수가 서양사 전공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 접경사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되어 그 영역을 차츰 확대해 오다가, 2017년 중앙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접경인문학연구단이 설립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접경사 이론은 주로 서양사 전공자들에 의해 한국 역사학계에 소개되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역사학계에 접경사 이론을 소개한 연구자는 대략 13명에 이른다. 이 13명의 연구자 가운데 9명은 주로 서양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동양사와 한국사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동양사 연구자는 동양사 분과 안에서도 주로 중국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한국사 연

〈표 1〉 접경사 이론 연구자와 분과 구분

분과	인원
서양사	9
동양사	1
한국사	3
총	13

구자는 각기 고대 시기, 조선 시대, 그리고 근대 시기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위 표에 나오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한국 역사학계에 도입된 역사 이론들과 함께 접경사 이론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접경사 이론은 새롭게 도입된 역사 이론 가운데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역사학계에서 핵심적 이슈가 되었던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와 함께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접경사 연구, 또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접경사 연구를 소개하였다.¹¹

하지만 이상의 연구자들 속에는 접경사 이론의 독자적인 영역을 밝히고, 접경사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을 설명하며,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사람들도 있다.¹² 이 연구자들의 성과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접경사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 이론을 자신의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중국사와 한국사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구 분야에 접경사 이론을 적용하였다.¹³

1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진일, 2010, 「주권-영토-경계:역사의 공간적 차원」, 『사림』 35, 수선사학회.(이찬행 외, 앞의 책, 재수록); 오경환, 2012, 「“트랜스내셔널” 역사:회고와 전망」, 『한국사학사학보』 25, 한국사학사학회(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7,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으로의 초대』, 한양대학교 출판부, 재수록); 박혜정, 2015, 「변경에서 중심 읽기-변경에서 보는 유럽 근대 국가와 유럽연합」, 『역사학보』 228, 역사학회(한양대학교 비교역사연구소 기획, 2017, 앞의 책, 재수록); 정현백, 앞의 글; 김택현, 2001, 「비교사를 다시 생각함-섭알턴 연구(Subaltern Studies)의 관점에서-」, 『영국연구』, 영국사학회.

12 크리스 윌리엄스, 「변경에서 바라보다-근대 서유럽의 국경과 변경-」, 임지현 엮음, 앞의 책; 차용구, 2008, 앞의 글; 차용구, 「국경Grenze에서 접경Kontaktzone으로-20세기 독일의 동부 국경 연구 동향-」,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 연구단 기획, 2019, 앞의 책; 차용구, 「서양 중세의 국경과 여성을 둘러싼 기억전쟁-마이센의 백작부인 우타와 레글린디스-」,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 연구단 기획, 2020, 앞의 책; 반기현, 2017, 「“접경사”의 정의와 연구 방법론의 적용」, 『중앙사론』 4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반기현, 2020, 「유럽과 북미에서의 접경시대 연구 동향과 서사의 확장성-『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시대 연구의 세계화』 읽기-」, 『대중서사연구』 26-2, 대중서사학회.

3. 중국사에서 접경사 연구

한국 역사학계에는 접경사 이론을 소개한 연구 이외에도, 접경사 이론을 실제 연구에 적용한 사례도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 중국사 분야에서 접경사 이론이 적용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접경인문학연구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중국의 주대(周代), 수(隋)·당대(唐代), 송대(宋代), 청대(清代), 민국(民國) 시기와 현대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고대에 관한 연구로는 서주(西周) 시기 태행산맥(太行山脈) 동쪽의 중국 접경에 관한 연구와, 춘추(春秋) 초기 중국 서부와 북부의 접경을 살핀 연구가 있다.¹⁴ 수·당대에 관한 연구로는 고구려와 발해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당대(唐代) 특수 지역의 접경 공간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다.¹⁵ 송대에 관해서는 서하(西夏), 거란, 몽골과 같은 이민족 왕

-
- 13 김선민, 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여진-만주족과의 조선의 관계-」, 『만주연구』 15, 만주학회; 이대화, 2017, 「한국사 연구에서 ‘접경 시대’ 연구 가능성의 시론적 검토-조선시대 및 근현대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4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김선주, 2017, 「한국 고대사에서 ‘접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앙사론』 4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윤해동, 2017, 「한국 변경사 연구 시론-지대, 선, 영토-」,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8, 앞의 책, 재수록) 이 외에도, 서양사의 관점에서 중국의 변경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 박혜정, 2017, 「변경에서 보는 청 제국-북서부 스텝과 동남 해안의 사이에서-」, 『역사학보』 236, 역사학회(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8, 앞의 책, 재수록).
 - 14 민후기, 2019, 「西周 중, 후기 太行산맥 동쪽의 접경의 변화-有銘 청동기 출토 정황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1, 중국고중세사학회; 민후기, 2019, 「燕의 형성 전후 접경의 변화-商 후기, 西周 초기 太行山脈 동쪽 출토 청동기 銘文의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63, 동북아역사재단; 민후기, 2020, 「춘추초기 서, 북의 族國들과 접경-有銘 청동기의 출토지와 銘文을 중심으로-」, 『한국고중세사연구』 56, 한국고중세사학회.
 - 15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여호규,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의식」, 『한국고대사연구』 88, 한국고대사학회; 정동민, 2018, 「598년 고

조와의 접경을 고찰한 연구와, 북방 민족인 김(金)이 화북(華北) 접경을 지배해 가는 과정을 그린 연구가 있다.¹⁶

또, 청대에 관한 연구로는 만주족에 관한 연구가 크게 주목되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신청사(新淸史)’의 영향으로 생각된다.¹⁷ 청대에 관한 연구에는 몽원사(蒙元史)에 관련된 연구도 있다.¹⁸ 민국 시기와 현대에 관한 연구로는 대만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중국의 의회제도 개설과 독일의회제도의 영향, 방호(方豪, 1910~1980)의 『중서교통사(中西交通史)』의 역사적 의미, 중경임시정부의 여성 문제, 한국 전쟁 중 생포된 중국군의 생환, 현대 중국의 노동조합 등에 관한 성과가 있다.¹⁹

句麗-隋 전쟁의 배경과 충돌 양상-접경공간인 遼西地域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이성시, 「동북아시아 변경의 역사-발해사의 배타적 점유를 둘러싸고」, 임지현 엮음, 앞의 책.

- 16 이근명, 2018, 「11세기 중반 宋-거란의 접경 지역을 둘러싼 충돌과 외교 교섭」,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이근명, 2019, 「13세기 초 남송-몽골의 연맹과 端平入洛」, 『역사문화연구』 7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이근명, 2020, 「11세기 중반 宋-西夏의 대립과 和約 체결」, 『역사문화연구』 7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이근명, 2021, 「12세기 중엽 金의 국가구조와 화북 지배」, 『중앙사론』 5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17 김선민, 2015,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만주학회(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7, 앞의 책, 재수록); 구범진, 2009, 「19세기 성정 동변의 산장의 관리와 조.청 공동회초」, 『사림』 32, 수선사학회(동북아역사재단 기획, 2009, 앞의 책, 재수록).
- 18 조원, 2015, 「17~20세기 몽원사 연구에 나타난 청 지식인들의 ‘몽골제국’ 인식-『元史類編』, 『元史新編』, 『新元史』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74, 한국중국학회(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7, 앞의 책, 재수록).
- 19 대만에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준식, 2020, 「접경 속의 접경-戰後 臺灣의 眷村 형성과 관리-」, 『다문화컨텐츠연구』 35, 중앙대학교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최말순, 2018, 「種族誌와 전쟁동원-일제말 전쟁기 접경지 대만의 南方담론-」,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이춘복, 2017, 「변법운동 시기 개혁파의 의회제도 개설과 立憲君主制 논의」, 『역사교육』 144, 역사교육연구회; 이춘복, 2019, 「독일유형의 의회제도 수용과 변법운동시기 康有爲의 양원제

이상과 같이 특정 시기에 관련된 연구 이외에도, 여러 시대를 통시대적으로 살펴보는 성과도 존재한다. 만주 지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 중국, 러시아의 접경 공간으로서의 ‘만주’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들은 청대부터 현대까지 넓은 시기에 걸쳐 있다.²⁰ 또 운남 지역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백족(白族)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살핀 연구도 있으며, 중국의 전통 시대에 만들어진 영웅 신화가 근대 이후 접경 지역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²¹

위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접경사에 관련된 연구는 아쉽게도 주로 ‘외적 공간’으로서의 접경 공간에만 집중되었다. 물론, 전통 중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영웅 설화가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주변의 접경 공간으로 전파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문화적 접경’ 연구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접경 연구는

의회설립 구상-독일하원과 프로이센 상원의 수용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40, 한국사학사학회; 손준식, 2020, 「方豪와 『中西交通史』-그 사학사적 의미와 한계-, 『중앙사론』 51,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정주아, 「重慶 임시정부 여성들과 위대한 일상」,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연구단 기획, 2020, 앞의 책; 이사사·손준식, 2018, 「현신의 대가-한국전쟁 중국군 포로의 귀국 이후 삶」, 『역사학연구』 72, 호남사학회; 백승욱, 2020,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가벼운 중국 노동조합은 바뀔 수 있는가-직업화 간부 중심의 선전시 노동조합 개혁-」, 『중소연구』 43-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백승욱, 2020, 「사회관리 강화를 위한 중국 노동조합의 개혁-포산(佛山)시 스산(獅山)진 S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1-4, 현대중국학회.

20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지배, 2018,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이화자,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 고승희,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은정태,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김춘선,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이상은 모두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앞의 책에 수록된 것임)

21 정면, 2016, 「大封民國과 白國」-南詔·大理 시기 ‘雲南史’ 서술과 자기인식-, 『서강인문논총』 4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7, 앞의 책. 재수록); 정면, 2017, 「白族의 탄생-『白族社會歷史調查』와 『白族簡史』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2018, 앞의 책. 재수록); 왕밍커, 「영웅, 변경을 가다-중국 전근대·근대의 상상된 변경-」, 임지현 엮음, 앞의 책.

〈표 2〉 시기 별 접경사 연구 현황

시기	주제	시기	주제
周代	- 西周代 太行山脈 동쪽의 접경 - 춘추 초기 西, 北의 族國 접경	清代	- 新淸史의 영향: 滿洲族 연구 - 청대의 蒙元史 연구
隋·唐代	- 고구려와의 관계 - 발해와의 관계 - 唐代 특수 지역의 접경 공간	民國 및 현대	- 대만 연구 - 의회제도 개설과 독일의회제 - 方豪의 『中西交通史』 - 중경 임시정부의 여성 문제 - 한국전쟁 중국군 포로의 귀환 - 노동조합 문제
宋代	- 송과 서하, 거란, 몽골과의 경계 - 金의 華北 접경 지배	통시대적 시각	- 한·중·러 접경 공간: 만주 - 雲南 소수민족 白族 - 영웅 신화의 접경 전파

접경사 연구의 전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접경인문학연구단에서는 2017년 그 출범과 동시에 ‘접경 인문학’의 범주를 크게 ‘외적 접경’과 ‘내적 접경’으로 구분한 다음, 외적 접경 연구와 내적 접경 연구가 아우러지는 작업을 접경 인문학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접경이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공간적 접경 공간’을 말하고, 내적 접경이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아우르는 ‘문화적 접경 공간’을 의미한다.

접경공간은 국경이나 변경 같은 ‘외적 접경’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인종/종족, 종교, 언어, 생활양식-간의 교차지대인 ‘내적 접경’을 동시에 아우른다. 이렇게 접경을 선이 아닌 공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접경 공간은 물리적 차원의 확장을 뛰어넘어 다양각색의 문화와 가치가 경쟁하고 공명하는 사회적 무대로 확장된다. 연구단은 이러한 접경 공간들 속에서 나타났거나 나타나고 있는 개인 및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을 ‘접경의 인문학’이라 부르고자 한다.²²

22 접경인문학연구단 홈페이지(<http://rccz.cau.ac.kr/index.php>) ‘아젠다 소개’. 이

이상과 같이 ‘문화적 접경 공간’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인문학 연구에서 문화적 접경 공간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인문학에서 문화적 접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전파와 변화 과정을 통시대적으로 고찰하는 연구와, 여러 사회의 문화를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문화적 접경을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역사학계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아직까지 풍부하게 축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적 접경 연구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시기에 한정된 연구보다는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 사회의 문화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 각 사회의 성격을 도출하는 작업을 함께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적 접경 공간을 발견하고 그 접경 공간을 통해서 ‘창조’와 ‘융합’의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성씨공정(姓氏工程)’과 문화적 접경 연구

1. 성씨공정의 실체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접경사 이론을 처음으로 도입한 분야가 고구려와 발해에 관련된 연구였다는 점이다. 고구려와 발해는 전통적으로 한국 역사에서 서술되어 왔고, 중국 역사에서는 단지 변방에 있던 이민족이 세운 왕조 정도로만 기록되었다. 하지만 중국학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따라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

이외에도,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연구단에서 2019년과 2020년에 발간한 연구 성과의 ‘발간사’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온다. 연구단의 성과에 관해서는 각주 3번을 참고하길 바란다.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역사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발해를 특정 일국의 역사로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접경 공간으로 설정하여 연구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국가 주권’과 ‘역사 주권’을 구분하고, 국가 주권과 역사 주권이 상충되는 공간을 접경 공간으로 설정하여 그 접경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 서술을 시도하자는 것이었다.²³

성씨공정은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산하에 있는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2002년에 ‘중한상관성씨족원고론(中韓相關姓氏族源考論)’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한·중 역사 갈등으로 크게 이슈화되었고, 한국인들은 이를 ‘성씨공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중한상관성씨족원고론’ 프로젝트는 요녕대학(遼寧大學) 역사계(歷史系)(-사학과) 왕아현(王雅軒) 교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중한상관성씨족원고론’은 변강사지연구중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한국 사회에 반감이 커지면서 지금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사라졌다. 한국 통일연구원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2004년에 작성된 동북공정 관련 보고서 안에는 2002년에 실시된 동북공정 가운데 하나로 ‘중한상관성씨족원고론’이 기록되어 있다.²⁴

2002년에 ‘중한상관성씨족원고론’이 시작된 이후, 중국 역사학계에는 한국

23 임지현, 「고구려사의 딜레마-‘국가 주권’과 ‘역사 주권’의 사이에서」; 이성시, 「동북아시아 변경의 역사-발해사의 배타적 점유를 둘러싸고」; 김한규,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요동과 티베트 역사공동체의 역사정 위상-」(이상은 모두 임지현 엮음, 2004, 앞의 책에 수록됨).

24 전병곤, 2004,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통일연구원, 8쪽.

의 성씨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과 한국 성씨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들이 2002년 이후로는 한국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성씨 가운데 어떤 성씨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는지를 밝히고, 그를 통해 한국인의 조상이 중국인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⁵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편의 연구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 인용문과 같다. 한 편은 1987년 한국에서 간행된 『성씨총람(姓氏總覽): 씨족(氏族) 계보(系譜)』(-京和社 편집부 편, 1987년 발행)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에는 250여 개의 성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147개 성씨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기원한 147개 성씨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중국 안에서도 ‘중원(中原)’ 지방에서 기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한 편은 한국인들 가운데 중국인의 후예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그러한 사실을 한국의 족보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 증명하려 노력하였다.

한국의 성씨 가운데 중국에서 기원한 성씨로는 賈氏, 葛氏, 甘氏 등 147개가 있는데, 그 147개 성씨 가운데에는 성씨의 모든 支派가 중국에서 기원한 경우도 있고 일부 지파만 중국에서 기원한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기원한 147개 성씨 가운데 李氏, 張氏, 陳氏 등 30개 성씨는 모든 지파가 中原에서 기원하였으며, 劉氏, 趙氏, 吳氏, 徐氏 등 28개 성씨는 일부 지파만 중원에서 기원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의 모든 성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기원하였고, 중국에서 기원한 성씨 가운데 3분의 2는 중원에서 기원하였다.²⁶

25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羅千洙·葉玲君, 2002, 「韓國姓氏傳自中國之研究」, 『韓國研究』 6, 杭州:浙江大學 韓國研究所; 王秋華, 「明萬曆援朝將士與韓國姓氏」,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년 2期, 北京: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研究所; 張炎鈺·余迎迎, 「中漢姓氏對比研究」, 『南方論刊』 2011년 9期, 茂名:廣東省茂名市社會科學界聯合會; 程吉, 「韓國姓氏與中國的淵源」, 『西部時報』 ‘2006년 11월 1일’ 자, 北京:中國西部研究與發展促進會.

26 邊鈞鈞, 「中原姓氏在韓國的傳播與發展」, 『文化萬象(理論版)』 2013년 1期, 長

조선(-북한)과 한국의 성씨는 모두 漢·唐代부터 明代의 중국에서 기원하였다. 安氏, 卞氏, 邊氏, 蔡氏, 曹氏……楊氏, 殷氏, 印氏, 禹氏, 朱氏 등의 족보에서 이를 완벽히 증명할 수 있다. 이들 족보에 따르면, 林氏, 魯氏, 柳氏, 車氏, 羅氏, 呂氏, 南宮氏, 芮氏, 王氏, 吳氏 등은 그들의 始祖가 商·周, 戰國, 秦·漢 시대에 조선으로 들어간 중국인이다.²⁷

한국에서는 이러한 중국 역사학계의 움직임을 한국에 대한 ‘성씨공정’이라 부르며 대응하였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한국 족보에 그들의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모화사상(慕華思想)과 사대주의(事大主義)에 물든 시대의 유산에 불과한 것 일 뿐, 한국의 조상이 실제로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한국 역사학계의 주요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성씨공정을 접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사학계의 주장에 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성씨공정’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과의 독도 문제, 중국과의 고구려·발해 문제와 함께 크게 이슈화 되면서 중국과의 ‘역사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실상 중국에서는 ‘성씨공정’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성씨공정’이라 부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족보상에 기재된 선조들의 관직도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고려 이래 士族들은 대개 慕華思想에 젖어 始祖의 유래를 중국에서 찾아다는 데서 현존 족보상에는 그 시조가 중국 출신이 많다. 이는 대개 후대에 와서 조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⁸

沙:湖南省作家協會, 402쪽.

27 譚汝爲, 「韓國人的姓氏」, 『尋根』2014年4期, 鄭州:大象出版社, 135쪽.

邊氏의 (중국) 渡來説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우리나라 족보의 80퍼센트는 그 시조를 중국에서 온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가문의 지위를 높이려는 사대적인 발상으로서 극복되어야 할 점이다. 그러니 변씨는 중국에서 왔다가보다는 黃州 지방의 토호 세력으로 보는 게 옳은 터이다.²⁹

현재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 망언과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어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성씨 중 일부가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성씨공정’까지 벌이고 있다.³⁰

2. 한국의 ‘동래성(東來姓)’ 현황

실제로, 한국 사회 안에는 ‘동래성(東來姓)’이라 불리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동래성은 동쪽으로부터 건너 온 사람의 후손들이 사용하는 성씨, 즉 중국에서 한반도로 건너온 사람의 후손들이 사용하는 성씨를 의미한다. 이 동래성은 일찍이 한국의 고조선(古朝鮮) 시대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 안에서 상당수의 성씨들이 스스로를 동래성이라 밝히고 있다.

그럼, 이 동래성은 한국의 성씨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앞서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250여개 성씨 가운데 147개 성씨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1992년에 한국민족문화진흥회에서 발간한 『한국성씨보감(韓國姓氏寶鑑)』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³¹ 『한국성씨보감』 안에는 모두 200개의

28 이수진,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61쪽.

29 이성무, 2015, 『변안렬 평전』, 글항아리, 73쪽.

30 『헤럴드경제』 2011년 10월 7일자 ‘중국 ‘성씨공정’에 맞서 한국인의 뿌리 연구 독보적’ 기사.

31 한국민족문화진흥회 간, 1992, 『韓國姓氏寶鑑』, 한국민족문화진흥회.

성씨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200개의 성씨에 딸린 본관(本貫)이 794개이다. 따라서 ‘동성동본(同姓同本)’을 하나의 씨족(氏族)으로 가정할 경우, 이 책에는 모두 200개 성씨, 794개 씨족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물론 한국의 씨족 가운데에는 ‘동성동본’을 하나의 씨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정도의 분량은 동시기에 간행된 한국 성씨 관련 서적 가운데 많은 분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성씨보감』은 중국에서 성씨공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출판된 책으로, 이 책이 출판될 당시에는 성씨공정을 주장하는 중국학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해인 1992년에 출판되기는 하였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성씨를 조사하여 편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책에는 한국의 성씨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는 기록, 다시 말해 한국의 동래성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가감 없이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성씨 안에서 동래성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해야 할 내용은 개성(改姓)과 분적(分籍)에 대한 원칙이다. 개성이란 성씨가 변하는 것으로, 문화유씨(文化柳氏)가 차씨(車氏)에서 개성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성의 경우에는 비록 성씨가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성씨가 동래성일 경우 그대로 동래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적이란 하나의 씨족에서 별도의 씨족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³² 예를 들면, 남평서씨(南平徐氏), 대구서씨(大邱徐氏), 달성서씨(達城徐氏)는 각기 별도의 씨족이지만, 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천서씨(利川徐氏)에서 분적되어 나왔다. 이 분적된 씨족까지 동래성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적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기 별도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성씨 가운데 스스로를 동래성이라

32 송준호, 1987,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01쪽.

〈표 3〉 『한국성씨보감』에 나오는 동래성 비율

	갯수	백분율(%)
전체 씨족	794	100
동래성(분적 미포함)	286	36.02
동래성(분적 포함)	328	41.30

밝히고 있는 성씨는 분적으로 인한 씨족까지 포함할 경우 약 41%에 이르고 있으며, 분적으로 인한 씨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3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앞서 소개한 중국학자의 통계보다는 다소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통계 역시 한국의 성씨 안에서 동래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또 『한국성씨보감』에 수록된 성씨들을 분류하다 보면, 한국의 동래성은 중국 은대(殷代)부터 청대(淸代)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한국으로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대(唐代)의 ‘안사(安史)의 난’과 ‘황소(黃巢)의 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5대10국 시기의 혼란, 발해의 멸망, 남송의 멸망과 원조(元朝)의 중국 지배 등이 동래성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동래하게 된 주요한 계기로는 왕조의 멸망과 교체, 반란 등으로 인한 정치적 정변의 발생, 사신의 파견과 배종 그리고 표류 등이 있었다.

3. 중국 남방(南方) 지역의 성씨 현황

그럼, 성씨 관련 문헌에 나오는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한국인의 상당수는 정말로 중국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에 관해서 살펴보자. 동래성은 본래 한국 족보에 나타나는 중국인의 동래(東來) 기록으로 인해 생겨난 명칭으로, 족보에 나타나는 이 기록을 가지고 중국인들이 실제로 한반도로 건너와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화로서의

성씨가 중국 지역에서 한반도로 전파되어 오는 것과, 실제 중국인이 한반도로 건너와 성씨를 전파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중국 남방에 거주하는 종족(宗族)(-한국의 씨족에 해당)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중국 남방에 거주하는 종족들에 의해 작성된 족보를 살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재미있는 사실이란, 그들의 족보들에 따르면 남방의 종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북방인의 후손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족보에 나오는 그들의 조상이 거의 대부분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복건성(福建省) 소무시(邵武市)의 종족과 그들의 족보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소무시는 복건 지역 안에서도 ‘민북(閩北)’이라 불리는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비록 시(市)단위의 도시라 칭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급(縣級) 수준의 작은 도시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필자는 소무시도서관(邵武市圖書館), 소무시(邵武市) 황씨연의회(黃氏聯誼會), 화평구진(和平舊鎮)에 있는 민가, 화평진(和平鎮)의 민가, 그리고 소가방진(蕭家坊鎮)의 민가에 소장된 14개 성씨, 29종의 족보(-책 수로는 90책, 105권에 해당)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소무시주요성씨원류고(邵武市主要姓氏源流考)』라는 책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무시주요성씨원류고』는 소무시도서관에서 주관하여 편찬한 것으로, 소무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종족들 가운데 주요 종족들의 성씨와 역사를 조사하여 정리한 책이다.³³ 이 책 안에는 모두 26개 성씨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종족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조상이 북방에서 내려 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위하여 스스로를 ‘객가(客家)’라 칭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³⁴

33 邵武市圖書館 편, 2009, 『邵武市主要姓氏源流考』, 邵武:邵武市圖書館.

34 邵武市圖書館 편, 위의 책, 3쪽.

이처럼 남방의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북방에서 내려 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현상은 비단 소무시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남방 일대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두 가지 기록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청대에 활동하였던 전대흔(錢大昕, 1728~1804)의 저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있는 마이클 쏘니(Michael Szonyi)의 저술이다.

전대흔은 고증학에 관한 저술을 많이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십가재양신록(十駕齋養新錄)』은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과 함께 청대 고증학의 대표적인 저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십가재양신록』 안에는 중국의 군망제도(郡望制度)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다. 군망제도는 중국 한대(漢代)에 출현하여 당대(唐代) 말기까지 지속된 사회적 제도로서, 자기 조상이 망족(望族)으로 활동한 지역의 지명을 자신들의 성씨 앞에 계속해서 칭하는 일종의 관습을 말한다.³⁵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군망을 통해 중국 고·중세 시기 종족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도 한다.

전대흔은 청대 ‘오중(吳中)’ 지역(-오늘날 江蘇省 일대)의 종족들이 그들의 성씨와 함께 특정 지역의 지명을 계속해서 칭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의 군망제도는 당대(唐代) 말기 이후로 사라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중 지역의 종족들은 그들의 가계 기록 안에 계속해서 군망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대흔은 오중 지역의 종족으로 왕씨(王氏), 이씨(李氏), 장씨(張氏), 유씨(劉氏), 주씨(周氏), 고씨(顧氏), 주씨(朱氏)를 언급하였는데, 이 성씨들이 칭한 군망은 모두 북방에 위치해 있는 지명이거나, 또는 북방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마이클 쏘니는 중국의 종족에 관한 연구자로서, 현재 영미권의 연구자 가운데

35 王昶, 『金石萃編』卷88 潘智昭墓誌銘, 『續修四庫全書』889책, 199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8쪽; 岑仲勉, 2004, 『唐史餘藩(外1種)』, 北京:中華書局, 229쪽.

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 종족에 관한 3권의 저술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들은 모두 복건과 대만에 거주하는 종족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실체로서의 종족(Practicing Kinship)』은 복건성 복주시(福州市) 남대(南臺)섬에 살고 있는 종족을 조사한 것이다. 쏘니는 이 책에서 개념적인 종족의 모습과 실제적인 종족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이클 쏘니는 남대섬에 살고 있는 17개 성씨의 종족을 조사한 후에 이 종족들이 사용하는 성씨에 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대섬에 살고 있는 종족들은 청조(淸朝)의 적극적인 한화정책으로 인해 중국적 질서에 편입된 사람들로, 이들이 사용하는 성씨는 그들이 중국적 질서에 편입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작성한 족보에는 그들의 조상이 북방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5대10국 시기에 하남(河南) 고시(固始)(-오늘날 하남성 固始縣)에서 살다가 복건으로 내려와 ‘민국(閩國)’을 건설하였던 왕심지(王審知)(862~925)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송대 이후로는) 선비들이 顯達하여 다른 지역에 寓居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郡望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된 지가 5~6백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오직 민간의 文獻에서는 하나같이 이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王氏의 경우에는 반드시 琅琊를, 李氏의 경우에는 반드시 隴西를, 張氏의 경우에는 반드시 清河를, 劉氏의 경우에는 반드시 彭城을, 周氏의 경우에는 반드시 汝南을, 顧氏의 경우에는 반드시 武陵을, 朱氏의 경우에는 반드시 沛國을 칭하였다. 자기 조상이 누구이고, 어디로 이사하였는지를 묻지 않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풍속이 매우 가소롭다.³⁶

36 錢大昕, 『十駕齋養新錄』卷12 郡望, 『續修四庫全書』1151冊, 1995,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41쪽.

오늘날 남대섬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북방인 河南省 固始縣에서 왔으며 아주 먼 옛날에 王審知를 따라 북진으로 이주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또, 노인들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은 그 내용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고, 또는 적어도 문화대혁명 이전까지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그들이 북방에서 이주해 온 인물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족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는 그 중에서 몇 개의 기록을 찾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하남성에 살고 있는 동일 성씨 집안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들의 성씨가 북방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은 북주 지역에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³⁷

이상에서 소개한 중국 남방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해 복건성 소무현의 종족들이 스스로를 북방인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모습, 청대 오중 지역의 종족들이 자신들의 군망으로 북방의 지명을 칭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청대 복건 북주 남대섬의 종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북방 지역인 하남에서 왔다고 믿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남방의 종족들이 스스로를 북방인의 후손이라 믿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성씨공정과 문화적 접경 연구

그럼 우리는, 마치 한국의 족보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서 한국인의 상당수가 중국인의 후손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중국 남방의 족보에 나오는 기록에 따라 남방인들의 상당수 또한 북방인들의 후손이라 믿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북방인이 실제로 남으로 내려 왔다가보다 성씨라는 문화가 남으로 전파되는 과정

37 Michael Szonyi, 2002, *Practicing kinship: lineage and descent in late imperial China*, pp26~2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에서 북방인과 연결되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족보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문화의 전파’와 그 전파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접경 공간’의 현상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화가 발전한 지역에서 하나의 문화가 생겨나면 그 문화는 일반적으로 인접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는데, 그 문화를 수용한 인접 지역에서는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접경 공간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문화적 접경 공간 안에서는 원래의 문화와는 다른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두고 접경사에서는 ‘문화 접변’이라 부르고 있다.³⁸

‘한자식(漢字式) 성씨(姓氏)’라 불리는 문화가 중국의 ‘중원(中原)’ 지역에서 생겨나 인접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인접 지역의 문화적 접경 공간 안에서 문화 접변 현상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식 성씨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자식 성씨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천자건덕(天子建德) 인생이사성(因生以賜姓) 조지토이명지씨(胙之土而命之氏)”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³⁹ 즉, 천자(天子)는 유덕(有德)한 사람을 등용하면서 그 출신지에 따라 ‘姓’을 주고, 제후(諸侯)에게는 봉토(封土)를 하사하면서 그 봉토의 지명에 따라 ‘씨(氏)’를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과 씨는 모두 황하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 지방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중원에서 출현한 성과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용 계층과 지역을 점차 넓혀갔다. 그러다가 전국(戰國)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과 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과 씨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씨 합이위일(姓氏合而爲一)”, 즉 성과 씨를 구분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성과 씨를

38 반기현, 2017, 앞의 글, 198쪽.

39 李學勤 主編, 1999, 『春秋左傳正義』, 北京:北京出版社, 112~115쪽.

합쳐 성씨(姓氏)라 칭하는 관행이 생겨나게 된다.⁴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씨는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역사에서는 이를 두고 ‘한자식(漢字式) 성씨(姓氏)’ 또는 ‘중국식(中國式) 성씨(姓氏)’라 칭하고 있다. 전국 시대에 출현한 성씨 역시 그 이전 시대의 성과 씨가 그러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사용 계층과 지역을 넓혀 갔다.

한자식 성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 북방 일대에 전파되었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인접 지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갔다. 비록 인접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한자식 성씨가 전파되는 시기 또한 서로 달랐겠지만, 역사적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동쪽으로 한반도에 이르게 되었고, 또 다른 어느 시기인가는 남쪽으로 복건의 소무현이나 오중 지역 또는 복주의 남대섬 같은 남방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그래서 한반도와 중국 남방에는 한자식 성씨라는 문화의 전파로 인해 문화적 접경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접경 공간 안의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방식이란 자신들의 조상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따지려 하기보다는, 성씨 관련 문헌 속의 기록을 통해서 동일한 성씨를 가진 사람 가운데 될 수 있으면 가장 원대(遠代)의 인물을 자기 조상으로 확정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성씨 관련 문헌들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국의 중원 지역을 배경으로 작성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문화적 접경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보에 자연스럽게 중원의 인물들을 그들의 조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족보에 나타나는 ‘동래성(東來姓)’이나, 중국 남방인의 족보에 나타나는 ‘선조남하설(先祖南下說)’을 성씨라는 문화의 전파로 인해 생겨난 현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전파 과정 속에서 생겨난 문화적 접경 공간 안의 문화 접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동래성

40 鄭樵, 『氏族略』第1, 『影印文淵閣四庫全書』373책, 1986, 臺北:臺灣商務印書館, 254쪽.

이나 중국 남방의 선조남하설은 한자식 성씨가 인접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전파 과정에 따른 문화적 접경 공간에서 생겨난 공통된 현상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한자식 성씨의 전파 과정과 그 접경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중국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가 대북인(代北人)들에게 한자식 성씨를 나누어 주고 그 성씨에 따라 사회적 등급을 정해준 ‘정성족(定姓族)’ 사건, 또 다른 북방 민족인 만주족이 청조의 멸망과 함께 만주족의 성씨를 버리고 재빨리 한자식 성씨를 취득한 사건, 그리고 귀주성(貴州省) 금병현(錦屏縣)에 살고 있는 묘족(苗族)들이 역사적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그들의 성씨를 한자식 성씨인 강씨(姜氏)라 칭하고 그들이 중국 고대 역사에 등장하는 ‘삼묘(三苗)’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⁴¹

이상에서 소개한 사실들은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한자식 성씨라는 문화를 수용하고 그 수용 과정에서 출현한 문화적 접경 공간 안의 문화 접변 현상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족보에 나오는 동래설 관련 기록과 중국 남방의 족보에 나오는 선조남하설 관련 기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 기록’과 역사 기록 안에 담긴 ‘문화 현상’을 나누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일국사의 시각을 넘어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민족국가의 배타적인 논리는 양자 병합의 논리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연구에서 접경사적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 역사학계에는 2000년대 이후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유입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접경사이다. 서두에서 밝혔

41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한제, 2019, 『중국 중세 호한체제의 정치적 전개』, 일조각, 256~257쪽; 이훈, 2018,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205~216쪽; 唐立·楊有廣·武內房司 편, 2001,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匯編』 3권 研究編, 東京: 東京外國語大學 國立アジア・アフリカ語言文化研究所, 3쪽.

듯이, 접경사 영역이 한국 역사학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간적 접경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문화적 접경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한자식 성씨의 문화적 전파와 그에 따른 문화적 접경 공간 안의 문화 접변 현상도 바로 이 문화적 접경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성씨공정(姓氏工程)은 중국 중심의 자국주의적 역사 해석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에 맞서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충돌하면서 역사 갈등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근대 이전에는 성씨라는 문화가 한국과 중국 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었지만, 근대 이후로는 그 소통의 공간이 역사 갈등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 성씨공정은 근대 이후 한·중 양국 사회에 팽배해진 민족주의적 분위기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이었다.

이 글에서는 성씨공정으로 인해 생겨난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접경사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중원(中原)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한자식(漢字式) 성씨(姓氏)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인접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인접 지역에서는 한자식 성씨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접경 공간’이 형성되었다. 그 문화적 접경 공간 안에서는 이른바 ‘문화 접변 현상’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한국 족보에 나오는 ‘동래성(東來姓)’ 관련 기록과 중국 남방의 족보에 나오는 ‘선조남하설(先祖南下說)’은 모두 문화적 접경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우리가 한·중 양국의 역사 속에서 성씨의 전파와 그 전파로 인한 문화 접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씨 관련 문헌에 나오는 ‘역사 기록’과 그 기록에 담긴 ‘문화 현상’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일국사의 시각을 넘어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민족국가의 배타적인 논리를 양자 병합의 논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접경 공간에 관한 연구는 접경사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접경이라는 공간을 외적 공간, 즉 공간적 접경 공간으로만 한정하게 될 경우 접경사의 범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의 성씨공정과 같이 비공간적 역사 갈등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접경을 조우와 충돌의 공간이자, 융합과 공존의 공간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경 공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승렬 외, 2008,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 박한제, 2019, 『중국 중세 호한체제의 정치적 전개』, 일조각.
- 송준호, 1987,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 에드가 볼프름, 이병련·김승렬 옮김, 2007, 『무기가 된 역사-독일사로 읽는 역사전쟁-』, 역사비평사.
- 이성무, 2015, 『변안렬 평전』, 글항아리.
- 이수건,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찬행 외, 2015, 『황단적 역사 담론의 형성』, 선인.
- 이훈, 2018,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 임지현 엮음, 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변경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다-』, 휴머니스트.
- 전병근, 2004,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통일연구원.
- 조지 이거스, 임상우·김기봉 옮김, 2003,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 존 W. I. 리·미하엘 노스 지음,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연구단 역, 2020, 『유럽과 북미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 소명출판.
- 중앙대·한국외대 HK+접경인문학연구단 기획, 2019, 『접경 공간의 형성-조우와 충돌-』, 소명출판.
- _____, 2020, 『접경의 기억-초국가적 기억의 장소를 찾아서-』, 소명출판.
- 프레더릭 잭슨 터너 지음, 손병권 옮김, 2020, 『미국사와 변경』, 소명출판.
- 한국민족문화진흥회 간, 1992, 『韓國姓氏寶鑑』, 한국민족문화진흥회.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2017, 『제국과 변경』, 해안.
- _____, 2018, 『변경과 경계의 동아시아사』, 해안.
- _____, 2017,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으로의 초대』, 한양

대학교출판부.

한운석 외, 2008,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동북아역사재단.

邵武市圖書館 편, 2009, 『邵武市主要姓氏源流考』, 邵武:邵武市圖書館.

王昶, 1995, 『金石萃編』(『續修四庫全書』 889책 수록본), 上海:上海古籍出版社.

李學勤 主編, 1999, 『春秋左傳正義』, 北京:北京出版社.

岑仲勉, 2004, 『唐史餘藩(外1種)』, 北京:中華書局.

錢大昕, 1995, 『十駕齋養新錄』(『續修四庫全書』 1151冊 수록본), 上海:上海古籍出版社.

鄭樵, 1986, 『氏族略』(『影印文淵閣四庫全書』 373책 『通志』 수록본), 臺北:臺灣商務印書館.

唐立·楊有慶·武內房司 편, 2001,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匯編』, 東京:東京外國語大學 國立アジア・アフリカ語言文化研究所.

Michael Szonyi, 2002, *Practicing kinship: lineage and descent in late imperial China*, pp26~2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Yongku Cha et al., 2020, *The borderlands of China and Korea: historical changes in the contact zones of East Asia*, Lanham: Lexington Books.

논문

구범진, 2009, 「19세기 성경 동변의 산장의 관리와 조·청 공동회초」, 『사림』 32, 수선사학회.

김기봉, 2015, 「글로벌 시대 한국 역사학의 해체와 재구성-한국사·동양사·서양사 3분과 체제의 역사화를 위하여-」,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김선민, 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여진-만주족과의 조선의 관계-」, 『만주연구』 15, 만주학회.

_____, 2015,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김신주, 2017, 「한국 고대사에서 '집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앙사론』 45, 중앙대학

교 중앙사학연구소.

- 김택현, 2001, 「비교사를 다시 생각함-섭알턴 연구(Subaltern Studies)의 관점에 서-」, 『영국연구』, 영국사학회.
- 민후기, 2019, 「西周 중, 후기太行산맥 동쪽의 접경의 변화-有銘 청동기 출토 정황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1, 중국고중세사학회.
- _____, 2019, 「燕의 형성 전후 접경의 변화-商 후기,西周 초기太行山脈 동쪽 출토 청동기 銘文의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63,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 「춘추초기 서, 북의 族國들과 접경-有銘 청동기의 출토지와 銘文을 중심으로-」, 『한국고중세사연구』 56, 한국고중세사학회.
- 박지배, 2018,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 박혜정, 2015, 「변경에서 중심 읽기-변경에서 보는 유럽 근대 국가와 유럽연합」, 『역사학보』 228, 역사학회.
- _____, 2017, 「변경에서 보는 청 제국-북서부 스텝과 동남 해안의 사이에서-」, 『역사학보』 236, 역사학회.
- 반기현, 2017, 「접경사의 정의와 연구 방법론의 적용」, 『중앙사론』 4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_____, 2020, 「유럽과 북미에서의 접경시대 연구 동향과 서사의 확장성-『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시대 연구의 세계화』 읽기-」, 『대중서사연구』 26-2, 대중서사학회.
- 백승욱, 2020,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가벼운 중국 노동조합은 바뀔 수 있는가-직업화 간부 중심의 선전시 노동조합 개혁-」, 『중소연구』 43-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_____, 2020, 「사회관리 강화를 위한 중국 노동조합의 개혁-포산(佛山)시 스산(獅山)진 S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1-4, 현대중국학회.
- 손준식, 2020, 「方豪와 『中西交通史』-그 사학사적 의미와 한계-」, 『중앙사론』 51,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_____, 2020, 「접경 속의 접경-戰後 臺灣의 眷村 형성과 관리-」, 『다문화컨텐츠연구』 35, 중앙대학교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
- 여효규,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의식」, 『한국고대사연구』 88, 한국고대사학회.

- 오경환, 2012, 「트랜스내셔널 역사: 회고와 전망」, 『한국사학사학보』 25, 한국사학사학회.
- 윤해동, 2017, 「한국 변경사 연구 시론-지대, 선, 영토-」,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근명, 2018, 「11세기 중반 宋-거란의 접경 지역을 둘러싼 충돌과 외교 교섭」,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_____, 2019, 「13세기 초 남송-몽골의 연맹과 端平入洛」, 『역사문화연구』 7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_____, 2020, 「11세기 중반 宋-西夏의 대립과 和約 체결」, 『역사문화연구』 7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_____, 2021, 「12세기 중엽 金의 국가구조와 화북 지배」, 『중앙사론』 5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이대화, 2017, 「한국사 연구에서 ‘접경 지대’ 연구 가능성의 시론적 검토-조선시대 및 근현대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4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이사사·손준식, 2018, 「현신의 대가-한국전쟁 중국군 포로의 귀국 이후 삶」, 『역사학연구』 72, 호남사학회.
- 이진일, 2010, 「주권-영토-경계:역사의 공간적 차원」, 『사림』 35, 수선사학회.
- 이춘복, 2017, 「변법운동시기 개혁파의 의회제도 개설과 立憲君主制 논의」, 『역사교육』 144, 역사교육연구회.
- _____, 2019, 「독일유형의 의회제도 수용과 변법운동시기 康有爲의 양원제 의회설립 구상-독일하원과 프로이센 상원의 수용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40, 한국사학사학회.
- 정동민, 2018, 「598년 高句麗-隋 전쟁의 배경과 충돌 양상-접경공간인 遼西地域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정면, 2016, 「大封民國과 ‘白國’-南詔·大理 시기 ‘雲南史’ 서술과 자기인식-」, 『서강인문논총』 4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17, 「‘白族’의 탄생-『白族社會歷史調查』와 『白族簡史』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정현백, 2008,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가능성과 한계」, 『역사교육』 108, 역사교육연구회.

- 조원, 2015, 「17~20세기 몽원사 연구에 나타난 청 지식인들의 '몽골제국' 인식-『元史類編』, 『元史新編』, 『新元史』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74, 한국중국학회.
- 차용구, 2008,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접경지역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3, 전북사학회.
- _____, 2018, 「국경(Grenze)에서 접경(Kontaktzone)으로-20세기 독일의 동부국경 연구-」,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최말순, 2018, 「種族誌와 전쟁동원-일제말 전쟁기 접경지 대만의 南方담론-」,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譚汝爲, 「韓國人的的姓氏」, 『尋根』 2014年4期, 鄭州:大象出版社.
- 羅千洙·葉玲君, 2002, 「韓國姓氏傳自中國之研究」, 『韓國研究』 6, 杭州:浙江大學韓國研究所.
- 邊鈞鈞, 「中原姓氏在韓國的傳播與發展」, 『文化萬象(理論版)』 2013年1期, 長沙:湖南省作家協會.
- 王秋華, 「明萬曆援朝將士與韓國姓氏」,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年2期, 北京: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研究所.
- 張炎鈺·余迎迎, 「中漢姓氏對比研究」, 『南方論刊』 2011年9期, 茂名:廣東省茂名市社會科學界聯合會.

중국사 연구에서 문화적 접경 연구의 필요성

— 중국의 ‘성씨공정(姓氏工程)’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중심으로 —

안광호

본고에서는 성씨공정(姓氏工程)으로 인해 생겨난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접경사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접경사 이론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역사학계에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공간적 접경’에 대한 연구에 머물고 있으며 ‘문화적 접경’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접경사 연구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간적 접경’에 대한 연구와 함께 ‘문화적 접경’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씨공정은 중국의 자국주의적인 역사 해석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에 맞서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충돌하면서 역사 갈등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중국의 성씨공정에서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의 ‘동래성(東來姓)’은 중국 남방 사회에 나타나는 ‘선조남하설(先祖南下說)’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동래성’이나 중국 남방 사회의 ‘선조남하설’은 모두 문화적 접경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다.

주제어: 접경사, 문화적 접경 연구, 성씨공정, 동래성(東來姓), 선조남하설(先祖南下說)

ABSTRACT

The Necessity of Cultural Contact Zone Approach in Chinese History Studies

An Gwangho

This study presents a contact zone approach to resolve the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was arised by Surname Project of China. The theory of contact zone history has been introduced in Korean history since the 2000s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ate. However, most of the studies are still on ‘spatial border’, and the study on ‘cultural border’ is only insignificant. Therefore, in order for the research of contact zone history to move in a better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spatial border’ and ‘cultural border’.

The Surname Project started with the China-centered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developed into a historical conflict as the nationalist tendency of Korean society clashed against it. ‘Eastern Surname’ in Korea, which is a major analysis target in Surname Project of China, seems to be similar to ‘Story of Northern Ancestor’ in Southern China. In other words, both ‘Eastern Surname’ in Korea and ‘Story of Northern

Ancestor' in Southern China are common phenomena that occurred in cultural contact zone.

Keywords: Contact Zone History, Cultural Contact Zone Studies, Surname Project of China, Eastern Surname in Korea, Story of Northern Ancestor in Southern China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문상명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 개발
- III. 중국의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신청과 고구려 발해 유적과의 연결
- IV. 중국의 '백두산공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 V. 맺음말



I. 머리말

2017년 2월 28일,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 중국에서 부르는 백두산 명칭] 식생(植生) 수직경관 및 화산 지모(地貌) 경관(Vertical Vegetation Landscape and Volcanic Landscape in Changbai Mountain)’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하였다. 이어 2020년에는 ‘Mount Changbaishan’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 신청을 했다.

2017년 9월 창바이산 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이하 창바이산 관리위)는 ‘창바이산 보호구역 10년 공작 회고[長白山保護區十年工作回顧]’를 발표하였다.¹ 2017년은 중국의 본격적인 백두산 관리와 공작이 10년 되는 시점이었는데, 실상은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자국의 명산으로 관리하여왔다. 1964년 북한과 국경조약인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발효하기 이전인 1960년 4월 이미 백두산을 ‘지린성 창바이산 자연보호구(吉林省 長白山 自然保護區)’로 지정하였다. 1980년 1월에는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아 ‘인류 및 생물권보전지역의 세계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한편, 1986년 7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국가 삼림 및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역으로 승인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백두산’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고 ‘창바이산’ 명칭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06년 지린성 당위원회와 성 정부는 창바이산 관리위를 설립하고 백두산의 생태관리 및 보호, 연구, 관광산업 육성 등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백두산 관광 개발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북한과 더불어 고구려 유적

* 투고: 2022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5월 10일, 게재 확정: 2022년 5월 15일

1 『長白山保護區十年工作回顧』, 〈吉林省商務廳〉, 2017.9.22(http://www.changbaishan.gov.cn/ztlz/sngzpg/sngzhg/201709/t20170922_100179.html).

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006년부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것은 남북한에서도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의 역사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백두산을 품고 있는 북한은 2000년 5월 칠보산·금강산·묘향산 등을 세계유산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하였으나 백두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2004년 한때 중국은 북한과 공동으로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려고 시도 하였지만,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이다.

중국은 2007년 백두산을 5A급인 ‘창바이산 풍경구(長白山風景區)’로 승격하였다. 규모는 지린성(吉林省) 옌벤조선족자치구 안투현(安圖縣) 얼다오바이허진(二道白河鎮) 남동 쪽으로 면적이 52.42km²에 달한다. ‘창바이산 풍경구’는 산림과 야생 동식물 자연 보호지역으로 중국 최초로 UN ‘인간과 생태권’ 보호망에 가입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백두산의 풍부한 산림과 생태, 지열과 온천, 빙설 기후 등을 바탕으로 스키와 문화·레저 관광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고자 접근성을 높였다.

이에 2008년 8월, 5억 5,000만 위안(830억 원)을 투입하여 백두산 서쪽의 푸쑹현[撫松縣]에 창바이산 공항을 개항하였다. 더불어 백두산과 동북지방의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었다. 2008년 지린시와 백두산 북쪽 도시인 옌지시를 연결하는 지옌고속도로가 건설된 데 이어 창춘[長春]~푸쑹 사이의 고속도로, 바이산~창바이산 공항, 옌지~얼다오바이허 사이 고속도로 등이 준공되었고, 백두산의 북파, 서파, 남파를 연결하는 얼다오바이허~쑹장허~창바이현의 순환도로가 건설되었다. 이로써 2005년 여행객이 연인원 35만 명에 불과했는데 2011년 142만 명으로, 2017년 9월에만 22만 5,372명, 2019년 코로나 직전에는 한 해 270만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²

2 『長白山冰雪小鎮建設項目』, 〈吉林省商務廳〉, 2019.2.12(http://www.jl.gov.cn/szfzt/tzcyj/zdxm/korean/ly/201902/t20190212_5595089.html).



그림 1 창바이산역[출처: 바이두(百度)]

※ 창바이산역은 백두산이 두만강·송화강·압록강 세 강의 원류라는 모티브와 유선형의 천지를 형상화함.

다음으로 2021년 4월 ‘선양[瀋陽]-자무쓰[佳木斯]’를 잇는 고속철도[沈佳高速铁路]의 ‘창바이산-둔화’ 113km 구간을 착공 4년 만에 완공하여 그해 12월 24일 둔화(敦化)와 백두산을 잇는 고속철이 공식 개통하였다. 이에 10억 위안이 투입되었다. 이는 안투현과 둔화시를 거쳐 장춘고속철도와 연결된다. 예전에는 지린성의 중심인 창춘에서 백두산까지만 해도 10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최소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다. 현재 베이징에서 창춘까지 고속철도로 최소 3시간 58분이 걸리므로, 베이징에서 백두산까지 6시간 정도 걸리는 셈이다. 중국 관련 부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고속철도 개통 직후인 2021년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불과 1주일 만에 백두산 관광객 수가 1만 2,22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42% 정도인 5,094명이 고속철을 이용했다.³

3 『沈佳高鐵白敦段開通 長白山全域旅游一周接待1,22万人』, 〈吉林省長白山保

중국 정부는 백두산과 연결하는 교통망을 항공,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으로 확충한 것을 두고 동북 3성의 인프라 구축의 일환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백두산관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백두산을 자신들의 독자적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의도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중국에서 시작한 대규모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 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소위 동북공정을 주목하며 중국의 백두산 인식을 대변하는 ‘장백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이후에도 중국의 백두산을 ‘중국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논문을 통해 학계에 알리고 있다. 이를 이끈 것은 윤휘탁이다. 그는 중국이 백두산 명칭을 지우고 장백산 명칭을 선전하는 움직임과 백두산이 만주족 발상지라는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논리 개발에 대해 비판하고 대응하고 있다.⁵

최근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중국 현지 조사가 어려웠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답사한 2019년 10월 이전의 자료와 최근 중국의 백두산 관련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백두산 공정, 소위 ‘창바이산문화건설공정(長白山文化建設工程)’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護開發區管理委員會), 2022.12.31(http://www.changbaishan.gov.cn/zjgx/202112/t20211231_176458.html).

- 4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백산학보』 제76집, 283~304쪽; 윤휘탁, 2007, 「중국의 동북 文化疆域 인식 고찰-“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5집, 695~716쪽.
- 5 윤휘탁, 2013,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인식과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제51호, 107~142쪽; 윤휘탁,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197~254쪽.

II.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 개발

창바이산관리위는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역대 왕조가 창바이산을 담당해왔으므로 창바이산은 중국의 산’이라는 ‘창바이산문화론’을 발전시켰다.⁶ 이러한 논리에 한 발 더 나아가 2010년부터 ‘창바이산문화건설공정’으로 발전시켜 창바이산 문화가 만주족의 고유한 문화이자 중화민족 문화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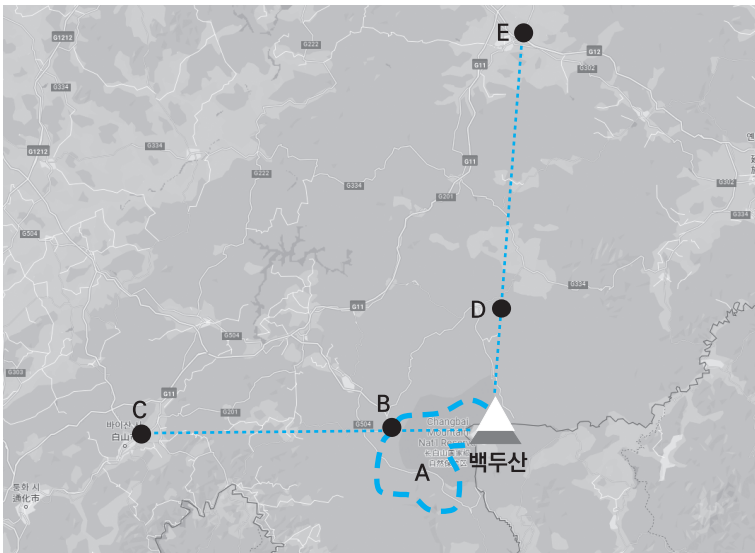


그림 2 백두산 주변 ‘창바이산문화론’ 개발 유적지 분포도(필자 작성)

- * A: 창바이산 풍경구[長白山景區]
- * B: 녀인고성[訥殷古城]
- * C: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
- * D: 바오마성 유적지[寶馬城遺址]
- * E: 류딩산 문화명승지[六鼎山 文化景區]

6 윤희탁, 2015, 위의 글, 213~222쪽.

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을 확산하고 있다. [그림 2]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으로 확산된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를 표시한 것이다.

1. 너인고성[訥殷古城]

창바이산 문화는 만주족의 고유한 문화이자 중화민족 문화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다민족 통합’, 즉 현재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의 큰 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백두산 영역을 확대하여 발해사 유적과 연결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 시작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너인고성[訥殷古城]⁷이다. 지린성 바이산시에 위치한 너인고성([그림 2]의 지도상 기호 [B]에 위치)은 중국의 유일한 여진족



그림 3 너인고성(2018.8.20. 필자 촬영)

7 지린성 바이산시 우송현 창바이산난취 청다오 302 만장 부근[吉林省 白山市 撫松縣 長白山池南區 省道302漫江 附近].

고대 산림촌락으로 2018년 개장한 국가 4A급 명승지이다. 이곳은 고대 여진족의 주거공간을 비롯하여 창바이산 역사 및 창바이산신 사당 등을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즉, ‘만주족 청조 선조의 발상지(滿清先祖發祥之地)’로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탄생한 여진족의 역사·종교·문화 등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두에는 ‘창바이산녀연문화(長白山訥殷文化)’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천 년 동안 창바이산은 신성스러운 산이자 용흥의 성지로 여겨져왔으며, 천지의 남쪽 지역 토우다오송화강 유역은 만주족의 발상지이다. 만주어로 ‘녀연강’이라 부른다. 녀연부락은 건주여진 8대 부락 가운데 하나로 녀연강 유역에 거주해서 불여진 이름이다. 그 후손은 수십만에 이른다. 녀연민족만의 독특하고 심오한 문화유산, 민족 관습이 있다.⁸

녀연의 문화를 만주족의 문화로 보고있으며, 이들 민족이 창바이산에서 발원하는 강의 최상류지역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창바이산은 만주족의 산이라는 것이다. 2018년 8월, 필자가 마지막으로 답사했을 당시만 해도 리조트와 결합한 형태의 종합 관광지구로 개발 중이었다. 현재는 개발이 끝나 완공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제조전(祭祖殿)」의 전시가 눈에 띄었는데, 기자(箕子), 숙신씨(肅愼氏), 한무제(漢武帝), 만주족의 시조 부쿠리용순[布庫里雍順],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努爾哈赤] 등의 동상을 줄이어 세운 것이 특징적이었다. 게다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인물에 대한 소개를 동상에 붙였다. 이것은 중국 역대 왕조가 백두산을 관할했고 한반도를 넘어 일

8 Baidu百科, 長白山訥殷文化(<https://baike.baidu.com>)[千百年來, 長白山一直被視爲神山, 龍興之聖地, 而池南區所在的頭道松花江流域, 正是滿族的發源地, 滿語稱爲“訥殷江”, 訥殷部系建州女真八大部落之一, 因祖居訥殷江而得名, 有滿族后人几十萬人. 這里有色彩獨特的民族風情, 有深厚的文化底蘊, 有獨特的文化內涵].



그림 4

너인고성 「제조전」에 전시된
광개토대왕 동상
(2018.8.20. 필자 촬영)

본에까지 그 위력이 미쳤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개토대왕[好太王] 동상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특히 너인고성에서 주목할 부분은 너인고성이 자리한 위치이다. 이 성은 진강[錦江], 만강[漫江]의 회합처와 토우다오송화강[頭道松花江]의 원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송화강의 최상류에 여진족의 발상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5]는 너인고성의 위치를 구글지도에 표시한 것이고, [그림 6]은 너인고성이 세 강의 회합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사진에 표시한 것이다. 이곳은 백두산 최상류에 위치한 마을로, 백두산에서 만주족의 문화가 발원했다는 것을 선전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성을 가진 위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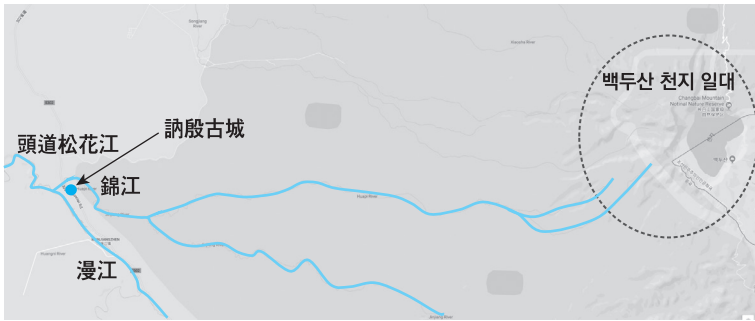


그림 5 너인고성의 위치와 수계(구글 지도에 필자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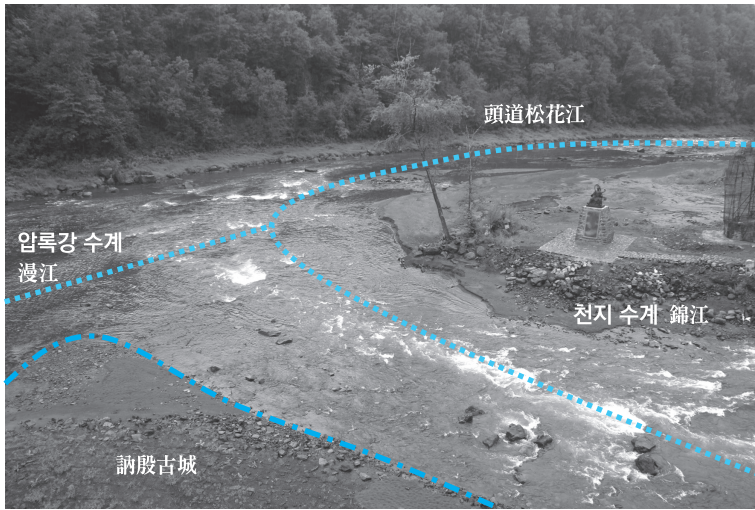


그림 6 너인고성과 세 강의 회합(2018.8.20. 필자 촬영)

2. 바오마성 유적지[寶馬城遺址]

중국고고(中國考古)는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홈페이지⁹로 중국 고고학에 관한 연구성거나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長白山“神山聖水”的佐證(장백산 신산성수의 증거)>라는 기사를 게시했는데, “창바이산은 일 년 내내 관광객으로 붐빈다. 사람들은 흥산기하와 천지폭포가 만들어내는 신비한 세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을 뿐, 눈앞에 있는 ‘성산’이 언제부터 이러한 명성을 얻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¹⁰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창바이산이 여진족의 발상지[女眞興王之地]라는 것을 강조하며, 만주족(여진족)에게 신성한 장소로서 백두산에 대한 찬탄을 기술하였다. 바오마성(寶馬城) 유적지가 백두산 제사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오마성 유적지[寶馬城遺址]¹¹([그림 2]의 지도상 기호 [D]에 위치)는 백두산 정상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유적은 바오마성의 건축 축선이 백두산의 주봉과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있다. 백두산에 제사를 지냈다는 장소로서 위치적 특성이 부각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를 금나라 시기 ‘창바이산 신묘(長白山神廟)’ 유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지린대학교 변강고고연구센터(邊疆考古研究中心)가 2013년에 시작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했으며 2017년에는 중국 10대 신규 고고 발굴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7년까지 총 3,498m²를 발굴하고, 18만 8,000m²를 탐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방문했을 때에도 발굴 중이었는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었으며, 유적지 사방으로 울타리를 치고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등 경계가 삼엄

9 中國考古, <http://www.kaogu.cn/cn/>

10 長白山一年四季游人如織, 人們沉醉于雄山奇峽, 天池流瀑所构建出的秘境之美, 可曾想過, 眼前這片“神山”, 之所以有此美譽, 究竟始于何時? 出自何人之口?

11 지린성 안투 현 얼다오바이허 진[吉林省 安圖縣 二道白河鎮]에 위치.



바오마성 유적 발굴현장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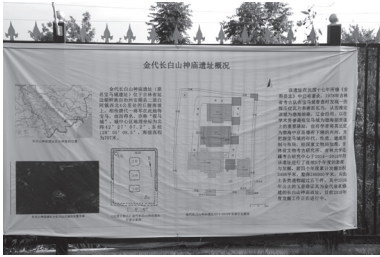
〈금대 창바이산 신묘 유적지〉 현판



바오마성 유적 표시석



바오마성 유적지 발굴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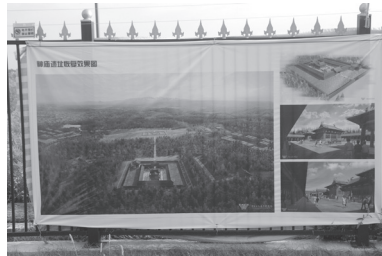
바오마성 유적지 개황



바오마성 유적 발굴 진행 현황



유적의 가치와 의미



발굴 이후 복원도

그림 7 바오마성 유적지(2018.8.20. 필자 촬영)

했다. 특히 한국인이 온 것을 알고 건물에서 사람이 달려와 경계하며 답사 갔던 일행을 쫓았다. 바오마성 발굴현장은 울타리가 쳐진 상태에서 발굴이 진행중이었으나, 잡초가 무성하고 일부 구간에만 땅을 판 듯한 흔적과 함께 비닐 덮개로 덮여 있었다. 1년 사이 표면적으로 크게 진전된 것은 없었다. 유적지의 바로 옆에는 ‘금대 창바이산 신묘 유적지 사무실’이라는 현판이 걸린 유적지 발굴을 담당하는 현장사무소가 있었다.

2021년 10월 12일에 중국의 국가문물국에서는 대규모 유적의 활용과 보호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는데, 바오마성 유적은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¹² 최근 2022년의 보도¹³에서는 중원 이외에서 발견된 중국 최초의



12 문물보호[2021]29호: 중국 국가문물국 “대유적지 보호 및 이용 14.5 전문 항목 계획에 관한 통지(大遺址保護利用“十四五”專項規劃).”

산제 유적[吉林長白山千年前寶馬城遺址顯露眞容：中原以外首次發現國家“山祭”遺存]이라 선전하고 있다. 특히 이 유적은 동북 변방에서의 금왕조의 전략과 북부와 남부 문화의 교류와 상호 작용, 중국 문화의 다양성과 다민족 통일 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탐구하는 광범위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유적을 통해 창바이산이 여진족의 산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역사적 장소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1년 6월 17일, 지린성(吉林省) 문물고고 연구소와 안투현(安圖縣) 문물관리소가 지린성 연벤(延邊) 조선족 자치주 량장진(兩江鎮) 바이허둔(白河屯) 서남쪽 520m 지점에서 ‘장백산인삼(長白山人參)’ 비석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곳은 바오마성 인근으로, ‘백두산 인삼’이라는 명칭을 지우고 ‘창바이산 인삼’ 명칭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2002년 12월 25일, 국가 품질검사 총국(總局)은 지린성 량장진을 ‘창바이산 인삼’의 원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창바이산 인삼’에 대한 제품보호 실시를 승인한 바 있다. 언론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비석이 이 보호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여진족의 유적지가 발견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 홍보하는 중국의 행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3. 류딩산 문화명승지[六鼎山 文化景區]

바오마성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백두산으로부터는 북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둔화시(敦化市)에는 여진족의 발상지 류딩산 문화명승지[六鼎山 文化景區]¹⁴([그림 2]의 지도상 기호 [E]에 위치)가 있다. 이곳은 52km²에 달하는 국

https://baike.baidu.com/reference/22483369/5154sNy6yvq3xP04R9rzZ1YKJ5MpAUPp363zsFuUBvHFcF_aqRHmscy1H_w4bA8uFLWkelOywSGVDI0njEkL_pWCSgW8AZiwp4kkWpVxWODLISirgUM

13 <https://www.haobiju.com/kan/show/2448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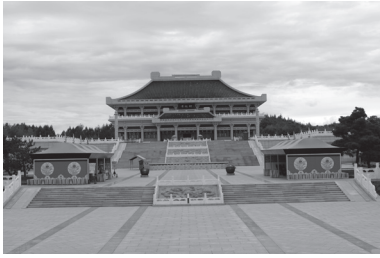
14 연변 조선족자치주 둔화시 남교 3km 밖 목단강 남안[延邊 朝鮮族自治州 敦化市

가 5A급 관광지이자 성급 관광개발지역으로 불교·발해·청조문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본래 이곳은 발해 초기 왕실고분군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며 특히 발해 제3대 문왕의 둘째 딸 정혜 공주의 고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청의 역사를 기록한 『만주실록(滿洲實錄)』, 『청실록(淸實錄)』, 『동화록(東華錄)』 등에는 누르하치[努爾哈赤]의 선세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하여 그가 건주위(建州衛)를 통일하고 명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건국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창바이산을 자세히 묘사하여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삼선녀 설화, 포고리용순(布庫里雍順, Aisin Gioro Bukūri Yongšon)의 탄생과 오도리성[鄂多里城]에서 만주를 연 내용 등이 서술되어 있다.

류딩산 문화명승지에는 발해 왕조가 탄생한 곳이자 청 황실의 발상지이며 만주족 시조의 탄생지인 오도리성이 위치한 곳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부각하여 2011년 9월 청조 문화원(淸朝文化園)을 조성하고 만주족 조상들을 모신 대규모 사당 청조사(淸祖祠)를 세웠다. 이곳에는 2층으로 별도의 건물을 조성하여 창바이산 신사(長白山神祠)를 만들고 만주족이 백두산에 제사 지냈다는 것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듯 청조사는 만주족 문헌이나 민간풍속 자료 등을 전시하여 만주족의 뿌리가 백두산에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청조사에서 매년 청 황실의 후예와 만주족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고, 창바이산 신사에서는 백두산에 망제를 지낸다.

청조사는 창바이산이 만주족의 발상지[장백산은 여진족(만주족)의 뿌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전하는 역사 문화의 현장으로 자리하였다. 한편, 청조사가 가까이에는 발해의 대표적 유적지 옥정산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우리에게 발해의 건국지로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인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곳에 청조사를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해의 역사를 고구려사나 한국사와 분리하여 그 이전의 ‘숙신-음루-물길-말갈-여진-만주’로 이어지는 역사이자 중국사로

南郊 3km處 牡丹江 南岸].



청주 문화원[清祖祠]



포고리웅순[布庫里雍](청주 문화원 내부 전시)



삼선녀 설화 벽화(청주 문화원 내부 전시)



포고리웅순의 모험 설화 벽화
(청주 문화원 내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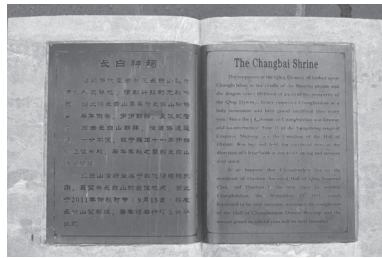
창바이산 신사[長白山神祠]



창바이산 신사 현판



창바이산신 제단(창바이산 신사 내부)



창바이산 신사 설명

그림 9 류딩산 문화명승지[六鼎山 文化景區](2019년 9월 6일 필자 촬영)

편입하기 가장 적당한 장소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민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둔화가 진짜 오도리성인지 연구했는데, 오도리성은 백두산의 동·동남쪽에 위치하며 고고학적으로도 둔화의 위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¹⁶

[그림 9]는 필자가 2019년에 촬영한 류당산 문화명승지의 청조사와 창바이산 신사 건물과 내부의 전시를 촬영한 것이다. 류당산 문화명승지 내부에는 불교문화와 관련된 사찰과 불상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청조사와 창바이산 신사가 별도의 건물로 각기 구성되어 있다. 청조사는 외부에서 보면 2층으로 보이지만, 내부의 높이가 높은 1층 건물이다. 내부에는 부쿠리용순부터 시작하여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에 이르기까지 금과 청의 역대 왕들의 동상이 3m 이상 되는 높이로 세워져 있고, 벽면에는 포고리용순의 탄생신화부터 청의 건국과 역사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여진족의 시조인 부쿠리용순의 강인한 모습을 표현한 동상과 그의 탄생 설화의 배경 창바이산을 강조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띈다.

창바이산 신사는 2층 건물이다. 신사의 2층 내부에는 창바이산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청조의 역대 황제는 모두 왕조의 발상지인 창바이산에 가서 산제를 지냈는데 길이 멀고 험하여 옹정제 11년부터는 직접 가지 않고 매해 봄과 가을에 창바이산 방향에 산제를 지냈다. 창바이산은 둔화의 동남쪽에 있어 망제를 지내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다. 이에 2011년 중추제(9월 15일)부터 여기에 창바이산 망제전을 설치하고 매해 산제를 지낸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 그대로를 해석해볼 때 둔화에서 망제를 지낼 역사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2011년에 들어 여기에 망제전을 설치하고 오히려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듯하다.

15 박정민, 2016,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 - ‘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289~290쪽.

16 박정민, 2016, 위의 글, 316쪽.

흥미로운 점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 중인 창바이산 신묘 유적 바오마성 유적지의 위치이다. 중국이 의도하였든 역사적 진실이든 [그림 2]에 백두산과 바오마성, 류딩산 문화명승지는 모두 북쪽으로 일직선상에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창바이산 문화론에 논리적으로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4.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

창바이산 문화론을 홍보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조성된 곳은 2008년 10월 바이산시[白山市]에 개관한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¹⁷([그림 2]의 지도상 기호 [C]에 위치)이다. 백두산의 서쪽으로 너인고성과 일직선상에 있다. 장백산만주족문화박물관은 장백산만주족문화를 주제로 한 중국 내 최초의 특별박물관으로 만주족의 독특한 지역특색과 문화를 전시하고 있는 성급 박물관이다.

그래서인지 공공롭게도 만주족박물관에는 한국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백두산은 만주족만의 문화를 잉태하였고, 백두산에서는 만주족의 문화만 꽃피웠다는 불편한 내용이 한국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한국 학자가 박물관 관람을 시도했으나 입장하지 못했고, 필자도 2010년부터 여러 차례 관람을 시도했으나 ‘관람 예약을 하지 않았다’, ‘단체 관람이 있어서 오늘은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박물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8월 현지인들과 함께 중국인으로 가장하여 겨우 박물관에 들어가 관람이 가능했다. 박물관의 서언(序言)에 창바이산은 “중화(中華) 1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 만주족의 발상지이고 중국 북방 민족이 대대로 번성하고 생식(生息)할 수 있도록 해준 가원(家園)이다. ...”라고 박물관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에 짐작할 수 있듯이 백

17 바이산시 눈장대로 152호(白山市渾江大街152號).



그림 10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설치한 '만주족박물관 서언(序言)'(2018.8.22. 필자 촬영)



그림 11

만주족박물관 제1전시 '중화 명악 장백산'(2018.8.22. 필자 촬영)

두산이 만주족의 성산이자 발상지임을 강조하고 발해 왕조도 말갈족이 세운 왕조라 규정하는 내용도 전시하고 있었다.

창바이산, 창바이산 만주족 신산 숭배, 창바이산 만주족 역사원류, 창바이산 만주족 생활관습, 창바이산 만주족 문화 예술 등 주요 전시와 창바이산 송화석 및 송화 벼락, 창바이산 특산품 표본, 창바이산 인삼, 창바이산 미술, 창바이산 예술 등 5개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창바이산과 만주족’이 키워드이며 만주족이 탄생한 근거지로서의 창바이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국인의 출입이 불편할 만한 전시로 가득하였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측의 [B]-[C], 북측의 [D]-[E]로 이어지는 창바이산 문화론 유적과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의 위치는 마치 백두산을 중심으로 부채꼴로 확산되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그림 2) 참고).

Ⅲ. 중국의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신청과 고구려 발해 유적과의 연결

중국은 만주족의 역사·문화성을 강조하며 백두산을 만주족의 ‘성산(聖山)’으로 선전하고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인 ‘창바이산’만 내세워 자신들의 산으로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상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바이산 풍경구를 비롯하여 [B]너인고성, [C]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D]바오마성 유적지, [E]류당산 문화명승지 등 ‘창바이산문화론’ 개발은 중국의 백두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창바이산’ 관광 및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바이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경제의 축을 발해사 유적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중국은 최근 ‘14.5’ 계획, 일명 ‘중국 국가문물국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 12개의 유적을 삭제하고 바오마성 유적(그림 2의 [D])을 추가하였으며, ‘세계유산등재 신청 예비 항목’ 육



성에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을 언급하였다.¹⁸ 상경성 유적은 1951년 중국 ‘국무원’에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공포된 이후 2020~2040년까지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지 보호 총체 계획[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保護總體規劃]’에 맞춰 보존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유적의 문화 가치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 실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인근의 주요 발해 유적들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를 통해 이 지역을 ‘발해 문화권’의 중요한 역사 문화 경관이자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한 인문 경관 및 관광지로 개발 중이다. 즉, ‘발해 문화권’ 개발은 백두산-바오마성-둔화시 류딩산 문화풍경구로 이어지는 ‘창바이산 문화론’

18 문물보호[2021]29호: 중국 국가문물국 “대유적지 보호 및 이용 14.5 전문 항목 계획에 관한 통지(大遺址保護利用“十四五”專項規劃)”.

과 맥을 같이하여 둔화에서 무단강[牡丹江]을 따라 연결되고 있다.

중국은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고구려를 중국의 고대 소수 민족 지방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백두산은 여진족의 발상지,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당(唐)에 예속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며 백두산과 발해 유적을 고대사 편입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은 백두산이 우리의 성산이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가라는 한국과 북한의 역사적 사실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역사인식이다.

중국은 ‘창바이산 문화론’ 홍보를 위해 ‘창바이산’ 명칭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국에서 ‘백두산’ 명칭을 지우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청의 강희제 시기 중국 공식 문헌에 ‘백두산’ 명칭이 등장하고,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의 공식적인 문헌과 지도 등에도 ‘백두산’ 명칭을 사용하였다.¹⁹ 특히 1962년 10월 12일,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당시 총리였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사이에 맺었던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은 양국의 국경을 확정하는 협정이었는데 여기서 백두산의 명칭은 창바이산이 아닌 ‘백두산’이었다. 1964년 3월 20일 양국이 1962년의 조약을 확정하고 교환한 ‘조중변계의정서(朝中邊界議定書)’에도 ‘백두산’이었다.

중국,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사회에서는 ‘백두산’ 명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7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백두산 천지’라는 글자를 넣은 달력을 발행했는데, 중공연변자치주 혁명회기관의 일부 요인들이 ‘창바이산 천지를 백두산 천지로 고치는 행위는 조선수정주의가 창바이산 영토를 요구하는 매국행위’라는 비판을 하였다. 이에 중공연변자치주 주위원회 제1서기 겸 주 혁명위원회 주임 조남기는 유관 기관 전문가와 국무원 외교부, 총참측회국(總參測繪局) 등 중앙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당시 ‘백두산’은 중국에서 통용되는 명칭이며 1962년의 ‘조중변계조약’에서도 사용한 명칭인 만큼 ‘백두산 천지’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19 田雨, 2002, 「白頭山地名及白頭山稱謂의歷史考察」, 『交流與思考』, 183쪽.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한 부서에서 자치주 인민정부에 ‘백두산 표준비명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백두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고 ‘창바이산’ 호칭만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중국 국가와 민족단결을 위해 ‘창바이산’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마침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40주년(1952년 9월 3일 창립) 행사에 맞추어 각종 유인물과 전시품, 상표 등을 준비 중이었는데 주정부의 지명관리위원회에 ‘백두산’ 명칭 사용 금지를 건의하였다. 이에 연변자치주에서는 상급기관인 길림성과 중앙정부에 ‘백두산’ 명칭 사용 적합성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국가우전국에서는 베이징 아시안게임 기념우표를 발행했는데, 우표 가운데 백두산 천지 그림과 함께 ‘백두산 천지’ 명칭이 써여 있었다. 이에 국가우전국에서도 사용하는 ‘백두산 천지’ 명칭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1998년 6월 주정부와 민정부에서도 명확하게 ‘백두산’ 명칭 사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보통 중국의 문헌이나 지도에서는 창바이산을 산맥, 백두산을 주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2003년 ‘동북진흥전략’을 본격화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백두산을 불함산(不咸山), 태백산(太白山), 개마대산(蓋馬大山), 도태산(徒太山)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²⁰ 동북아의 큰 산인 만큼 이름이 다양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나라 옛지도에는 중국에서 부르는 ‘창바이산’도 표시하여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을 존중해왔다. [그림 13] 《관서관북도(關西關北圖)》 중 《관서관북도(關西關北圖)》와 《청구관해방총도(靑丘關海防總圖)》에는 백두산에 ‘백두산(白頭山), 피운장백산(彼云長白山); 우리는 백두산이라 부르지만, 저들은 장백산이라 부른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우리의 관

20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1765~1814)은 자신의 저서 『海東歷史』 「地理考」에 백두산을 不咸山, 蓋馬大山, 徒太山, 太白山 등으로 명명하였으며, 정약용은 長白, 白山, 白頭, 歌爾民商堅 등의 명칭을 더하여 여덟 가지로 『大東水經』에 정리하였다. 문상명, 2021, 「조선후기 《天下圖》에 담긴 白頭山 인식」, 『만주연구』 32, 36~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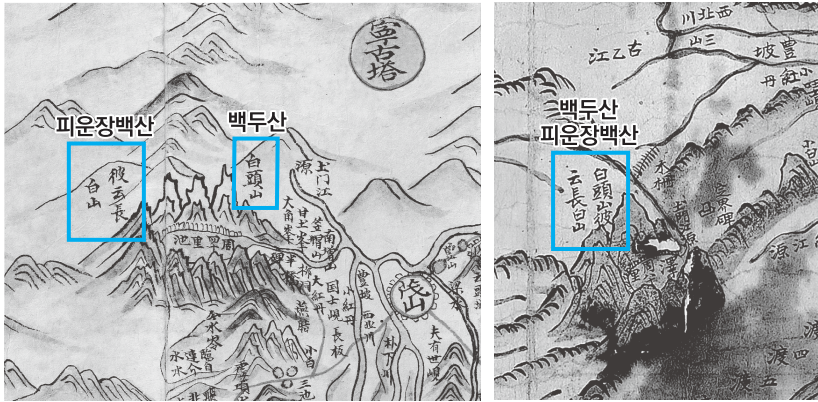


그림 13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좌), 《청구관해방총도》(우), 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고지도에서 이러한 명칭의 표기를 볼 수 있다.²¹

중국이 만주족의 뿌리라는 창바이산의 역사·문화성을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백두산은 단군이 하강한 우리 민족의 시원적 공간이라 생각하였다.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인식했으며, 천지를 ‘신단수’라 하여 지도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백두산 정상에 ‘천년단목(千年檀木)’이라는 단군신화의 신단수(神檀樹)를 그린 지도를 통해 백두산을 이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스러운 장소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질서화하는 공간으로 상징화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²² 영조 시기에는 갑산(甲山) 망덕산(望德山)에 제당을 설치하고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국가 조종산으로서 품격을 확고히 하기도 하였다.²³

백두산은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반도의 일부였으

21 문상명, 2021, 위의 책, 45~47쪽.

22 문상명, 2021, 위의 책, 48~50쪽.

23 문상명, 2021, 위의 책, 51~52쪽.

며, 오랫동안 우리 영토였다. 우리 애국가의 첫 소절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는 백두산이 우리의 산이라고 무의식적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지리적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단독으로 신청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IV. 중국의 ‘백두산공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북중관계와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모색

중국은 ‘창바이산’ 명칭을 내세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하고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신청하였다. 비록 북한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중국보다 한 해 빠른 2019년에 ‘Mount Paektu’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s (UGGp)]에 신청한 바 있다. 북한과 중국 모두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심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자연유산의 경우, ①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정당성, ② 세계유산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③ 잠정목록 유산의 완전성(문화유산은 진정성), ④ 신청 유산과 다른 유산과의 비교 등이 주요한 심사의 요건이다. 이에 중국은 백두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정당성’의 근거로 화산 용암·호수·카르스트·빙하지형이라는 독특한 지형 형태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호 천지와 고산고원의 경관 등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동북아시아 화산의 용기·형성·진화 등의 지질학적 단계와 생물학적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뿐만 아니라, 수직 식생 경관에는 멸종위기의 식물 73종과 동물 150종을 포함하는 보호구역임을 강조하였다.²⁴ 하지만 ‘유산의 완전성’ 항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에 속한 백두산 산채 1/4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3/4만 등재 목록에 올리는 점, 백두산 경관의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천지의 54.5%가 북한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완전하지 못한 신청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지질학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장소, 자연·인문·사회·역사·문화·전통 등이 결합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 그 결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21년 11월 현재 전 세계 44개국 169개소가 지정되었다. 한국은 4개소(제주도·청송·무등산·한탄강), 북한은 아직 없으며 중국은 41개소로 가장 많은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답사한 코로나19 직전의 2019년 여름, 압록강 상류 일대에는 리조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북한을 전망하는 전망대도 곳곳에 설치되고 있었다.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관광산업이 본격화되는 듯 보였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24일에 개통된 창바이산역 등은 백두산 일대 관광산업의 증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백두산 일대의 변화는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북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중국은 인도와 국경분쟁으로 무력 충돌을 빚는 등 몽골, 북한 등과 국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였다. 당시 북한은 소련과 등거리 실리 외교를 취하는 중이었는데 소련의 후르시초프의 등장과 함께 소련과의 사이가 불편해졌고, 게다가 1962년 쿠바사태로 인하여 북한과 중국은 ‘소련이 제국주의 미국에 투항했다’며 한목소리로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북한과 중국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중변계조약’을 맺게 되었다.²⁵ 당시 양국의 우호

24 유네스코세계유산(<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6190/>).

25 박종철, 2009, 「1960년대 중반의 북한과 중국: 긴장된 동맹」, 『한국사회』 제10집

적 분위기는 ‘백두산’ 명칭 사용이나 천지의 분할 등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는 현재 중국의 백두산과 관리 전략 등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북한은 중국에 앞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를 신청하였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북한이 신청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2000년에 신청한 칠보산·금강산·묘향산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백두산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의외가 아닐 수 없다. 김일성 시기 백두산은 항일무장빨치산 활동의 근거지이자 ‘백투 혈통’의 시원 신화와 전설이 탄생한 ‘백두산’ 혁명의 성지이다. 김정일은 백두산 정기를 받고 태어난 민족지도자라는 것을 부각했으며 백두산 장군 김일성으로부터 선군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주창하기도 하였다.

현재 김정은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선군조선’의 핏줄임을 증명하고자 ‘백두혈통;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의 정체성, 정통성을 주장하는 핵심’을 계승하는 ‘백두산 칼바람’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의 백두산 답사길 개척 6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학생들의 백두산 답사 행군이 이어지기도 하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는 분위기이다. 북한 기록영화에 백두산에 오르는 김정은 모습을 등장시켜 백두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보인다.²⁶ 뿐만 아니라 백두산지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양강도 백암군에 2004년부터 청년돌격대 2만 명을 투입하여 총 발전설비 10만kW 규모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여 2015~2016년까지 1호, 2호, 3호기 건설이 완료되었다. 2018년부터는 김정은의 특별지시로 삼지연시(三池淵市)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말 준공하였다.²⁷

2호, 127~144쪽.

- 26 송현진, 2021,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232~236쪽; 박태상, 2016, 「김정은의 홀로서기와 “백두산 칼바람”, 최첨단 돌파」의 과제 - 『조선문학』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0호, 206~209쪽.
- 27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

냉전기 혈맹관계를 유지하던 북·중 관계는 탈냉전, 특히 한중수교(1992) 이후 각자의 국익에 따라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는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 북핵 문제와 국가이익을 상호 조정하는 시기(2011~2017)를 지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화하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미국 카드로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는 한편, 중국 카드로 미국의 강경 입장을 완화하려는 이중헤징(二重 hedging)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북중무역은 5억 4,000달러로 2019년(28억 달러)의 약 20%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양국은 친서 및 축전외교를 통해 전략적 소통·협력 강화, 경제협력 및 인민 생활, 이념·외교 안보적 유대감 등을 강조하며 관계를 밀착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참여할 명분과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²⁸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가 회복되면 북중 관계는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전략적 경쟁 관계의 심화와 한미동맹의 발전 속에서 북·중 역시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을 추구할 동인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북·중 관계는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국가 지정 5A급 관광명승지인 백두산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유리하나, 북한은 백두산 등재 추진을 반대하거나 맞대응하는 등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이 의지를 보이면 공동 등재 추진을 논의할 개연성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ry.do?pageIndex=1&dicaryId=262)

28 한센동, 2021, 「최근의 북중 관계: 변화와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9권 4호, 78~81쪽; 신종호, 2021,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성균차이나브리프』 9권 4호, 86~92쪽.

2. ‘백두산’ 국제 명칭의 정립과 확산

중국은 백두산을 ‘Changbai Mountain’으로 이미 국제사회에 각인시켰고 계속 홍보 중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Mount Paektu’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내에서조차 다양한 영문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다.

[표 1]은 세계 주요 전자지도에 표기된 백두산의 국제명칭이다.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지도들은 대부분 중국 측의 백두산에 ‘Changbai Mountai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북한 측의 백두산 명칭은 다양하다. Map Quest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영국에도 자회사가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지도 회사이다. Google Map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도 가운데 하나

〈표 1〉 주요 전자지도에 표기된 백두산 국제명칭과 천지의 분할 표기

국가	지도 출처	백두산		천지	높이	천지 분할	
		중국 측	북한 측			중국:북한	
미국 UK	Map Quest	Changbai Mountain	PeaktuMountain	Heaven Lake	—	4,5:5,5	
미국 중국	Google Map	Changbai Mountain	PeaktuMountain	Heaven Lake	—	4,5:5,5	
	Bing Map	Changbai Mountain	Baekdusan	Heaven Lake	2,744m	4,5:5,5	
	Apple Map	ChangbaiShan	ChangbaiShan	Heaven Lake	2,744m	4,5:5,5	
	Baidu Map	長白山	—	長白山 天池 白頭山 天池	—	분할 없음	
일본	yahoo Japan	—	—	白頭山 天池	—	4,5:5,5	
한국	국토지리정보원	—	—	—	—	0:10	
	네이버 지도	웹	—	—	—	—	7:3
		앱	—	—	—	—	0:10
	카카오지도	—	Bakdu - Mountain	—	2,750m	5:5	

이다. 두 지도에 북한 측의 백두산은 ‘Peaktu Mountain’으로 표기되어 있다. 천지 분할을 기점으로 각국의 측면에 중국과 북한의 공식 명칭을 따른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Bing Map은 ‘Baekdus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백두’ 영문표기를 따른 것이다. Apple Map은 중국과 북한 측 모두에 ‘ChangbaiShan’으로 표기하여 중국의 표기를 따르고 있다. 이 경우 Apple Map 사용자는 ‘백두산’ 명칭을 인지하지 못하며, 백두산을 중국만의 산으로 각인될 것이다.

천지의 명칭은 모두 ‘Heaven Lake’이며 천지의 분할은 중국:북한이 4.5:5.5로 북한 측이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Baidu Map은 영문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長白山’으로 표기하고 천지의 분할이 없으며, 일본의 yahoo Japan은 표기가 없다. Baidu Map은 백두산을 중국만의 산으로 표현하였다.

미국의 지도는 대부분 백두산을 중국과 북한 양측의 산으로 인지하여 천지를 분할하였으며, 명칭도 양측의 것을 각각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공신력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영문표기가 없으며, 카카오지도는 북한 측에 ‘Bakdu-Mountain’, 네이버지도는 웹과 앱의 경우 모두 영문표기가 없다. 천지를 분할한 선의 표기도 각양각색이다. 카카오지도는 중국:북한이 5:5, 국토지리정보원은 0:10이다. 심지어 네이버지도의 경우 웹과 앱의 지도가 서로 다른데 웹은 7:3, 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표기를 따라 0:10으로 표시하였다. 국내 지도의 백두산 표기가 서로 상이하고 심지어 같은 회사의 지도조차 내용이 다른 상황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백두산’을 홍보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Changbai Mountain’보다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백두산의 영문표기 및 지도의 천지 분할선 등을 먼저 통일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의 ‘백두산’ 국제 명칭을 정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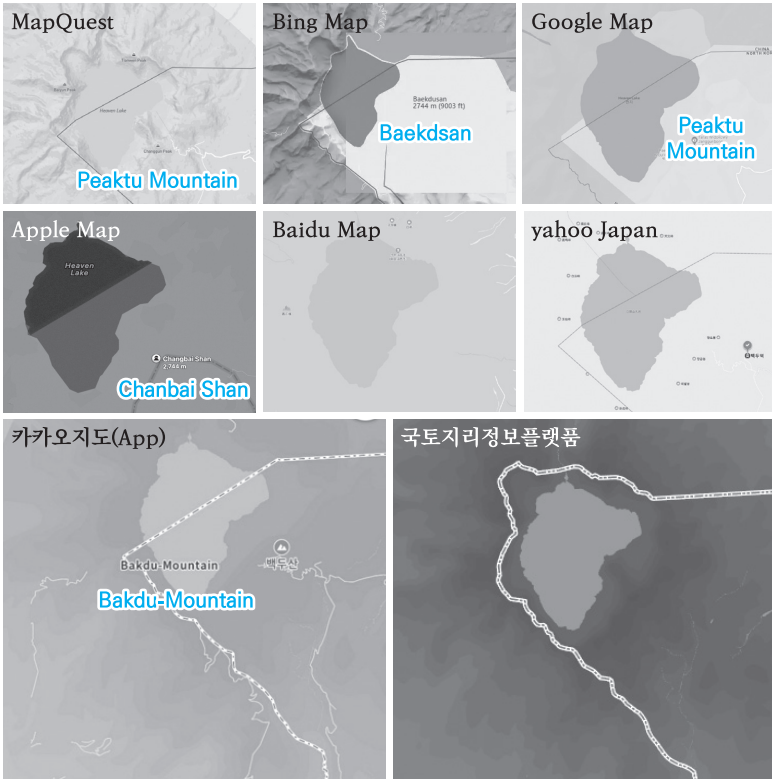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 전자지도의 백두산



그림 15 네이버지도(웹과 앱)의 백두산

V. 맺음말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백두산처럼 스페인과 프랑스에 걸쳐 있는 피레네산맥-몽페르뒤산(Pyrénées-Mont Perdu)도 두 나라에 걸쳐 과거 유럽 사회의 경관을 간직한 지역이다. 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복합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보면 중국과 겹쳐 있는 백두산의 경우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88년 9월 24일 스페인 토를라(Torla)에서 프랑스의 몽페르뒤(Mont Perdu) 국립공원과 스페인의 피레네(Pyrénées) 국립공원은 ‘인류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유산 가운데 하나’인 피레네산맥-몽페르뒤산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 보존하기로 하였다. 이때 ‘협력헌장’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원칙과 행동을 열거하였다.²⁹

두 나라가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1997년 12월 ‘Pyrénées-Mont Perdu’는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의 접경지역 유산(transboundary property)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복합유산에 등재되었다. 협곡과 권곡, 석회암 지괴 등 빼어난 자연적 경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마을, 농장, 밭, 고지대 목축지, 산악 도로 등은 과거 유럽 사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역사·문화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공동으로 등재된 경우는 문화유산 18개소, 자연유산 15개소, 복합유산 3개소 등으로 적지 않다.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역사·문화·자연유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견주어본다면 백두산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역사·문화·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충분하고 그 가치는 초국가적이다. 현재 우리가 분단의

29 유네스코세계유산, world heritage list, “Pyrénées - Mont Perdu”(http://whc.unesco.org/en/list/773).



773bis - Pyrénées - Mont Perdu : délimitation du bien inscrit sur la Liste en 1997, modifié e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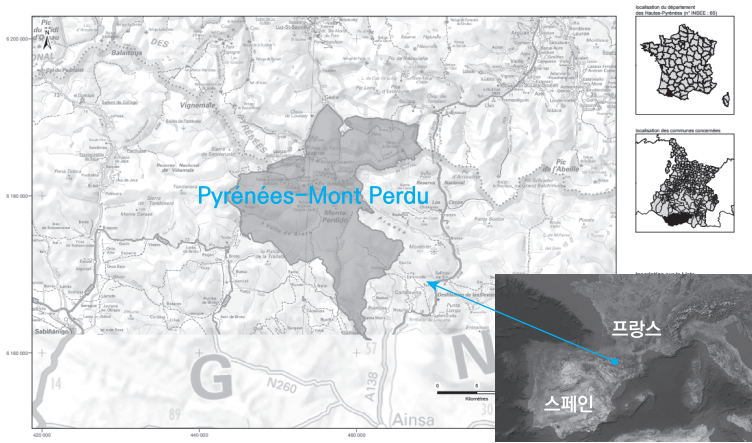


그림 16 유네스코세계유산, world heritage list, “Pyrénées–Mont Perdu”(http://whc.unesco.org/en/list/773)

상황에서 북한 쪽으로 백두산을 오를 수는 없지만, 백두산은 분명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하고, 백두산 국제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백두산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를 품은 큰 산이다. 국경과 경계라는 대립 공간이 아닌 남북 화합의 장, 한반도와 중국 공동 역사의 공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이후 한 발 더 나아가 초국가적인 가치 차원에서 중국과 함께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田雨, 2002, 『白頭山地名及白頭山稱謂의歷史考察』, 交流與思考.

논문

문상명, 2021, 「조선후기 <天下圖>에 담긴 白頭山 인식」, 『만주연구』 32.

박정민, 2016,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박종철, 2009, 「1960년대 중반의 북한과 중국: 긴장된 동맹」, 『한국사회』 제10집 2호.

박태상, 2016, 「김정은의 홀로서기와 “백두산 칼바람”, 최첨단 돌파”의 과제-『조선문학』 소개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0호.

송현진, 2021,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신미아, 2013, 「발해 상정성의 세계유산 등재 전망 및 제언」, 『고구려발해연구』.

신중호, 2021,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성균차이나브리프』 9권 4호.

윤휘탁, 2007, 「중국의 동북 文化疆域 인식 고찰-“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5집.

_____, 2013,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인식과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제51호.

_____,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_____, 2019, 「중국에서의 ‘滿洲(長白山) 主人論’의 表象化 작업과 의미」, 『중국사연구』 119.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백산학보』 제76집.

한센동, 2021, 「최근의 북중 관계: 변화와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9권 4호.

기사 및 보도

문물보호[2021]29호: 중국 국가문물국 “대유적지 보호 및 이용 14.5 전문 항목 계획에 관한 통지《大遺址保護利用“十四五”專項規劃》.

『沈佳高鐵白敦段開通 長白山全域旅游一周接待1.22万人』, <吉林省長白山保護開

發區管理委員會〉, 2022.12.31.

『長白山保護區十年工作回顧』, 〈吉林省商務廳〉, 2017.9.22.

『長白山冰雪小鎮建設項目』, 〈吉林省商務廳〉, 2019.2.12.

기타 자료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262>

유네스코세계유산,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6190/>

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 <http://cbs.jl.gov.cn/>

Baidu百科, <https://baike.baidu.com>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문상명

2017년 2월 28일,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중국에서 부르는 백두산 명칭) 식 생수직경관 및 화산 지모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하였다. 이어 202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 신청을 하였다. 최근에는 백두산 관광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답사 자료들과 최근 중국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백두산 공정, 소위 ‘창바이산문화건설공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 설립한 창바이산관리위는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창바이산문화건설공정’으로 발전시켜 백두산을 만주족의 ‘성산(聖山)’으로 선전하고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인 ‘창바이산’만 내세워 자신들의 산으로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창바이산 풍경구를 거점으로 너인고성,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바오마성 유적지, 류당산 문화명승지 등을 통해 ‘창바이산 문화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창바이산’ 관광 및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바이

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경제의 축을 발해사 유적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발표한 '중국 국가문물국 제14차 5개년 계획'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북중 관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기준을 고려할 때 공동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 백두산의 영문표기 및 지도의 천지 분할선 등을 먼저 통일하고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의 '백두산' 국제 명칭을 정립해야 한다. 이후 한 발 더 나아가 중국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백두산, 창바이산, 장백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백두산 공정, 창바이산문화건설공정, 창바이산 풍경구, 너인고성,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바오마성 유적지, 류당산 문화명승지, 발해, 만주족, 여진족, 천지

ABSTRACT

China's Baekdusan Strategy and Our Countermeasure

Moon Sangmyeoung

On February 28, 2017, China submitted Changbai Mountai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After that, in 2020, it applied for registration as a UNESCO Global Geopark. Recently, it is promoting the tourism development of Baekdusan. It is connected with the movement to inscribe Baekdusan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Mt. Baekdu process and suggest countermeasures based on data from previous expeditions to COVID-19 and recent Chinese articles.

The Changbai Mountain Management Committee, established in 2006, is playing the role of a forward base for inclusion of Baekdusan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the Changbai Mountain Scenic Area as a base, 'Changbai Mountain Cultural Theory' is being developed through the Neyin Ancient City, Changbaishan Cultural Museum, Baoma Ancient castle, and Liudingshan Culture Tourism Area. In

addition, it is promoting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hangbai Mountain'. Centering on the 'Changbai Mountain' brand, the axis of history, culture, and economy are connected with the Balhae ruins.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recently announced 14th Five-Year Plan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China.

The inclusion of Baekdusan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can be jointly promoted, g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criteria for inclusion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Prior to this, the English notation of Mt. Baekdu and the dividing line of heaven and earth on the map should be unified in Korea. Through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a common international name for 'Baekdusan' should be established. We need to go one step further and jointly promote UNESCO World Heritage inscription with China.

Keywords: Baekdusan, Peak Mountain, Changbai Shan, Changbai Mountain,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Global Geoparks, Changbai Mountain Cultural Construction Strategy, Baekdu(白頭) Mountain Strategy, Changbai Mountain Scenic Area, Neyin Ancient City, Changbaishan Cultural Museum, Baoma Ancient castle, Liudingshan Culture Tourism Area, Balhae, Manchu tribe, Heaven Lak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률총론』·『당률각론』

김택민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I. 머리말
- II. 당률의 위상과 체제
- III. 『당률총론』
- IV. 『당률각론』



I. 머리말

필자는 2021년 9월에 경인문화사에서 『당률각론』 2권 및 『당률총론』 1권을 출간하고, 2021년 12월에 같은 출판사에서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였다.

『당률각론』 I·II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당률각칙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6년여의 연구 끝에 출간한 책이다. 『당률각론』 I은 황제·국가 법익편, 『당률각론』 II는 사회·개인 법익편이다.

『당률총론』은 ‘당률각칙연구’를 수행하면서 총칙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집필한 책이다. 필자는 2002년 타이완의 다이엔후이(戴炎輝)의 『당률통론(唐律通論)』을 번안하여 『중국고대형법』(아카넷, 2002, 뒤에 『동양법의일반원칙』으로 개제)을 출간한 바 있는데, 이 책은 완성도가 높지 않고 내용도 부실하다. 그리하여 이번에 당률의 총론서를 다시 집필하게 된 것이다.

『당률소의역주』는 총론과 각론을 집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동학 4인과 함께 6년여 동안 『당률소의』를 정독하고, 번역과 주석 작업을 진행하여 출간한 책이다. 『당률소의』에 대한 역주는 오래전에 필자의 연구실과 경북대학교 임대희 교수의 연구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역주당률소의』 3권(한국법제연구원, 1994~1998년)을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오역이 적지 않고 주석도 부실하여 다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의 역주서로 그 숙원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당률의 위상과 체제에 대해 설명한 뒤 『당률총론』과 『당률각론』의 요지를 소개한다.

II. 당률의 위상과 체제

1. 당률의 위상

1) 당률의 성립

『당률소의(唐律疏議)』는 당의 율과 그 해석인 소(疏)를 결합한 형법전으로,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법전의 율은 652년(고종 영회 2년)에 반포되었고, 율을 해석한 소는 654년 10월에 『율소(律疏)』라는 책으로 반포되었다. 여기서 소는 율의 해석이라는 뜻이다. 율과 소는 원래 별도의 책으로 반포되었으나, 후대에 율과 소를 하나의 책으로 결합하면서 『당률소의』라고 칭하였다.

『당률소의』가 오래된 형법전이기는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출현한 최고의 법전은 아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법은 전국시대 위의 이회(李悝)가 정한 법경(法經) 6편, 즉 도(盜)·적(賊)·수(囚)·포(捕)·잡(雜)·구법(具法)이다. 상앙이 이 법을 진에서 시행하면서 명칭을 율로 바꿨다. 이후 청말까지 그대로 율로 불렸다.

1975년 중국 호북성 운몽현 수호지에서 출토된 간독으로 진율의 존재가 확인되고, 2001년에 호북성 장가산의 한대 묘에서 출토된 간독을 통해 비교적 완전한 법전형태를 갖춘 기원전 186(여후 2년)의 율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서에는 진말 한초에 제정된 형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단지 전한의 소하(蕭何)가 상앙의 율 6편에 사율(事律) 3편을 더하여 구장율(九章律)을 정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후 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율(副律)·방장율(傍章律) 등이 더해져 율이 수십 편에 이르고 조문 수가 수만에 이르렀으나, 양한 400년 동안 법전으로 편찬되지는 못했다.

후한 말에 이르러 조조가 비로소 율령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위문제 조비가 위율 18편을 제정하였다. 이어 진(晉)에서 진율 20편을 제정하였다. 이 두 율에는 유가사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른바 “예를 법

에 들였다(以禮入法)”고 하는 당률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후 남조의 왕조들은 진율을 계승하고 북조의 왕조들은 한율의 회복을 꾀하여, 왕조마다 율의 조문과 내용이 들쭉날쭉하였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는 대개 북제의 율을 기본으로 하고 남조의 율을 참작하여 새로운 율 500조를 정했는데, 이는 이전 율의 형을 경감하고 조문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전대의 율들에 비해 마땅한 바가 많다는 평가가 있다.

당은 수의 율을 계승하면서도 다시 형을 경감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몇 차례 걸쳐 율을 반포하였다. 또한 653년에 반포한 율소도 현종 개원 연간에 수정하였다. 율소의 소는 ‘조목별로 기록하다’ 혹은 ‘어려운 말을 풀다’의 뜻으로 법해석이다. 여기에는 이전 시대 율학자들과 유학자들의 법사상과 법 이론이 녹아들어 있다.

2) 당률의 계승과 전파

이전의 율과 법 이론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당률소의』는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물론 주변의 한반도, 일본, 베트남 왕조들의 법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인지 『당률소의』는 종종 비잔틴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편찬되어 근대 서양법의 모태가 된 『로마법대전』에 비견되기도 한다.

(1) 당률의 계승

송에서는 『당률소의』에 제·칙을 더한 『송형통(宋刑統)』이 편찬되었다. 원에서는 당률과 같은 형법전이 편찬되지 않았다. 명은 『대명률』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대명률』은 당률을 계승한 것이 많으나 당률의 12편 체제를 취하지 않고, 명례율과 이·호·예·병·형·공률의 7편으로 개편하였으며, 오직 율의 조문만 채택하고 그 해석인 소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청은 『대청률』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이는 명률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2) 당률의 전파

신라가 당률을 직접 수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 다만 문무왕 때 이부방격(吏部方格) 60조를 반포한 것을 보면 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는 『고려사』 형법지에 “고려 일대의 제도는 대개 당을 모방하였으며, 형법은 당률을 채택하되 때의 마땅함을 참작하여 썼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률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은 『경국대전』 형전에 “올은 『대명률』을 쓴다”고 명기해둔 바와 같이 올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대명률』을 형법으로 사용했다. 단, 올의 해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초에 이두로 올 해석서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조선에서는 많은 법이 제정되었지만, 형률로서의 『대명률』은 1905년 『형법대전』이 반포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일본은 7세기 후반부터 당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701년과 717년에 올령을 반포하였는데, 일본의 연호에 따라 각각 『다이호올령(大寶律令)』, 『요로올령(養老律令)』이라 칭한다. 지금 『요로올령』의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이 올령은 중세 이후 적용되지 않다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서양의 형법을 도입하기까지 잠시 사용한 적이 있다.

베트남은 15세기 중엽 레조(黎朝)가 당률을 근간으로 하여 『국조형률』을 제정하였는데, 일명 『레조형률(黎朝刑律)』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중국의 법을 참조하였지만 베트남의 관습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3) 당률의 제한적인 보편성

이상으로 보듯이 당률은 주로 동아시아의 농경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고대에 일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듯하다가 중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베트남의 경우는 후대에 와서 비로소 당률을 참조하여 제정했지만 관습법을 많이 반영하였다. 따라서 당률을 장기간 중단 없이, 그리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한 지역은 한반도뿐이다. 이들 지역 외에 몽골 초원과 만주의 대부분, 티베트고원, 아시아 서남부 지역 등 중국과 접하고 있는

주변의 여러 민족에게는 당률이 전파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 서양법이 전래되자 중국의 법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듯 다수의 주변 민족들이 당률을 수용하지 않았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중국법 자체가 생명력을 잃게 된 까닭은, 유교의 예와 그것을 바탕으로 정한 형법의 가치를 주변 민족들이나 근대인들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당률 및 그것을 계승한 전통시대의 중국법은 보편성이 제한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당률은 보편성이 제한적인 법이지만 우리는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고, 당률을 계승한 명률을 우리의 법으로 삼아 현실에서 적용하기도 했으며, 그 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의 일부 유산을 이어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우리가 『당률소의』를 역사로 읽어야 할 이유이다.

2. 당률의 체제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1) 명례율

명례율 57개 조항을 현행 형법 총칙의 체제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형벌 및 형의 시행 원칙을 규정한 조문들이다. 5형 20등(명1-5), 유형 의 집행 및 유·도형의 대체 집행(명24, 25, 27, 28), 장물의 몰수와 추징(명32, 33조), 형의 개정 및 보구(명44)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감면할 수 없고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 열 가지 십악(명6)이다.

셋째, 감면 대상과 감면의 방법을 정한 조문들이다. 황제의 친속·관인·관인의 친속에 대한 형사상 특전(명7~14), 관인 처벌의 특례(명15~23), 사·유형의 집행 유예(명26), 노·소·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30, 31), 사면의 조건(명

35, 36), 자수 감면(명37~39), 공무죄 처벌원칙과 자수 감면(명40, 41), 친속을 숨겨준 죄의 면제(명46)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 공범과 갱범·경합범의 처벌원칙에 관한 조문들이다. 공범의 처벌원칙(명42, 43), 갱범 및 경합범의 처벌 원칙(명29, 45)에 관한 조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 형법의 적용범위 및 법률 용어를 정의한 조문들이다.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는 친인의 범죄(명47)와 외국인의 범죄(명48), 명례율의 적용(명49), 유추해석(명50)에 관한 조문이 있다. 법률 용어를 정의한 것에는 장물의 평가(명34), 법률 용어의 해석(명51~57)에 관한 조문이 있다.

2) 각칙

각칙 445개 조항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사율은, 2편 위금율(2권), 3편 직제율(3권), 4편 호훈율(3권), 5편 구고율(1권), 6편 친홍률(1권), 11편 포망률(1권), 12편 단옥률(2권)로 모두 13권 242조이며, 주로 국가의 행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궁궐 등의 숙위(위금), 관리들의 직무 수행(직제), 호구·세역 및 혼인과 양자(호훈), 창고와 가축의 관리(구고), 군사와 토목·건축(친홍), 체포와 도망(포망), 죄수 관리와 판결(단옥)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과 양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적 법의 침해의 죄에 해당한다.

죄율은, 7편 적도율(4권), 8편 투송률(4권), 9편 사위율(1권), 10편 잡률(2권)로 모두 11권 203조이며, 대부분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의 침해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적도율은 주로 비윤리적인 살상죄와 강도·절도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투송률은 통상의 살상죄와 고소·고발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위율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잡률은 이상의 율에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Ⅲ. 『당률총론』

1. 본서의 체제

『당률소의』는 형법과 그 해석을 합해놓은 형법전이지만 전통시대 중국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당률소의』의 총칙을 사료로 이용하여 집필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당률의 총칙을 사료로 삼아 역사책을 쓰면서 여전히 형법총론의 체제를 따른 것은, 이 방법이 총칙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당률의 명례율은 총칙이라고는 하지만, 현행 형법의 총칙과는 다른 점이 매우 많다. 현행 형법 총칙은 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인 데 반해, 당률의 명례율은 먼저 용서할 수 없는 죄 십악을 특정하고, 이어서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게 형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규정 등이 중심이다. 따라서 어떤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지, 누구에게 형사상 특전이 부여되는지 고찰해보면 이 시대의 역사상을 새롭게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는 총론편 3장과 명례편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1편 총론편

1) 당률의 기본 성격

총론편 1장은 당률의 기본적 성격을 규명한 것인데, 그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① 당률은 보편성이 제한적인 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② 당률의 입법자들은 법망을 벗어나서 날뛰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율을 제정했다고 언명하였다. 이는 로마법에서, 입법목적은 “품덕 있게 사는 것,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그의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며,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부여하려는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의지이다

(『법학제요(法學提要)』 1장)”라고 선언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 정리해서 말하면, 로마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반면 당률은 인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③ 당률은 황제가 정한 법이다. 당 전기의 법체계는 율·령·격·식이고, 이 밖에 법적 효력을 가진 것들이 더 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오직에게 황제에게만 있고, 신민은 그 지배를 받을 뿐이었다.

2) 당률의 총칙

총론편 2장은 명례율의 총칙과 각칙에 규정된 총칙의 대강을 소개하였다.

3) 당률의 사상적 기반

총론편 3장은 당률의 사상적 기반과 죄의 구조에 대한 것으로, 이 책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당률의 사상적 기반은 유가사상이며, 법은 예를 도입해서 하나같이 예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전국시대에 최초로 출현한 율은 유가사상이나 예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유자들의 꾸준한 시도 끝에 유가의 예를 기반으로 하는 율이 완성되었다. 예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율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① 황제의 친속이나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게는 일반인보다 우월한 형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르게 처분한다.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은 황제의 율타리가 되는 자들이므로 이들이 범한 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며, 관인들은 황제의 조력자들이므로 관품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여 일반인과 달리 처분하는 것이다.

② 모든 죄행은 해악의 정도가 동등할지라도 신분에 따라 죄형의 등급이 다르다. 신분은 관품의 고하, 양인과 천인, 친속의 준비장유와 친소를 말하는데, 신분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다르다. 신분의 형법상의 효과는 당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③ 예의 절차적 규범과 금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3. 제2편 명례편

1) 형벌 및 형의 집행

명례편 1장에서는 형벌 및 형의 집행에 대해서 논하였다.

명례율의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5형 20등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눈금과 같은 것으로, 모든 죄의 무게는 오직 이 20등의 눈금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위금률 이하 445개 조에 정한 모든 죄에 대한 형은 5형 20등 중의 한 등급으로 정해진다. 단 형의 등급이 같을지라도 신분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경우에도 본조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대체하여 집행한다.

죄를 논하여 형이 이미 정해졌더라도 다시 심의하여 죄와 형을 정정할 수 있다. 예컨대 뒤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판관이 고의나 과실로 죄를 증감했거나, 망실한 물건을 뒤에 습득하거나, 놓친 죄인을 체포했을 때 다시 심의해서 형을 정하고, 이미 집행된 형에 대해 보완하거나 구제한다.

2) 십악

명례편 2장에서는 십악에 대해서 논하였다.

명례율 6조 십악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의 항목 10개를 열거하고 각 항목마다 하나 또는 몇 개의 죄를 주기한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명례율 7조 이하의 특전에 관한 규정에서는 십악을 범한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기하고 있다. 즉, 십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은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게 부여하는 형사상 특전과 특례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조부모·부모의 시양을 위해 사형의 집행유예를 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십악 중 일부의 죄는 통상의 은사령으로 사면하지 않는다.

이처럼 몇몇 범죄를 특정해서 특전과 특례를 허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그것들이 중대 범죄이기 때문일 터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십악 조항의 소는, 십악은 명교(名敎)를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 소에는 명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는데, 여기서 명교는 후한의 반고(班固)가 『백호통(白虎通)』에서 윤리의 근간으로 정의한 삼강육기(三綱六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강육기의 삼강은, 군주는 신하의 근본이고(君爲臣綱),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이며(父爲子綱),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다(夫爲婦綱)라는 윤리이고, 육기(六紀)는 삼강의 부수적인 것으로 관장은 속민의 기, 백숙부는 조카의 기, 형은 동생의 기가 된다는 등등의 준비장유의 윤리인데, 십악의 각 항목에 주기된 40여 개의 죄는 5항 부도를 제외하고 모두 이 윤리 중 하나를 훼손한 행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십악의 죄들은 다 같이 삼강육기의 윤리를 훼손한 죄이지만 군위신강의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은 부위자강의 윤리를 훼손한 죄가 많으며, 부위부강의 윤리 훼손죄는 앞의 두 강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육기의 윤리를 훼손한 죄는 더욱 적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군위신강의 윤리 훼손죄가 가장 많이 십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률이 황제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형법적 장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위자강의 윤리 훼손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률이 가부장적 가족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형법적 장치였고, 부위부강의 윤리 훼손죄들이 십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률이 남편에 대한 부인의 종속성을 강제한 형법적 장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준비장유의 윤리훼손죄를 십악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당률이 신분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악은 당률이 지향하는 목적을 선언한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지배층의 형사적 특전

명례편 3장에서는 지배층에게 부여된 형사적 특전에 대해서 논하였다.

지배층에 대한 특전은 명례율 7~16조의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장·청장·감장·속장이다. 의장은 황제의 친속 및 직사관 3품 이상이 십악 이외의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의국을 열어 형의 집행 여부를 논한 뒤 황제의 재가를 청하고, 유죄 이하는 1등을 감하는 특전이다. 청장은 의장 자격

이 있는 자의 친속과 5품 이상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집행 여부에 대해 황제의 재가를 청하고 유죄 이하는 1등을 감하는 특전이다. 단, 이들이 십악이나 살인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특전을 받을 수 없다. 감장은 고위 관인의 친속과 6·7품의 관인이 유죄 이하를 범한 경우 1등을 감한다는 특전이다. 특전이 제한되는 죄는 청장의 경우와 같다. 속장은 관인과 관인의 친속 등이 죄를 범한 경우 십악 등 특정된 죄를 제외하고 모두 실행에 처하지 않고 동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특전이다. 이같이 황제의 친속이나 고위 관인 및 그 친속에게 형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규정을 총칙으로 정한 것은 당률이 황제의 울타리가 되는 자들을 위한 형법적 보호 장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관인의 죄에 대한 특별 처분

명례편 4장에서는 관인들의 죄행을 특별 처분하는 규정에 대해서 논하였다.

관인의 특별처분은 명례율 17~23조의 7개 조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데, 관당·제명·면관·면소거관이 바로 그것이다. 관당은 관인이 유·도죄를 범한 경우 관품의 임명장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제명은 특정된 죄를 범한 경우 일체의 관·작을 해면하고 관품을 수여하기 전의 출신 자격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면관·면소거관은 가지고 있는 관품의 일부를 해면하는 것이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현직에서 해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서용하되, 서용하는 관품은 원래의 관품에서 강등하고 실행은 면제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총칙으로 정한 것은 당률이 관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5) 양인 및 천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

명례편 5장에서는 명례율 26~28조, 30~31조에 규정된 양인 및 천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논하였다. 특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조가 시양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기친 이상의 성정(20세 이상)이 없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② 도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복역해야 하는 죄인의 가내에 죄인

외에 다른 성정이 없는 경우 장형으로 대체해서 형을 집행한다. ③ 특수직역인 및 부인이 유죄를 범한 경우 유배하지 않고 장형과 노역으로 대체해서 집행한다. ④ 노·소·장애인이 죄를 범한 경우 실형 대신 동을 징수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⑤ 관호·부곡 및 관·사노비가 유·도죄를 범한 경우 장형으로 대체해서 집행하고 노역을 면한다.

6) 은사의 조건 및 제한

명례편 6장에서는 은사의 조건 및 제한에 대해서 논하였다.

은사는 절대적인 황제권의 성격과 황제의 법률 운영 방식을 잘 보여주는 제도이다. 은사령이 내리면 은사의 명을 적은 사서(赦書)가 나온 날의 일출 이전에 범한 죄는 모두 사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사는 원칙적으로 범행의 발각 여부나 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현재 수감된 죄수나 복역 중인 죄수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서에 통상의 은사령으로 면제되지 않는 것도 면제한다는 언급이 없는 한 사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의 율에 의한 은사의 제한 규정일 뿐이며, 황제가 특별히 용서해서 방면하는 경우 통상의 율은 효력을 잃는다. 은사는 군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단, 은사령이 내리면 죄는 용서하지만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존속을 용인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은사령이 내린 뒤 일정 기한 내에 죄인이 자수하기를 명하고, 자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처벌한다.

7) 자수 감면

명례편 7장에서는 자수 감면에 대해서 논하였다.

죄를 범하고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죄를 면제한다. 자수하지 않고 도망했다가 같이 도망한 죄수를 붙잡아서 자수하는 경우에도 죄를 면한다. 단, 이 경우에는 자기보다 죄가 무거운 자를 붙잡거나 도망자의 반 이상을 붙잡는 경우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절도죄 등 장죄를 범하고 주인에게 자수하고 재물을 돌려주는 경우 죄를 면하기도 한다. 자수와는 반대로 죄를 범한 친속을 숨겨주

어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8) 공범

명례편 8장에서는 공범에 대해서 논하였다.

명례율에 정한 공범의 처벌 규정은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조의자를 수범으로 하고, 수종자는 1등을 감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규정된 공범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서로 의사를 소통하여 공동으로 실행한 범죄이며, 현대 형법 이론으로 말하면 임의적 공범에 해당한다. 2인 이상의 참가나 단체 행동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필요적 공범은 각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당률에서 교령법은 공범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교령은 타인을 교도·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으로, 이용된 자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대로 교령법 본인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교령법은 명례율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갱범과 경합범

명례편 9장에서는 갱범과 경합범에 대해서 논하였다.

갱범은 범한 죄가 이미 발각되었거나 판결이 끝나고 복역 장소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다시 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죄를 병과한다. 경합범은 2개 이상의 죄가 함께 발각된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그중 무거운 것으로 논한다. 장물로 인한 죄를 여러 번 범했다면 모두 누계하되 절반하여 죄준다는 규정도 있다. 이 밖에 한 사건이 2죄로 나누어지는 경우의 처벌법, 하나의 행위에 적용될 명례와 본조가 경합하는 경우 본조를 적용한다는 원칙, 하나의 행위에 2개 이상의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 때 그중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는 원칙, 사실의 착오에 관한 처벌 원칙을 규정한 조문도 있다. 이상을 합해서 경합범으로 설명하였다.

10) 율의 적용범위 및 명칭의 정의

명례편 10장에서는 율의 적용범위와 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의 정의에 대해

서 설명하였다.

천인의 범행에 대해 본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양인에 준한다는 규정, 동류의 외국인 사이의 범행은 본국의 법에 의거한다는 규정, 본조에 명례율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본조를 적용하며, 신분인을 범한 무거운 죄라도 범행할 때 알지 못한 경우 일반인을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정한 규정도 있다. 당률은 해악이 동등할지라도 신분과 정상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더하거나 감하기도 하고, 별도로 지정한 특수한 신분에 대해서는 죄를 무겁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칭의 정의가 중요하다. 이 밖에 다른 죄를 준거로 적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IV. 『당률각론』

1. 본서의 체제

당률의 총칙은 황제지배체제와 가부장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 십악과,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이 죄를 범한 경우 사형을 면하고 죄를 감한다는 원칙 및 관인이 죄를 범한 경우 특별 처분한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또한 당률은 객관적인 해악의 정도가 동등할지라도 신분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 및 규정들은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이다.

당률의 각칙은 총칙에서 정한 원칙과 지향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정된 조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전하는 『당률소의』의 각칙은 황제의 신변에 대한 경위로부터 시작하여 재판까지 국가 행정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죄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총칙에서 정한 원칙들이 각칙에서 어떻게 구

현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총칙에서 정한 원칙과 지향하는 목적이 각칙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법익이 중시되었는지,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를 서열화하고 체계적으로 재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 『당률각론』은 당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내용, 그리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고찰하여 현행 『형법각론』의 체제에 따라 각칙의 조문들을 재조직하여 집필된 것이다.

단, 본서의 체제는 현행 『형법각론』들과는 달리,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형법각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규범이며, 개인이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은 황제의 신변과 권력, 권위와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본 『당률각론』에서는 황제·국가의 법익을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우선적으로 서술하였다.

각 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1장 황제·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장 황제·국가의 명령체제에 대한 죄, 3장 국가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죄, 4장 국가의 사법적 기능에 대한 죄의 4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1) 황제·국가의 존립과 존엄에 관한 죄

당률에서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에 포함될 수 있는 죄는 내란죄에 상당하는 모반과 대역, 외환죄에 상당하는 모반(謀叛) 등을 들 수 있다. 단, 당률의 모반은 현행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를 침절한다든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일으킨 범죄가 아니고 황제를 위해하려고 모의한 죄

이다. 따라서 죄의 객체로 국가가 아니라 곧바로 황제를 지칭하고 있는 점에서 현행 형법의 내란죄와는 차이가 크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고 종묘·산릉·궁궐과 같이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훼손한 죄인 대역도 모반과 같은 등급의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이처럼 황제에 대한 위해 및 권위 손상의 죄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로 간주되는 만큼 황제의 시봉, 황제의 신변 안전, 황제 및 황실의 존엄에 관한 위법행위도 매우 중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고, 율의 배열에서도 우선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2) 황제·국가의 명령·보고체제에 대한 죄

당률에는 황제의 명령서인 제·칙 및 관문서의 작성과 그것의 유통에 관한 죄가 적지 않다. 또한 그 문서들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신표인 보·인·부·절에 관한 죄들과 문서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마련된 역전제도에 관한 죄도 많다. 이는 황제의 명령을 담은 제·칙 및 기타 관문서의 정확한 작성과 그것의 신용 보증 및 신속한 전달이 당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제·칙 및 관문서의 정확한 작성과 유통이 국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고, 황제의 전체적 지배체제의 원활한 작동과 유지를 위한 기제였기에,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치밀하게 갖추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국가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죄

국가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죄는 관리의 직무에 관한 죄와 관리들이 수행하는 각 분야의 공무 방해에 관한 죄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들의 직무에 관한 죄는 근무태만죄와 기밀누설죄 및 탐오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들이 수행하는 각 분야의 공무 방해에 관한 죄는 관리의 임용 및 고과, 민의 통제 및 치안, 토지 관리, 세역 관리 등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기능을 방해한 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죄들을 통해서 당시 국가 행정 및 제도가 운용되는 실상을 엿볼 수 있다.

4) 국가의 사법적 기능에 대한 죄

당의 사법제도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이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가 없고, 행정과 사법이 일체화되어 있었다. 당의 율령에는 고소·고발 및 탄핵에 관한 규정, 죄수 관리 및 신문에 관한 규정, 재판에 관한 규정,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관한 규정 등 형사 관련 절차법이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절차법에는 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식화된 고소·고발 규정과 정확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 및 형벌의 집행을 위한 세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혐의가 있는 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허용하고, 증인도 죄인과 마찬가지로 신문하고 고문할 수 있는 등,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규정들도 있다.

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당률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현행 『형법각론』과 마찬가지로 ①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②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③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④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 분류할 수 있다. 단, 포괄할 수 있는 죄의 내용은 다른 점이 많다. 이 밖에 혼인에 관한 죄와 양자 및 상속에 관한 죄가 있다. 현행법에서 혼인·양자·상속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속하여 국가 공권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에서는 민법을 별도로 제정해두지 않고 혼인·양자·상속에 관한 규범을 위반한 경우 율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체로 사회적 규범 내지 풍속 또는 도덕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죄들을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죄에 포함시켜 ⑤ 혼인에 관한 죄, ⑥ 양자 및 상속에 관한 죄로 서술하였다.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요서·요언에 관한 죄 등의 공안을 해하는 죄가 있고, 병기에 관한 죄가 하나의 절로 구성할 수 있

을 만큼 많다. 방화 및 실화의 죄와 물의 관리 및 절도에 관한 죄도 있다. 또한 수레·말의 과속주행죄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흥미롭다.

2)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죄로는 사사로이 전을 주조한 죄와 도량형에 관한 죄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한 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신용을 해하는 죄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사회가 단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고독을 조합한 죄와 독이 있는 육포에 관한 죄 및 오물을 버린 죄 정도만 들 수 있다.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성 풍속에 관한 죄, 도박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예와 윤리를 위반한 죄 등을 들 수 있다. 당률에는 사회생활의 절차적 규범과 금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많다. 이러한 규범들은 현대에는 사라진 것이 많으므로 생소한 죄도 많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5) 혼인에 관한 죄

당대에는 혼인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범과 범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이 많은데, 당률은 이러한 규범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치밀하게 갖추어 두고 있다. 이 죄들은 현대에는 성립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가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양자 및 상속에 관한 죄

양자는 원칙적으로 동성에 한하며, 이성을 입양한 자는 처벌한다. 일단 입양되

면 함부로 양부모를 떠날 수 없다.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상속은 봉작의 상속과 가산의 상속으로 구분된다. 봉작의 상속은 적장자가 계승하며, 적장자가 계승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자의 순위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재산의 상속은 모든 아들이 균분하며, 미혼의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이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처벌한다.

4.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당률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② 자유에 대한 죄, ③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④ 재산에 대한 죄로 분류할 수 있다.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당률은 고의살인만 살인죄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없이 싸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살인죄에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위력에 의한 살인, 고의로 입고 쓰고 마시고 먹는 것을 제거한 것으로 인한 살인, 공갈·협박으로 인한 살인, 염매나 저주에 의한 모살이 있다. 또 한 집안에서 사죄에 해당하지 않는 3인을 살해한 죄와 같은 특별한 살인죄명도 있다.

상해의 죄는 일반인 상해의 죄와 신분인 상해의 죄로 구분된다. 신분인 상해의 죄는 친속을 살상한 죄, 관인을 살상한 죄, 양인과 친인 및 주인과 친인 사이의 살상죄로 구분되며, 모든 죄행은 객관적인 해악의 정도가 동등할지라도 신분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신분에 따라 죄를 구분해서 형을 정한 이유는 당률이 신분제 질서 유지를 위한 형법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당시 신분제 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2) 자유에 대한 죄

당률에서 자유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약취 및 유인의 죄와 강요의 죄를 들 수 있다. 당률의 약취·유인·합의매매의 죄는 객체에 따라서 양인·부곡·노비·

친속으로 구분하고, 부곡이 객체인 경우 양인에서 1등을 감하며, 노비는 재물과 동일시하여 강도·절도로 논한다. 또한 객체를 노비로 삼은 경우와 부곡으로 삼은 경우 및 처·첩·자손으로 삼은 경우로 나누어 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처럼 약취와 유인의 죄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이 같은 범행으로부터 인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요의 죄는 인질의 죄, 양인을 노비로 삼아 부채의 저당물로 사용한 죄, 방면한 부곡·노비를 다시 천인으로 삼은 죄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죄들을 통해서도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3)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당률에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무고죄, 친속·주인 또는 주인의 친속을 고·무고한 죄, 야간 주거침입의 죄를 들 수 있다. 현행 『형법각론』에서는 무고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죄에 포함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의 경우 무고죄를 무고한 자에게 되돌려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보면, 이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안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서에서는 무고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포함시켜 논하였다.

당률은 친속을 관에 고하거나 부곡·노비가 주인 또는 주인의 친속을 고한 경우 죄를 과하고, 무고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례율 46조에는 대공 이상 친속 등이 죄가 있어도 서로 숨겨주거나, 부곡·노비가 주인을 위하여 숨겨주어도 모두 죄를 논하지 않고, 사건을 누설하거나 소식을 은밀히 전하더라도 역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례가 규정되어 있다. 단, 조부모·부모나 친속이라도 모반(謀反)·대역·모반(謀叛)을 범한 경우 관에 고해야 하고, 주인이나 주인의 친속이라도 마찬가지로 고해야 한다. 황제에 대한 충이 부모에 대한 효나 친속 사이의 화목 또는 주인에 대한 의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4) 재산에 대한 죄

당률의 재산에 대한 죄는 현행 형법과 마찬가지로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

같은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등을 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절도라도 친속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 친소에 따라 죄를 감하는 규정이 있고, 사기와 공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률에는 타인의 매장물을 습득하고 토지 주인의 몫을 보내지 않은 자나 계약을 위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치밀하게 갖추고 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는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몰래 경작한 죄, 또는 산과 들에서 공력을 들어 취한 물건을 함부로 취한 죄와 같은 유사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물권 및 채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사건 판례를 통해 본 사상통제의 역사

–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 역사공간

전명혁 |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 I.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사'에 대한 최초의 단행본
- II. 책의 구성과 목차
- III.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제령 제7호와의 차이
- IV. 조선에서 치안유지법의 '최초' 적용 사건
- V.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 재판과 치안유지법 판례의 '안정화'
- VI. 전면시행기의 치안유지법
- VII. 확장하는 치안유지법
- VIII. 폭주하는 치안유지법
- IX.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의 현존



I.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사'에 대한 최초의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오기노 후지오 선생의 책, 『朝鮮の治安維持法-運用の通史』(東京, 六花出版, 2022)에 대한 서평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역사재단의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중 『일제하 민족운동·사회운동의 탄압사(가제)』 작업 때문에 어차피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되어 승낙하였다. 그런데 막상 '서평'을 쓰기 위해 일본어로 된 단행본을 읽으려니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최근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연구소의 윤소영 선생의 번역으로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이 발간되어 정말 다행이었다. 400쪽의 일본어 책을 500쪽에 달하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제 탄압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치안유지법의 역사를 다룬 최초의 단행본이라 할 수 있는 오기노 선생의 노작(勞作)을 한국의 연구자와 독자들이 읽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점에서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필자가 소개할 책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오기노 후지오(荻野富士夫)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역사공간]이다. 저자인 오기노 선생은 1953년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縣)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일본사를 공부하였고 1987년 오타루(小樽) 상과대학 교수로 30년간 재직하다가 2018년 명예교수로 퇴임하였다. 그는 일찍이 『특고경찰체제사-사회운동억압체제의 구조와 실태』(1984), 『전후치안체제의 확립』(1999), 『사상검사』(2000), 『특고경찰』(2012), 『일본헌병사』(2018), 『되살아나는 전시체제』(2018) 등 주요 저서를 집필하고 『치안유지법관계자료집』(1~4권, 1996) 등을 발간하였다.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대개 그의 이름과 저작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이 저작들을 통해 일본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억압구조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필자가 소개할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는 오기노 후지오 선생

의 역작(力作) 중 한 권이다. 이 책은 오기노 후지오의 『치안유지법의 역사』(1~5권)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책이다. 1권은 『치안유지법의 ‘현장’-치안유지법사건은 어떻게 재판받았는가』, 2권은 『치안유지법의 성립과 ‘개정’사』, 3권은 『조선의 치안유지법의 ‘현장’-치안유지법사건은 어떻게 재판받았는가』, 4권은 『조선의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이고 마지막 5권은 『‘만주국’·대만의 치안유지법』으로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어 실행된 일본뿐 아니라 식민지였던 조선과 만주, 대만 등 전체를 다루고 있다. 5권의 시리즈 가운데 현재 1권과 4권이 발행되었고 2권, 3권, 5권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치안유지법의 역사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 역사연구와 저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기노 선생에게 찬사를 보낸다.

사실 필자는 오기노 선생과 일면식도 없지만 필자의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과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30년-1940년대 초 사회주의운동』¹ 두 권을 참조하고 오기노 선생이 선행연구로 평가해주면서 『朝鮮の治安維持法-運用の通史』를 보내준 것이 이 책의 서평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오기노 선생의 노작을 충실히 소개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며 이 저작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1 전명혁, 2020,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 선인; 전명혁, 2020,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30년-1940년대 초 사회주의운동』, 선인. 필자는 이 책을 발간하기 이전 치안유지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2016년 10월 동국대에서 개최한 ‘한국근현대 형사법 체계의 성립과 성격’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하여 2019년 다음 논문을 집필한 바 있다. 전명혁, 2019, 「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 『역사연구』 37호.

II. 책의 구성과 목차

치안유지법 등 사회운동 억압의 구조와 역사를 연구해온 오기노 후지오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의 역사』 시리즈 가운데 4권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

한국어판에 부쳐

들어가는 말

I. 조선에 상륙한 치안유지법 1925~1927

1. 조선에서의 치안유지법 운용 이전의 상황
2. 조선에서의 운용 개시
3. 만주 간도에서의 초기 적용

II. 전면 시행하는 치안유지법 1928~1934

1. 전면시행기의 개관
2. 독립운동에 대한 본격적 운용
3. 조선공산당 붕괴에 이른 치안유지법 적용
4. 1930년대 전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집중적 운용

III. 확장하는 치안유지법 1935~1940

1. 확장기의 개관
2.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추격적 적용
3. 다시 타오르는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적용
4. 종교단체에 대한 선제적 적용

IV. 폭주하는 치안유지법 1941~1945

1. 폭주기의 개관
2. 민족주의운동·의식의 최종적 도려내기
3. 공산주의운동·의식의 최종적 도려내기
4. 종교사범에 대한 본격적 적용
5. 보안법·조선임시보안령·불경죄·육해군 형법 등의 적극적 활용

맺음말

저자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 책은 치안유지법 시행 이후 폐지될 때까지 그 적용의 구체적 과정을 다루었다. 저자는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치안유지법 운용 20년의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저작을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1925~1927년 시기로 「조선에 상륙한 치안유지법」, 두 번째는 1928~1934년 시기로 「전면 시행하는 치안유지법」, 세 번째는 1935~1940년 시기로 「확장하는 치안유지법」, 네 번째는 1941~1945년 시기로 「폭주하는 치안유지법」으로 구분하였다. 저자는 시기구분에 대하여 직접 그 기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생각할 때 4시기 구분의 기준과 각 시기별 또는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조선에서 치안유지법 운용 이전 적용되었던 보안법, 제령7조와 치안유지법의 공통점과 차이 등을 설명하고 조선에서 치안유지법의 최초 적용 사례, 1~2차 조선공산당 사건 등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공산주의운동 판결에 법조항이 어떻게 적용되어가는지 등을 추적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28년 3월 15일 일본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인 ‘3.15사건’을 계기로 치안유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1934년까지이다.

저자가 1934년을 두 번째 시기의 종기로 본 것은 1934년에 보호관찰과 예방구금제를 포함하는 치안유지법의 재개정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기는 치안유지법 검거자 수가 193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감소 경향이 현저해지는 1935년부터 공산주의운동 등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는 1940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1936년 일본의 ‘2.26사건’ 등이 조선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충격을 준 것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시행과 1937년 중일전쟁의 전면화, 1938년 6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결성과 1939년 「사상정화대책요강」의 확립 등을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 시기는 1941년 3월 신 치안유지법 실시 이후 1945년 8월 일제의 패전으로 치안유지법이 폐지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일제는 1941년 2월 신 치안유지법 실시에 앞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시행하였으나 신 치안유지법에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조항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이 시기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일제가 1942년 전시형사특별법을 조선에 적용하고 조선임시보안령 등을 시행하여 언론, 출판, 집행, 결사의 단속을 강화했으며, 시국에 관한 유언(流言) 비어, 조언(造言) 비어 등에 대해 처벌하였다. 저자는 이 시기 치안유지법은 1942년 약간 증가하다가 1943년 8월까지의 244건 2,050명으로 격증하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사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²

Ⅲ.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제령 제7호와의 차이

일제강점기 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법안은 아마도 치안유지법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치안유지법 제정을 앞두고 『조선신문(朝鮮新聞)』이나 『경성신문(京城新聞)』 등 신문과 제국의회 등에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

2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 역사공간, 364~365쪽.

實),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시모오카 추지(下岡忠治) 등 식민 지배 최상급 당국자들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이하 제령 제7호)로도 “정치를 변혁할 목적으로 안녕질서를 해치고, 또 방해하고자 한 자, 선동하는 자” 등을 단속할 수 있지만 “과격과 공산주의 선전의 경우”는 포함시키기 어렵고 ‘정체와 국체’를 운운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없으므로 보다 강력한 법령인 치안유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용하면서 총독부 상층 관료들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치안유지법 시행 당일인 1925년 5월 12일 경무국 고등경찰과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는 제령과 치안유지법 모두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안법이나 제령 제7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치안유지법이 실시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한 법안에 대해 사안에 따라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저자는 고등법원 판사 노무라 조타로(野村調太郎)의 치안유지법에 대한 해석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언급하고 있다. 노무라 조타로는 “조선의 독립은 제령 제7호로 보면 정치변혁에 해당하고, 치안유지법으로 보면 국체변혁, 그리고 보안법으로 보면 이른바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에 해당한다. 각각 다른 양태와 영역의 처벌을 상정하고 있다”며 각 법령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노무라 조타로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그 내용을 알고 가입했을 경우는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가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치안유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한 실행 협의 및 실행 선동은 치안 방해 예비 또는 음모라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이를 제령으로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치안유지법에 적당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제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저자는 노무라 조타로가 치안유지법이 사회주의적 과격운동을 단속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 틀림없지만 입법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성법(成法)을 해석할 때는 구체적 사유에 구속되지 말고 법문(法文)에 나타난 의의

와 치안유지라는 법의 근본정신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써 시행 초기부터 치안법령이 확장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솔직히 드러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안유지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인 1925년 6월 13일에는 고등법원 검사장 나카무라 다케조(中村竹藏)는 「치안유지법 적용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어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그 내용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 또는 그 목적 실행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고, 또는 그 실행을 선동한 자 등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므로 이 취지에 따라 취급해주시기 바란다는 통첩을 산하 각 검사장과 검사정에게 하달하였다.⁴ 이렇게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치안유지법은 점차 제령 제7호를 대체하는 강력한 통치 법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카무라 다케조는 도쿄제대 법과대학 출신으로 1907년 통감부 판사로 부임하여 1910년 경성공소원 검사국 검사장, 1912~1920년 경성복심법원 검사국 검사장을 거쳐 1920년 9월 고등법원 검사장에 취임하여 1929년 10월 법무국장 마쓰데라 다케오(松寺竹雄)가 부임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마쓰데라 다케오는 1923년 4월부터 1929년 10월까지 법무국장으로 재임하다가 고등법원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1932년 1월까지 재임하였다. 나카무라 다케조와 마쓰데라 다케오는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으로서 식민지 조선의 사법 통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1928년 6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제령 제7호와 치안유지법의 차이에 대한 법무국장 마쓰데라 다케오의 담화내용이 소개되었다. 즉, “제령 제7호는 정치운동에 대한 것이오 치안유지법은 국체변혁운동에 대한 것임으로 법률의 목적이 다르며, 국체라는 것은 주권, 민중, 국토의 삼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법성과 내무성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만일 독립운동자가 결사를 하여 조선

3 野村調太郎, 1925, 「治安維持法と朝鮮獨立運動」, 『普聲』 第二號.

4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앞의 책, 33~35쪽.

을 일본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운동을 하였다면 그 주모자는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다. 또한 제령 위반은 치안유지법보다 가벼운 예를 들면 결사를 하지 않고 만세를 부른다든지 선전문을 배포한다든지 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단독으로 하였다면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고 만일 관청 폭파, 살인 같은 행동으로 그 목적이 독립에 있다하면 물론 치안유지법에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⁵

치안유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1928년 6월 마쓰데라 다케오의 담화 내용은 앞서 고등법원 판사 노무라 조타로의 해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무라는 조선의 독립을 정치변혁과 국체변혁 두 가지로 나누어 전자는 제령 제7호, 후자는 치안유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법무국장 마쓰데라는 제령 제7호는 치안유지법보다 가벼운 선전문 배포와 같은 ‘정치운동’에 대한 것으로, 치안유지법에서 언급하는 국체를 ‘주권, 민중, 국토’로 구분하여 조선을 일본이라는 ‘국체’로부터 ‘이탈’시키고자 하는 행위 전체로 파악한 것이었다. 저자는 이 ‘3년’ 사이의 해석의 간극을 치안유지법 적용 사건의 구체적인 판례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IV. 조선에서 치안유지법의 ‘최초’ 적용 사건

1925년 5월 12일 치안유지법이 시행되자 조선총독부 관공사들은 한국독립운동에서 최초로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사건에 대한 기소 또는 판례를 남기려고 경쟁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언론 보도에서 최초의 치안유지법 적용이라는 기사가 다수 있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역시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저자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제약 때문에 주로 일본어 신문이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5 『동아일보』, 1928.6.29.

를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독립운동관련판결문」 사이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저자는 확인 가능한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1925년 6월 24일 경성복심법원의 박동근(朴東根)에 대한 판결로 파악하였다.⁶ 이 사건은 1925년 5월 8일 청진지방법원에서 강도 및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한 사건으로 중국 봉천 안도현에서 대동회(大同會)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건이었다. 경성복심법원 재판장 아마구치(山口均四郎)는 이 사건에 대해 신법인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과 구법인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을 비교하고 결국 형량이 가벼운 제령 제7호를 적용하였다.⁷ 박동근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6월 24일에 치안유지법 적용이 논의되었으나 1심 법원이 아니고 2심 법원이라는 점과 박동근의 활동지가 만주 지역이라는 점에서 치안유지법의 첫 번째 국내 적용 사례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한편, 저자는 1925년 7월 27일 박희빈(朴熙彬)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조선독립운동에 공명(共鳴)’이란 것을 “조선을 제국의 속박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정치를 변혁할 목적”으로라는 정형화된 어구가 제령 제7호 위반을 적용하여 인용되었지만, 이후 치안유지법 판결에서 상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저자는 1925년 11월 18일자 『매일신보』에 “경성지방법원 최초의 치안유지법 적용, 흑기연맹사건 언도”라고 보도된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미 ‘흑기연맹 판결’에 앞서 1925년 7월 30일 평양지방법원 안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경성지방법원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라고 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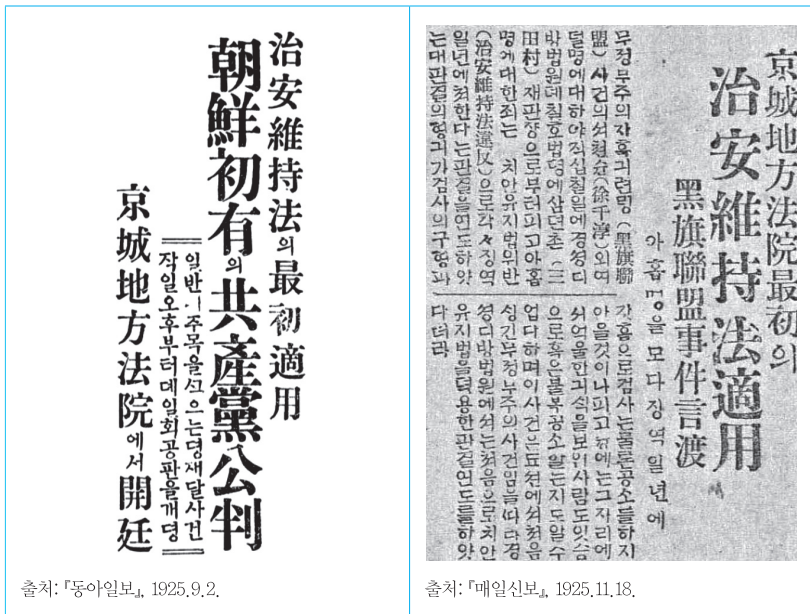
이 안주지청의 판결은 1926년 6월 16일 평안남도 안주경찰서에서 체포된

6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앞의 책, 50쪽.

7 메이지 40년(1907년), 개정 다이쇼 10년(1921년) 형법 제6조 “범죄 후 법률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는 조항에 의거한 것이었다.

8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앞의 책, 53~55쪽.

대한정의부원 안휴식(安休植)에 대한 판결로 당시 언론에서는 7월 25일 공판에서 안휴식은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다음날 7월 26일이 일요일임에도 계속 개정하여 판사로부터 구형 그대로 치안유지법 제1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언도받은 “치안유지법 발표 후 처음 생긴 사건”, “치안유지법 초(初) 적용”으로 보도되었다.⁹ 그런데 이 사건은 저자가 언급하였듯이 항소심인 평양복심법원에서 검사가 치안유지법 적용은 잘못이며 제령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1925년 9월 12일 판결에서 제령 제7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저자는 검사가 왜 치안유지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해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치안유지법 운용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증거라고 보았다.



9 『동아일보』, 1925.7.30; 『조선일보』, 1925.7.31.

한편, 무정부주의 결사 ‘흑기연맹사건’을 ‘경성지방법원 최초의 치안유지법 적용’으로 보도한 『매일신보』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였다. 흑기연맹사건의 피고인 이복원 등에 대해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와키테쓰 하지메(脇鐵一) 판사는 행위시법인 제령 제7호 제1조와 신법인 치안유지법 제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각 소정형을 비교하는 데 경중이 없으므로 제령 제7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다.¹⁰

왜냐하면 ‘흑기연맹사건’에 앞서 정재달, 이재복의 ‘고려공산당창립준비위 사건’, 즉 ‘꼬르부료’ 조직 사건에 대한 판결이 1925년 9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서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와키테쓰 하지메 판사는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과 치안유지법 제1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언론은 “치안유지법의 최초 적용, 조선초유의 공산당공판”¹¹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 또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제령 제7호와 치안유지법의 형량이 동일하므로 제령 제7호를 적용하였다.¹²

저자는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치안유지법 최초의 적용 사건을 1926년 1월 20일 충남 서산경찰서가 검거한 이영재·이성린 등 ‘적혈결사대’ 사건으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1926년 2월 2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조선총독부 판사 나가타(永田顯士)의 단심으로 선고되었는데, 이 판결에서 판사 나가타는 이영재와 이성린에게 사유재산제도 부인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행위인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양형에서 이영재는 치안유지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절도죄를 적용하고 이성린에게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이성린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경성복심법원은 1926년 5월 5일 이

10 京城地方法院 刑事部, 1925.11.17, 「判決」(大正十四年刑公第846號).

11 『동아일보』, 1925.9.2.

12 ‘고려공산당창립준비위사건’의 예심에서 판결에 이르는 경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명혁 2019, 「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 재판과정」, 『역사연구』 37호 참조.

성린에게 치안유지법 제2조인 ‘협의회’를 적용하였다.¹³ 이 ‘적혈결사대’ 사건은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사건은 맞지만 공산주의운동이었던지는 의문이다. 물론 “공산제도를 확립하여 사유재산제도를 파괴하려고 협의”한 점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판결하였지만 테러리즘을 부정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운동의 특성상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고 은닉 소지한 부분을 공산주의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이영재, 이성린 등 인물이 한국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운동사에서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법적용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V.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 재판과 치안유지법 판례의 ‘안정화’

저자는 이 책에서 ‘예심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치안유지법 판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치안유지법 시행 후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의의는 분명했지만 국체변혁에 대해서는 해결에 이르지 않고 시행 후 ‘제국주의·자본주의 = 일본의 국체’라는 이해가 일반적이었는데 ‘국체변혁 = 조선독립’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은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에 대한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을 통하여 탄생했고, 공판과 판결을 통해 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¹⁴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에 대한 예심은 1926년 7월 12일 경성지방법원 검사 사토미 간지(里見寬二)는 권오설 등 12명에 대한 예심청구서로부터 시작하여 1927년 3월 31일 종결되었는데 그때까지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저자는

13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앞의 책, 58~59쪽. 국내 한 연구는 적혈결사대 사건을 한국과 일본에서 파악되는 치안유지법 관련 판결문 중 최초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최종길, 2008, 「식민지 조선과 치안유지법의 적용-1926·27년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0집, 512쪽.

14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위의 책, 86쪽.

사토미가 보낸 예심청구서에 “우리 국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이라고 한 논리가 자리 잡기 시작하여 이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정해진 틀이 되었다고 하였다. 1927년 2월 17일 경성지방법원 판사 고이 세쓰조(五井節藏) 예심판사에 의해 조선공산당 예심이 재개되고 1927년 3월 31일 예심종결이 결정되어 권오설 등 101인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예심판사 고이 세쓰조는 시종일관 ‘국체변혁 = 조선독립’이라는 프레임에 맞추어 피고인들을 추궁하였다. 공산제도 실현은 현재의 국체변혁이 된다는 논리를 유도하여 무조건 ‘국체변혁의 의사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것이 조선공산당의 설립목적이었다고 비약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예심종결서」는 “조선을 우리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 조선공산당이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공식이 정립되었다.¹⁵

1927년 9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개정된 공판은 1928년 2월 13일 선고 공판까지 만 5개월에 걸쳐 48회에 이르렀다.¹⁶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의 재판장인 경성지방법원 판사 야모토 쇼헤이(矢本正平)¹⁷는 공판에서 예심종결결정에 기록된 ‘국체변혁=조선독립’의 인정 여부를 피고들에게 추궁하고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저자는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 판결은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형화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하나의 사례로 1933년 11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유응경 등 8인의 ‘공작위원회사건’ 판결을

15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위의 책, 66~79쪽.

16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 재판과정과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김국화, 2020, 「101인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형사재판(1925-28)」,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7 그는 도쿄제대 법과대학 독법과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총독부 판사에 임명되어 평양복심법원 판사, 공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927년 경성복심법원 판사 겸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였다. 조선공산당 재판 이후 그는 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였다.

들고 있다. 여기서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공작위원회에 그 목적을 알면서 가입한 부분을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반과 제1조 제2항 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밀결사가입’을 조선을 일본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함 = 조선독립 =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정형화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⁸

VI. 전면시행기의 치안유지법

저자는 1928년 일본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인 ‘3.15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치안유지법의 전면적인 시행의 국면을 맞게 되고 조선에서도 1928년 조선공산당 재판 등을 계기로 전면적 운용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8년 6월 29일 ‘긴급치령’으로 치안유지법이 개정되었고 1928년 8월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을 전담하는 사상검사가 탄생하였다.¹⁹

저자는 「조선에서의 치안유지법 위반자 처분상황」, 「조선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연도별 누계 인원표」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조선에서 치안유지법의 전면적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²⁰ 또한 1928년 치안유지법 검거 자수가 1,304명에서 1932년에는 4,257명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는데 이처럼 치안유지법 위반이 급증한 이유는 사회운동의 고양뿐만 아니라 개정 치안유지법이 더욱 운용을 확대한 점도 있음을 강조한다.

18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앞의 책, 73쪽.

19 荻野富士夫, 2000, 『思想検事』, 岩波新書; 水野直樹, 2007, 「植民地朝鮮の思想検事」, 松田利彦 編,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 이러한 통계자료는 이미 저자가 발간한 치안유지법 자료집에 의거한 것이다. 荻野富士夫 編, 1996, 『治安維持法關係資料集』 第1~4卷, 新日本出版社.

저자는 치안유지법의 개정으로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간파한 『동아일보』는 「사상범죄와 대책-엄벌보다 원인의 시정」이라는 사실을 통해 엄벌주의의 만으로 사상을 전환시킬 수 없으며, 그릇된 사상의 근원에 존재하는 사회생활의 왜곡이나 결함을 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제언했음을 언급하였다.²¹

사상사건의 급증은 치안유지법에 대한 재개정 시도를 가져와 일본은 1934년, 1935년 두 차례에 걸쳐 ‘전향제도’ 등을 포함하는 치안유지법의 전면적 개정을 준비하였으나 이 개정안은 우익단체와 관련된 국가주의운동의 단속과 예방구금에 대한 공방과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²² 저자는 치안유지법 개정 시도에 대해 『동아일보』가 1933년 6월 27일 사설에서 부정기 구금 또는 예방구금제 도입 등에 대한 강한 위구심을 표명하였음을 지적하며 당시 언론의 대응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저자는 고등법원 검사국이 작성한 1925년부터 1933년까지 ‘민족주의 계열 치안유지법 사건’의 검거자의 추이를 통해 검거자 합계는 556명, 기소자 합계는 383명으로 그들은 총검거자의 4.3%, 총기소자의 8.6%에 해당하며 독립운동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상검사 사사키 히데오(佐木日出男)가 치안유지법 시행 후 식민지의 독립운동은 국체변혁운동으로서 치안유지법 적용 대상이 되어 제령 제7호에서 치안유지법으로 바뀌었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저자는 실제로는 여전히 제령 제7호도 존속한 가운데 치안유지법 적용이 일반화되었다고 하였다.

저자는 민족주의 계열의 치안유지법 사건의 예로서 192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의 공명단(共鳴團)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여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에서 개발된 ‘제국의 속박 이탈 = 국체변혁 = 조선독립’이라는 공식이 이 판결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21 『동아일보』, 1932.10.25.

22 일제하 전향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장신, 2019,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또한 1930년 7월 2일자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의 기사에서 독립운동에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존재했으나 신판례로 법 적용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기사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신판례는 1930년 7월 21일 신간회 철산지부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인데 이에 앞서 1930년 5월 22일 고려혁명당 안주 총부장 황금술(黃金述)의 상고에 대해 평양복심법원의 판결을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마스나가 쇼이치(増永正一)²³ 판사가 파기하고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판시한 부분을 ‘제령 제7호와 치안유지법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는 실행방법으로 그 결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령 제7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에도 해당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제령 제7호 위반 행위를 하고 이로써 치안을 방해하고자 했던 이 건의 경우, 그 행위는 치안유지법 위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심이 제령 제7호만 적용한 것은 당위성을 상실한 것으로, 법적용 착오가 있으며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었다.

저자는 이 외에도 1930년대 전반기까지 십자가당사건,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 차금봉 등 제4차조선공산당사건, 간도 5.30사건, 조선학생전위동맹사건, 경성 고등여학생 동맹휴교사건 등 여러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들의 예심종결서, 판결문 등을 검토, 분석하여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치안유지법 판결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회 및 그 재건운동의 경우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 즉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 부인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개별적인 공산주의운동 사건 판결에는 제1항 국체변혁을 적용하지 않고 제2항 사유재산제도 부인만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치안유지법 적용은 국체변혁-제1조 제1항으로 수렴되고 제2조 이하의 적용은 극히 적었는데 1930년대 전반기 조선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에는 제2조 협

23 그는 1934년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1937년 고등법원 검사장에 취임하였다.

의죄와 제3조 선동죄 위반이 적용이 10%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셋째, 만주사변 이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이 급증하는데 조선에서는 이시기 반제운동에 대한 탄압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넷째, 조선의 치안당국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봉쇄하면서 공산주의운동이 노동운동과 소작쟁의로 파고드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그 대응으로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이라는 합법단체 운동을 치안유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다섯째, 1932년 중반까지 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회와 직접 연결되는 재건운동은 차단되었지만 그 시도는 계속되었고 치안당국은 억지로 당과 공청재건운동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사건이 생겨났다. 여섯째,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뿐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의 다양한 비밀결사를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판결하였다. 일곱째, 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농민조합 등 계몽적 학습활동에 주목한 공산주의적 교양, 투사양성이라는 새로운 명목이 개발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판결하였다.²⁴

VII. 확장하는 치안유지법

저자는 1932년을 정점으로 치안유지법 검거자 수와 검사국의 수리자 수가 점차 감소하여 1935년부터 감소 경향이 현저해져 “민족주의운동은 거의 그림자를 감춘 것이 인정된다. 이는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주의운동보다 점점 대중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치안 당국자들에게는 단속이 매우 엄중하여 조기 검거가 이루어진 결과로 자화자찬되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민족주의운동도 일본의 1936년 ‘2.26사건’, 즉 일본 육군의 황도파(皇道派)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를 계기로 발흥하려는 조짐이 있고 1936년 12월

24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앞의 책, 224~256쪽.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시행으로 ‘사상정화대책’을 강화하고,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1939년 8월 「사상정화 대책요강」, 「사상 요격계인물」에 대한 검거 조치 등이 시행되어 비전향자에 대한 예비검속 등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저자는 중일전쟁 이후 치안유지법 운용에 나타난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치안유지법 적용 건수와 인원이 감소하여 1937년에는 1,22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38년에는 987명으로 감소하였고 1939년에는 790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둘째, 공산주의운동의 쇠퇴가 급격해진 가운데 다시 독립운동에 대한 적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1938년 6월부터 1940년 6월까지 국체변혁 =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기소자가 1,226명, 사유재산제도 부인 = 치안유지법 제1조 제2항 기소자가 440명이었다. 셋째, 종교에 대한 탄압, 즉 기독교 외의 종교단체 관계자로 불경, 치안유지법, 보안법 혹은 균형법 위반 등 죄로 검거 처벌된 자가 속출하였다.²⁵

저자는 조선이 일본보다 양형이 무거운 이유를 동경형사지방법판소 판사 요시다 하지메(吉田肇)의 「조선에서 사상범 과형 및 누범상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조선독립, 조선민족해방의 목적 관철의 일수단으로 채택되었다는 ‘조선사상범의 특수성’, 둘째, 조선의 사상범은 형법범이나 다른 특별법 범죄명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범죄의 복잡성’, 셋째, 일본 국내는 대부분 공산당의 목적수행죄, 결사 조직 가입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데 비해 조선에서는 결사 조직 또는 가입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죄의 성격(罪情)의 중대성’, 넷째, 전향문제로 1933년 조선에서도 사상전향시대에 들어가 전향자가 점증하여 특히 중일전쟁 이후 그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에서는 판결 당시

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종교운동은 민족의식의 색채가 농후하고 순수한 종교운동 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운동, 사회운동으로 봐야 할 점이 많다는 1940년 10월 고등법원 검사장 마스나가 쇼이치의 훈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앞의 책, 270쪽.

전향하지 않은 자가 상당수에 이른 것은 과형을 일률적으로 무겁게 함과 동시에 집행유예자의 숫자를 적지 않게 한 점, 신념의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저자는 ‘간도 5.30사건’의 판결과정을 분석하여 치안유지법만으로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된 사례를 통해 일제의 잔혹함을 비판하고 있다. 1933년 12월 20일 경성지방법원의 ‘간도 5.30사건’ 1심 판결 항소심인 1936년 2월 24일 경성복심법원 판결에서 치안유지법 제1조 1항 위반으로 18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22명이 상고하였지만 고등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하였다. 1936년 7월 21일, 22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주현갑, 김응수 등 간도 5.30사건 관련자 1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주현갑(周現甲)에게는 치안유지법 위반만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²⁶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처음 사형이 집행된 사례였다.

저자는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발행한 『사상휘보』 등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일상적 문제를 포착한 선정 방법으로 대중을 획득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1937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언도된 ‘진도적색농민조합사건’, 1940년 1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순탁, 백남운 등 연희전문학교 교수 3명에 대한 교내 강의를 문제 삼은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1940년 3월 1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적색농민조합 재건 및 지나사변 후방교란 획책사건’ 판결 등은 ‘후방교란’이라는 호들갑스러운 표현을 하지만 대개 반전과 관련한 언동에 그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합법적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치안유지법 위반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러 사례를 검토하였다. 1936년 6월 종로경찰서가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족혁명당, 중국육군항공학교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안재홍을 검거하여 1937년 10월 19일 경성지방법원이 결국 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와 1930년대 후반 학생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고조되면서 대한독립만세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민족적 배후관계가 있다

26 『동아일보』, 1936.7.24.

고 수사에 착수한 사례, 1938년 10월 ‘비밀결사 도라회 사건’, 1938년 10월 28일 ‘춘천중학교 비밀결사 상록회 사건’, 1939년 3월 181명을 기소한 ‘수양동 우회사건’ 등 합법적 민족주의단체와 1939년 6월 등대사 사건 등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도 치안유지법 적용이 늘어가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VIII. 폭주하는 치안유지법

1941년 3월 10일 일본에서 신치안유지법이 공포되어 치안당국이 엄원하던 예방구금이 실현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이미 1941년 2월 12일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제령 제8호로 공포되었으나 신치안유지법 시행과 함께 예방구금령 조항이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또한 제령 제34호로 1941년 12월 「조선임시보안령」이 시행되었는데 제20조에 따라 시국에 관한 유언비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저자는 전시체제시기 치안유지법의 특징을 여러 통계, 판례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전시체제시기 치안유지법 위반 건수는 증가하여 1940년에 43건 286명, 1941년에 143건 1,414명, 1942년에 172건 1,528명, 1943년에 244건 2,050명으로 격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미한 사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제 당국은 경찰의 검거와 검찰 송치만으로 충분히 치안 강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치안유지법 위반죄 유형별 인원」 통계를 통해 국체변혁관계가 사유재산제도 부인 관계보다 3배 이상 되는 것은 민족주의 보다 공산주의 관계가 많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고 분석하였다.

1941년 8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1940년 8월 조선총독부에 의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에 대해 “조선인에게 최고 유일의 문과 계몽지도기관인 두 신문의 폐간은 완전히 무모한 조선총독부의 탄압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비판하는 어느 학생의 편지가 경찰의 사찰 속에서 압수되었는데 이에 대해 신치안유지법 제5조(협의·선동)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서 1년을 부과하였다. 저자는

이에 대해 치안유지법은 개인 차원의 민족의식조차 도려내어 처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어(일본어) 상용, 창씨제도, 지원병제도 등을 비판, 부정하는 언동 등에 대해서도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1941년 4월 고등법원 검사장 마스나가 쇼이치는 순진무구한 국민학교 아동 또는 중등학교 생도 사이에 불온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학교 방면의 청소년 행동에 대해 항상 사찰 내탐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훈시하였다.

1943년 4월 21일 평양지방법원은 임윤걸에게 신치안유지법 제5조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언도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41년 9월 조선유행가 레코드 〈오동잎의 맹세〉를 연주하여 “아아, 지나간 열아홉의 꿈, 나도 맹세하네 오동잎의 맹세”라는 가사를 오동잎이 푸른 것처럼 우리는 조선독립을 위해 맹세를 새롭게 하네라고 해석하여 조선독립의 필연성을 역설했다는 등 치안유지법의 선동죄로 단정하였다. 마치 박정희 시대 때 ‘막걸리 보안법’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1941년 5월 2일 고등법원 검사장 마스나가 쇼이치는 신치안유지법 시행에 즈음하여 공산주의운동이 통일적 조직적 형태에서 분산적 개별적 형태로 이행하고 있으니 경계하도록 훈시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운동뿐 아니라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도 뿌리 뽑으려는 내용이었고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1941년 2월 4일 경성지방법원은 염홍섭에게 신치유법 제1조 제1항 후반, 제2항 후반을 위반했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주오대학 학생인 염홍섭은 1937년 9월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오르그』, 『부재지주』,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의 『第二貧乏物語』 등을 탐독하여 공산주의에 공명하고,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 그룹을 결성하여 재경 제일고등보통학교 동창생에게 공산주의 선전 계몽을 하여, 코민테른과 일본공산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의도했다고 하였다.

IX.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의 현존

저자인 오기노 후지오 선생은 일제의 패전과 더불어 치안체제도 붕괴해갔다고 하면서 해방 직후 조선 전체 형무소의 재감자 중 사상범 수형자는 약 1,000명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경찰, 검찰 단계의 피의자, 예심 공판에 계류 중인 피고를 합하면 사상범 관계자의 석방은 2,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1944년 8월 시점 보호관찰인원 약 2,900명, 1944년 9월 시점 예방구금 인원 59명을 합하면 정치범, 사상범, 경제범으로 석방된 인원은 5,0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1945년 10월 9일 미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해 치안유지법은 폐지되었고 일본에서는 10월 15일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시기 일제 통치하의 신문지법, 보안법 등을 비롯하여 미점령군의 군포고, 군정청 법령 등이 한국의 민중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계승’되었고, 특히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을 계승했다고 하였다. 저자는 국가보안법으로 검거 또는 입건된 인원은 시행부터 약 1년 동안 11만 8,621명으로 치안유지법 20년의 운영에서 검거, 수리된 인원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라고 하였다.

저자인 오기노 후지오 선생은 「한국어판에 부쳐」 서문에서 현재 일본국민은 1945년 이전의 억압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과 마주하고 있으며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 2017년 「공모죄」가 제정되었다고 언급하며 “시대착오적인 과거 전신체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⁷ 여기서 「공모죄」는 2017년 6월 21일 공포되어 7월 11일 시행된 「조직적인 범죄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언급하는 “테러리즘집단, 기타 조직적 범죄 집단에 의한 실행준비행위를 수반하는 중대범죄 수행의 계획(計劃)”과 ‘죄의 예비(豫備)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한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7 오기노 후지오 지음, 윤소영 옮김, 2022, 앞의 책, 5~6쪽.

이러한 내용은 현재 한국에서도 1948년 12월 1일 ‘여순사건’에 대한 처벌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시효가 만료된 구시대의 유물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조직적 범죄처벌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기원에는 치안유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 치안유지법이 악법인 이유는 바로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인 행위주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 표현된 인간의 행위 중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치안유지법은 ‘결사 가입’뿐 아니라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조차도 처벌하였고, 그 현존법인 국가보안법은 목적 수행을 위해 ‘예비’, ‘음모’한 자까지도 처벌하는 행위주의 원칙에 모순되는 악법인 것이다.

이상 필자는 오기노 선생의 저작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평을 작성하였다. 일제하 치안유지법에 관련된 수많은 판결을 일일이 분석하면서 치안유지법의 판례의 변화를 추적하여 정식화되는 과정과 그것이 확대 적용되는 사례를 분석한 오기노 선생의 노력에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 찬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면서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형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6호(2022. 6)

초판 1쇄 인쇄 2022년 6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6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